

한국유럽학회 · 춘계 공동 학술대회 I · 2026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전략의 재구성

Age of Uncertainty: Reconstructing Future Strategies

일시 | 2026년 03월 27일 (금) 오후1시~6시
장소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경영관 7층 아람홀

주관 |  사단법인 한국유럽학회  후원 | BNK 부산은행  주관 미래도시혁신재단

공동주최 |  사단법인 한국유럽학회  한국아시아학회  한국EU학회 EUSA-KOREA

 경희대학교 극지연구소  유럽연합 정책연구소  Eurasess  시대전환인간안보연구소
 PKNU글로벌멀티거버넌스연구소 준비위원회  WU 워드제이

진행 일정

13:00
13:20

 참석자 등록 — 7층 아람홀

13:20
13:40

개회사 및 환영사 (7층 아람홀)

안상욱 — 한국유럽학회 회장 · 개회사
김현태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 환영사

13:50
14:10

기획강연 1

커피도시 부산 — 미래사회 먹거리를 위한 커피 밸류체인의 완성
임수정 (CCNOIRE 대표) · 7층 아람홀

14:10
14:30

기획강연 2

커피 밸류체인과 하이엔드 커피의 가치

손길한 (로스팅 바리스타 · 공간21 대표) · 7층 아람홀

14:30
14:50

다과 및 휴식

세션 1

패널 1 · 417호

불확실성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전략

사회: 방청록 (한동대)

김선진 (동아대)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후
대만에 대한 한국의 공급망 전략

장정재 (부산연구원) — 불확실성의 시대 공급망
변화에 대한 부산의 대응방안

오태현 (KIEP) — EU-미국 통상 갈등과 EU의 대응
전략

허재철 (KIEP)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
·일 공급망 전략

토론: 김종욱 (부경대) · 김은영 (울산연구원)

패널 2 · 546호

불확실성의 시대
외교전략의 변화

사회: 최진우 (한양대)

박상철 (한국공학대) — The Fragmenting
Global Order and Roles of the Middle Powers
as Swing States

김용민 (시대전환인간안보연구소) — 특수관계의
균열: 트럼프 2기와 영국외교의 재편

정세원 (부경대) — 불확실성의 시대 EU의 안보전략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 신고전적 현실주의로
본 프랑스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

토론: 고주현 (연세대) · 이성봉 (서울여대)

14:50
16:10

패널 3 · 7층 아람홀

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사회: 황기식 (동아대)

김현정 (동아대) — 일본 커피도시 사례로 본 커피
와 도시 전략

김주희 (부경대) — 커피는 어떻게 도시의 산업이
될까?: 함부르크에서 부산의 가능성을 보다

서창배 (부경대) — 중국 커피산업 현황과 전망: 중
국 커피 수도 '운남' 커피를 중심으로

김연준 (충북대) —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적 측면
에서 살펴본 커피 산업

김유빈·강유덕 (한국외대) — 커피 산업의 기술적
적응도(Export Unit Value)와 거시 지표 간의 상
관성 분석

토론: 모춘흥 (한양대) · 이종서 (유럽연합 정책연구
소)

16:10
16:30

다과 및 휴식

세션 2

패널 4 · 417호

**불확실성의 시대
부산의 나아갈 길**

사회: 황기식 (동아대)

서창배·김민주 (부경대) —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변화에 따른 부산경제 영향 분석

김현정 (동아대) — 불확실성 시대, 부산의 SMR 산업 육성과 로컬 전략

정성문 (동아대) — 북극항로와 부산의 대응전략

안상욱 (부경대) —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변화와 부산의 대응전략

토론: 황규연 (세종대) · 김윤경 (영산대)

패널 5 · 546호

**불확실성의 시대
사회 패러다임 변화**

사회: 김남국 (고려대)

김주희 (부경대) — AI 규제의 정치경제: 규제모델의 분화와 국가 간 질서 경쟁

오창룡 (부경대) — 불확실성의 시대 극단화된 정치와 사회분열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후위기 불확실성과 대안적 대응: 화폐제도의 재구조화 기반시설의 공유화

이보고 (부경대) — 부유하는 주체 "베이피아오"와 베이징 공간의 의미

토론: 정승철 (부경대) · 김연준 (충북대)

16:40
17:50

패널 6 · 7층 아람홀

**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사회: 신상협 (경희대)

정세원 (부경대) — 커피문화의 역사적 순환: 프랑스에서 베트남을 거쳐 유럽으로

김새미 (한예중) — 런던 커피하우스에서 부산 커피도시로

고주현 (연세대) — 항해도시의 커피공간: 바르셀로나와 부산, 스페셜티 커피로 읽는 공론장과 정체성

정호윤 (부경대) — 브라질은 어떻게 '커피'를 품었나: 국가 브랜드의 탄생과 부산이 가야할 길

김계리 (한국외대) — 커피의 두 운명: 문화는 산업을 살리는가?

토론: 김신규 (한국외대) · Tomasz Wierzbowski (EURAXESS Korea)




17:50
18:20

기획강연 3 및 폐회사

기획강연 3 — 김영재 (부산연구원 원장): 글로벌 경제의 미래
폐회사 —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회장)

한국유럽학회 2026년 춘계 공동 학술대회 I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전략의 재구성

- 행사일시: 2026년 3월 27일(금), 오후 1시 ~ 6시
- 행사장소: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경영관 7층 아람홀
- 행사후원:    부산은행
- 행사주관 (사)한국유럽학회
- 행사주최: (사)한국유럽학회, 한국아시아학회, 한국EU학회, 경희대학교 극지연구소, 유럽연합 정책연구소, 시대전환인간안보연구소, EURAXESS Korea, PKNU글로벌멀티거버넌스연구소 준비위원회, 공공정책연구소 위드제이

프로그램

시 간	구 분			
13:00~13:20	참석자 등록 (7층 아람홀)			
13:20~13:40	개회사 및 환영사 (아람홀)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회장 김현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7층 아람홀)		
13:50~14:10	기획강연1	임수정 CCNOIRE 대표: 커피도시 부산 - 미래사회 먹거리를 위한 커피 밸류체인의 완성 (7층 아람홀)		
14:10~14:30	기획강연2	손길한 공간21 대표: 커피 밸류체인과 하이엔드 커피의 가치 (7층 아람홀)		
14:30~14:50	휴식	다과 및 휴식		
14:50~16:10	세션1	불확실성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전략 (패널1) 417호 사회: 방청록(한동대)	불확실성의 시대 외교전략의 변화 (패널2) 546호 사회: 최진우(한양대)	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패널3) 7층 아람홀 사회: 황기식(동아대)
		발표 김신진(동아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에 대한 한국의 공급망 전략 장정재(부산연구원) 불확실성의 시대 공급망 변화에 대한 부산의 대응방안 오태현(KIEP) EU-미국 통상 갈등과 EU의 대응전략 허재철(KIEP)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일 공급망 전략	발표 박상철(한국공학대) The Fragmenting Global Order and Roles of the Middle Powers as Swing States 김용민(시대전환인간안보연구소) 특수관계의 균열: 트럼프 2기와 영국외교의 재편 정세원(부경대) 불확실성의 시대 EU의 안보전략 심성은(국회입법조사처) 신고전적 현실주의로 본 프랑스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	발표 김현정(동아대) 일본 커피도시 사례로 본 커피와 도시 전략 김주희(부경대) 커피는 어떻게 도시의 산업이 될까?: 함부르크에서 부산의 가능성을 보다 서창배(부경대) 중국 커피산업 현황과 전망: 중국 커피 수도 '운남'커피를 중심으로 김연준(충북대)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커피 산업

				김유빈·강유덕(한국외대) 커피 산업의 기술적 적응도(Export Unit Value)와 거시 지표 간의 상관성 분석
		토론: 김종욱(부경대), 김은영(울산연구원)	토론: 고주현(연세대), 이성봉(서울여대)	토론: 모춘홍(한양대) 이종서(유럽연합 정책연구소)
16:10~16:30	휴식	다과 및 휴식		
16:40~17:50	세션2	불확실성의 시대 부산의 나아갈길 (패널4) 417호	불확실성의 시대 사회 패러다임 변화 (패널5) 546호	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패널6) 7층 아람홀
		사회: 황기식(동아대)	사회: 김남국(고려대)	사회: 신상협(경희대)
		발표 서창배·김민주(부경대)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변화에 따른 부산경제 영향 분석 김현정(동아대) 불확실성 시대, 부산의 SMR 산업 육성과 로컬 전략 정성문(동아대) 북극항로와 부산의 대응 전략 안상욱(부경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변화와 부산의 대응전략	발표 김주희(부경대) AI 규제와 정치경제: 규제모델의 분화와 국가 간 질서 경쟁 오창룡(부경대) 불확실성의 시대 극단화된 정치와 사회분열 빈재익(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후위기 불확실성과 대안적 대응: 화폐제도의 재구축과 기반시설의 공유화 이보고(부경대) 부유하는 주체 “베이피아오”와 베이징 공간의 의미	발표 정세원(부경대) 커피문화의 역사적 순환: 프랑스에서 베트남을 거쳐 유럽으로 김새미(한예종) 런던 커피하우스에서 부산 커피도시로 고주현(연세대) 항해도시의 커피공간: 바르셀로나와 부산, 스페셜티 커피로 읽는 공론장과 정체성 정호윤(부경대) 브라질은 어떻게 ‘커피’를 품었나: 국가 브랜드의 탄생과 부산이 가야할 길 김계리(한국외대) 커피의 두 운명: 문화는 산업을 살리는가?
		토론: 황규연(세종대), 김윤경(영산대)	토론: 정승철(부경대), 김연준(충북대)	토론: 김신규(한국외대) Tomasz Wierzbowski (EURAXESS Korea)
17:50~18:20	기획강연3 및 폐회사	김영재 부산연구원 원장: 글로벌 경제의 미래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회장: 폐회사		

기획강연

임수정 CCNOIRE 대표

커피도시 부산 - 미래사회 먹거리를 위한 커피 밸류체인의 완성

손길한 공간21 대표

커피 밸류체인과 하이엔드 커피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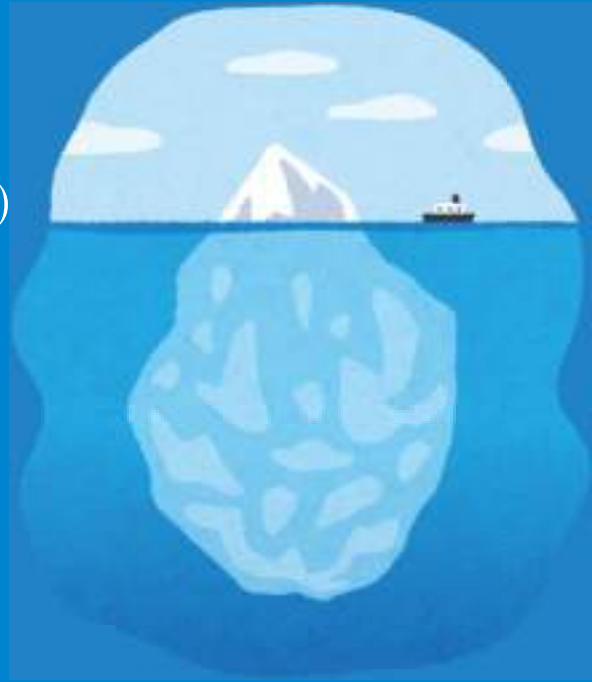


미래사회 먹거리를 위한
커피 밸류체인의 완성



OO는 과학이다

관광 (축제, 박람회)
브랜드 (프랜차이즈, 커피숍)
3차 가공(캡슐, 드립백)
2차 가공(원두)
1차 가공(생두)
무역 및 물류
원산지



1,110만톤

브라질(1위)

베트남(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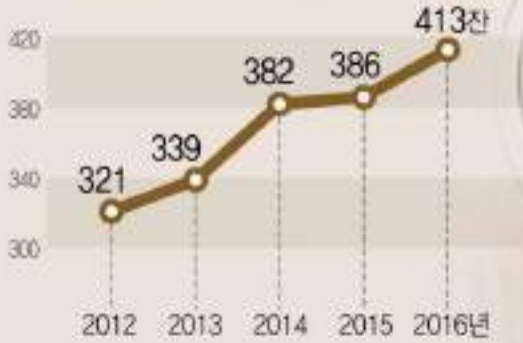
인도네시아(3위)

콜롬비아(4위)

에티오피아(5위)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20세 이상 성인 기준, 아메리카노 커피 제조품
수입량 (생두 및 원두 등) 10g을 1잔 기준으로 산출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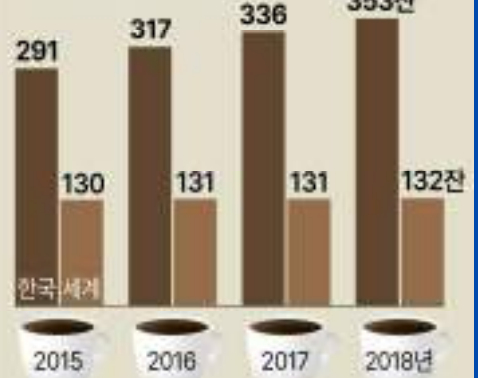
자료/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20170524 트위터 @yo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tNI

1인당 커피 소비량 추이

연간, 20세 이상 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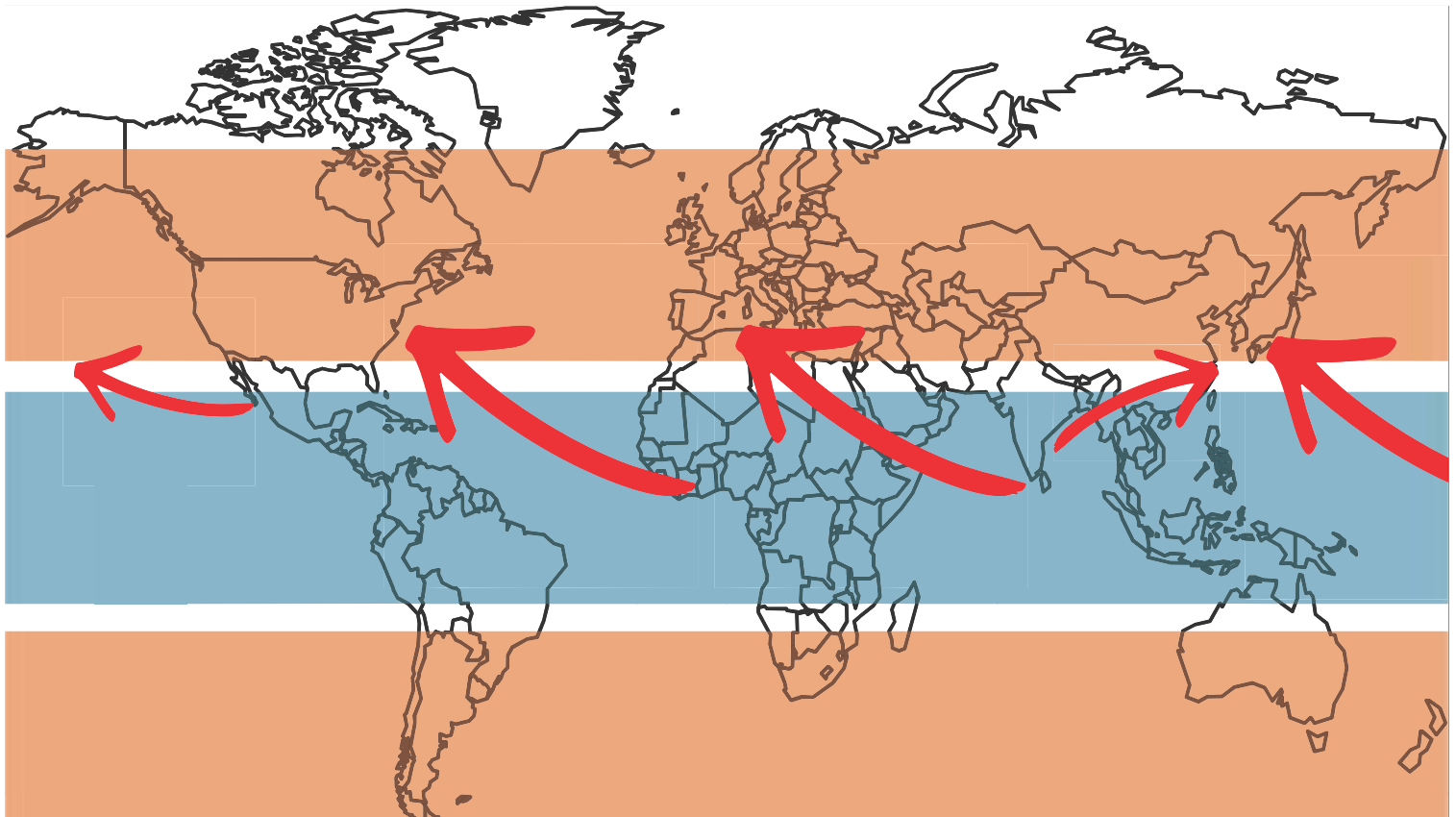


*1인당 커피 소비량 = 커피 원두 소비량, 10g을 커피 한 잔으로 계산

연합뉴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원형민 기자 2023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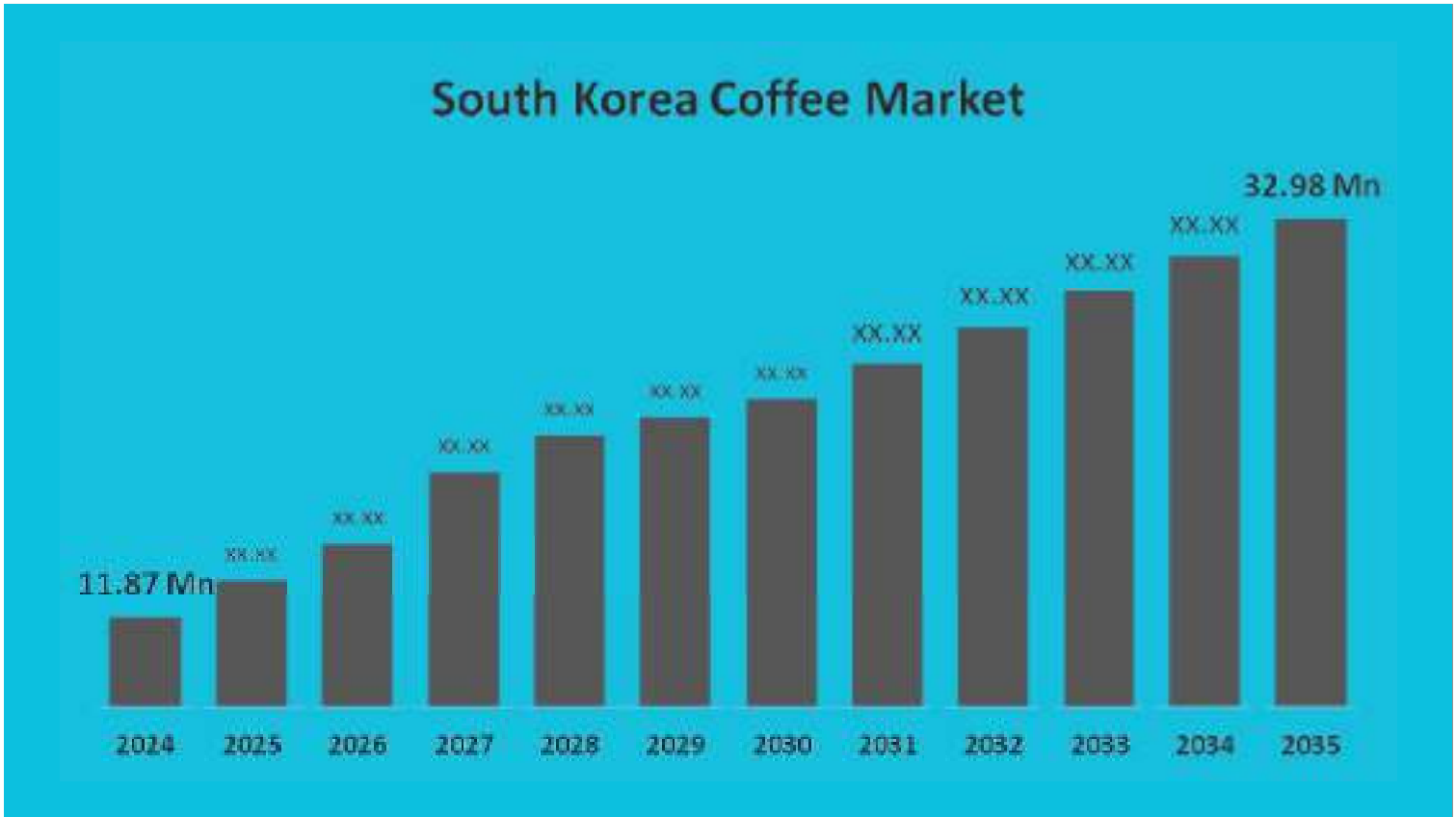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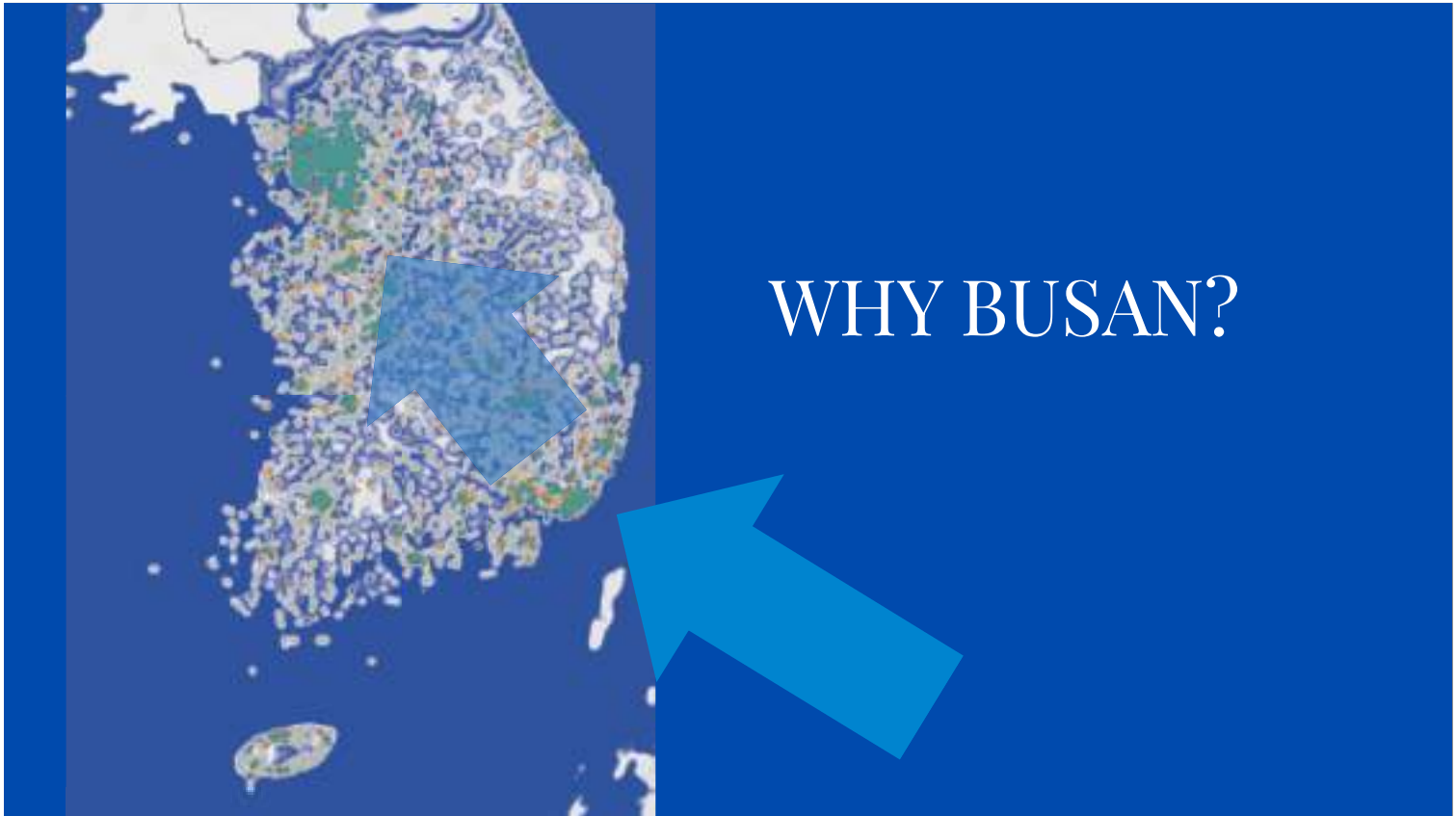
11
조

10만점 (부산 1만여개)

416잔 (세계평균 152
잔)

13억 7846만 달러=2조 (23년
기준)

수십여개
(36개국 3891개 커피)





부산 외국어 대학 특임교수 (스페인어)
미래도시혁신재단 분과 (여성, 문화)

임수정

커피 밸류체인과 하이엔드 커피의 가치

— 공간21의 실천적 접근과 경험적 가치의 재구성 —

손길한

공간21 대표 · 생두 수입, 로스터, 바리스타

【요약】

본 발표는 하이엔드 커피라는 실천적 영역에서 출발하여, 커피 밸류체인 내 ‘경험적 가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고찰한다. 발표자는 2016년 처음 하이엔드 커피를 접한 이후 기존 시장과는 다른 이론적 접근으로 로스팅과 추출을 실험해왔으며, 2017년 하이엔드 커피 핸드드립 전문점으로 시작한 공간21과 2021년부터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커피를 제공하는 공간21s를 현재 서울 청담동 한 공간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발표는 기술적 방법론보다 철학적 방향성에 초점을 두며, 와인 시장의 최고급 사례에 견줄 수 있는 커피 경험의 가능성과 그것이 도시 커피 산업 전략에 갖는 함의를 논한다.

주제어: 하이엔드 커피, 커피 밸류체인, 경험적 가치, 로스팅 철학, 공간21

1. 들어가며: 한 잔의 커피가 열어준 세계

2016년 1월 4일 19시, 발표자는 처음으로 하이엔드 커피를 경험했다. 아버지의 생신 자리에서 건네받은 그 한 잔은, 처음 한 모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한 잔이 남긴 여운은 그때까지 알고 있던 커피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었다. 발표자에게 커피란 그전까지 익숙한 쓴맛과 향의 음료였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미각적 충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식론적 전환이었다.

이 발표는 그날의 경험에서 시작된 질문—커피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발표자는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로스팅과 추출을 연구하였고, 2017년 9월부터 서울에서 공간21을 운영하며 이를 실천해오고 있다. 지금껏 구체적인 방법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그 철학적 방향성과 커피 산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인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전략의 재구성'은 커피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지만, 커피가 도달할 수 있는 경험의 천장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이 발표가 그 논의의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 하이엔드 커피란 무엇인가

2-1. 스페셜티 커피와 하이엔드 커피의 구분

현재 커피 시장에서 '스페셜티 커피'는 품질의 상위 범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페셜티 커피 협회(SCA)의 기준에 따르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의 원두를 스페셜티로 분류한다. 그러나 발표자가 말하는 '하이엔드 커피'는 이 범주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스페셜티 커피가 원두의 품질 기준에서 출발한다면, 하이엔드 커피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컵 안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가를 중심 기준으로 삼는다. 즉, 원재료의 등급이 아니라 경험의 깊이와 고유성이 핵심이다. 이는 와인 세계에서 부르그뉴 피노누아의 최고급 생산자들이 보여주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 같은 품종, 같은 토양에서도 생산자의 철학과 방법론에 따라 경험의 층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2-2. 경험적 가치의 의미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치는 종종 물질적 속성으로 환원된다. 커피의 경우에도 원두의 산지, 고도, 품종, 가공 방식 등이 가격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발표자의 실천에서 핵심은 이러한 속성 변수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소비자의 경험 안에서 어떻게 통합되는가이다.

'경험적 가치'란,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단순한 소비를 넘어 기억에 남는 감각적·감정적 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습관적 소비와 구별되며, 소비자가 그 경험을 타인에게 언어로 전달하고 싶어지는 상태를 만들어낸다. 발표자는 이 상태를 커피가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본다.

3. 공간21의 접근 방식: 철학으로서의 로스팅과 추출

3-1. 기존 이론과의 차별성

발표자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로스팅 및 추출의 접근 방식과는 다소 다른

방향을 탐색해왔다.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 그 철학적 방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세상에는 레시피를 먼저 공개하는 요리사와, 손님과 함께 그 맛을 발견해가기를 기다리는 요리사가 있다. 발표자는 후자의 방식을 택해왔다.

이는 단순한 비밀주의가 아니다. 어떤 접근 방식이든 그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수용하는 측의 경험과 감각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소한 감각적 경험을 이론적 설명으로 앞서 규정하면, 소비자는 자신의 감각보다 설명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진정한 경험적 발견이 일어나지 않는다.

3-2. 시절의 인연과 경험의 축적

공간21은 지난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조용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광고나 미디어 노출보다 직접적 경험을 통한 소통을 우선시했으며, 소비자 한 분 한 분과의 대화 속에서 커피가 전달할 수 있는 가치의 범위를 탐색해왔다.

발표자는 이 과정을 '시절의 인연'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좋은 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과 상황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발표자 자신이 2016년 아버지의 권유라는 인연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났듯, 공간21을 찾는 소비자들도 각자의 시절과 인연을 통해 그 경험에 다가온다.

4. 커피 밸류체인에서 경험적 가치의 위치

4-1. 밸류체인의 현재 구조

커피 밸류체인은 일반적으로 생산(재배·수확) → 가공(정제·건조) → 유통(수출·수입) → 로스팅 → 추출·서비스 → 소비자의 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에서 가치가 부가되며, 현재 글로벌 커피 산업에서는 로스팅 이후 단계, 즉 브랜드와 소비자 경험 영역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가 형성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 논의는 생산지 다변화, 공급망 안정성, 가격 변동성 대응에 집중되어 있다. 소비자가 실제로 컵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얕다.

4-2. 경험적 가치의 부상과 역방향 흐름

최근 커피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제품 자체의 품질을 넘어, 소비자가 체험하는 '경험적 가치'가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커피를 매개로 한 감각적·인지적 경험이 소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밸류체인은 생산과 유통, 가공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소비 단계에서의 경험이 다시 상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즉, 소비자의 경험이 생산 방식과 유통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역방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간21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커피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해석의 과정을 포함한 경험으로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원두의 산지와 가공 방식, 로스팅의도에 대한 설명과 그 커피를 다루는 방식과 그 결과물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소비자가 커피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밸류체인에 참여하는 해석자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커피의 가치가 물리적 품질뿐 아니라, 그에 부여된 의미와 경험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3. 경험의 질이 밸류체인 전체를 재정의한다

결과적으로 경험적 가치는 밸류체인의 말단에서 발생하는 부가 요소가 아니라, 전체 구조를 재편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공간21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운영 방식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발표자의 관점에서, 커피 밸류체인의 진정한 완성은 소비자의 컵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질에 달려 있다. 아무리 뛰어난 원두가 공급되어도,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단계에서 경험의 폭과 깊이가 확보되지 않고, 그 원두가 지닌 가능성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면 밸류체인의 상위 단계에서 창출된 가치는 희석된다. 추출과 서비스 단계에서 경험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밸류체인 전체의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으며, 하이엔드 커피 실천가는 공급망 상류의 생산자들과 함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다.

5. 나가며: 더 높은 산이 있다는 것

발표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자 했다. 하나는, 커피가 아직 자신의 천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커피의 경험은, 아직 도달 가능한 수준의 전부 아닐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빠른 확장보다 깊은 경험을, 광범위한 노출보다 준비된 만남을 우선하는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고 발표자는 믿는다.

부산이 커피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 시점에, 발표자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단순하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산이 가장 높다는 전제를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유연한 사고와 경험의 다양화 없이는 새로운 가치가 싹트기 어렵다.

미래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산 너머에 더 높은 산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공간21은 그 방향으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걸어가고 있다.



패널 1

불확실성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전략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에 대한 한국의 공급망 전략

2026. 03. 27.

김 선 진 (동아대학교)



목차

1. 연구배경
2. 대만 문제와 미·중·대만 '실리콘-삼각관계'의 균형
3. 대만 문제와 한·대만 산업 공급망 구조
4. 대만 문제와 한·대만 반도체 공급망 구조
5. 요약 및 결론: 한국의 대응 전략

1. 연구배경

1.1. 국제정세 불확실성 가속화

- '러시아-우크라이나(2022)', '이스라엘-팔레스타인(2023)', '미국-이란(2026)' 전쟁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중 패권 경쟁 속 대만 문제(대만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만과 한국과의 상호보완적인 공급망 구조를 분석하고 그 파급 수준을 예측해 전략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 미국 외교협회(CFR)가 발표하는 「안보위협우선순위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대만을 지정함.
- ✓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양안(兩岸) 간 갈등이 부각되며 제20차 당대회(2022년)에서 시진핑의 대만을 향한 무력 동원 통일 의지 피력
- ✓ 차이잉원 총통 집권기(2016-2023) ~ 라이칭더 총통 집권기(2024-현재): 중국은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만해협을 둘러싼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

1. 연구배경

1.1. 국제정세 불확실성 가속화

❖ 대만해협 둘러싼 중국인민해방군의 네 차례 군사훈련 (2022~현재)

- 1) 2022. 8.,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72시간동안 대만섬 봉쇄와 대만과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동평-15B 미사일을 발사
- 2) 2024. 5. 23.~24.,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에서 대만섬을 포위하는 '연합검(聯合利劍)-2024A' 훈련 시행
- 3) 2024. 10. 14., 대만 건국기념일 이후 대만섬을 포위하는 '연합검(聯合利劍)-2024B' 훈련을 단행
- 4) 2025. 4. 1~2., '해협의 천둥(海峽雷霆)-2025A' 작전으로 함정 20여 척, 군용기 70여 대를 동원하여 대만해협을 포위하는 훈련을 감행

<그림1-1> 중국 항공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입 일수 (단위: 건)



자료: Military balance, www.iiss.org(검색일: 2025. 4. 5.)

<그림1-2> 1-2. 중국의 '대만포위' 군사훈련 구역



자료: efficio, "China-Taiwan tensions: Impacts on global supply chains and semiconductor availability," <https://www.efficioconsulting.com/en-gb/resources/all/china-taiwan-tensions-impacts-on-global-supply-chains-and-semiconductor-availability/>(검색일: 2025. 4. 5.)

1. 연구배경

1.2. 미국발 중국의 대만침공설

- 러-우 전쟁이 본격화된 2022년 이후, 미국발 중국의 대만침공설이 부각되면서 반도체 공급 차질 및 경제 피해 규모에 대한 다수의 보고서와 언론 보고가 제기됨
-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23.)는 '위게임 시나리오'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과 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상정한 결과, 미중 양국 모두 막대한 군사적 인명 피해와 전력 파괴인 후과(後果)만 남는다고 분석함
- ✓ 또한 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2023.3)는 대만 반도체 산업의 높은 집중도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무력 충돌을 통해 대만 통일을 감행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붕괴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 이에 따라 대만 중심의 반도체 생산 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 한편, 블룸버그 통신(2024)이 밝힌 ① 중국의 대만 침공시 피해 규모(△ 전 세계: 10.2%, △ 대만: 40%, △ 중국: 16.7%, △ 한국: 23.3%, △ 일본: 13.5%, △ 미국: 6.7% 하락), ② 전면전이 아닌 1년간 봉쇄 시나리오로 인한 피해 규모(△ 전 세계: 5%, △ 대만: 12.2%, △ 중국: 8.9%, 미국: 3.3% 하락)을 분석함.
- ❖ 추정 근거는 반도체, 무역 및 금융 충격을 모두 반영한 추정치임

2. 대만 문제와 미·중·대만 '실리콘-삼각관계'의 균형

2.1. 대만해협의 위기 가능성은?

- 미국 군·정보 수뇌부와 학계는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과 시진핑 4기 진입을 앞둔 2027년을 전후로 양안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음. 그러나 실제 침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특정 시점('연제')에 주목하기보다, '어떠한 조건'이 충족될 때 행동이 개시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보다 중요함
- ✓ 중국은 「반국가분열법」에서 무력 사용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대만 독립'에 대한 대응임
- ✓ 미국과 대만은 '대만 독립'에 더해 '대만의 핵무기 보유'와 '외국 세력과 군대의 대만 개입'으로 분석함
→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단기간 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함

〈표2-1〉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조건

중국 공식 견해	대만의 입장	미국의 입장
① '대만독립(台灣獨立)' 분리주의 : 어떤 명목이나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는 경우	① 대만 독립 선언 : 대만이 독립으로 향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대만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① 대만 독립 공식 선언, 대만 독립으로 향하는 징조, 대만 내부 불안정화
② 대만과 중국의 분리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② 중국 내부의 동요와 대만해협의 불안정화, 양안의 평화적 통일 지연	② 대만이 핵무기 보유, 통일 관련 양안 간 대화 재개의 무기한 연기
③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	③ 외부 세력이 대만 문제에 관여할 경우, 외부 군대가 대만에 주둔할 경우	③ 대만 내정에 대한 외국 군대의 간섭
반국가분열법(2006. 3.)	중공 군력보고(2021)	중국 연차보고서(2023. 10.)

자료: 「反分裂国家法 2005年 3月 14日 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會議通過」(2005. 3. 15.)(검색일: 2025. 5. 25.); 翁衍慶(2023), 『中共軍史、軍力和对台威脅』, pp. 365~366; U.S. Department of Defense(2023),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3," Annual Report to Congress, pp. 136-137.

2. 대만 문제와 미·중·대만 '실리콘-삼각관계'의 균형

■ 2.2. 현 트럼프 2기, 미·중·대만이 원하는 '현상유지'

[대만의 입장]

- TSMC의 對미국 투자가 2025년 3월까지 총 1,680억 달러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상호관세에서 대만 32%(중: 30%, 한:25%, 일:24%) 부과와 국방비 인상요구(GDP 대비 10%)로 대내 여론이 악화됨
- ✓ 특히, 대만 유사시 미국이 대만을 지원할 것이라는 인식이 2024년 44.5% → 2025년 37.5%로 하락하는 등 안보 신뢰도 저하됨
- ✓ 이러한 가운데 라이칭더 총통의 지지율이 32%로 하락(민주당 집권 이후 최저 수준)하면서, 2025년 5월 집권 1주기를 계기로, "중국과 유의미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양안 간 갈등 수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함

[중국의 입장]

- 중국은 대만문제 해결에 있어 무력 침공보다는 경제적·정치적 수단을 통한 '흡수통일'을 우선적으로 염두하고 있음. 즉, 대만의 對중국 무역의존도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외교적 고립 및 회색지대 전술(gray zone strategy)을 활용하여 대만을 관리해 옴.
- ✓ 실제로 2024년 기준, 대만의 對중국(홍콩 포함) 수출입 의존도는 20.3%(26.6%)에 달하며, 특히 전기전자·정밀기계 분야의 비중은 67.5%로 나타나 산업적으로 높은 연계성을 보이고 있음
- ✓ 또한 2020년 기준, 중국 상위 10대 수출기업 중 6개가 대만계 기업(주로 정보통신 분야)으로, 여전히 중국의 주요 FDI로 세수·고용 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2. 대만 문제와 미·중·대만 '실리콘-삼각관계'의 균형

■ 2.2. 현 트럼프 2기, 미·중·대만이 원하는 '현상유지'

[중국의 입장]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인명 피해 발생에 따른 내부 여론 악화와 함께 시진핑 체제 및 공산당 통치 기반에 대한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 ✓ 더불어 2026년 3월 양회에서 제시된 경제성장률 목표(4.5~5%)를 고려할 때, 중국은 첨단산업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위축, △청년실업 증가, △지방정부 부채 확대 등으로 민생 경기와 기업 성장 간 괴리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 이에 따라 내부 실물경기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은 대만 침공과 같은 고위험 대외 군사행동이 쉽게 결정되기 어려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미국의 입장]

- 미국은 대중 견제를 위한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의 확전은 억제하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 2026년 1월 23일 발표된 국가방어전략(NDS)은 중국에 대해 '억지(deterrence)'와 '힘을 통한 안정 유지'를 제시하였고,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축소됨(2025년 12월 국가안보전략(NSS) 문서 대비)
- ✓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부 정책 담당인 Elbridge Colby 차관은 과거 미 의회 인준 청문회(2025. 3. 4.)에서 '대만은 미국에 중요하나 실존적 이익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음.

2. 대만 문제와 미·중·대만 '실리콘-삼각관계'의 균형

2.2. 현 트럼프 2기, 미·중·대만이 원하는 '현상유지'

[미국의 입장]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시기에 대만을 절대적 방어선이 아닌 협상의 대상으로 언급한 기조와 궤를 같이함. 이러한 발언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실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함.

● 더불어 최근 이란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군사 자산 분산 및 전력 운용 부담은 미국의 동시다발적 군사 개입 능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미군 내 무기 고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두고 동맹국의 군함 파견 요청 및 한국 사드를 이전함)

→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대만 유사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음

2. 대만 문제와 미·중·대만 '실리콘-삼각관계'의 균형

2.3. '미·중·대만'의 '실리콘-삼각관계(Silicon triangle) 균형

● 미·중·대만 간 이른바 '실리콘-삼각관계(Silicon triangle)'의 균형 여부는 향후 '현상유지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 싱크탱크인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 2023)와 랜드연구소(RAND Institution, 2023.3)는 각각 미국의 대만 반도체 제조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으며, 대만 유사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붕괴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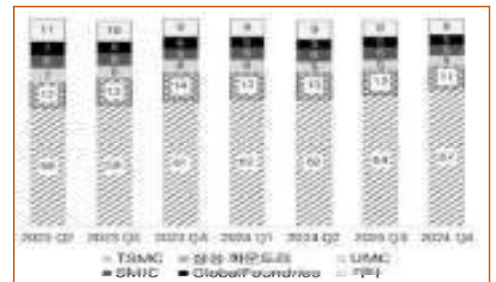
→ 이에 따라 TSMC 생산의 일부를 대만 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적시됨

● 이러한 구조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미·중·대만 간 현상유지(시나리오 I)'와 '대만 격리(시나리오 II)'를 주요 분석 틀로 설정할 수 있음.

✓ 다수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만해협 격리(봉쇄)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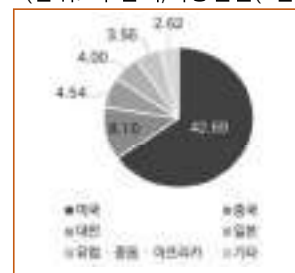
❖ CSIS는 만일 중국이 무력수단을 채택한다면 직접적인 침공보다는 봉쇄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함

<그림 2-1>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시장 점유율 (2023 Q2~2024 Q4) (단위: %)



자료: Counterpoint(2025), Global Semiconductor Foundry Market Share: Quarterly

<그림 2-2> TSMC의 반도체 수익(Net revenue)에 대한 국가별 기여도(2023년) (단위: 억 달러, 적용환율(1달러=33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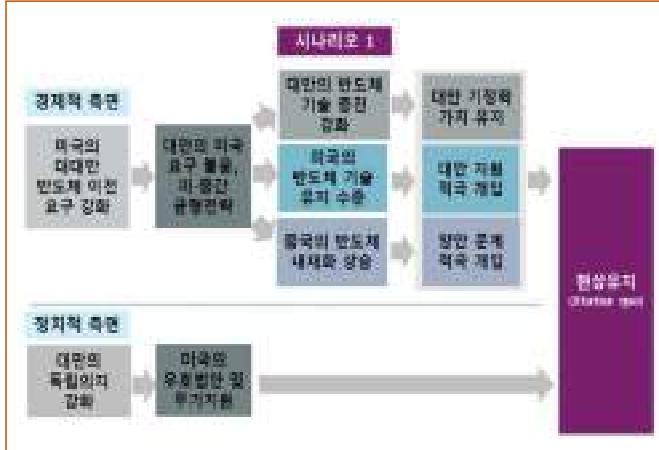


자료: TSMC, "Financial Results -2023Q4," <https://investor.tsmc.com/english/quarterly-results/2023/q4>(검색일: 2025. 3. 21.).

2. 대만 문제와 미·중·대만 '실리콘-삼각관계'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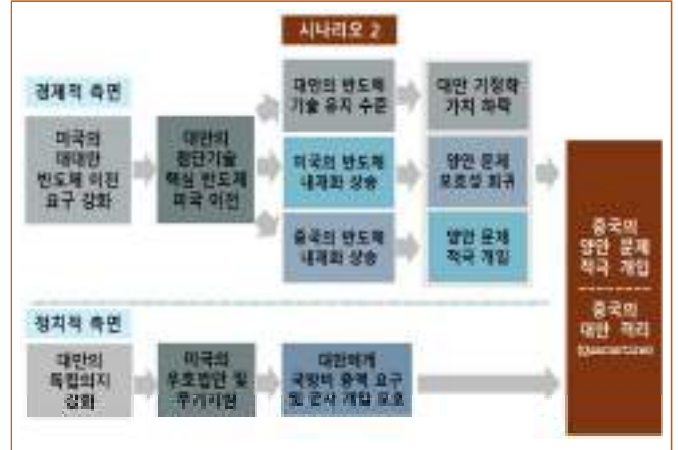
2.3. '미·중·대만'의 '실리콘-삼각관계(Silicon triangle) 균형

<그림 2-3> 시나리오 I: '미·중·대만' 현상유지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4> 시나리오 II: 대만 격리



자료: 저자 작성

3. 대만 문제와 한·대만 산업 공급망 구조

3.1. 분석 배경과 개요

(1) 분석 배경

- 한국은 대만과 산업·무역 구조상 깊이 연결되어 있어, 대만 격리시 직접적인 경제·산업 피해가 불가피함
- ✓ 본 연구는 해상교통로 차단에 따른 물류 피해 추정이 아닌, 대만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수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함.
- 이는 물동량 기반 추정 방식이 연구방법론에 따라 결과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임.
- 특히 산업연관분석(IO)을 활용한 생산 및 수출 피해 추정은 분석 주체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일반균형(CGE) 모형 역시 산업연관분석을 기반으로 확장된 분석 틀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뒷받침함
-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만 문제가 한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고찰함. 구체적으로 ① 산업연관분석(IO)을 통해 대만의 對한국 전 산업에 대한 생산 및 수출유발효과를 산출하고, ② 무역통계(상호의존도)를 활용하여 반도체 산업의 수출 경쟁력과 취약성을 분석함

3. 대만 문제와 한·대만 산업 공급망 구조

3.1. 분석 배경과 개요

(2) 분석 개요

-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12개 산업을 대상으로 생산기술 수준 변화에 따른 한·대만 간 연도별 상호의존 관계와 생산파급효과(production ripple effect)와 수출유발효과를 측정
- 분석기간: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
- 분석대상
 - ✓ 한·대만의 최종수요(소비, 투자, 재고 등)와 수출에 의해 유발되는 생산 및 수출 의존도를 분석함
 - ✓ 또한 대만과의 무역 거래가 중단(대만 격리)될 경우 초래되는 생산유발효과 및 수출파급효과도 함께 측정
- 자료출처
 - ✓ 생산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다지역 산업연관표(MRIO)에서 35개 산업을 제조업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서비스업을 제외한 12개 산업으로 설정
 - ✓ 한편, 수출유발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KITA)의 KO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중심의 13개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3. 대만 문제와 한·대만 산업 공급망 구조

3.1. 분석 배경과 개요

<표 3-1> HS 2단위 기준 산업 통합분류표

산업명	HS 2단위
1 농림수산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2 광업	25 26 27
3 식료품	16 17 18 19 20 21 22 23 24
4 섬유제품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5 기타 경공업	41 42 43 44 45 46 47 48 49
6 화학제품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7 비금속광물	08 09 10 11
8 금속제품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9 일반기계	84
10 전기전자기계	85
11 수송기계	86 87 88 89
12 정밀기계	90 91 92 93
13 기타 제조업	64 65 66 67 68 69 94 95 96 97 98 99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의 HS 품목분류(검색일: 2025. 4. 18.)를 인용하여 작성.

<표 3-2> KCJT IO 통합 부문분류표

분류코드	KCJT IO 통합 부문분류	ADB-MRIO 부문분류
001	농림수산업	001
002	광업	002
003	식료품	003
004	섬유제품	004
005	기타 경공업	005, 006, 007
006	화학제품	008, 009, 010
007	비금속광물	011
008	금속제품	012
009	일반기계	013
010	전기전자·정밀기계	014
011	수송기계	015
012	기타 제조업	016

주: KCJT IO는 한국, 중국, 일본 및 대만의 통합 부문분류 산업연관표를 의미함. 자료: ADB-MRIO(검색일: 2025. 3. 7.)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대만 문제와 한·대만 산업 공급망 구조

3.2. 대만-한국 간 생산파급효과 변화와 특징

(1) 대만의 對한국 생산파급효과

- 대만의 對한국 의존도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17년(8.92%)을 정점으로 크게 하락하여 2023년에는 3.5% 수준으로 축소됨
 - ✓ 이는 대만의 산업생산 활동이 한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변화는 대만의 한국 의존도 감소에 따른 연관관계 약화에 기인함.
 - ✓ 즉,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대만-미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대만의 對중국 의존도 심화 등의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 산업별로는 대만의 對한국 생산파급효과가 화학제품(13.26%)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어 섬유제품(10.62%), 일반기계(8.14%), 금속제품(7.54%), 수송기계(7.3%), 순으로 분석됨
 - ✓ 다만, 이러한 산업들 역시 2017년(8.92%)을 정점으로 파급효과가 크게 축소됨. 특히, 화학제품(20.84% → 7.67%)과 섬유제품(15.48% → 7.67%)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3. 대만 문제와 한·대만 산업 공급망 구조

3.2. 대만-한국 간 생산파급효과 변화와 특징

<표 3-3> 대만의 對한국 생산파급효과 변화

(단위: %)

품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농림수산업	2.29	3.77	4.79	5.20	4.14	4.95	5.42	5.58	3.13	2.74	1.80	2.41	2.66	1.67	3.61
광업	2.11	4.53	5.07	3.62	3.47	4.16	2.52	2.46	1.69	0.72	0.78	0.75	1.25	1.38	2.47
식품	2.49	3.13	3.98	4.23	3.25	3.84	3.66	3.98	2.68	2.55	1.90	2.14	2.20	1.41	2.96
섬유제품	8.09	11.44	13.25	12.39	13.01	14.28	16.28	15.48	9.05	9.49	7.52	7.01	7.60	3.81	10.62
기타 경공업	4.37	5.49	6.32	6.23	5.84	6.26	6.64	6.91	4.33	4.58	3.79	4.07	4.27	1.92	5.07
화학제품	10.74	13.30	16.76	19.06	17.74	16.51	18.92	20.84	10.34	9.89	7.39	7.56	8.86	7.67	13.26
비금속광물	3.95	4.72	5.08	4.45	3.96	4.10	4.58	4.50	3.73	2.95	2.30	2.31	2.99	2.39	3.72
금속제품	9.62	8.77	8.09	7.80	7.91	8.70	7.64	9.80	7.07	5.86	5.38	6.43	7.01	5.53	7.54
일반기계	7.99	7.58	8.21	9.18	8.97	10.16	8.97	10.85	8.08	7.26	6.47	7.33	7.76	5.13	8.14
전기전자·정밀기계	9.54	9.04	6.15	6.71	6.72	7.38	8.72	8.24	6.22	6.39	4.55	3.78	4.07	2.89	6.46
수송기계	6.70	7.10	8.75	8.68	9.13	9.83	10.74	9.83	5.71	6.03	5.14	5.00	5.74	3.80	7.30
기타 제조업	7.32	7.65	8.79	8.23	8.37	8.94	8.67	8.60	6.05	5.60	5.12	4.54	4.75	3.75	6.88
평균	6.27	7.21	7.94	7.98	7.71	8.26	8.56	8.92	5.67	5.34	4.34	4.44	4.93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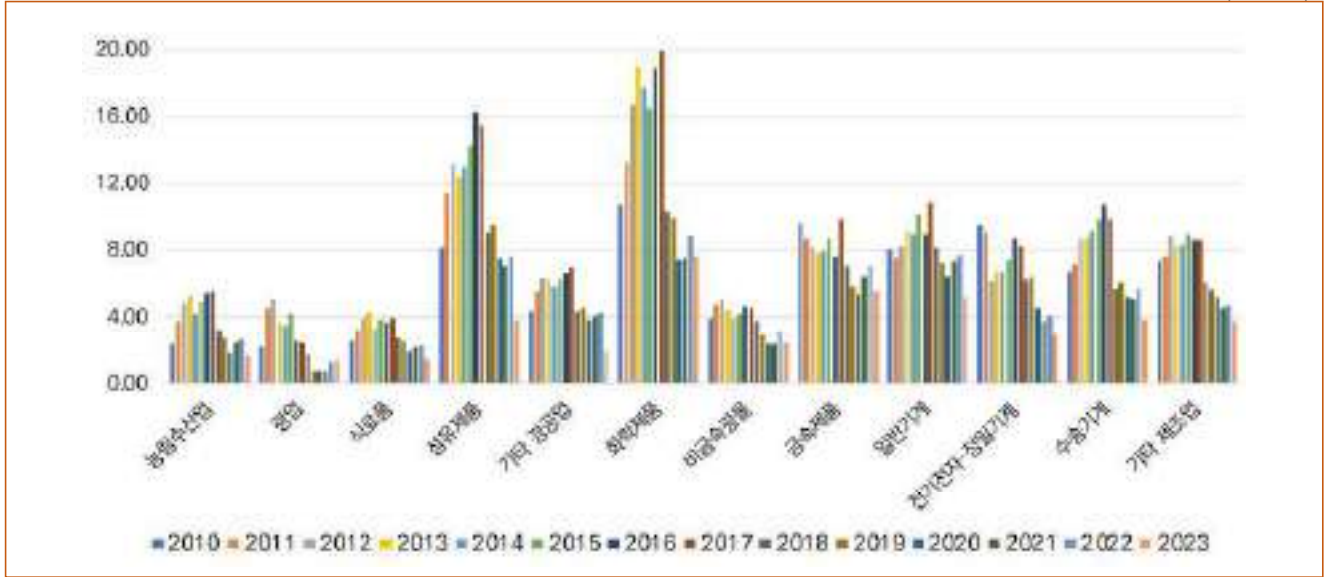
자료: ADB-MRIO(검색일: 2025. 3. 10.)를 통합 부문분류한 KCJT IO를 토대로 산출.

3. 대만 문제와 한·대만 산업 공급망 구조

3.2. 대만-한국 간 생산파급효과 변화와 특징

<그림 3-1> 대만의 산업별 對한국 생산파급효과 변화

(단위: %)



자료: ADB-MRIO(검색일: 2025. 3. 10.)를 통합 부문분류한 KCJT IO를 토대로 산출.

3. 대만 문제와 한·대만 산업 공급망 구조

3.2. 대만-한국 간 생산파급효과 변화와 특징

(2) 한국의 對대만 생산파급효과

- 한국의 대만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에 따라 對대만 생산파급효과 또한 지속적으로 축소됨. 구체적으로 2010년 1.64%에서 2023년 0.79%로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 다만, 미·중 간 무역마찰(2017~19년)과 코로나19(2020년)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남. 이는 미·중 무역마찰과 일본의 對한국 수출통제에 따른 한국의 공급처 다변화, 그리고 전자제품 수요 급증으로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가 확대된 데 기인함
- 산업별로는 한국의 산업생산이 대만 생산을 가장 크게 유발하는 분야가 전기전자·정밀기계(3.55%)로 나타나, 해당 산업의 대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 그러나 2017년 이후(2020년 제외) 대만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대만의 對한국 수입 감소와 對중국 및 對일본 수입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됨
- 이 외에도 한국의 대만 의존도는 수송기계(2.17%) → 금속제품(1.94%) → 일반기계(1.92%) → 화학제품(1.82%) → 섬유제품(1.47%) → 비금속광물(1.36%) 순으로 나타나며, 해당 산업들은 대만의 산업생산을 상대적으로 크게 유발하는 긴밀한 공급망 구조 속에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3. 대만 문제와 한·대만 산업 공급망 구조

3.2. 대만-한국 간 생산파급효과 변화와 특징

<표 3-4> 한국의 對대만 생산파급효과 변화

(단위: %)

품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농림수산업	0.53	0.64	0.70	0.68	0.60	0.53	0.43	0.51	0.43	0.80	0.51	0.49	0.62	0.33	0.56
광업	0.48	0.60	0.53	0.48	0.53	0.47	0.35	0.43	0.58	1.77	0.70	0.35	0.41	0.25	0.57
식료품	0.64	0.77	0.80	0.82	0.73	0.66	0.52	0.61	0.66	0.86	0.66	0.58	0.89	0.40	0.69
섬유제품	1.66	1.91	1.99	1.96	1.68	1.47	1.15	1.34	1.54	1.37	1.29	1.16	1.40	0.60	1.47
기타 경공업	0.86	1.12	1.14	1.08	0.99	0.85	0.67	1.03	0.74	0.76	0.73	0.71	0.93	0.46	0.86
화학제품	1.92	2.07	2.16	2.27	2.22	2.06	1.71	1.91	1.59	1.97	1.45	1.50	1.68	0.98	1.82
비금속광물	1.21	1.56	1.64	1.61	1.43	1.33	1.09	1.33	1.16	1.59	1.26	1.28	1.54	0.98	1.36
금속제품	1.99	2.38	2.06	2.19	2.10	2.12	1.61	2.09	2.28	1.86	2.10	1.63	1.82	0.89	1.94
일반기계	2.17	2.68	2.39	2.22	2.08	2.01	1.55	1.81	2.10	1.44	2.27	1.52	1.76	0.92	1.92
전기전자·정밀기계	4.55	5.84	5.21	4.38	4.11	3.95	3.18	3.21	3.04	1.77	4.22	2.38	2.40	1.52	3.55
수송기계	2.04	2.67	2.37	2.21	2.10	2.01	1.61	1.95	2.67	1.90	2.95	2.10	2.57	1.21	2.17
기타 제조업	1.59	1.96	1.87	1.77	1.64	1.49	1.14	1.37	1.46	1.39	1.44	1.22	1.82	0.89	1.50
평균	1.64	2.02	1.91	1.81	1.68	1.58	1.25	1.47	1.52	1.46	1.63	1.24	1.49	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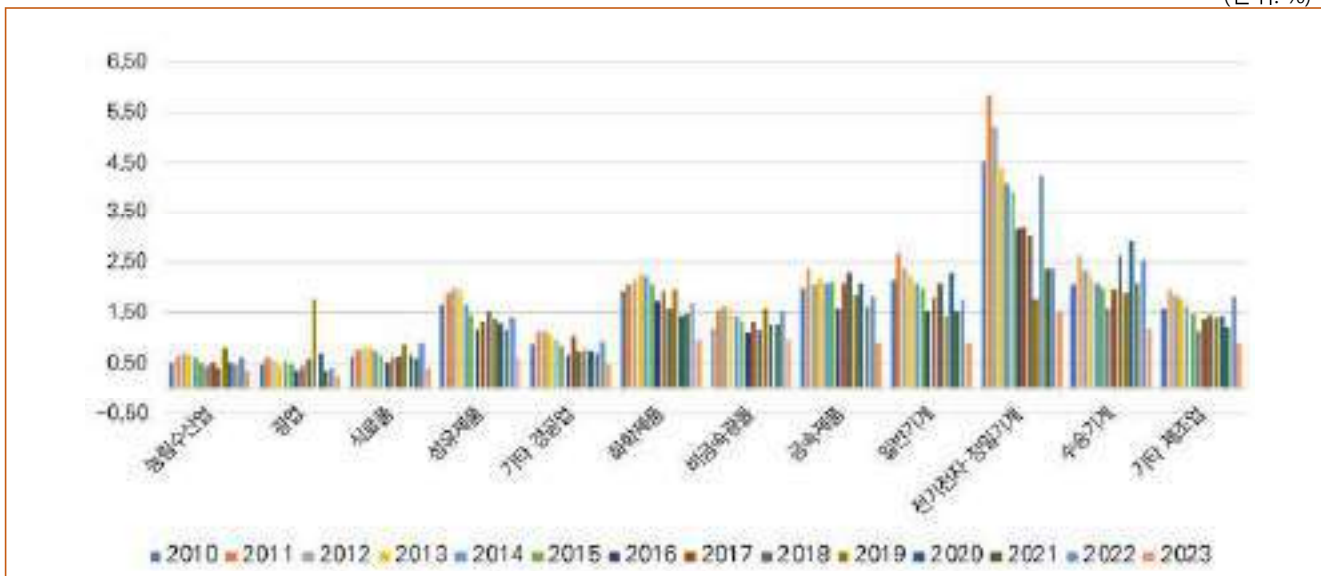
자료: ADB-MRIO(검색일: 2025. 3. 10.)를 통합 부문분류한 KCJT IO를 토대로 산출.

3. 대만 문제와 한·대만 산업 공급망 구조

3.2. 대만-한국 간 생산파급효과 변화와 특징

<그림 3-2> 한국의 산업별 對대만 생산파급효과 변화

(단위: %)



자료: ADB-MRIO(검색일: 2025. 3. 10.)를 통합 부문분류한 KCJT IO를 토대로 산출.

3. 대만 문제와 한·대만 산업 공급망 구조

3.3. 대만의 무역거래 중단이 한국 생산 및 수출의 유발효과에 미치는 영향

(1) 대만 격리가 한국 생산유발효과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대만 격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산업에 미치는 피해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2023년 기준 대만과의 산업 및 무역의 연관관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추계함
 - ✓ 분석 결과, 한국은 대만 산업생산과의 연계를 통해 약 138억 달러의 생산창출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로, 전기전자·정밀기계(62억 달러, 25.3%) → 화학제품(35억 달러, 23.9%) → 금속제품(18억 달러, 11.5%) → 일반기계(11억 달러, 13.6%) 순으로 나타나, 주요 산업 전반에서 대만과의 연관성이 높음.
 - ❖ 괄호는 생산유발비중임
 - ✓ 특히 반도체 산업이 포함된 전기전자 분야에서 생산유발효과가 압도적으로 큰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산업에서 대만과의 공급망 연계 유지가 한국 경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됨
- 동 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한·대만 간 긴밀한 공급망은 자유무역 및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형성된 것으로, 대만 격리로 양국 간 무역이 중단될 경우, 약 138억 달러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
 - ✓ 또한 한·대만은 글로벌 연계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해 온 만큼, 해당 공급망의 균열은 단순히 생산유발효과 감소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3. 대만 문제와 한·대만 산업 공급망 구조

3.3. 대만의 무역거래 중단이 한국 생산 및 수출의 유발효과에 미치는 영향

<표 3-5> 한국의 산업별 대대만 생산유발규모와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생산 유발 규모	생산 유발 비중
농림수산업	170.7	1.3
공업	25.0	18.2
식료품	343.0	2.0
섬유제품	88.6	7.3
기타 경공업	86.9	3.4
화학제품	3,462.6	23.9
비금속광물	147.9	11.3
금속제품	1,811.9	11.5
일반기계	1,052.0	13.6
전기전자·정밀기계	6,184.8	25.3
수송기계	375.6	4.7
기타 제조업	49.7	11.2
합계	13,798.7	11.1

자료: ADB-MRIO(검색일: 2025. 3. 10.)를 통합 부문분류한 KCJT IO를 토대로 산출.

3. 대만 문제와 한·대만 산업 공급망 구조

3.3. 대만의 무역거래 중단이 한국 생산 및 수출의 유발효과에 미치는 영향

(2) 대만 격리가 한국 수출유발효과에 미치는 영향

- 대만-한국 간 연관관계에 의해 유발되는 수출 규모를 고려할 때, 양국 간 무역거래 중단 시 한국이 받는 경제적 타격은 상당할 것임.
 - ✓ 2023년 기준, 한국이 대만과의 무역을 통해 얻는 수출유발효과는 약 512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대만이 한국의 수출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 ❖ 수출유발효과는 최종수요와 수출 규모를 토대로 산출
-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정밀기계(222억 달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금속제품(100억 달러), 화학제품(87억 달러), 일반기계(42억 달러), 광업(1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 ✓ 특히 전기전자·정밀기계 분야에서의 수출 증대 효과가 두드러져, 해당 산업에서 대만과의 연관관계가 생산뿐 아니라 수출 측면에서도 핵심적임을 보여줌. 이는 양국 간 상호 의존 및 보완 관계 속에서 동시에 경쟁이 병존하고 있음을 시사함

3. 대만 문제와 한·대만 산업 공급망 구조

3.3. 대만의 무역거래 중단이 한국 생산 및 수출의 유발효과에 미치는 영향

<표 3-6> 한국의 산업별 對대만 수출유발규모와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유발 규모	수출 유발 비중
농림수산업	282.7	0.8
광업	1,180.0	54.6
식품	490.0	0.7
섬유제품	342.9	1.5
기타 경공업	964.0	4.3
화학제품	8,722.4	12.4
비금속광물	1,487.2	19.8
금속제품	9,975.7	9.7
일반기계	4,235.0	6.8
전기전자·정밀기계	22,186.0	28.0
수송기계	1,088.8	0.9
기타 제조업	206.6	2.5
합계	51,181.3	11.8

자료: ADB-MRIO(검색일: 2025. 3. 10.)를 통합 부문분류한 KCJT IO를 토대로 산출.

4. 대만 문제와 한·대만 반도체 공급망 구조

4.1. 분석 개요와 모형

(1) 분석 개요

- 대만-한국 간 생산파급효과와 수출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전기전자·정밀기계임. 미 싱크탱크인 후버 연구소(Hoover Institution)와 랜드연구소(2023.3)가 밝힌 바와 같이, 전세계의 대만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만큼, 한국의 대만 반도체 의존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 존재
- ✓ 중국의 대만 격리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만-한국간 반도체 무역 상호의존도 수준을 반도체 세부 품목별로 파악하고자 함.
- ✓ 특히 반도체 세부 품목은 수출입품목분류체계(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를 기준으로 분류함. 총 8개(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집적회로반도체 부품,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기타 개별소자반도체, 개별소자반도체 부품, 실리콘웨이퍼)로 세분화하였으며, HS코드 6단위와 연계하여 분석을 수행함
- ✓ 이는 대만의 수출입이 차단되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피해가 예상되는 반도체 품목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4. 대만 문제와 한·대만 반도체 공급망 구조

4.1. 분석 개요와 모형

(2) 분석 모형

- 무역(수출, 수입) 의존도는 해당국 전체 무역(수출, 수입)에서 상대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양국 상호 간의 의존 정도를 분석하며, 1에 가까울수록 의존도가 높음

$$\text{수출 의존도}_{ij}^k = \frac{EX_{ij}^k}{EX_{iW}^k} \quad \text{수입 의존도}_{ij}^k = \frac{IM_{ij}^k}{IM_{iW}^k}$$

$$\text{무역 의존도}_{ij}^k = \frac{(EX_{ij}^k + IM_{ij}^k)}{(EX_{iW}^k + IM_{iW}^k)}$$

EX : 수출, IM : 수입, W : 전 세계,
 k : 특정품목, i : 해당국, j : 상대국

<표 4-1> 반도체 산업 MTI와 HS코드 연계

		MTI	HS 6단위
반도체 (831)	집적회로 반도체	메모리반도체 (831110)	847330 854232
		시스템반도체	854231
		프로세서의 컨트롤러 (831120)	854233
		중복기 (831130)	852352 854239
		기타 집적회로반도체 (831190)	
	집적회로 반도체 부품	집적회로반도체 부품 (831200)	854290 854390 854890
	개별소자 반도체	트랜지스터 (831310)	854121 854129
		다이오드 (831320)	854110
		기타 개별소자반도체 (831390)	854130 854140 854150 854160
	개별소자 반도체 부품	개별소자반도체 부품 (831400)	854190
실리콘웨이퍼	실리콘웨이퍼 (831500)	381800	

자료: 김은영, 서창배(2021), pp.199~200.

4. 대만 문제와 한·대만 반도체 공급망 구조

4.2.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 상호의존도 분석

-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의 상호의존도는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짐

[메모리반도체]

- ✓ 대만은 전체 수입의 1/4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對한국 수입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23년 27%로 크게 증가함
- ✓ 반면 한국의 對대만 의존도는 6% 수준에 불과해 해당 품목에서 대만보다 한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를 보임

[시스템반도체]

- ✓ 한국은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임. 대만으로부터의 시스템반도체 수입 비중은 2010년 28%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현재 전체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정도(45%)를 차지함
- ✓ 한국의 對대만 수출 비중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0년대 후반 약 8% 수준에서 2020년대 들어 약 14%까지 확대됨
- ✓ 한편, 대만의 對한국 시스템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10년 16%였던 對한국 수출 비중은 2010년대 후반 이후 8~9% 수준으로 하락함. 반면 대만의 對한국 수입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19년 8%까지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확대되며 2023년에는 18% 수준을 기록함

4. 대만 문제와 한·대만 반도체 공급망 구조

4.2.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 상호의존도 분석

-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의 상호의존도는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짐

[그 외]

- ✓ 집적회로반도체 부품을 보면, 한국은 전체 수입의 19%를 대만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다이오드도 20%를 수입하고, 트랜지스터 역시 12% 수준의 수입 비중을 유지함
- ✓ 한편 기타 개별소자반도체는 2010년 대만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24%에 달하며 높은 의존도를 보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현재는 거의 수입하지 않는 수준임
- ✓ 또한 실리콘웨이퍼의 경우 2010년 한국의 對대만 수출 비중이 37%로 높았으나, 최근 10%로 감소하며 대만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 △집적회로반도체 부품(0.19)과 다이오드(0.20) 등 중간재 부문에서도 각각 수출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기술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산업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4. 대만 문제와 한·대만 반도체 공급망 구조

4.2.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 상호의존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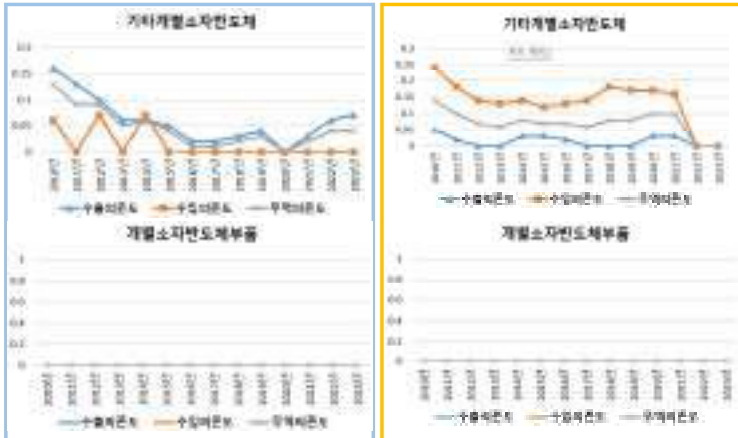
〈그림 4-1〉 대만-한국 반도체 세부 수출품목 상호의존도 추이 비교



4. 대만 문제와 한·대만 반도체 공급망 구조

4.2.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 상호의존도 분석

〈그림 4-1〉 대만-한국 반도체 세부 수출품목 상호의존도 추이 비교



- 정리하면,
 - ✓ 대만은 시스템반도체 중심 파운드리(특히 TSMC) 부문의 높은 수출경쟁력, 그 외 개별소자반도체 및 다이오드 부문 강세
 - ✓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 강세
-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대만 격리로 인해 대만 수출입이 중단된다면, 한국이 받는 산업 충격은 아래와 같음
 - ✓ 시스템반도체(수입의 45%를 대만에 의존)에 직접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해 고부가가치 ICT 산업(스마트폰, AI 반도체, 통신장비) 전반의 생산 차질과 경쟁력 저하가 야기
 - ✓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와 같은 중간재 수급 차질로 완제품의 생산 지연과 비용 상승이 초래

5. 요약 및 결론: 한국의 대응 전략

5.1. 요약

- 전술한 여러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중국의 침공이나 격리 등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대만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는 한국의 경제 및 산업에 대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 이에 대만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여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한국은 대만과 산업·무역 구조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만일 대만 리스크 요인이 확대된다면 산업생산·수출·공급망 전반에서 복합적인 충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 한국은 대만과의 연계를 통해 약 138억 달러 규모의 생산효과와 512억 달러 규모의 수출유발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전자·정밀기계, 화학, 금속, 일반기계 산업에서 높은 연관성 나타냄. 또한 반도체 산업에서는 메모리반도체는 한국 중심, 시스템반도체는 대만 중심의 비대칭적 상호의존 구조가 형성됨
 - ✓ 한국은 시스템반도체 수입의 약 45%를 대만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차질 시 즉각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AI 반도체, 통신장비 등 고부가가치 ICT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큼. 또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중간재 수급 차질은 완제품 생산 지연과 비용 상승을 유발하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

5. 요약 및 결론: 한국의 대응 전략

5.2. 한국의 공급망 대응전략

- 대만 리스크 확대로 한국이 직면할 위험은 단순한 대외 변수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산업구조 자체의 취약성과 직결된 사안임. 따라서 한국의 대응 전략은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간 긴장 고조를 외교·안보 이슈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급망·산업정책·수출전략·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 핵심은 대만 의존 구조의 취약 고리를 정확히 식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급망 분산, 전략 비축, 수출시장 다변화, 민관합동 위기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함
- **한·대만 공급망의 '완전 대체'보다 '취약 고리 보완'에 집중**
 - ✓ 한국의 대만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나, 특정 산업에서는 여전히 높은 상호의존성이 유지됨. 전기전자·정밀기계를 비롯해 화학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수송기계 등은 대만과의 연계가 강한 분야로 분석됨. 따라서 한국은 대만 공급망 전체를 대체하려는 접근보다, 실제 충격이 집중되는 취약 고리를 선별하여 보완하는 방식이 효율적임
 - ✓ 즉, 공급망 전략은 '전면적 탈대만화'가 아니라 '핵심 취약 부문의 선택적 분산'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산업별 대만 의존도, 생산유발효과, 수출유발효과를 결합한 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부터 대체 가능성, 전환 비용, 국산화 수준을 반영한 단계적 대응전략을 마련

5. 요약 및 결론: 한국의 대응 전략

5.2. 한국의 공급망 대응전략

● 반도체 중심 공급망 리스크의 선제적 분산 및 구조적 재편

- ✓ 한국은 대만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산해야 함. 특히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부품(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정밀 전자부품 등을 우선 식별하고, 대체 공급처 확보,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는 공급선 다변화를 넘어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의미함

● 전략 비축 및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전망 구축

- ✓ 대만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균열은 생산 감소와 수출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충격임. 이에,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전략 비축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는 에너지·원자재 중심의 기존 비축 정책을 넘어, 첨단 제조업 핵심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동시에 민간기업의 재고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독자적인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R&D 투자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관련 업계 기술전략 총괄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할 필요
- ✓ 고부가가치 반도체 설계 능력 강화, 공정 기술 내재화, 차세대 반도체(HBM, CXL, PIM 등 AI 반도체, F-RAM, M-RAM, P-RAM, Re-RAM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 역량을 제고할 필요

5. 요약 및 결론: 한국의 대응 전략

5.2. 한국의 공급망 대응전략

● 수출구조 다변화 및 시장 리스크 분산


- ✓ 대만과의 연계를 통해 창출되던 수출효과(약 512억 달러)가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은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추진해야 함. 특히 단기적으로는 아세안, 인도, 미국, 유럽 등 대체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기반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전자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특정 지역 및 특정 생산거점 의존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출 구조를 재편할 필요
- ✓ 동시에 미·일·EU 등과의 다자간 공급망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반도체 원자재 및 부품 조달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시나리오 기반 민관 통합 대응체계 구축

- ✓ 대만 격리와 같은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현상유지-부분 격리-전면 봉쇄' 등 단계별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생산·수출·물류·금융 충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해야 함. 이를 통해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감사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공급망 변화에 대한
부산의 대응 방안 - 수출을 중심으로

2026. 3. 27.

BDI 부산연구원



Contents

1. 초불확실성 시대의 도래
2. 부산의 수출 현황
3. 부산의 수출감소 요인 진단
4. 부산의 수출 활성화 방안

1 초불확실성의 시대

- 1.1. 현상의 목격
- 1.2. 부산의 대응 방향

1. 초불확실성 시대의 도래

(1) 현상의 목격

① 격동적 국제관계 조성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 미국 자국민 보호, **보호무역**, 제조업 르네상스, 일방주의

② 급격한 '통상 리스크' 상승 → 수출에 즉각적 충격

- 미·중 갈등, 글로벌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美 트럼프의 고율관세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랜 동맹국가인 한국, 일본, 독일까지 예외없는 부과
- 한·중·일 및 EU 등 16개국 301조 적용 검토(과잉생산 기준)

③ 물류·에너지 비용 변동성 확대

- 중동발 에너지 대란, 러·우 전쟁 장기화
- 해상운임, 유가, 환율 변동성 증가

④ 전략산업 중심 공급망 재구성

-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중심으로 국가 개입 강화
- 해상운임, 유가, 환율 변동성 증가



1. 초불확실성 시대의 도래

(2) 부산의 대응 방향

- 통상 리스크 관리
- 對美 산학협력 TF 출범
- 알래스카·북극항로 연계한 부산항의 허브회랑 경쟁력 강화



자료: 장정재(2025), 트럼프2.0시대 다시 흔들리는 세계

1.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2) 부산의 대응 방향

① 통상 리스크 관리

- (가칭) 부산시 '통상진흥과' 신설로 통상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중국제품의 국내 공습과 제3국에서 마케팅 접전에 대응한 정책지원 강화
-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기업(자동차, 철강) 출구전략 지원

② 대미 산학협력 TF 출범

- TF에서는 단순 통상 대응이 아닌 비즈니스 협력모델 제안으로 지역기업 성장을 견인
- 부산광역시(부시장) 주관 ▲산학협력 분야▲정책·시장분석 분야▲기업지원 분야로 구성
- 미 해군 함정(MRO)과 조선 수리 분야 협력
- 미국 제조업 부활과 생산시설 거양한 중간·산업재 공급하는 수출기회를 모색



자료: 장정재(2025)

1.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2) 부산의 대응 방향

③ 알래스카·북극항로 연계한 부산항의 허브화 경쟁력 강화

- 부산항→알래스카→북극항로→유럽 주요 항만으로 연결
- 북극항로의 자원·물류 흐름과 동북아의 산업 수요를 연결하는 회랑형 물류 생태계 구축
- 예)러시아·알래스카산 수산물이 부산 수산식품으로 가공되어 K푸드 수출



자료: 장정제(2025)

2 부산의 수출 현황

- 2.1. 한국의 무역수지 변화
- 2.2. 부산의 무역수지 변화
- 2.3. 부산-전국 수출 비교
- 2.4. 부산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
- 2.5. 부산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최근 10년간)
- 2.6. 부산의 국가별 교역 변화 추이
- 2.7. 부산의 국가별 수출 상위 10위 품목

2. 부산의 수출 현황

(1) 한국의 무역수지 변화

- 한국의 수출은 최근 10년 동안 글로벌 시장 상황과 반도체제조업 경기 변동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
- 2015년 수출 5,268억 달러에서 2025년 7,093억 달러로 증가 추세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 부산의 수출 현황

(2) 부산의 무역수지 변화

- 부산 수출이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액 역시 주력산업의 성장한계로 인해 뚜렷한 확대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
- 부산의 무역수지는 2018년 적자 전환 이후 뚜렷한 반등없이 부진한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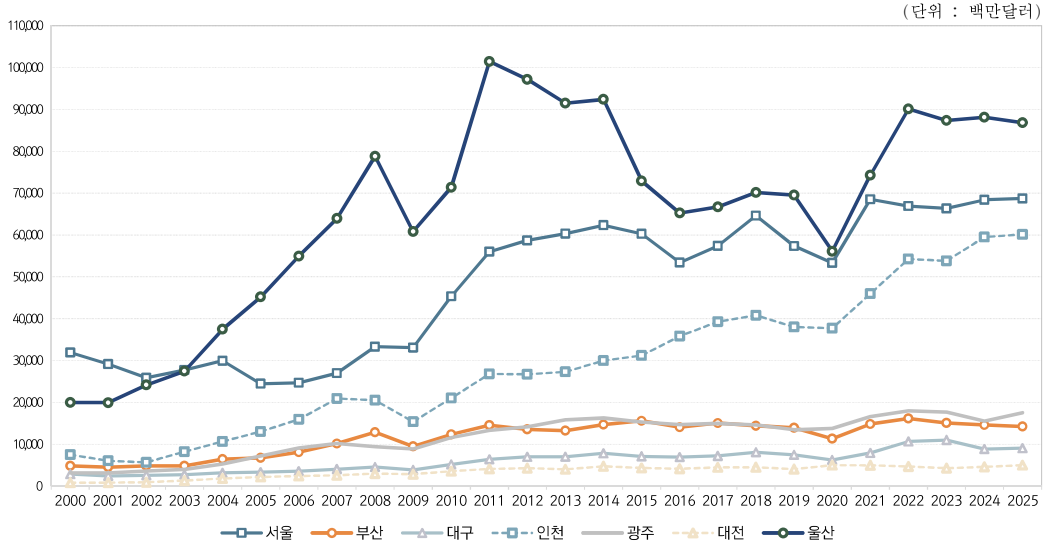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 부산의 수출 현황

(3) 부산-전국 광역시도의 수출 비교

- 부산 수출이 전국 7대 광역시도 중 5위(울산-서울-인천-광주-부산)
- 타 광역시도 수출 상승세 속에 부산 수출은 감소



2. 부산의 수출 현황

(4) 부산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상위 20위)

- 부산의 국가별 수출 실적은 전반적으로 감소세
- 무역수지가 2023년 흑자 → 2024년, 2025년 적자로 전환
- 2025년 부산의 총수출은 142억 2,800만 달러, 총수입은 148억 8,600만 달러

(단위 : 백만 달러)

순번	국가명	2023년					2024년					2025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총계	15,111	-6.7	14,961	-11.0	151	14,596	-3.4	15,261	2.0	-665	14,228	-2.5	14,886	-2.5	-658
1	미국	2,588	0.6	1,367	4.2	1,221	2,700	4.3	1,404	2.7	1,295	2,604	-3.6	1,137	-19.0	1,466
2	중국	2,034	-6.9	4,603	-6.5	-2,569	1,822	-10.4	5,313	15.4	-3,490	1,959	7.5	5,318	0.1	-3,358
3	일본	1,216	-2.4	1,838	-17.6	-621	1,188	-2.3	1,809	-1.6	-621	1,152	-3.0	1,583	-12.5	-432
4	베트남	981	-10.2	905	-18.5	77	1,000	1.9	958	5.9	42	977	-2.3	917	-4.2	59
5	멕시코	745	1.1	123	-18.5	622	729	-2.2	125	1.2	604	643	-11.7	115	-8.0	529
6	프랑스	684	-15.8	452	-44.0	232	484	-29.1	508	12.4	-23	231	-52.3	524	3.3	-293
7	인도(인디아)	385	2.0	184	-6.2	201	452	17.3	160	-13.1	292	433	-4.1	172	7.8	261
8	인도네시아	399	-19.4	307	23.8	91	451	13.1	222	-27.7	229	445	-1.2	179	-19.5	267
9	싱가포르	341	-6.2	103	3.7	237	385	13.0	162	56.3	223	434	12.8	89	-44.8	345
10	대만	261	-15.1	180	-14.5	80	318	22.1	234	29.8	84	325	2.2	200	-14.7	126
11	사우디아라비아	199	3.3	5	51.7	194	260	30.8	4	-7.8	256	322	23.8	8	91.1	314
12	스페인	245	-34.4	216	-19.7	29	258	5.5	267	24.0	-9	178	-31.1	158	-41.0	20
13	영국	322	0.9	175	30.8	147	245	-24.1	152	-13.1	93	168	-31.5	123	-19.3	45
14	태국	265	-9.5	176	-26.1	90	237	-10.7	168	-4.5	69	229	-3.5	153	-8.9	76
15	러시아	325	-1.7	711	-28.5	-386	236	-27.6	541	-24.0	-305	199	-15.4	614	13.5	-414
16	벨기에	312	-47.0	79	33.3	232	229	-26.7	42	-46.9	186	137	-40.2	49	15.0	88
17	아랍에미리트 연합	229	7.1	43	-3.1	186	223	-2.6	58	34.8	165	216	-3.1	99	70.1	117
18	캐나다	183	-1.6	99	-25.3	84	222	21.8	114	15.8	108	239	7.6	101	-11.2	138
19	호주	215	-22.6	280	1.8	-65	205	-4.6	237	-15.2	-33	216	5.4	307	29.3	-91
20	독일	198	-7.6	525	4.2	-327	190	-3.9	536	2.0	-345	197	3.6	422	-21.2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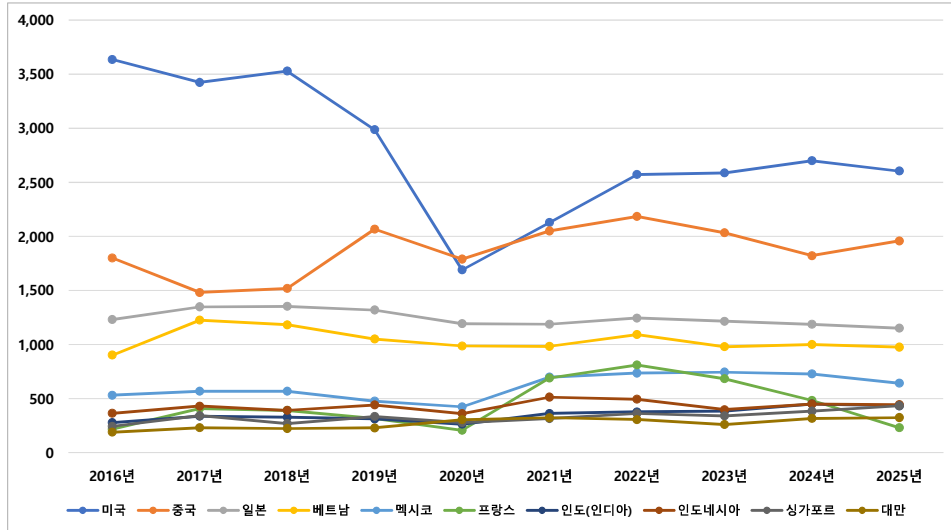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지자체 수출입: 국내통계 -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2. 부산의 수출 현황

(5) 부산의 국가별 수출 현황(상위 10위)

- 부산 수출이 미국·중국 의존 → 부산(동남아·인도) 구조 전환
- 미국·중국 등락 반복 변동성 확대, 일본·베트남 저성장·일정수준 유지, 프랑스 지속 하락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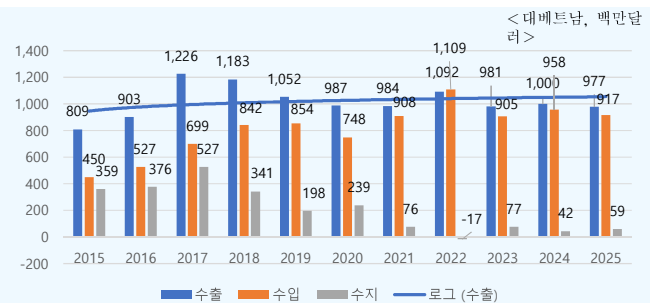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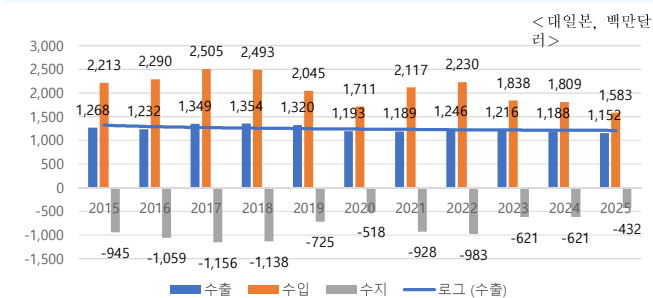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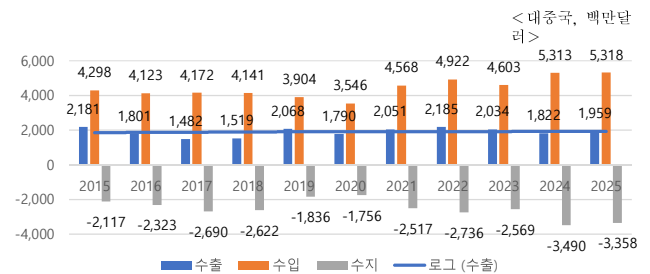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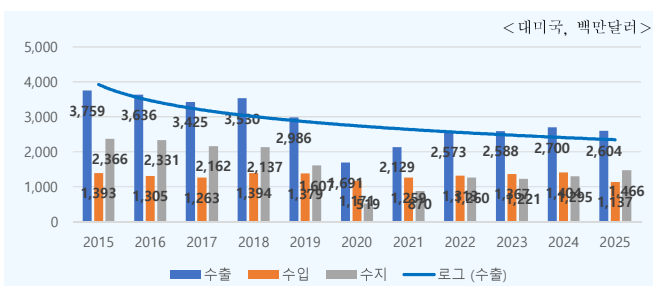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지자체 수출입 : 국내통계 -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2. 부산의 수출 현황

(6) 부산의 국가별 교역 변화 추이(상위 4위)

- 부산의 대미 수출 감소세 / 대중 수출 정체·무역수지 적자
- 일본 수출 정체 / 대베트남 수출 정체·수입 증가세



2. 부산의 수출 현황

(7) 부산의 국가별 수출 상위 10위 품목(2025년)

- 부산의 대미(자동차·기계), 대중(산업설비·부품), 대일(금속가공품·수산물), 대베트남(화학제품·섬유)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전체		미국(1위)		중국(2위)		일본(3위)		베트남(4위)		멕시코(5위)		인도네시아(6위)		싱가포르(7위)		인도(8위)		대만(9위)		사우디아라비아(10위)	
	MTB	금액	MTB	금액	MTB	금액	MTB	금액	MTB	금액	MTB	금액	MTB	금액	MTB	금액	MTB	금액	MTB	금액	MTB	금액
1	철강판(613)	1,012	전력용기기(841)	411	동판(113)	214	철강관및철강선(614)	104	편직물(436) (436)	75	철강판(613)	160	무기류(970)	87	원동기및펌프(711)	124	철강판(613)	70	기구부품(834)	84	주단조품(617)	152
2	자동차(741)	967	주단조품(617)	194	원동기및펌프(711)	147	어류(041)	87	플라스틱제품(310)	71	자동차(741)	110	편직물(436)	49	반도체제조용장비(732)	80	기타기계류(790)	61	기계요소(751)	33	무기류(970)	38
3	원동기및펌프(711)	934	항공기및부품(747)	169	어류(041)	138	어육및어란(045)	85	합성수지(214)	66	산업용전기기기(842)	81	합성수지(214)	30	기타기계류(790)	49	합금철선철및고철(618)	49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746)	29	자동차(741)	32
4	철강관및철강선(614)	709	원동기및펌프(711)	167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746)	128	원동기및펌프(711)	74	어류(041)	39	자동차(741)부품	55	기타직물(439)	20	주단조품(617)	22	금형(753)	45	비누치약및화장품	18	기타산업기계(729)	14
5	주단조품(617)	700	철강판(613)	165	기계요소(751)	127	기계요소(751)	69	기타기계류(790)	34	원동기및펌프(711)	39	플라스틱제품(310)	20	기계요소(751)	19	주단조품(617)	26	철강관및철강선(614)	17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713)	13
6	기계요소(751)	624	기계요소(751)	162	산업용전기기기(842)	81	철강판(613)	64	갑각류(042)	34	기계요소(751)	28	섬유및화학기계(721)	1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746)	18	기계요소(751)	16	농산가공품(016)	15	원동기및펌프(711)	10
7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746)	489	자동차(741)부품	109	섬유및화학기계(721)	80	주단조품(617)	50	주단조품(617)	33	기타기계류(790)	19	철강판(613)	15	신재봉강및철근(612)	17	철강관및철강선(614)	15	주단조품(617)	15	철강판(613)	9
8	전력용기기(841)	478	산업용전기기기(842)	103	철강관및철강선(614)	80	자동차(741)부품	45	기타직물(439)	33	금형(753)	16	원동기및펌프(711)	11	기타산업기계(729)	13	계측제어분석기(815)	12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13	철강관및철강선(614)	7
9	어류(041)	440	농산가공품(016)	91	연체동물(043)	69	농산가공품(016)	44	철강관및철강선(614)	24	냉장고(823)	15	철강관및철강선(614)	11	기구부품(834)	1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836)	10	레이저및절구조물(615)	10	기계요소(751)	7
10	자동차(741)부품	410	철강관및철강선(614)	85	기타산업기계(729)	58	비누치약및화장품(227)	37	문구및완구(515)	23	계측제어분석기(815)	1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746)	10	철강관및철강선(614)	9	기구부품(834)	10	원동기및펌프(711)	6	니켈제품(623)	6

자료: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지자체 수출입 : 국내통계 -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3 부산의 수출 감소요인 진단

- 3.1. 부산 수출업체 실태조사
- 3.2. 수출시장별 트렌드 변화 및 애로사항
- 3.3. 부산의 수출 감소 요인

3. 부산의 수출 감소요인 진단

(1) 부산 수출업체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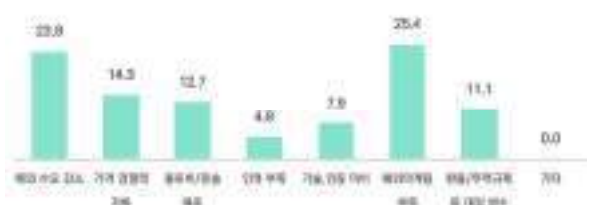
- 부산 수출업체 대상 설문조사
- 수출실적 감소 32개사(13.3%)
- 수출실적 부진 원인 ① '해외마케팅 부족(25.4%)' ② '해외 수요 감소(23.8%)'

구분	내용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방법	이메일, Fax, 전화조사, web-survey 병행
조사일시	(1차)2025년 8월 6일 ~ 8월 25일(20일간) (2차)2025년 9월 19일 ~ 9월 26일(8일간)
조사대상	해외무역사무소를 이용한 부산광역시 소재 수출업체
조사표본	240개사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평가>



<수출 실적 부진 원인>



3. 부산의 수출 감소요인 진단

(2) 수출시장별 트렌드 변화 및 애로사항

국가	현황/트렌드	애로사항	주요 수출 품목	수출 실적	비고
미국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산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 경기 회복이 예상되며, 서비스업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산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 경기 회복이 예상되며, 서비스업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제품, 화학제품, 섬유, 플라스틱, 금속제품, 농산물, 서비스업	2024년 1-6월 수출액: 1,234억 달러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산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 경기 회복이 예상되며, 서비스업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국은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제품, 화학제품, 섬유, 플라스틱, 금속제품, 농산물, 서비스업	2024년 1-6월 수출액: 987억 달러	중국은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제품, 화학제품, 섬유, 플라스틱, 금속제품, 농산물, 서비스업	2024년 1-6월 수출액: 765억 달러	일본은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EU	EU는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EU는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제품, 화학제품, 섬유, 플라스틱, 금속제품, 농산물, 서비스업	2024년 1-6월 수출액: 654억 달러	EU는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ASEAN	ASEAN은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ASEAN은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제품, 화학제품, 섬유, 플라스틱, 금속제품, 농산물, 서비스업	2024년 1-6월 수출액: 543억 달러	ASEAN은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남미	중남미는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남미는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제품, 화학제품, 섬유, 플라스틱, 금속제품, 농산물, 서비스업	2024년 1-6월 수출액: 432억 달러	중남미는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제품, 화학제품, 섬유, 플라스틱, 금속제품, 농산물, 서비스업	2024년 1-6월 수출액: 321억 달러	아프리카는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동	중동은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동은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제품, 화학제품, 섬유, 플라스틱, 금속제품, 농산물, 서비스업	2024년 1-6월 수출액: 210억 달러	중동은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러시아는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제품, 화학제품, 섬유, 플라스틱, 금속제품, 농산물, 서비스업	2024년 1-6월 수출액: 109억 달러	러시아는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기타	기타 국가는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기타 국가는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제품, 화학제품, 섬유, 플라스틱, 금속제품, 농산물, 서비스업	2024년 1-6월 수출액: 98억 달러	기타 국가는 부산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최근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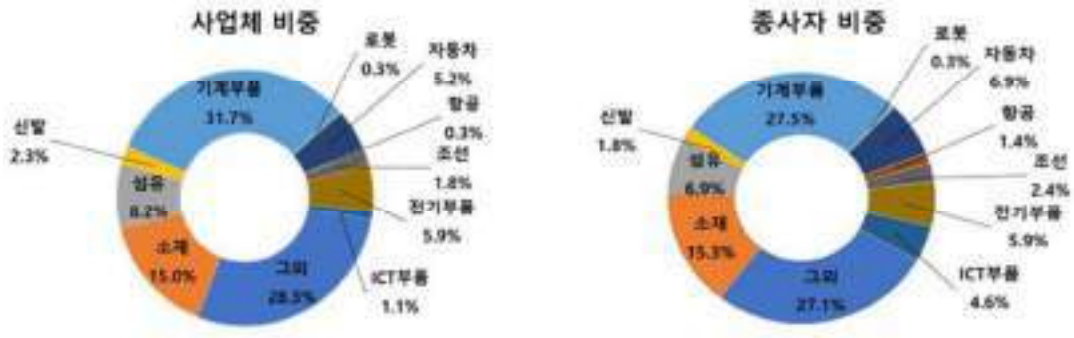
3. 부산의 수출 감소요인 진단

(3) 부산의 수출 감소 요인

1) 산업 구조상 취약성 심화(주력산업 편중 · 경기 민감도 증가)

- 부산 수출산업은 일부 품목에 편중된 구조적인 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023년 부산 제조업은 전통산업(기계부품, 섬유, 신발) 비중이 높고 ICT부품, 로봇 등 첨단산업 비중이 낮음
- 특정 전통산업에 집중으로 新수출분야 신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

< 부산 주력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3년기준)

3. 부산의 수출 감소요인 진단

(3) 부산의 수출 감소 요인

2) 지역 생산성 저하로 가격경쟁력 상실

- 낮은 자동화율 · 설비노후화 · 소규모생산 → 단위당 생산비 상승 → 중국 · 동남아 대비 가격경쟁력 열위
- 숙련인력 부족 · 글로벌 인증기준 미충족 → 품질 일관성 저하 → 미국 · 일본 · EU 고부가 시장 진입 제한
- 청년 · 기술인력 유출, 신기술 대응 실패 → 대체 가능한 공급자로 전락 → 동남아 기업으로 빠르게 대체
 - 부산지역 내 총생산 연평균 증가율 2.4%로 전국(2.7%) 보다 낮음
 - 부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37백만원, 전국(49백만원) 대비 낮음

없으면 안 되는 공급자가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공급자'로 전락

< 부산지역 지역 내 총생산(GRDP)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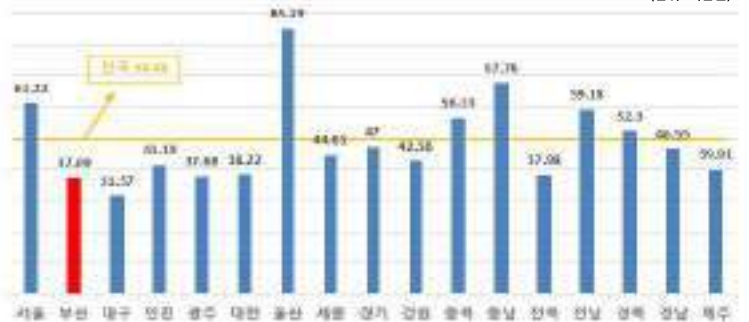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전국	20,624,899	21,559,934	22,149,107	22,501,383	22,953,418	2.71%
부산	982,254	1,007,591	1,024,979	1,052,473	1,080,655	2.42%
전국 비중	4.76	4.67	4.63	4.68	4.71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소득(실질)

< 전국 시 · 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

(단위: 백만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소득(실질)

3. 부산의 수출 감소요인 진단

(3) 부산의 수출 감소 요인

3) 수출시장 편중 및 특정지역 의존 리스크 확대

- 특정 국가에만 수출 의존도 과다: 미·중·일·베·멕 부산 전체수출의 52%(2025년기준) → 상위10개국 79.5% 비중

4) 글로벌 규제·통상 변화 대응 체계의 미비

- 무역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GVC 변화)의 영향 확대 → 고율관세 부과, 수요변동성 확대 등 **채산성악화로 수출의지 상실**
- EU CBAM, REACH(화학물질관리제도) 등 친환경 기반 비관세장벽 강화에 대응 부족

5) 중소기업 중심 수출생태계로 인한 대응역량 부족

- 수출 전담 인력 및 해외영업 조직 부재



4 부산의 수출 활성화 방안

- 4.1. 수출지원 정책 운영 측면
- 4.2. 부산의 수출시장·품목별 대응방안
- 4.3. SWOT분석 고려한 대응방안

4. 부산의 수출 활성화 방안

(1) 수출지원 정책 운영 측면

1) 수출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 수출 기반 확보를 위한 신성장 제조업 육성, 수출 주력 제조업 육성 시급
- 반도체·바이오헬스, 친환경차량·선박, 이차전지, 첨단기계·장비, 프리미엄 철강·소재·부품, 친환경섬유 등 유망품목

2) 수출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 수출 기반 확보를 위한 잠재적 수출품목 집중 육성 → 비누치약및화장품(227), 농약및의약품(226)

3) 중장기적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수출기업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중장기 지원 프로그램 기획 필요
- 일회성 지원으로 수출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현장간담회 의견)



4. 부산의 수출 활성화 방안

(2) 부산의 수출시장 · 품목별 대응방안

국가	품목(MTI)	수출감소 이유	대응방안
미국	(1) 산업용전기기기(842) → 전기기기(84)	전년 수출 증가 후 감소 미국 우선 보호무역주의 전개	정부 관세 지원 건의 수출지원사업 선정기회 제공
	(2) 플라스틱 제품(310)	중국의 공급 과잉 현상 미국 플라스틱 대량수요 산업 쇠퇴	R&D 투자 지원강화, 기능성·특수 목적 플라스틱(친환경·내열·고내구성 등)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 전환 미국 내 제조르네상스 산업과의 연계 강화
	(3) 철강관및철강선(614) → 철강제품(61)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의 고금리로 인한 산업 둔화	고부가가치 중심 R&D 강화 SI·반도체·방산 등 신성장 산업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강재 중심의 연구개발 강화 대·중소기업 협력 체계 구축: ex) 포스코, 2021년부터 중소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
중국	(1) 동광(113)	글로벌 정광 공급 부족 정·제련 수수료(TC/RC) 급락 및 동 재활용	철레·폐루 등 자원 부족과의 자원 외교 강화(MOU 등 장기 공급 계약을 포함한 패키지 협력) 국내 동 스크램 회수·재활용 산업 육성
	(2) 어육및어란(045), 어류(041) → 수산물(04)	중국의 수산물 수입 감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따른 한국 우회 수출 경계 분리기	중국 지역별·소비층별 수요조사 기반한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프리미엄 수산물 수출 지원
	(3)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746)	중국 조선업 성장 및 공급 과잉 국내기업 가격 경쟁력 약화	조선업 R&D 정부 지원 건의 산·학·연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 강화
일본	(1)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713)	수출량 증가 후 반등 감소 일본 제조업 설비투자 둔화	무역 금융·보험 지원 확대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중소 조선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 보험, 환율 컨설팅, 무역금융 연계 지원을 확대해 대중국 수출 리스크 완화
	(2) 금형(753)	중국의 점유율 증가 납기 경쟁력 약화·주 52시간제 적용	수출 금융 지원 분야 확대 한·일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베트남	(1) 주단제품(617)	글로벌 수요 약화, 국내 생산 감소 베트남 건설·플랜트 경기 부진	스마트 제조 전환 지원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2) 신변장화(521) → 기타 생활용품(52)	중국의 베트남 수출 진출 베트남 수입 유통 규제 강화	산업 구조조정 지원 수입재 대응 및 녹색 전환
멕시코	(1) 금속공작기계(723)	수출량 증가 후 반등 감소 미국 통상정책 영향	베트남 시장 맞춤형 수출 전략 지원 K-문화 연계 소비재 수출 지원
	(2) 철강관및철강선(614)	중국발 공급 과잉 멕시코 통상 리스크 확대	연구개발(R&D)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확보 신규시장 개척·통상사절단 프로그램에 우선 배정
		무역규제 법률·회계 컨설팅 사업 수출금 의존도 완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피해지원 테스크포스(TF) 가동
		무역 규제 및 통상 장벽 확대	수출금 의존도 완화 생산·가공 현지화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4. 부산의 수출 활성화 방안

(3) SWOT분석 고려한 대응방안

외부 요인	내부 요인	Strengths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산의 수출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류(0164) 수출 증가 ■ 화장품(2273)은 2003년 수출 이후 수출 증가 ■ 무기류(9701)의 수출 회복세 ② 부산의 수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원스톱 수출지원체계 구축으로 수출진입·과정상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 ■ 전방위적 신규 수출시장 개척 노력 ③ 부산지역 수출기업(설문조사·현장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의 신규 판매처 개척에 적극적인 노력(전시회, 바이어상담회, 무역사절단 등) ■ 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물류비용, 수출보험료, 수출신용보증료 등) ■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 	Weaknesses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산의 수출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의 신발(5212) 수출은 2001년 대비 △72.6%, 2013년 대비 △54.4% 감소 ■ 부산의 섬유류(4) 수출 감소: 편직물(4360), 기타섬유제품(4490), 기타의 직물(4399) ■ 부산의 문구류(5151) 수출 감소 ② 부산의 수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주력산업 양성 노력 부족 ■ 수출 유망산업 발굴 및 양성 노력 부족 ■ 중소기업 체권화수 어려움 등 사각지대 문제 해결 노력 부족 ■ 정책 지원(금액) 규모 적고 다년간 연속 지원 불가 ③ 부산지역 수출기업(설문조사·현장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은 수출지원 금액 ■ 마케팅사업 참여 횟수 제한 ■ 수출국이 기존 주요국에 편중
	Opportunities (기회)	SO Strategies (내부 강점을 통해 외부환경 기회를 살리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미국 시장의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공략하는 혁신형 중소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획 ■ 원스톱 수출지원센터에서 지역간, 산업간 협력 프로그램 기획 ■ 선진국 수출시장 및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 흐름에 대응하는 산업구조 조정 프로그램 기획 ■ 정부의 국제적 무역협상에 부산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프로그램 기획 ■ 수출 제품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보조 프로그램 기획 	WO Strategies (외부환경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내부 약점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산 산업재 판매를 위한 전문 무역상사 협력 ■ 기존 수출 주력산업 외에도 새로운 수출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노력을 강화 ■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사용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 ■ 중소기업의 체권화수 어려움에 대한 해결을 위해 체권화수 대행 서비스 비용을 지원
Opportunities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탄소국경조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규제개혁 추진에 대응으로 현지시장에 적응력 향상 ■ 경영활동 재검토를 통한 노후시설 정비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사업장, 생산 라인, 제품 공정의 특성을 고려한 수출 품목 코드를 재검토함으로써 탄소 제로 공정 개발 및 상용화 가속화에 적극적 대응 ② 보호무역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시장에서 수입 제품과의 경쟁은 상대적으로 감소해서 국내기업의 성장 가능성 높음 ■ 보호무역 장벽 극복을 위한 제품 품질혁신 및 기술혁신에 더 많은 정책지원 자금이 투입됨 ■ 보호무역 기조 아래에서도 국가간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으로 무역협력 강화 기회 발생 ③ 디지털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제품 및 서비스 공급되기 때문에 전통적 무역방식에 비해 비용절감 ■ 시간 및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더 많은 수출 기회를 확보 ④ 저성장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 타파를 위한 정부주도형 기술혁신 프로그램, 스타트업 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지역간, 산업간 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 공유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Threats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탄소국경조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수입업체는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기업은 생산 공정의 영입 비용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 ■ 탄소 배출을 경감시키기 위한 기존 노후 생산 설비 교체로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발생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준수를 협의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해서 국가간 갈등을 유발 ② 보호무역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산업에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 발생 ■ 국가마다 관세 및 규제 장벽 강화로 국제무역 활성화 저해되고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 ■ 다양한 국가 및 국가협의체 간의 협력을 감소시켜서 공급망 안정성을 저해 ③ 디지털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상담 및 거래 과정에서 해킹, 데이터 유출 등 사이버 보안 위험에 노출 ■ 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프라 부족한 상대국(바이어)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 ■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관련 국가마다 규정, 과세 기법의 불확실성으로 수출기업의 리스크 부담 높음 ④ 저성장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 감소로 정부의 재정 압박 도래하여 이전만큼 정책지원을 기대할 수 없음 ■ 경제적 불안정으로 소비심리 약화되어 기업의 수익 감소 아래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짐 	

4. 부산의 수출 활성화 방안

(3) SWOT분석 고려한 대응방안

외부 요인	내부 요인	Strengths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산의 수출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류(0164) 수출 증가 ■ 화장품(2273)은 2003년 수출 이후 수출 증가 ■ 무기류(9701)의 수출 회복세 ② 부산의 수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원스톱 수출지원체계 구축으로 수출진입·과정상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 ■ 전방위적 신규 수출시장 개척 노력 ③ 부산지역 수출기업(설문조사·현장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의 신규 판매처 개척에 적극적인 노력(전시회, 바이어상담회, 무역사절단 등) ■ 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물류비용, 수출보험료, 수출신용보증료 등) ■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 	Weaknesses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산의 수출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의 신발(5212) 수출은 2001년 대비 △72.6%, 2013년 대비 △54.4% 감소 ■ 부산의 섬유류(4) 수출 감소: 편직물(4360), 기타섬유제품(4490), 기타의 직물(4399) ■ 부산의 문구류(5151) 수출 감소 ② 부산의 수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주력산업 양성 노력 부족 ■ 수출 유망산업 발굴 및 양성 노력 부족 ■ 중소기업 체권화수 어려움 등 사각지대 문제 해결 노력 부족 ■ 정책 지원(금액) 규모 적고 다년간 연속 지원 불가 ③ 부산지역 수출기업(설문조사·현장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은 수출지원 금액 ■ 마케팅사업 참여 횟수 제한 ■ 수출국이 기존 주요국에 편중
	Threats (위협)	ST Strategies(내부 강점을 통해 외부환경의 불리함을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자체도입과 협력한 해외수출 마케팅 강화 ■ 디지털 무역 인프라 환경 부족한 국가의 수출상담에 부산거주 유학생과 산학 취업 연계 프로그램 기획 ■ 기업이 친환경 기술과 제품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집중 지원 ■ 특정 수출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차세대 수출시장에 대한 마케팅 강화 	WT Strategies(외부환경의 불리함과 내부 약점을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수출기업 융성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 기획 ■ 부산시 수출정책의 전면적 재조정을 통한 효과적 지원방안 강구 ■ 친환경 및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해서 미래 수출 성장동력 확보

감사합니다.



EU-미국 통상 갈등과 EU의 대응 전략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Mar. 27, 2026
국립부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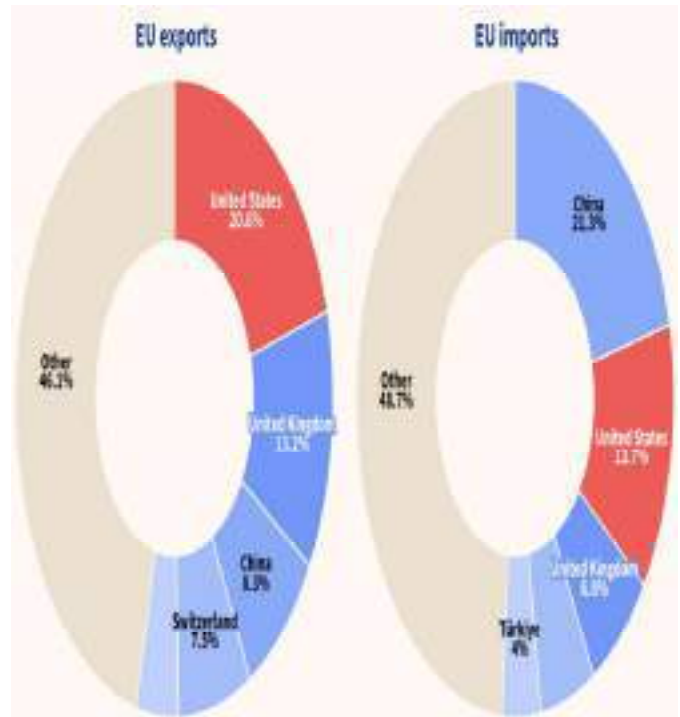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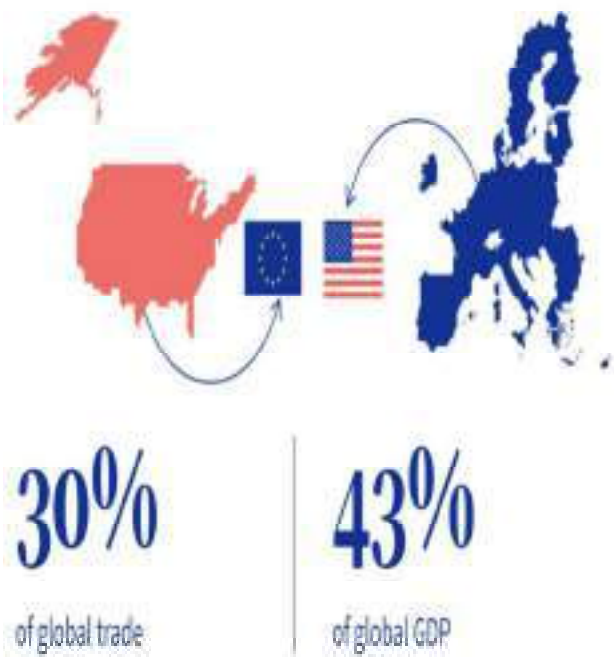
I EU-미국 통상 갈등

II EU의 대응 전략

III 평가

I. EU-미국 통상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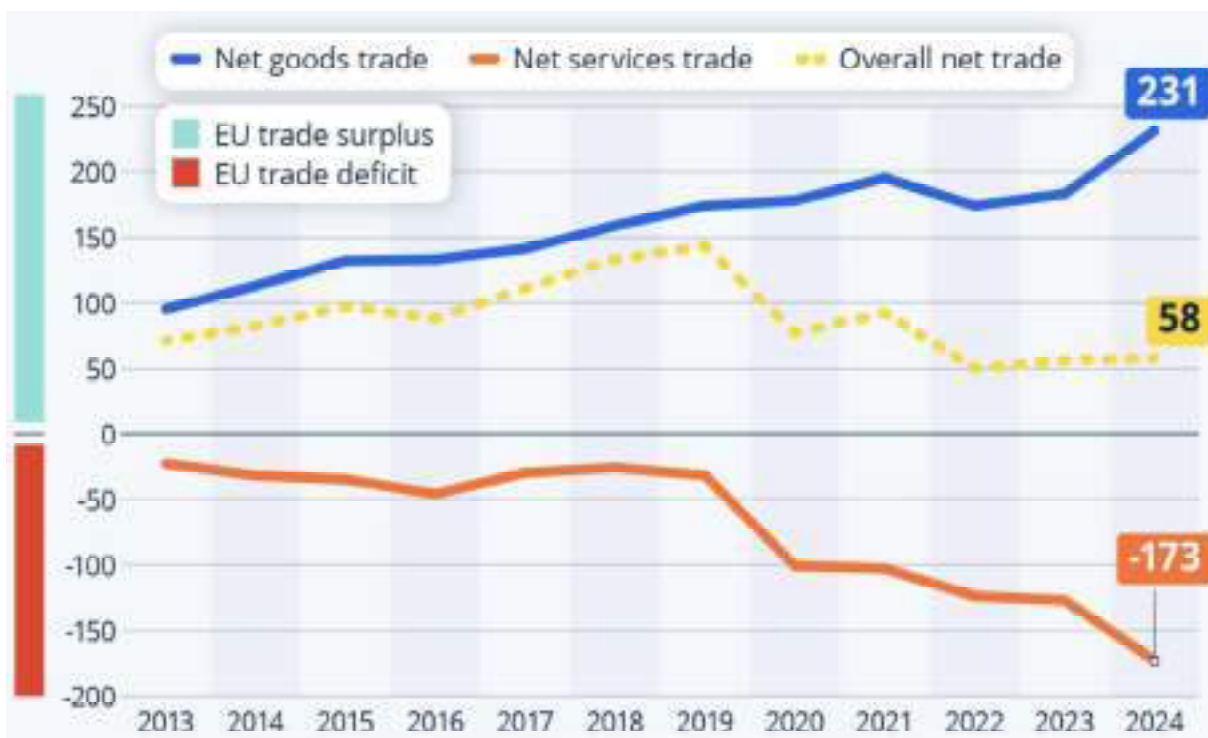
EU-미국 교역(좌) 및 EU 교역에서 미국의 비중(우), (2024년)



자료: European Council(2025)

I. EU-미국 통상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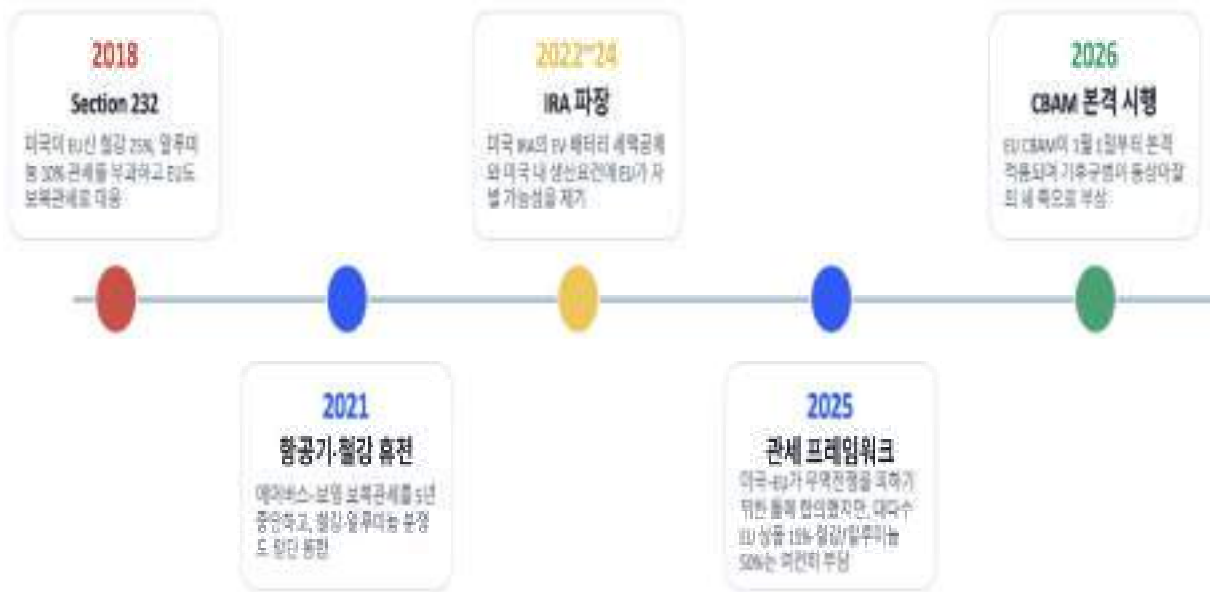
EU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 수지 추이 (십억 달러)



자료: statista(2025)

I. EU-미국 통상 갈등

EU-미국 통상갈등 주요 사건



자료: European Council(2025)

I. EU-미국 통상 갈등

EU와 미국의 주요 관세 협상 결과

[미국 주요 관세 협상 현황 (2026. 1 기준)]

분야	EU	영국	한국	일본	
상호관세	15%	10%	15%	15%	
분야별 관세	철강·알루미늄	TRQ 논의 중	25% TRQ 논의 중		
	자동차	15%	TRQ 10%(연10만대)	15%	
	반도체	15%		한국보다 교역규모 큰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제약·원료	제232조: 15% 제네릭: MFN	제232조: 면제*	제232조: 15% 제네릭 상호관세 제외	제232조: 타국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제네릭: 상호관세 제외
	천연자원	상호관세에서 제외		상호관세에서 제외	상호관세에서 제외
	항공기부품	상호관세에서 제외	상호관세 제외	상호관세에서 제외	상호관세에서 제외
	목재	15%		15%	
	기타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對美 TRQ 배정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투자	\$6,000억 (~28: 구속력 없음)		\$3,500억 (연 \$200억 상한)	\$5,500억	

*꽃 NHS 의약품 구매 가격 인상을 대가로 영국에 대한 제232조 관세 면제하는 美英 간 별도 협상 존재

II. EU의 대응전략

2. EU의 대미 정책

보복관세 리스트

-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EU는 4,800개 이상의 품목이 담긴 200페이지 분량의 보복관세 부과 리스트 작성, 승용차, 의료기기, 화학제품, 플라스틱, 농산물, 버번 위스키 및 기타 증류주 등이 포함
 - 해당 품목의 대미국 수입액은 2024년 1,090억 유로를 초과
 - 와인, 맥주, 증류주도 이번 보복관세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미국을 최대 시장으로 삼고 있는 유럽 와인 생산업체들은 우려 표명
- 보복관세 이외에도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도 검토
 - 철 폐기물 및 스크랩, 알루미늄 폐기물 및 스크랩, 툴루이딘, 향료 물질, 효소 등

EU 통상위협 대응조치 (ACI)

- 2023년 12월 발효된 통상위협 대응조치는 아직 발동된 적이 없으며, EU는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활용할 가능성

9

II. EU의 대응전략

2. EU의 대미 정책

보복관세 리스트 수입 비중 (억 유로)



Source: 오테현(2025)

10

II. EU의 대응전략

2. EU의 대미 정책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EU-미국 관세 협정 진전 결정

- 텀베리 합의에 따른 EU-미국 무역협정이 미국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로 인해 승인이 지연되어왔으나, 2026년 3월 19일 유럽의회 무역위원회가 본회의(3.25/26일)에서 표결을 진행하기로 함.
- 무역협정에 따르면 2028년말까지 미국산 에너지(주로 석유와 가스) 7,500억 달러 수입
 - 2025년 기준 미국으로부터의 가스 수입: 전체 27% -> 2030년까지 40% 증가
 - 미국산 가스, 석유, 핵연료와 같은 에너지 제품 수입 증가 우려
- 또한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다단계 안전망을 마련하기로 함.
 - 미국이 외교정책 결정으로 EU 또는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합의 이행 절차가 즉시 중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 이외에도 미국의 EU산 철강제품에 대한 50%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것을 요구할 계획

11

II. EU의 대응전략

3. 분야별 주요 대응 정책

EU 산업가속화법(IAA)

- 목적: 미국과의 통상갈등 심화 및 특정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 EU 역내 제조역량을 강화
- 산업의 탈탄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de in Europe(유럽산)" 강조

전기차 유럽산 기준

구분	요건	내용
전기차	대상	순수 전기차, PHEV, 수소연료 전지차
	①역내 조립	EU내 최종 조립
	②역내 부품가치 비율	배터리 제외 모든 차량 부품 가격 중 70% 이상
	③역내 최소 부품 요건	구동 배터리는 셀을 포함해 최소 3개 (발효 후 3년 뒤: 셀, 양극재 BMS 포함 최소 5개)
소형 전기차	① + ② 또는 ③ 충족	

에너지 저장장치 유럽산 기준

구분	기준	요건
ESS	법 발효 후 1년 - 3년	EU 내 생산 + 1MWh 초과 프로젝트시 BMS는 EU산
	법 발효 3년 이후	EU 내 생산 + 셀, BMS, 추가 1개 부품이 모두 EU산

II. EU의 대응전략

3. 분야별 주요 대응 정책

EU 산업가속화법(IAA)

에너지 저장장치 유럽산 기준

구분	유럽 IAA	미국 IRA
최종 조립	EU 내 생산/조립 필수(FTA 국가 인정)	북미 내 생산/조립(FTA 국가 불인정)
배터리 조달	배터리 제외 부품의 70%이상 현지화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2029년 100%)
핵심 광물	2030년까지 전라광물 소비량의 최소 10% 채굴, 40% 가공 채련, 25% 재활용을 역내에서 달성 목표 (CRMA* 법안)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40% 이상 조달(2027년 80%)
보조금	총족 시 공공 조달 및 지원, 보조금 지급	소비자에게 7,500달러 크레딧(2025년 10월 중단)

외국인투자 심사조건

No	구분	조건
1	지분 및 통제권 제한	지분(또는 의결권, 자산 소유권이나 통제권) 49% 이하
2	JV 구성	하나 이상 EU 기업과 JV
3	기술 및 IP 이전	외국인 투자자의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4	R&D 투자	연간 수익의 최소 1% 매년 EU 내 R&D 투자
5	EU 근로자 고용	최소 50% 이상 EU 근로자 채용
6	EU 공급망 활용	EU 시장에서 출시된 제품 최소 30%를 EU 내에서 조달

자료: Samsung Securities (2026)

13

II. EU의 대응전략

3. 분야별 주요 대응 정책

청정산업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



Source: European Commission(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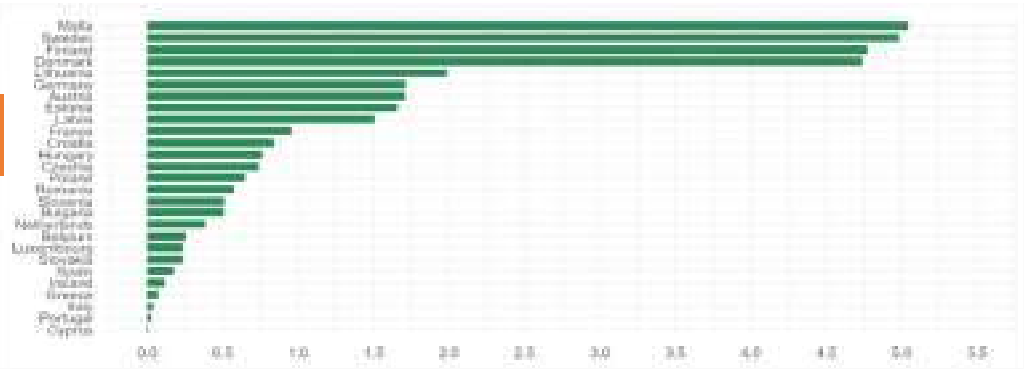
14

II. EU의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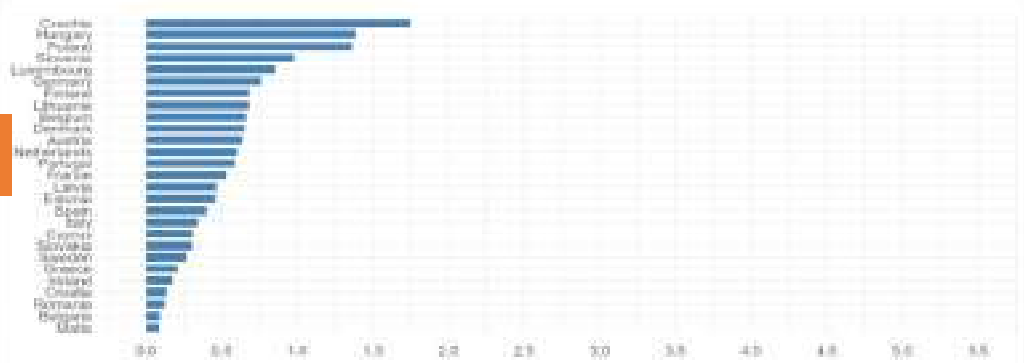
3. 분야별 주요 대응 정책

청정산업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 보조금 규모(국별 GDP 대비)

환경 목적
보조금



R&D, 혁신
보조금



Source: Jacques Delors Institute (2025)

II. EU의 대응전략

3. 분야별 주요 대응 정책

핵심원자재법 추진과 주요 내용



Source: Adamas Intelligence(2024)

II. EU의 대응전략

3. 분야별 주요 대응 정책

핵심원자재법 추진과 주요 내용



Source: EPRS(2024)

II. EU의 대응전략

3. 분야별 주요 대응 정책

EU 방위산업 강화 전략



Source: Beyond the Horizon(2025)

II. EU의 대응전략

3. 분야별 주요 대응 정책

양자 및 다자 통상협정 추진

▪ '미국 없는 세계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양다자 협정 진행 중

- 최근 Mercosur, UAE,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와 무역협상 타결, 채택 또는 비준
-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무역협상 진행
- 남아공과 청정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CTIP: 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체결
- CPTPP와 협력 심화 논의

▪ 중견국 연대에 적극 참여



EU Trade agreements 2025

자료: Samsung Securities (2026)

19

III. 평가

1. EU-미국 디커플링은 매우 어려움. 단 더 자주 부분합의 + 분야별 충돌 반복

- EU는 전략적 통상정책 수립 및 공급망 대응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활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대응은 보완적

2. EU의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 규제완화 적극 추진

- 첨단기술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보조금 제도 적극 활용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강화

3. 동시에 EU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규제 포함 국제협력 강화

- EU의 기후환경 목적 새로운 통상 규범 제안 가능성
- 유사입장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강화

20

「2026 (사)한국유럽학회/한국아시아학회 공동 춘계학술대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中·日의공급망 전략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6년 3월 27일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 트럼프 2기의 주요 정책과 국제질서 변화

II. 중국의 공급망 대응 전략

III. 일본의 공급망 대응 전략

IV. 시사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 트럼프 2기의 주요 정책과 국제질서 변화

I. 트럼프 2기의 주요 정책과 국제질서 변화

트럼프 2기의 주요 정책

- “America First”의 재강화
 - 동맹보다 미국의 직접적 이익 우선, 국제기구다자주의보다 양자 협상 중심
 - 배타적 이민 정책 실시, 글로벌 공공재 제공 후퇴
- 대중국 전략 경쟁의 지속 및 강화
 - 고율 관세 확대, 공급망의 탈중국화, 첨단 기술 차단, 투자 제한 등
- 동맹 재조정 (Alliance Burden Sharing)
 -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해외주둔 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
- 관세 중심의 무역정책
 -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품목관세, 무역법 301조 및 122조 등 일방적 보복 관세 적용
- 주요 분쟁에 대한 대응 변화 및 새로운 분쟁 촉발
 - 러우 전쟁에 소극적, 대이란 고강도 공습,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쿠바 압력 강화, 그린란드 야욕 등

I. 트럼프 2기의 주요 정책과 국제질서 변화

트럼프 2기의 국제질서 변화

자유주의 국제질서(LIO) 균열, 경제안보 강화, 국제질서의 다극화, 공급망 불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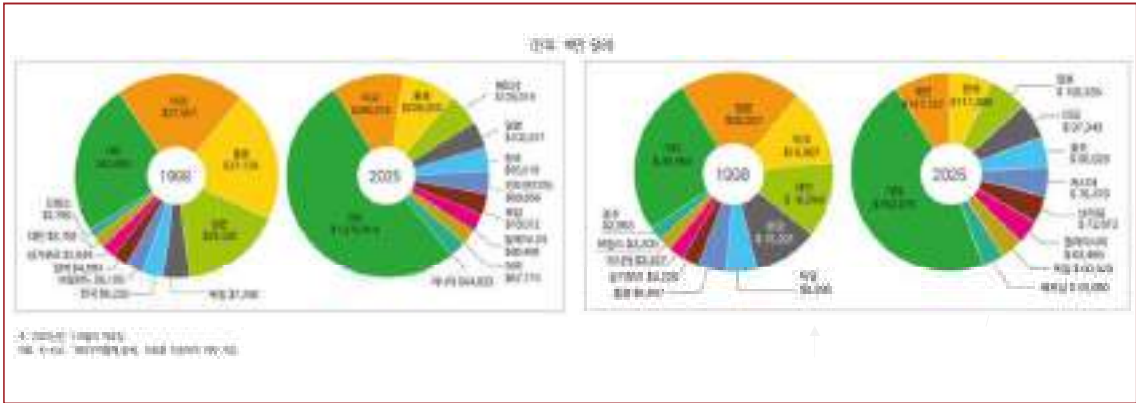
II. 중국의 공급망 대응 전략

II. 중국의 공급망 대응 전략

대미 무역 의존도 감소 및 수출입 다변화

- 중국은 수출입 다변화를 통해서 경제안보의 민감성(sensitivity)에 대응
 -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을 늘려가고 있음.
 - 이 과정에서 BRI와 GDI 등이 중국의 수출입 다변화를 위한 주요 플랫폼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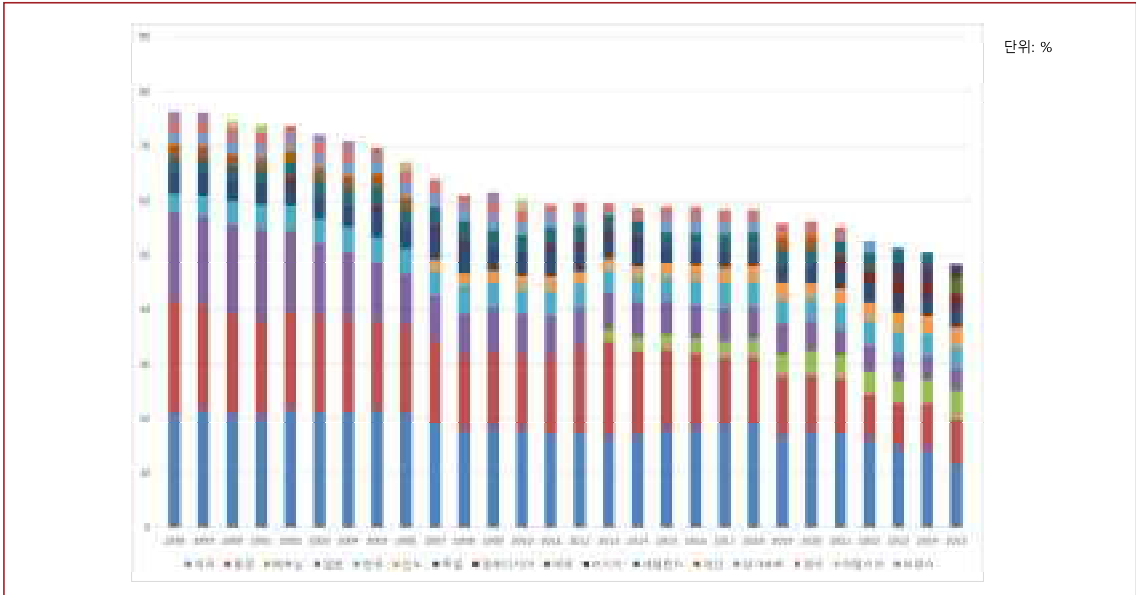
중국의 주요 수출국(좌) 및 수입국(우) 비중 비교(1998년, 2025년)



II. 중국의 공급망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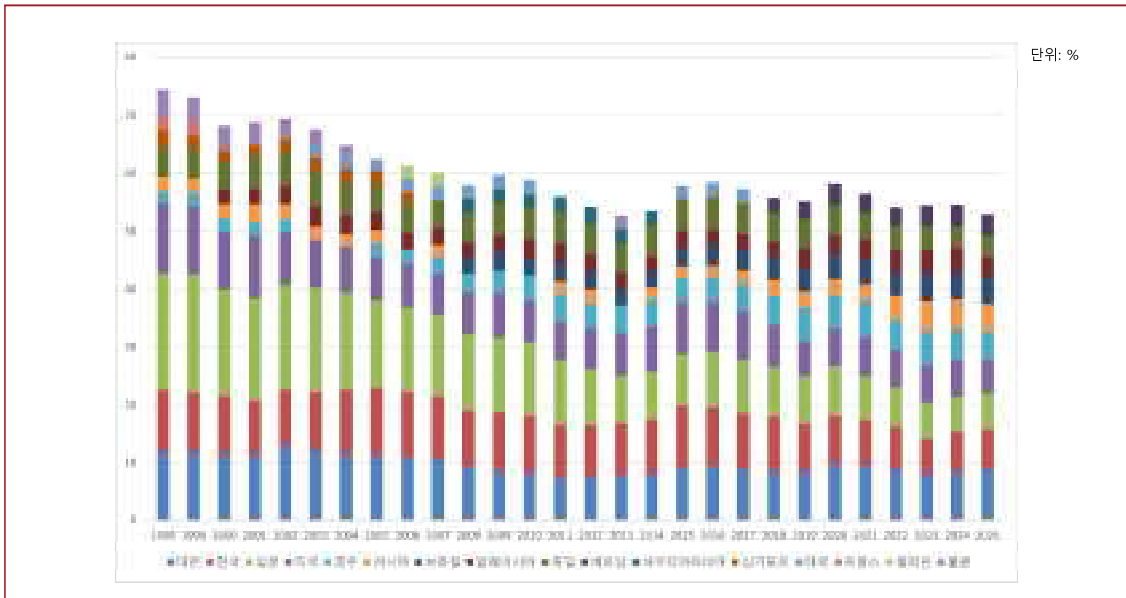
대미 무역 의존도 감소 및 수출입 다변화

중국의 주요 수출국 비중 변화(1998~2025년)



대미 무역 의존도 감소 및 수출입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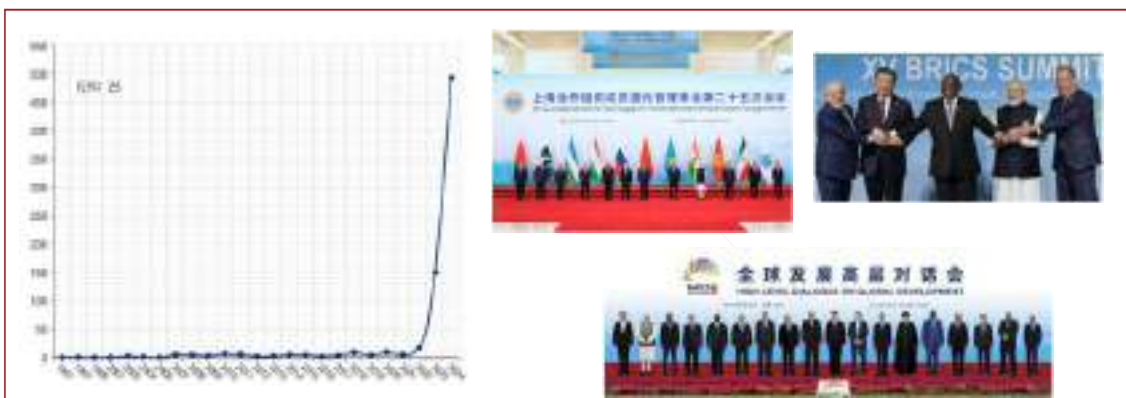
중국의 주요 수입국 비중 변화(1998~2025년)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통한 공급망 강화

- 글로벌 사우스 개념의 적극 수용 및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글로벌 사우스와 공급망 강화
 -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 △2006년 브릭스(BRICS) 창설 주도, △2010년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의 일대일로(BRI)와 △3G(GDI, GSI, GCI) 등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중국의 관련 자료 건수 및 주요 글로벌 사우스 협력 플랫폼



II. 중국의 공급망 대응 전략

일대일로, GDI를 통한 수출입 다변화

일대일로를 통해 추진한 인프라 연결 사업(左), 일대일로 사업내 수출입 총액(右)

경제차원	주요 사례
중-러 가스관 경제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러시아간 경제협력의 동향 및 공급망에 차차 추진 웨이투르-러시아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카자흐스탄 고속도로 2년째 운영 한-러 가스관, 라오스-티베트 교차로, 티베트-라오스 교차로 건설 진행 2019년 1월 중-러 가스관 건설 진행
신남아시아 대륙교 경제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인도네시아 철도, 중국-인도네시아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국-인도네시아 철도, 중국-인도네시아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국-인도네시아 철도, 중국-인도네시아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국-인도네시아 철도, 중국-인도네시아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인도차라트 도 경제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인도차라트 철도, 중국-인도차라트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국-인도차라트 철도, 중국-인도차라트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국-인도차라트 철도, 중국-인도차라트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아프리카 경제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아프리카 철도, 중국-아프리카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국-아프리카 철도, 중국-아프리카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국-아프리카 철도, 중국-아프리카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중남아시아 경제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중남아시아 철도, 중국-중남아시아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국-중남아시아 철도, 중국-중남아시아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국-중남아시아 철도, 중국-중남아시아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남미 경제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남미 철도, 중국-남미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국-남미 철도, 중국-남미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국-남미 철도, 중국-남미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유럽 경제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유럽 철도, 중국-유럽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국-유럽 철도, 중국-유럽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중국-유럽 철도, 중국-유럽 고속도로(수주)-물류 구간 2022년 1월 개통

Factors of the China-driven Belt and Road Initiative

연도	수출액	수입액
2013년	16,284	16,284
2014년	17,267	17,267
2015년	16,367	16,367
2016년	16,215	16,215
2017년	16,204	16,204
2018년	16,207	16,207
2019년	16,203	16,203
2020년	16,203	16,203
2021년	16,203	16,203
2022년	16,203	16,203

자료: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II. 중국의 공급망 대응 전략

과학기술 자립자강 및 대외 의존도 감소

중국 기술 굴기 4대 지표 (China Tech Rise Indicators)

지표	최근 데이터	핵심 의미
R&D 투자	2025년 3.92조 위안 (GDP 2.8%)	세계 2위 연구 투자
특허 출원	세계 1위, 세계 특허의 47%	혁신 활동 급증
과학 논문	세계 1위 연구 논문 생산국	연구 생산력 확대
AI-첨단기술	AI 특허 세계 1위 (약 70%)	미래 기술 경쟁

R&D SPENDING

2000: 0.5 trillion RMB

PATENT APPLICATIONS

WORLD #1

AI & ADVANCED TECH

WORLD #1 in AI Patents

II. 중국의 공급망 대응 전략

*내부 공급망 강화 추진

➤ <15.5 계획> 기간 쌍순환 중 국내 대순환을 보다 강조

- 국내 대순환은 소비 시장 뿐만이 아니라 공급망에 있어서도 내부화로 이어질 가능성 높

<15.5 계획>의 4대 중점 전략임무

关于重大战略任务

“十五五”时期
主要目标和重大任务

一是	突出推动高质量发展
二是	突出做强国内大循环
三是	突出推进全体人民共同富裕
四是	突出统筹发展和安全

II. 중국의 공급망 대응 전략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안전 대응 강화

➤ <15.5 계획>에 경제안보 관련 항목을 새롭게 설치하여 강조

- 식량과 에너지, 금융, 네트워크 보안, 개인 정보 등 분야에서의 국내외 공급망 안전 확보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

<15.5 계획> 제52장의 '국가 경제안전 보장'

第五十二章 保障国家经济安全

国家是各种风险的易发区,也是承担国际风险的巨大实体,新发展格局的构建需要增强国家经济韧性,以增强应对国际经济安全挑战能力。

第一节 增强粮食安全保障能力

坚持以我为主、立足国内、确保产能、适度进口、科技支撑,提升粮食产粮大县综合生产能力,确保口粮基本自给、口粮绝对安全,严格落实耕地保护和粮食安全责任制,严守耕地红线,加强耕地保护和质量管理,提升粮食储备管理现代化水平,强化储备调节功能,健全粮食储备管理制度,完善粮食收购政策,完善粮食储备制度,健全粮食应急保障体系,推进农产品进口多元化,适度进口紧缺粮食品种,增强粮食自给保障能力。

第二节 增强能源安全保障能力

坚持以我为主、多元供给、强化储备,保障能源产供储销体系安全,坚持油气核心需求自主保障,加强非油气能源供给能力建设,确保能源产供储销体系安全稳定,天然气产量稳步增长,加强煤制气产能和储备能力建设,推进石油储备和天然气储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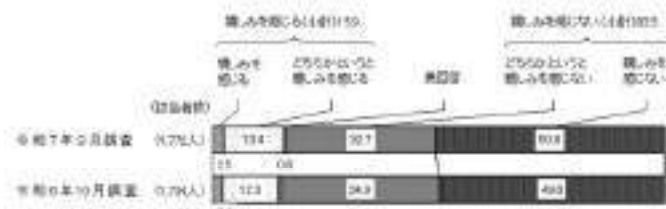
Ⅲ. 일본의 공급망 대응 전략

Ⅲ. 일본의 공급망 대응 전략

중국발 공급망 불안 인식과 경제안보법 제정

- 일본은 2022년 「경제시책의 일체화에 의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안(經濟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 경제안보 추진법)」을 제정
 - 4대 핵심 분야: ① 중요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관한 제도, ② 기간(基幹) 인프라 역할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에 관한 제도, ③ 첨단 중요 기술의 개발 지원에 관한 제도, ④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 (※ 2026년 내 경제안보 추진법 개정 예정)

일본의 <경제안보 추진법>의 주요 내용(좌)과 일본인의 對중국 인식(우)



Ⅲ. 일본의 공급망 대응 전략

미국과의 공급망 동맹 강화

▶ 트럼프 2기 이후 미국과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 강화 지속

- 2025년 미일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 체결 / 2026년 일본의 대미 1호 투자 확정
- 2026년 '미일 핵심 광물 프로젝트' 추진: △인디애나주 희토류 정제 사업 △인디애나주 구리 제련 사업 △노스캐롤라이나주 리튬 광산 개발 △애리조나주 카퍼월드 구리광산 개발 등
- 일본측 투자로 미국산 원유 생산 확대 및 늘어난 물량을 일본에 공동 비축 방안 (예: 알래스카)

최근 미일 공급망 동맹 강화 사례



17

Ⅲ. 일본의 공급망 대응 전략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연계 강화

▶ ODA 정책에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으로

-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동안의 ODA 정책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에 보다 집중한 정책 논의를 시작
- 그 결과, 2023~24년 내각 관방장관 주재로 '글로벌 사우스 연계 강화 추진회의(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との連携強化推進会議)'를 두 차례 진행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새로운 연계 강화 방침(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との新たな連携強化に向けた方針)」을 발표

▶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일본의 기본 인식

- 일본은 식량, 광물자원, 에너지 등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취약점 극복을 지원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발전과 강인성(強靱性)에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인식
-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은 일본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

18

Ⅲ. 일본의 공급망 대응 전략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연계 강화

- 배터리 및 모터 제조 등에 불가결한 5대 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희토류 등 확보 노력
 - 2023년에 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등 5개국과 희귀 금속,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의 자원 탐사 및 개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
 - 일본은 단순한 자원 개발 참여를 넘어서, 제도적 신뢰 관계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의 끈(資源の絆)' 프로그램을 시행
 - 2025년 JIBC가 칠레의 국영 구리광산 기업인 코델코(Codelco)에 약 6억 6,600만 달러 대출
 - 2024년 JOGMEC가 말레이시아 기반의 희토류 기업체 라이나스(Lynas)에 투자 등

2021년 세계의 주요 희토류 생산국(좌)과 일본의 희토류 수입국 변화(우)



Ⅲ. 일본의 공급망 대응 전략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 강화(Reshoring)

- 일본 정부는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국내 생산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
 - Rapidus 프로젝트: 일본 정부와 주요 일본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2nm) 국산화 프로젝트
 - 일본 반도체 산업 재건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대만의 TSMC를 규슈 구마모토(熊本)에 유치 하고 JASM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 및 운용

Rapidus 프로젝트 및 JASM



Ⅲ. 일본의 공급망 대응 전략

방위산업의 공급망 강화

- 일본은 미국 등 우호국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며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모색
 - 미일 미사일 공동개발, 영국·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정부 안보 능력 강화지원(OSA: Official Security Assistance)' 사업 추진 등

전투기 공동 개발 및 OSA 지원 사례



연도	대상국	지원 내용	목적
2023년	미국	• 제4세대 전투기 시스템 제공	• 남중국해 감시 능력 강화
2023년	일본·이탈리아	• 차세대 전투기 개발	• 방위산업의 연계를 강화 및 국제적 협력의 안정성 확보
2023년	일본·이탈리아	• 전투기 개발	• 방위산업의 연계를 강화 및 국제적 협력의 안정성 확보
2023년	미국	• 전투기 개발	• 국제적 연계를 강화 및 국제적 협력의 안정성 확보
2023년	일본	• 차세대 전투기 개발	• 방위산업의 연계를 강화 및 국제적 협력의 안정성 확보
2023년	일본	• 차세대 전투기 개발	• 방위산업의 연계를 강화 및 국제적 협력의 안정성 확보
2023년	일본	• 차세대 전투기 개발	• 방위산업의 연계를 강화 및 국제적 협력의 안정성 확보
2023년	일본	• 차세대 전투기 개발	• 방위산업의 연계를 강화 및 국제적 협력의 안정성 확보
2023년	일본	• 차세대 전투기 개발	• 방위산업의 연계를 강화 및 국제적 협력의 안정성 확보
2023년	일본	• 차세대 전투기 개발	• 방위산업의 연계를 강화 및 국제적 협력의 안정성 확보

자료: KIEP(2023)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전략(OSA: Official Security Assistance)'

IV. 시사점

IV. 시사점

한국에 대한 기회와 도전

- 미중 공급망 디커플링 또는 디리스킹에 따른 경제적 제약 및 비용 증가
 -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미국의 견제 및 규제 증가
 - 공급망의 안전성 중시 및 블록화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발생
- 중국의 내부 공급망 강화 및 과학기술 자립자강 정책에 따른 한국의 경쟁력 약화 우려
-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중일의 전략 강화
 - 우리도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공급망 강화 전략과 적극 연계할 필요
 -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중국 또는 일본과 공급망 협력 방안 모색 필요
 - 특히 핵심 광물 확보 분야에서 한일 협력 중요
- 에너지 및 중요 광물 분야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전략을 참고할 필요
 - 우리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우리의 공급망 안정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전략 수립 필요
- 일본의 전략 산업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탐색 要

23

감사합니다

한국유럽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전략의 재구성”

패널 1. 불확실성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전략 토론문

김종욱(부경대)

오늘 발표된 네 편의 연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서로 다른 수준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EU, 중국, 일본의 전략이 다루어졌고, 국가 수준에서는 한국의 대응과 지역 수준에서는 부산의 사례가 제시되면서 글로벌-국가-지역 또는 지역-국가-글로벌 차원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분석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발표가 공통적으로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통상 리스크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제경제 질서가 단순한 효율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성과 위험 관리, 정치·안보 요소가 결합된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세션은 공급망을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정치적 문제로 재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발표를 간략히 보면, 대만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한 연구는 반도체 중심 글로벌 구조 속에서 한국의 취약성과 대응 방향을 잘 보여주었고, 중국과 일본을 비교한 발표는 국가별 전략 차이를 통해 공급망 대응의 다양한 경로를 제시해주었습니다. 또한 EU의 사례는 전략적 자율성과 동맹 간 관계라는 중요한 쟁점을 잘 드러냈으며, 부산 사례는 이러한 글로벌 변화가 실제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표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공급망은 세 가지 중요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효율성 중심에서 안정성과 회복력 중심으로의 전환, 둘째, 공급망과 지정학의 결합, 셋째, 글로벌 구조의 블록화 또는 다층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발표들에서는 공급망 재편의 방향이 주로 동맹 중심 또는 블록화되는 경향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구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다시 다변화된 네트워크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각 발표에서 제시된 대응 전략을 보면 산업정책, 통상정책, 지역정책 등 다양한 접근이 제시되고 있는데, 정책 현장에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동시에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망 대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 세션은 공급망 문제를 다양한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 간 비교나 수준 간 연계 분석이 더욱 심화된다면 학문적·정책적 기여가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전략」

토론: 김은영(울산연구원)

오늘 발표된 네 편의 연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급망 재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만, 유럽연합(EU),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과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공급망’과 ‘경제안보’라는 공통된 분석 틀을 통해 현재 국제정세의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가치가 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에 대한 한국의 공급망 전략(김선진, 동아대)’은 대만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망 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EU-미국 통상 갈등과 EU의 대응 전략(오태현, KIEP)’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EU의 독자적 위치 확보 전략을 보여준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일 공급망 전략(허재철, KIEP)’은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공급망 전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가별 대응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불확실성의 시대 공급망 변화에 대한 부산의 대응(장정재, 부산연구원)’은 이러한 글로벌 변화가 지역 경제, 특히 부산의 수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이들 연구는 각각의 주제에 집중하면서도, 공통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시대’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재편이 단순한 국제경제 이슈를 넘어, 지역 산업 구조와 수출 전략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발표를 종합하면, 현재 국제질서는 ‘경제 중심 질서’에서 ‘경제안보 중심 질서’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이나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적 문제로서 공급망이 재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은 더 이상 효율성 중심이 아니라 안정성과 회복력(resilience)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성이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공급망의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공급망은 지정학적 요소와 긴밀하게 결합되고 있다. 반도체,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의 핵심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은 경제적 도구를 넘어 외교 및 안보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글로벌 경제는 점차 블록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중국 중심의 공급망,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다극화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국가별 대응 전략은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EU는 전략적 자율성을, 중국은 자립을, 일본은 동맹 중심 협력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산업 구조와 정치적 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동시에 특정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며, 에너지 및 자원 분야는 공급망 안정성이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볼 때, 부산 사례와 같이 산업구조 전환,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 지원 체계 강화 등이 핵심과제가 된다. 울산과 같은 산업 중심 도시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석유화학 산업은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며,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이차전지 및 친환경 산업은 향후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오늘 발표된 네 연구는 서로 다른 지역과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공급망 재편'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는 현재 국제질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

향후 공급망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며, 이에 따라 각국의 정책 대응 역시 더욱 복잡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정책과 외교정책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



패널 2

불확실성의 시대 외교전략의 변화



The Fragmenting Global Order and Roles of the Middle Powers as Swing States

Sang Chul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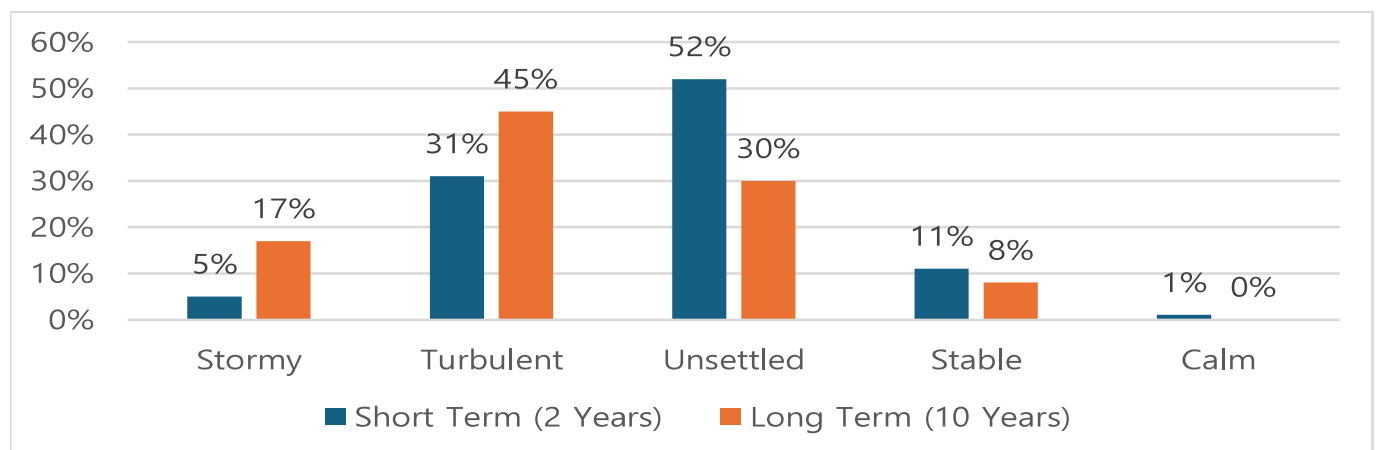
Professor Emeritus at School of Convergence Technology
and Energy, Tech University of Korea,
scpark@tukorea.ac.kr

1. Introduction

- From Pax-Americanism to Multipolar structure: U.S. China & Russia
- Ending US dominated unilateralism since the post Cold War era (1990~2016)
- Global Financial Crisis (2008) as turning point
- Rising protectionism in 2009: Obama's "Buying American Products policy"
- China as 2nd largest economy since 2010 & Xi's China Dreams in 2012: enlarging trade imbalance since China's entry to WTO
- Russian annexin to Crimea in 2014
- Spreading protectionism with Brexit in 2016 & populism with Trump administration 1.0 in 2017

- Regime competition between democracy & authoritarian under Biden government (2021~2025)
 - From multipolar to fragmenting world order
- Trump administration 2.0 intensifying tariff war & ignoring alliances
 - Tariffs as weaponized interdependence combined by defense budget
 - Expanding territories abroad based on Neo-expansionism: Panama Strait, Canda, Greenland etc. (Pyeongtaek US Military Base)
 - Protecting West hemisphere as US territory controlling China's expansion (fig.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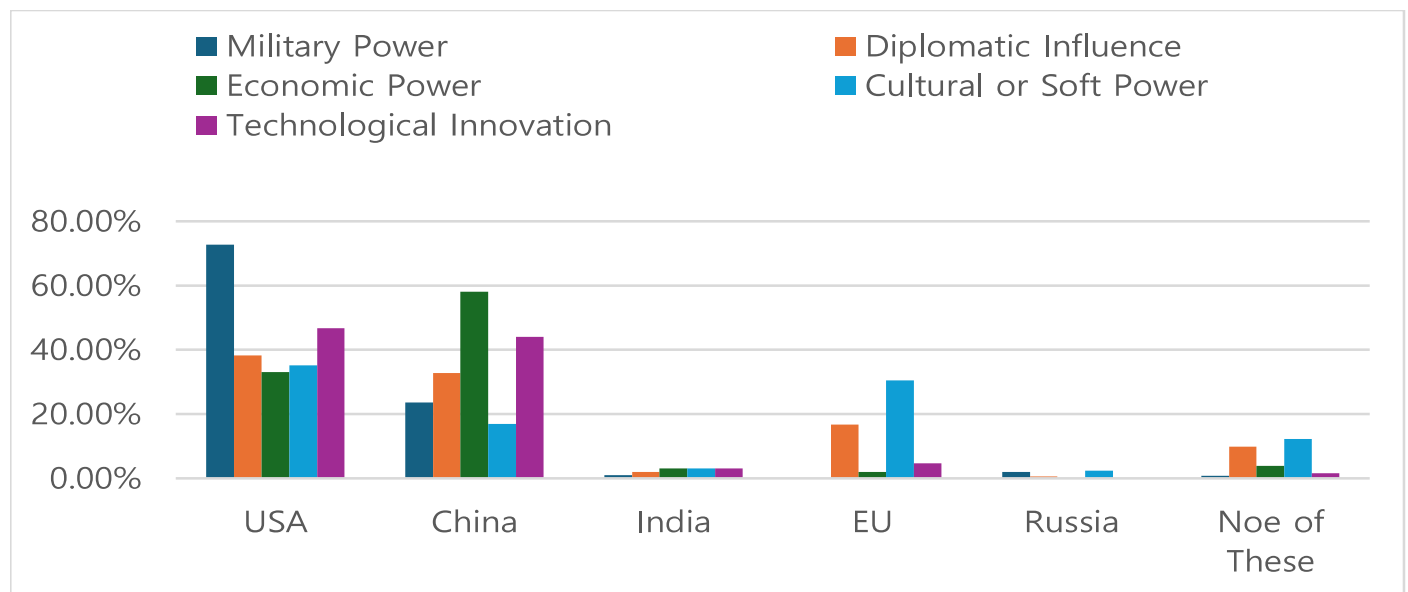
Figure 1: Experts Opinions on Short and Long-Term Global Outlook (As of 2025)



Source: WEF, 2025

Note: Stormy (global catastrophic risks), Turbulent (upheavals and elevated risks of global catastrophes), Unsettled (some instability, moderate risk of global catastrophes), Stable (isolated disruptions, low risk of global catastrophes), Calm (negligible risk of global catastrophes)

Figure 2: Experts Opinion on the World's Leading Power by 2036 (As of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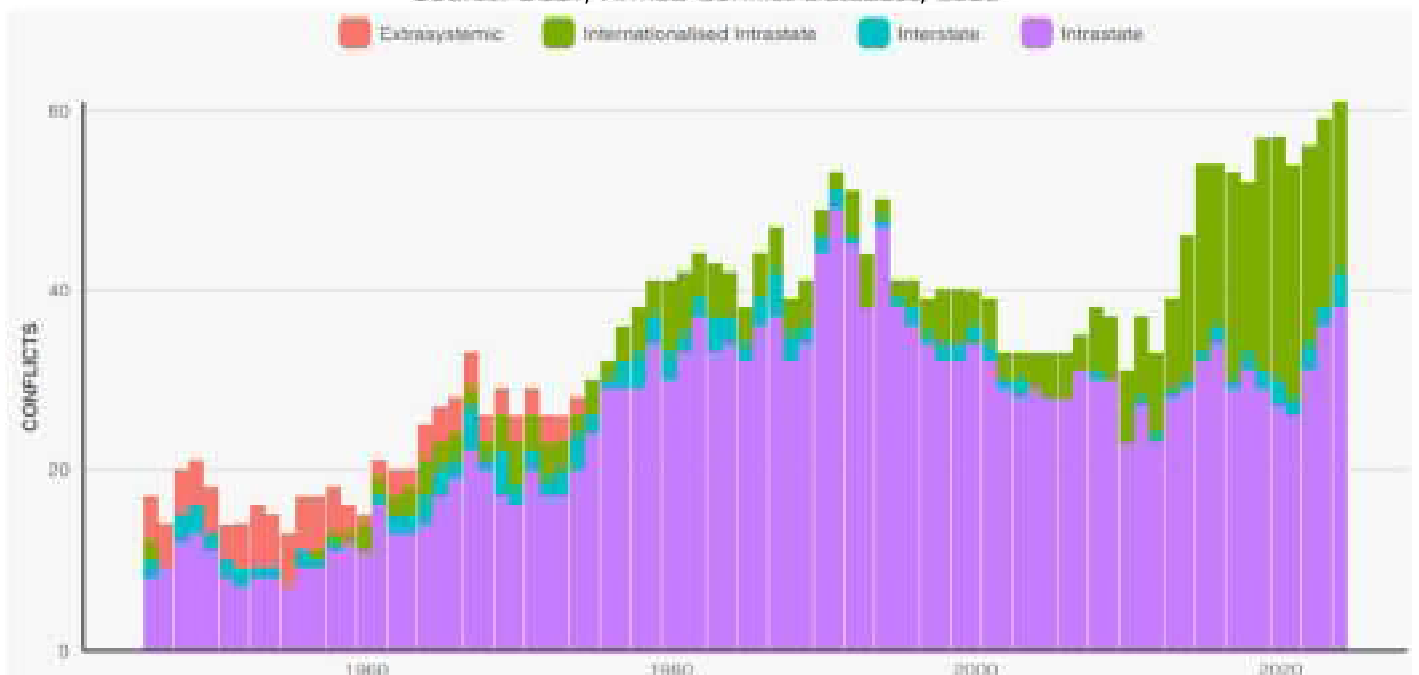
Source: Based on Survey conducted by Aylward et al., 2026

2. Fragmenting World Order

- From global imbalance to populism
 - Emerging China supplying low-cost goods & GFC caused by low inflation & increasing credits in mortgage market
- US protectionism for recovering US economy, but too late: China as world factory
 - Losing competitiveness in conventional manufacturing sectors increasing unemployment in Rustbelt
 - Strengthening populism against immigrants in USA & EU: nationalism or racism
- Disorder of Trump government 2.0
 - MAGA doctrine as extreme nationalism/racism
 - Hostile tariff policy based on base, reciprocal, & sectoral tariffs decided as illegal by the US Supreme Court: trade act section 122, 301, super 301 etc.

- US policy combination for pressing allies: tariffs plus defense budget (5% of GDP) (fig. 3, 4)
- Exercising territorial expansion protecting West hemisphere: Greenland issue: Golden Dome Project (Isolationism: President Monroe+ Expansionism: President McKinley)
- Increasing burdens for allies in Asia & Europe: No World Police, self defense mechanism except nuclear umbrella (crisis of democracy)
- Ending multilateral free trade system (WTO) & setting bilateral trade system based on tariffs & investments: predator economy
- Unilateral military operations without US Congress' permission in Venezuela & Iran: controlling oil production & pressing China
- Great Fragmenting World Order: Munich Security Conference in 2026
- Major threatens to the world: security & tsunami of Chinese goods
- EU's Industrial Acceleration Act (IAA); Buying European Products (70%)

Figure 3: Number of Conflicts by Conflict Type (As of 1948~2024)
Source: UCDP, Armed Conflict Database,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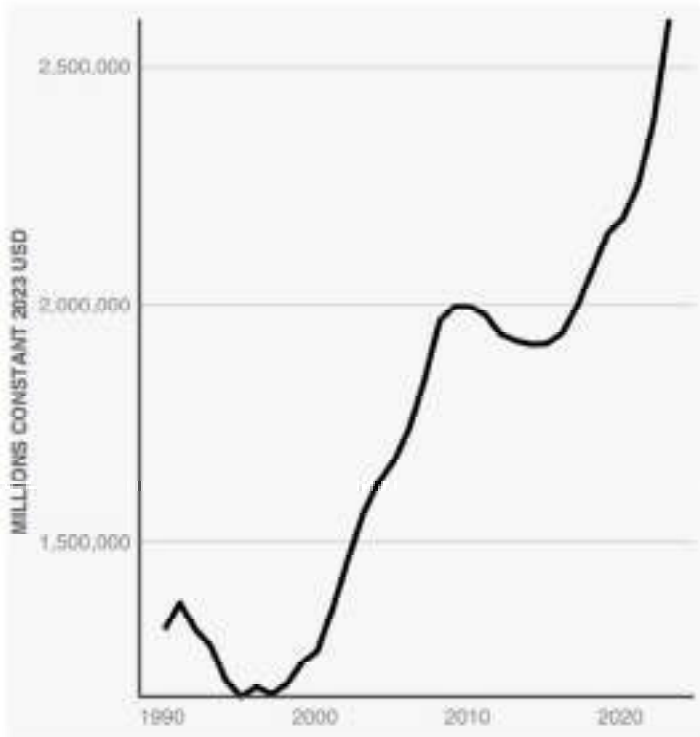


Figure 4: Total Military Expenditure (As of 1991~2024, USD Millions)
Source: SIPRI, 2025

Prof. Dr. Dr. Sang Chul Park

9

- Concept of fragmenting global order (FGO/FWO)
 - Shift from US dominated & rules-based system toward multipolar transactional & unstable structure: intensified by Trump administration II
- Characters of FGO
 - Intense geo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the USA & China
 - Rising middle powers: Brazil, India, MIKTA, Saudi Arabia etc.
 - Regionalization based on regional blocs: America, Asia, Europe
 - Fracturing technology ecosystem: ideology-driven alliances replaced by AI & energy security (AI geopolitics)
 - Erosion of traditional multilateralism: weakening global governance (UN, WTO)
- Driving forces for FGO
 - Prioritizing self-interests on economic, political, technological security

Prof. Dr. Dr. Sang Chul Park

10

- Reshaping supply chains increasing nationalistic tendencies
- Changing power arena: from hard to soft powers returning to hard power due to emerging China (weaponization of everything)
- Weaponizing interdependence based on global networks of information, finance & trade
- Current trend of FGO
- Super powers' competition for world hegemony
- Small & middle, great powers struggling to maximize their national interests by avoiding to engage direct conflicts (fig. 5, 6, 7)

Figure 5: Nominal GDP by Power Grouping (As of USD Trillion,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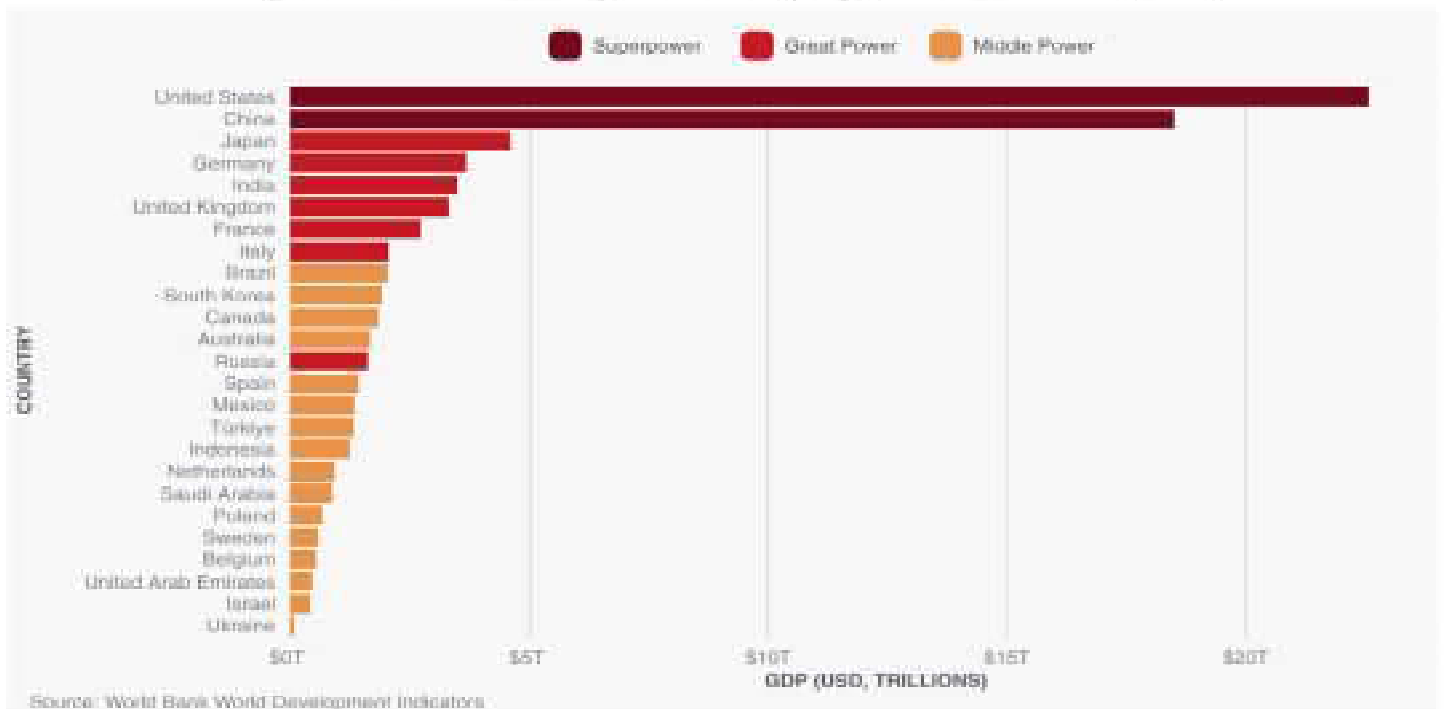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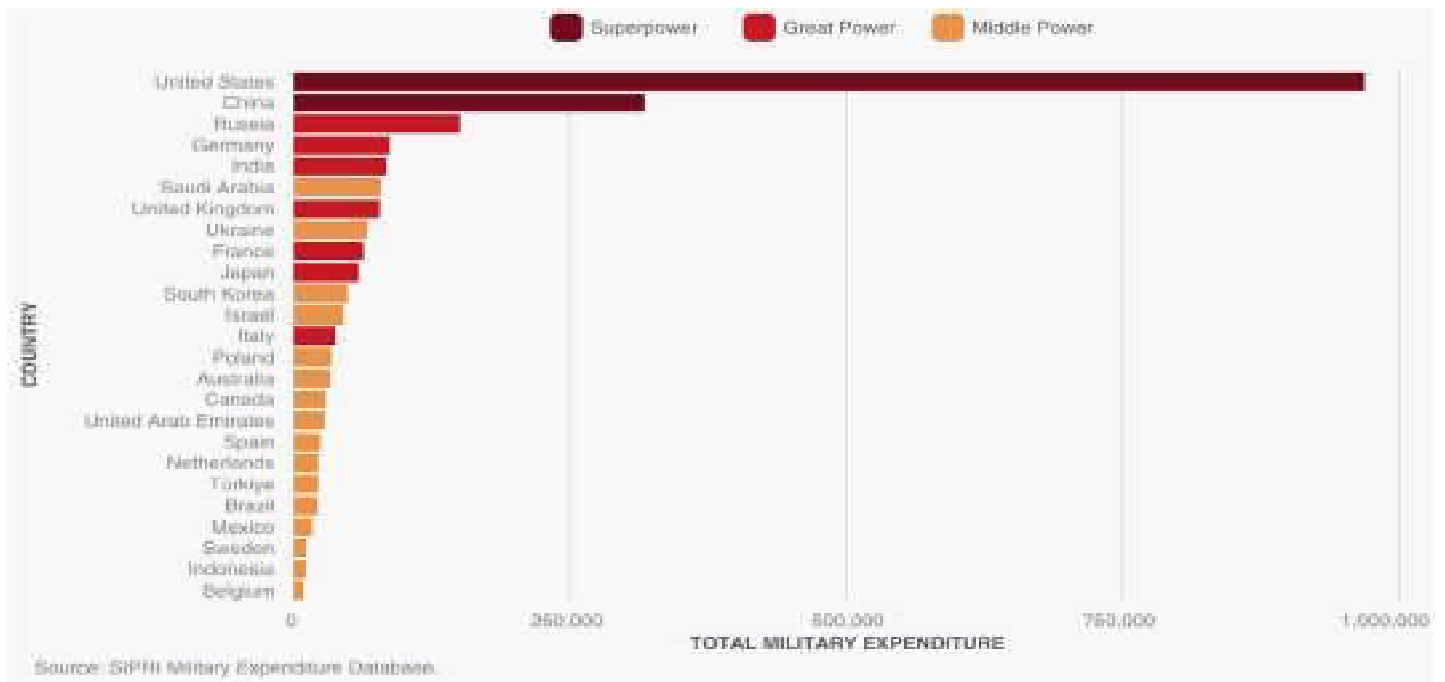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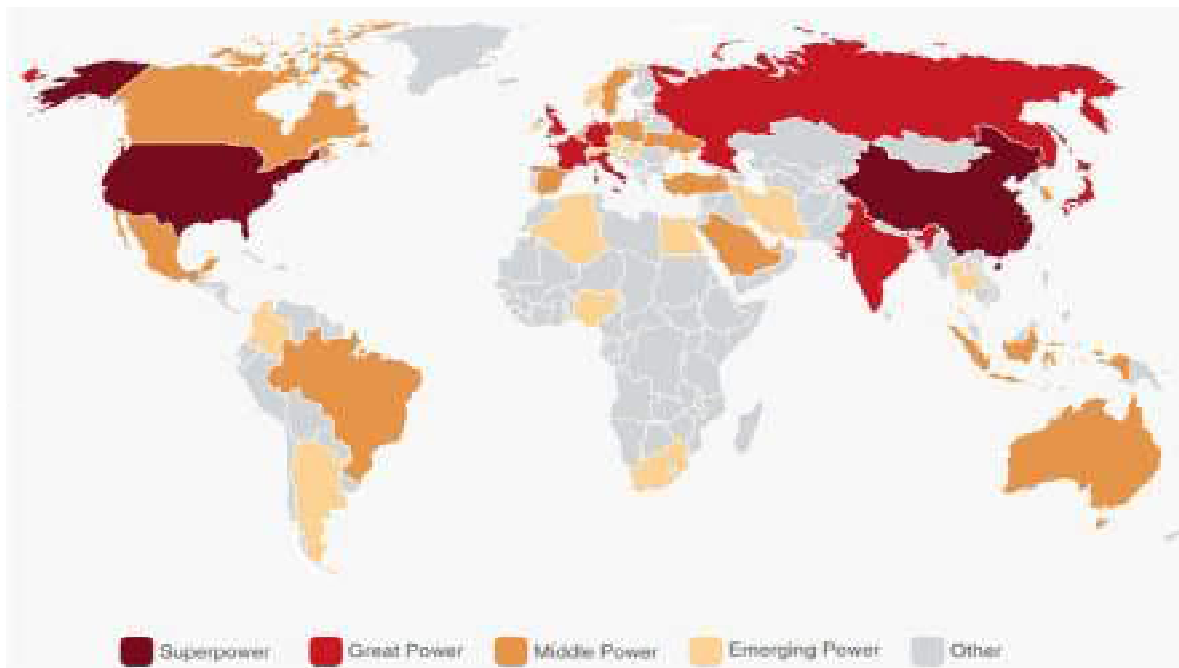
Figure 6: Total Annual Military Expenditure (As of Mil. USD, 2024)



Prof. Dr. Dr. Sang Chul Park

13

Figure 7: World Map of Countries by Power Grouping, Source: IEP, 2026



Prof. Dr. Dr. Sang Chul Park

14

3. Roles & Strategies of Super, Great & Middle Powers

- Categories of great & middle powers
 - G7 members: France, U.K. Germany, Italy, Japan, Canada (Countering Economic Coercion against China)
 - G20 members: MIKTA, Saudi Arabia, South Africa (SA)
 - BRICS members: Brazil, India, SA
 - APEC members: MIK(T)A, Canada
 - NATO members: France, U.K., Germany, Türkiye (Article 5)
 - SCO members: India
- Core great powers: France, Germany, U.K.
 - Military & economic power, diplomatic power (UN/EU)
 - De-factor Europe defender against Russia
 - Europe-oriented roles after Trump's MAGA doctrine

- High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 USA
- Limitation of global military operations
- MIKTA
 - Weak collaboration within G20 platform
 - Geographically dispersed & economically diverse & weak
 - Limited military & diplomatic powers
- BRICS members: Brazil, India, SA
 - Geographically extreme diverse, but dynamic economies
 - Strategic locations in geopolitics
 - No collective actions due to BRICS platform

4. Great & Middle Powers as Swing States

- **Swing states as realistic or illusion?**
 - **Status quo oriented:** France, Germany, U.K.
 - **Strong will for swing states:** India, SA, Brazil in BRICS format (fig. 8)
 - **Limited MIKTA's & independent Saudi Arabia's role**
 - **Focusing more on economic interests actively than military security passively:** deals with China & Iran War
- **US & China's wills & roles as more important than swing states** (fig. 9)
 - **Pressing allies & partners for world hegemony: USA**
 - **Strengthening leverage for swing states & Global South** (c.a. 100 countries): **China**

Figure 8: Views on the Unity of the West (As of Nov. 2025, %)
Source: Munich Security Conference,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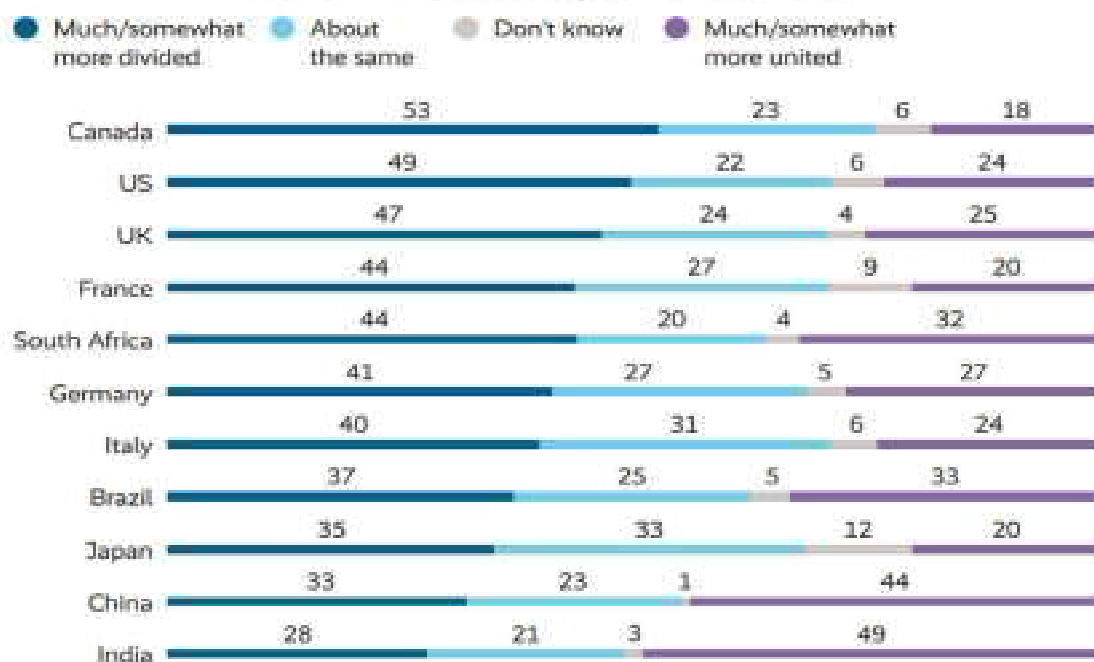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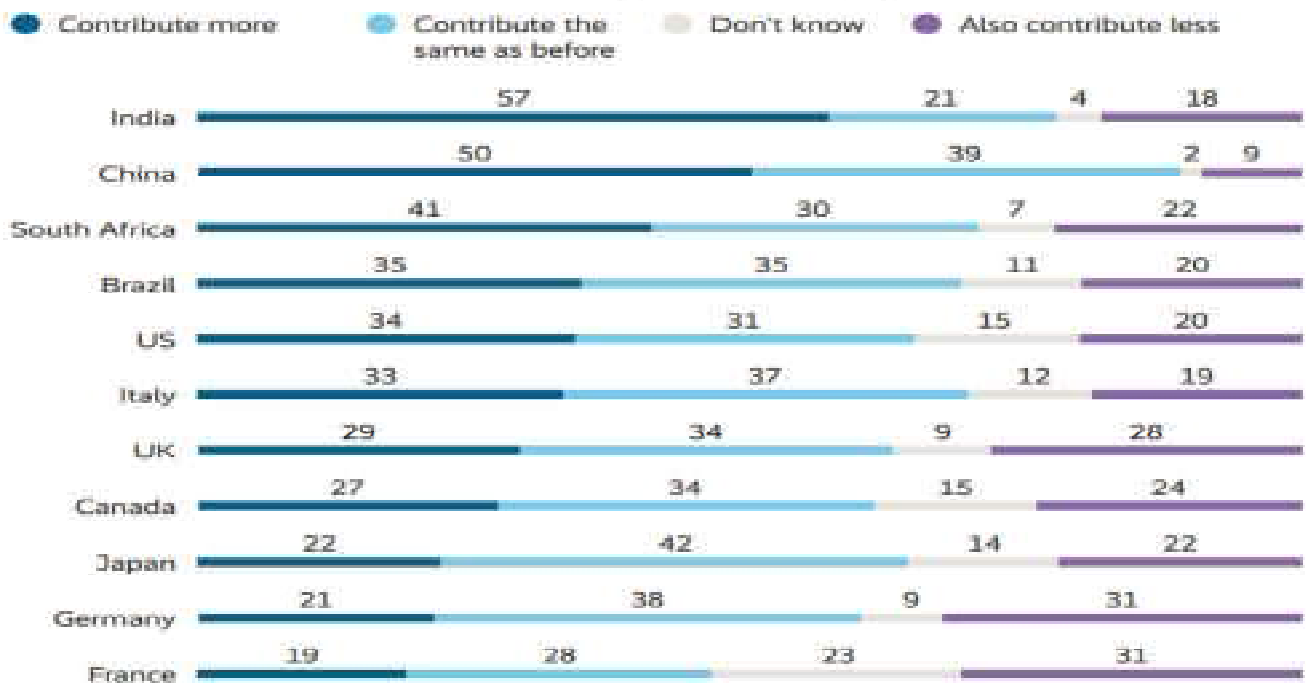


Figure 9: Preferences for Their Countries' Response to Other Countries' Reduced Contributions to Global Problem Solving (As of Nov. 2025, %)



Prof. Dr. Dr. Sang Chul Park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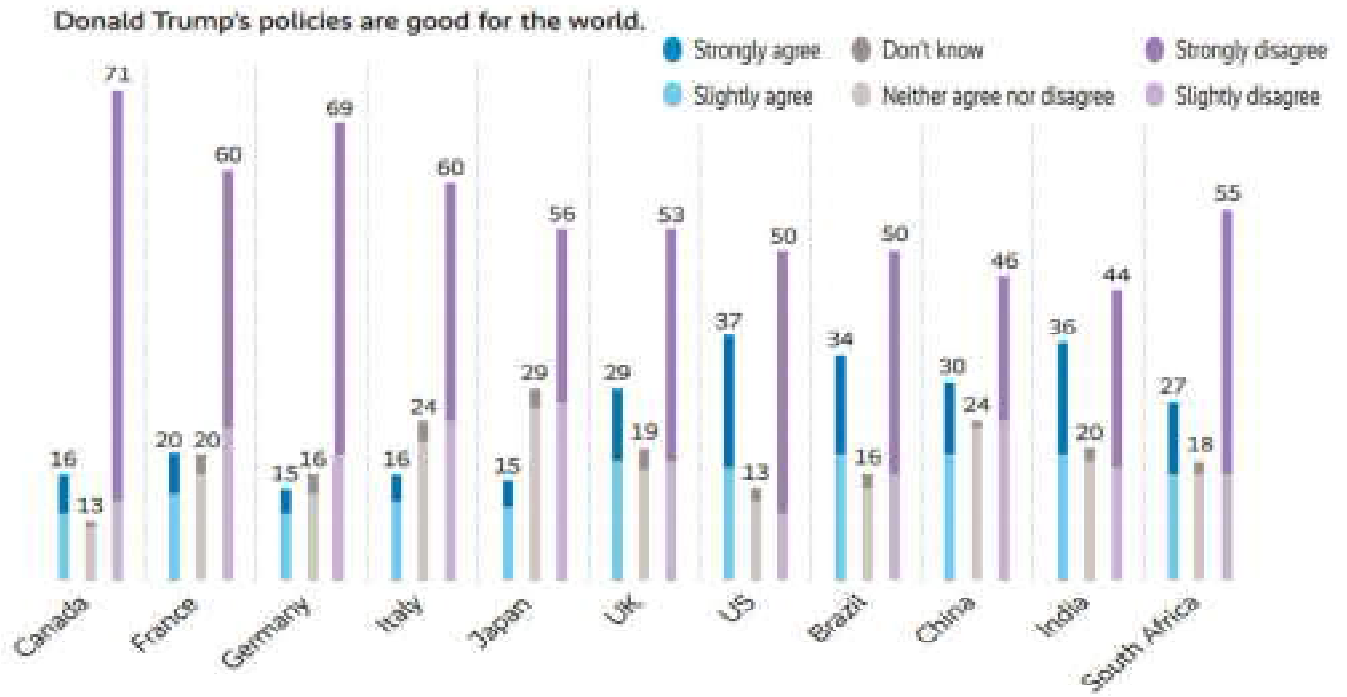
5. Conclusion

- Trump's MAGA doctrine escalating new global order
- From multilateralism to unilateralism creating fragmenting world order
- Self destructing Post Cold War System (fig. 10)
- Emerging importance of great & middle powers' roles, but limited in reality
- G2 competing for attracting swing states in cultures, diplomacy, economy, military, politics, technologies etc.

Prof. Dr. Dr. Sang Chul Park

20

Figure 10: Evaluation of Trump's Policies (As of Nov. 2025, %)



특수관계의 균열

트럼프 2기와 영국 외교의 재편

*Cracks in the Special Relationship:
Trump's Second Term and the Restructuring of British Foreign Policy*

김용민

시대전환인간안보연구소 소장

Paradigm Shift Human Security Research Institute

"2025년 트럼프는 영국을 동맹으로 대했는가?"

관세 부과

특수관계도 예외 없다

우크라이나 압박

동맹의 균열

Reform UK 부상

영국판 트럼프즘

특수관계란 무엇인가 — 신화의 탄생

1941

대서양 현장

처칠-루스벨트, 전후 국제질서 공동 구상

1946

풀턴 연설

처칠 "영어권 민족의 형제적 연합" — 특수관계 개념화

1962

나사우 협정

미국 핵미사일(Polaris) 영국 제공 — 핵 협력 제도화

1947~

Five Eyes

UKUSA 정보공유 협정 — 정보동맹의 핵심

3대 제도적 기반

● 핵 협력
(Polaris→Trident)

● 정보 공유
(Five Eyes)

● 군사 동맹
(NATO 공동작전)

★ 특수관계는 제도이자 신화 — 영국의 탈제국 정체성을 떠받치는 심리적 기둥

냉전 이후 공고화 — 그리고 균열의 씨앗

공고화의 계기들

- 탈냉전 후 블레어, 유럽 대신 미국을 반복 선택
- 9/11 직후 부시: "미국에 영국보다 진실한 친구는 없다"
- 아프간-이라크 공동 파병 — 군사 일체화의 정점
- 대처-레이건, 블레어-클린턴·부시 정상 간 유대

균열의 씨앗들 (과거~현재)

- 수에즈 위기(1956) — 미국의 영국 제동
- 히스-닉슨, 메이저-클린턴 냉랭기
- 이라크전 반전 여론 — 런던 100만 시위
- 브렉시트 → 미국 내 영국 신뢰도 타격
- 트럼프 1기 — 관계 불안정 예고

→ 특수관계는 '자동'이 아니다. 리더십, 국내 정치, 전략 이해관계가 맞아야 작동한다.

2.28 이란 폭격 — 트럼프 2기의 결정적 전환점

작전 개요

2026.2.28 시작

미-이스라엘 합동 기습

작전명

Operation Epic Fury (미)
Operation Roaring Lion (이스)

목표

핵 미사일 시설 파괴
하메네이 제거 → 정권 교체

3.19 현재

이란 사망자 1,444명+
이란, 9개국 미군기지 보복
LNG 전쟁으로 확산중

GB 영국의 대응

1단계 (2.28)

불참 선언
미국 기지 사용 거부
(디에고 가르시아등)

2단계 (3.1~2)

RAF 아크로티리
(키프로스) 피격 후
방어 한정 허용

3단계 (3.3)

트럼프, 스타머 직접 비판
스타머, 의회서 맞대응
No. Churchill 발언으로 스타머에 대한 개인
공격

지역 파장

중동 전면전 확산

이란 → 바레인등 주변국가 폭격
걸프국가들 더 이상 이란에게 참을 수 없음
표명

유류 공급망

두바이 공항 운항 중단
호르무즈 해협 위기
유가 110불 도달

국제사회 반응

중러 공개 규탄
UN 안보리 긴급회의

→ 이란 전쟁은 “글로벌 외교” 전략을 붕괴시킨 결정적 외부 충격 — 특수관계 균열 가시화

특수관계의 균열 | 김용민 | 시대전환인간안보연구소 | 2026.3.27

트럼프 1기 vs 2기 — 충격의 질적 차이

트럼프 1기 (2017~2021)

트럼프 2기 (2025~)

대영 태도

개인적 친영, 왕실 관심

거래 우선, 관세 압박

동맹 인식

NATO 불만, 그러나 유지

NATO 의무 회의, 방위비 압박

우크라이나

미적용 (전쟁 전)

우크라이나 압박, 영국 난처

영-미 무역

브렉시트 이후 FTA 협상

10% 관세 부과, 협정도 제한적

영국 반응

메이-존슨 방미 외교

스타머의 굴욕적 유화, 제한적 성과

특수관계의 균열 | 김용민 | 시대전환인간안보연구소 | 2026.3.27

5 / 20

트럼프의 압박 일지 — 관세와 압박: 특수관계도 예외 없다

2025.1

취임 직후

전 세계 관세 부과 예고 — 영국도 예외 없음 시사

2025.3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스타머의 유화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그대로 적용

2025.4.2

Liberation Day

영국에 10% 기본 관세 일괄 부과. '특수관계' 면제 불가 확인

2025.5

영미 무역협정 체결

10% 관세 유지, 자동차 10만 대 쿼터 제한 — '역사적 합의'의 한계

2026.2

글로벌 관세 15% 재인상 시사

영국, 최대 피해국 위기 — 10% 특혜가 오히려 독으로 돌아올 수도

→ 스타머가 최대한 공을 들였음에도, 영국은 예외가 아니었다. 특수관계의 신화적 위상이 실질적으로 훼손됨.

영국 국내정치 ① 2024 총선: 보수당의 괴멸적 붕괴

412

노동당 의석
(+210)

121

보수당 의석
(-251)

72

자민당 의석
(+61)

5

Reform UK 의석

보수당 14년 집권 종식

득표율: 노동당 34% vs 보수당 24% — 소선거구제로 의석 격차 더 확대

보수당, 이후 Kemi Badenoch 대표로 교체 → 재건 미미, 지지율 정체

Reform UK: 득표율 14% (전국 3위)에도 의석 5석 — 우파 분열 심화

영국 국내정치 ② Reform UK 부상 — 우파 분열 구조

Reform UK 포지셔닝

- Nigel Farage 대표 — '영국판 트럼프'
- 이민 제로(Net Zero Migration) 공약
- DOGE식 정부 축소 표방
- 트럼프 친화·친러 성향,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 2025년 지지율 28% — 노동당(18%) 추월
- 이민 정책 신뢰도 1위 (37%, Ipsos 2025)

영국 외교에 미치는 함의

- 보수당과 우파 표를 분점 → 야당 통합력 약화
- 트럼프 친화 노선으로 스타머 외교 압박
- 대미 유화 비판·대중 강경 요구 동시에
- 우크라이나 피로감 정치화 — 방위비 증액 반대
- 영국 외교의 '트럼프증화' 압력 심화

→ Reform의 부상은 단순 야당 약화가 아니라, 영국 외교 노선 자체를 우경화·고립주의 방향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요인

스타머의 이란 딜레마 — 특수관계 코스트 창구

트럼프의 비판 및 압박

Telegraph 인터뷰 (3.2)
"We were very disappointed in Keir"
"특수관계 역사에서 전례 없던 일"

The Sun 인터뷰 (3.3)
"He has not been helpful"
"Sad to see" 관계 단절
프랑스가 더 협조적이라며 영국과 비교

특수관계 균열 → 4단계 압박중

스타머의 입장 및 반론

의회 발언 (3.3)
"영국의 국익을 판단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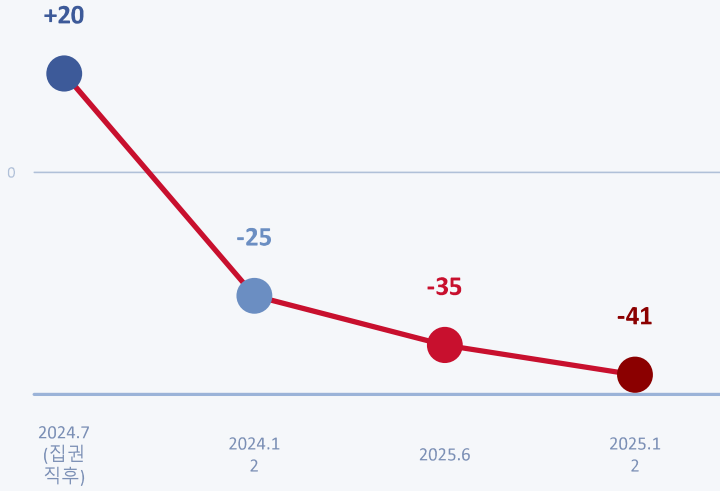
적법성 우선 논거
군사 자문단 자문 후 거부
→ 방어 한정으로 방침 전환
"이라크 실수 반복 안 된다"
"영국 군인은 트럼프의 전쟁을 위해 죽지 않는다."

국내 정치 마지노
노동당 간부 반발 우려
Reform UK 파라지: 영국도 참전해야 한다 주장

우크라이나 연결
중동 압박에 트럼프 우크라이나 포기 부담
영국의 대우크라이나 부담 가중 우려

→ **굴종 외교 1년, 결산 — 특수관계 "관리" 에서 "균열" 국면**

영국 국내정치 ③ 스타머의 딜레마 — 국내 취약성



스타머의 이중 압박

대외

트럼프 압박, 관세 위협
유럽 안보 리더십 요구

대내

지지율 역대 최저
Reform에 10포인트 열세

딜레마

대미 유화 → 국내 굴욕 비판
대미 강경 → 경제 타격 우려

러-우 전쟁 ① 영국의 유럽 안보 리더십 자처

영국의 역할

- 우크라이나에 가장 먼저 군사 지원 결정한 서방국 중 하나
- Storm Shadow 순항미사일 제공 — 고급 무기 지원 선도
- 우크라이나 병사 훈련 프로그램(Op. INTERFLEX) 주도
- 대러 제재 주도, 유럽 안보 외교 핵심 플레이어 자임
- 탈EU 이후 NATO-양자 협약으로 유럽 안보 관여 유지

전략적 계산

- 브렉시트 후 유럽 내 영향력 상실 만회 시도
- 미국이 빠진 자리 — 유럽 안보 리더십 공백 선점
- 프랑스-독일과 안보 협정 체결(2025)
- 영-EU 방위·안보 파트너십 협약
- "글로벌 브리튼" 외교 노선의 유일한 성과 영역

→ 러-우 전쟁은 영국에게 위기이자 기회: 탈미국화된 유럽 안보 공간에서 주도권 확보 시도

러-우 전쟁 ② 트럼프의 압박과 영국의 선택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압박

러-우 조기 협상 요구,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 압박. 영국의 유럽 안보 리더십 기반 흔들림

영국 내 여론 균열

우크라이나 지원 찬성 59% (견고). 그러나 경제 부담 반대 1/3 이상, Reform 지지자 44%는 트럼프 압박에 "안도"

스타머의 줄타기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천명 + 유럽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 참여. 동시에 트럼프와 관계 유지 필요 → 이중 구속

최근 동향 (2026.2)

트럼프의 일방적 러시아 협상 진행 - 영국 배제 우려. 유럽 독자 안보 프레임워크 논의 가속

대미 관계 - 스타머의 접근법: 실용인가, 굴종인가

스타머의 대미 접근 행동들

- 트럼프 취임 직후 최초 방문 외국 정상 중 하나
- 디지털세 양보 카드 검토 (트럼프 관세 면제 대가)
- 국왕 찰스 3세 국빈 초청 - 왕실 카드 활용
- NATO 방위비 GDP 2.5% 목표 선제 발표
- 트럼프 공개 비판 최대한 자제

결과와 한계

- 10% 관세 → 협정 후에도 10% 유지 (최저세율이 최선)
- 자동차 10만 대 쿼터 제한 - JLR 타격
- 철강 협상 미완 → 산업 위기 지속
- 국내 '굴욕 외교' 비판 → 지지율 추가 하락
- 관계 유지 성과: 우크라이나 공조, 정보공유 지속

핵심 딜레마: 트럼프의 거래 중심 외교 앞에서 '특수관계'는 가격표가 붙었다. 공짜 점심은 없다.

대중 관계 ① 스타머 중국 방문 — 배경과 전략적 계산

방문 배경

- 2025년 스타머 중국 방문 — 노동당 집권 후 첫 대중 외교
- 경제 다변화 필요성: 미국 관세 충격 속 새 시장 탐색
- 브렉시트 이후 EU 접근 제한 → 독자 무역 노선 필요
- 블레어-맨델슨 노선의 유산 — 경제적 실용주의

전략적 계산

- 트럼프 압박에 대한 '레버리지' 확보 시도
- 미·중 사이 독자 공간 모색 — "유럽의 균형자" 포지션
- 5G·AI·그린에너지 협력 의제
- 중국의 대영 투자 유치 목적도

외교적 위험

- 미국의 불쾌감 → 특수관계 추가 훼손 우려
- 의회 및 보수·Reform 강경 비판 예견
- 신장·홍콩 인권 문제 회피 비판
- "중국의 경제적 파트너인가, 전략적 경쟁자인가" 모호성

대중 관계 ② "친중" 국내 반발의 정치적 구조

반발의 주체와 논리

- 보수당: "국가 안보 위협, 중국에 굴복"
- Reform: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 반대"
- 일부 노동당 의원: 인권 문제 회피 비판
- 미디어: '굴종 외교' 비판 프레임
- Five Eyes 파트너(미·호주) 우려 표명

스타머 정부의 반론

- "실용적 관여(pragmatic engagement)"
- 경제적 이익과 안보 위협의 분리 관리
- "중국은 위협이자 기회, 양자를 동시에 관리"
- 트럼프 관세 속 대안 시장 확보 불가피
- 유럽 주요국도 대중 관여 유지 (독·프 비교)

→ "친중" 공세는 단순 외교 비판이 아니라, 노동당 약화를 노린 국내 정치 공세의 성격도 강함. '안보화(securitization)' 담론 활용

균열의 구조 분석 – 구조적 요인 vs 행위자 요인

← 협력 강화

균열 심화 →

구조적
요인

구조적 협력 기반

- Five Eyes 정보공유
- 핵 협력(Trident)
- NATO 공동 안보

구조적 균열 요인

- 미국 패권 상대적 쇠퇴
- 브렉시트 후 영국 위상 약화
- 중국 부상·다극화

행위자
요인

행위자 협력 시도

- 스타머의 대미 유화
- 왕실 국빈 카드 활용
- NATO 방위비 선제 약속

행위자 균열 요인

- 트럼프의 거래 중심 외교
- 스타머의 국내 취약성
- Reform의 트럼프 친화 압박

영국 여론의 변화 – 우경화·이민 반대·전쟁 피로감

이민 반대 – 세계 1위

- 이민 = 최대 국정과제: 영국인 21%, 107개국 중 1위 (Gallup 2025)
- "이민이 너무 많았다" 70% – 역대 최고치 (YouGov 2024.12)
- 이민 반대 여론 → Reform 지지로 직결

정치 우경화

- Reform UK 28% vs 노동당 18% (YouGov 2025.12)
- Farage, 이민·국경 정책 신뢰도 1위
- 노동당 지지자 절반 "실망" – 내부 균열

우크라이나 피로감

- 지원 찬성 59% 유지, 그러나 경제 부담 반대 1/3개
- Reform 지지자 44% "트럼프 압박에 안도"
- 우파 내 친트럼프·반전 정서 확산

→ 이민·우경화·전쟁 피로가 맞물려 스타머는 "진보적 외교"를 추진하기 어려운 국내 정치 지형에 갇혀 있음

유럽과의 관계 재설정 – 브렉시트 이후 영-EU 리셋

리셋의 배경

- 스타머: "브렉시트 반대론자" 출신, EU 재관여 공약
- 트럼프 압박 → 미국 의존도 위험성 재인식
- 우크라이나 전쟁 → 유럽 안보 협력 불가피
- 보수당 Brexit 유산 비판 가능한 정치 공간 확보

주요 행동 & 한계

- 프랑스-독일과 양자 안보 협정 체결 (2025)
- 영-EU 방위-안보 파트너십 협약
- 단일시장 재진입 논의 – 정치적 제약으로 진전 미미
- 어업권-국경 문제 재협상 여전히 난항
- EU: "영국이 원하는 것만 취하려 한다" 불만

→ 영-EU 리셋은 '미국에서 유럽으로'가 아니라, 미-EU 사이 삼각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 그러나 브렉시트의 구조적 족쇄가 발목을 잡는다.

영국 외교의 재편 방향 – 미·중·유럽 사이 포지셔닝



재편의 핵심: 미국 일변도 탈피 → 유럽 안보 + 대중 관여 + 대미 실용의 '전략적 삼각 균형' 모색
그러나 국내 정치 취약성이 전략 일관성을 제약

특수관계의 실질적 균열 — 2026.3 현재

이란 전쟁이 가시화한 영미 사이 분기점

① 기지 거부 사태

미국이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사용 요청 → 스타머 거부
“특수관계 역사에서 전례 없던 일” — 트럼프

② 트럼프의 공개 비판

“Not helpful”, “Sad to see”
2일 연속 영국 언론 인터뷰
프랑스 더 협조적이라 비교
영미 특수관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트럼프
NATO 포기 발언-장기화 가능성

③ 스타머의 반격

“국익 판단은 나의 의무”
이라크 실수 반복 거부
적법성 기반 원칙 고수

④ 향후 변수

이란 정전 여부 및 결과
트럼프 재보복 이슬람 위협
영국 내 정치 파장 움직임
걸프 국가들의 영국 신뢰도 저하

→ 군사등 협력은 유지 중이나, 정치적 신뢰와 경제적 우대는 실질적으로 소멸 -대서양동맹 균열의 시대

결론

특수관계는 끝났는가? 아니면 변형되는가?

- 1 특수관계는 '붕괴'가 아닌 '변형' — 군사·정보 협력은 유지, 그러나 정치적 신뢰와 경제적 우대는 소멸
- 2 트럼프의 거래 중심 외교 — 동맹에 가격표, 영국도 예외 없이 지불을 강요받음
- 3 영국의 딜레마 — 대외: 미·중·유럽 삼각 균형 모색. 대내: 우경화 민심·Reform 압박에 포위
- 4 스타머의 선택은 구조적 제약 속 실용주의. 그러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아직 미완성

한국에 주는 함의 — 동아시아 동맹 정치와의 비교

영국 사례의 이론적 함의

- 트럼프 거래 중심 외교의 보편성 — 동맹국 예외 없음
- 특수관계 신화의 해체 — 동맹도 '관리' 대상
- 국내 정치 취약성 → 외교 전략 일관성 약화
- 우경화 여론의 외교 제약 효과

한국 외교에 대한 시사점

- 한미 동맹도 거래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 방위비 분담·관세·반도체 협상 — 영국 선례 참조
- 미·중 사이 전략적 자율성 확보 — 한국의 과제
- 국내 여론·정치 지형이 외교 전략에 미치는 영향
- "특수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외교 역량 필요

→ 영국의 경험은 한국에게 교훈: 동맹의 제도화와 신뢰는 중요하지만,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변화 앞에서는 취약하다.

Q & A

감사합니다

김용민 | 시대전환인간안보연구소 소장

Paradigm Shift Human Security Research Institute

불확실성의 시대 EU의 안보전략

정세원 (국립부경대)

도입

-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불확실성' (uncertainty)이라는 개념이 체화 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함.
- 유럽연합은 이 시기와 맞물려 내부와 외부의 안보위기에 봉착하게 됨: 내부 (브렉시트, 난민위기), 외부 (러-우 전쟁)
- 불확실성과 더불어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특히 러-우전쟁은 유럽 연합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함. (러시아 에너지 의존, EU회원국의 국방안보비용 증가, 트럼프 집권 이후 안보메커니즘 즉 NATO의 불확실성 가증)
- EU는 2020-2026의 기간동안 그들의 안보 체계가 '복합안보 포트폴리오'로 진화함.

EU의 복합안보

포트폴리오

경내 안보:
(ProtectEU,
2025)

외교안보, 방위
(Strategic
Compass for
Security and
Defense 2022)

경제안보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JOIN (2023) 20

보건안보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ning
(Comm. Implementing
Regulation 2023/1808)

사이버안보

(EU
Cybersecurity
Act, Regulation
2019/881)

연구목적과 타당성

- 본 연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은 유럽연합이 국제질서의 변화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지를 살펴본다.
- EU의 안보전략을 통해 EU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힘과 역할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1. EU의 시장권력 (Economic Power/Market Power)
 2. EU의 규범권력 (Normative/Civilian Power)
 3. EU의 규제권력 (Brussels Effect)
 4. EU의 외교력 (Tools reflecting Soft Power)
 5. EU의 전략력 (Strategic Power)
- EU의 외교안보전략의 복합적 진화의 시의적 함의,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EU의 힘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추가적 함의점도 도출해본다.

이론적/개념적 틀

EU의 권력	관련연구	내용
경제력	Vogel (1995) Drezner (2007) Moravcsik (2009)	EU가 단일시장의 규모를 바탕으로 규제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질서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우위를 가짐 (Vogel, 1995, Drezner 2007). EU는 높은 1인당 소득, 거대한 경제적 규모, 장기적 제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군사, 경제, 소프트파워 전반에서 실질적 역량을 보유한다는 주장 (조용한 최고권력, quiet superpower) (Moravcsik 2009)
규범력	Duchêne (1972) Manners (2002)	(Duchêne) 시민권력으로 당시 외교, 경제, 규범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군사에는 집중하지 않음) (Manners) EU의 본질, 즉 규범적 기반을 가진 특별한 정체성. 정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권력. (235) 즉 특수한 역사적 발전, 혼합적인 정치 체제 그리고 헌법적 구성으로 인해 대외관계에 있어 규범적으로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음 (252) (독특한 정체성 구성)
규제력	Damro (2012) Bradford (2020)	경제 및 사회 시장 관련 정책과 규제 조치를 외부화 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 강대국으로서의 유럽 (Damro, 2012). 유럽연합의 역할에 있어 시장 규제가 세계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브뤼셀 효과) EU의 역내시장을 제약하는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역외적으로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광범위한 준수 압력을 발생시킨다 (Bradford, 2020).
외교력	Michalski (2005) Shyrokykh (2020)	Michalski는 EU의 soft power를 설득력 즉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설득력에 주목했다. Shyrokykh는 12개의 후기소비에트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EU가입에 적극적인 국가인 경우 설득력이 컸다고 분석했다. (인센티브 기반)
전략력	Toje (2008)	EU를 강대국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전략적 행위자로서 면모가 이미 형성되었고, 그는 Keohane의 연구에 비추어 보아, 강대국의 세 가지 유형(체제결정형, 체제영향형, 체제비효과형)에 비추어 보았을 때 EU는 이미 전략적 행위자로서 면모를 갖추었다고 간주했음.

연구 범위와 기간

- 코로나19 이후 EU의 안보전략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눠서 관찰한다.
 - “내부안보(치안, 테러, 조직범죄, 국경, 중요기반)”
 - “외부안보, 방위(공동안보방위정책 CSDP, 군사협력, 방산, 공동조달, 군사이동성, 대외안보 파트너십),
 - 사이버 하이브리드, 보건안보, 경제안보(공급망, 핵심기술, 경제강압대응, 제재)의 상호연계된 전략, 제도 예산 변화를 중점으로 관찰함.
- 방법론: 문헌분석 (Document Analysis)
- 분석기간: 2020. 1 ~2025.12
- 자료선택: (1차) EU 법령(EUR-Lex),
EU기구 (집행위, EEAS, 이사회, 의회 등)
공식 문서 및 보고서, 통계, 기타 관련 문서(NATO).
(2차) 관련논문 (학술논문), 싱크탱크 보고서

주요 공식 문서 및 전략 목록

코로나 19 이후 EU의 안보전략, 제도 주요 이정표	
2020-07-24	Security Union Strategy 2020–2025 (COM(2020)605)
2020-12-16	EU Cybersecurity Strategy for the Digital Decade (JOIN(2020)18)
2021-03-22	European Peace Facility 출범 (CFSP 2021/509)
2021-03-24	EU4Health Programme 법제화 (Reg. (EU) 2021/522)
2021-05-12	European Defence Fund 법제화 (Reg. (EU) 2021/697)
2021-09-16	HERA 설립(집행위 DG)
2022-03-21	Strategic Compass 채택(4트랙: ACT/SECURE/INVEST/PARTNER)
2022-11-10	Action Plan on Military Mobility 2.0 (2022–2026)
2023-01-10	EU–NATO Joint Declaration(3차)
2023-10-18	EDIRPA 채택(공동조달 인센티브)
2023-10-24	EU Maritime Security Strategy 개정 승인
2023-07-20	ASAP 채택(탄약 생산 지원; 2025-06-30 종료)
2024-03-18	Strategic Compass 2년차 이행보고(EEAS)
2024-12-19	Cyber Solidarity Act 채택(2025-01-15 OJ)
2025-04-01	ProtectEU(유럽 내부안보전략) (COM(2025)148)
2025-12-16	EDIP 채택(방산산업 프로그램; 2025–2027)

- 코로나 19 → 회복력/보건, 사이버안보로 확장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위, 군수, 공동조달 가속의 큰 흐름

경제력 (Economic Power)

- 단일시장의 규모와 **예산 동원력**을 통한 안보역량

€ 79.5억 EDF 2021-27 방산 R&D 전용 EU 예산	€ 56.9억 EPF 초기 상한 대외 군사지원 재원	€ 15억 EDIP 2025-27 방산산업+우크라이나 지원	€ 3,430억 회원국 국방지출 2024년 EU 27개국 합계
--------------------------------------------------	-------------------------------------------	-----------------------------------------------	-------------------------------------------------

주요 성과

- EDF: 2021년 60개 프로젝트·약 € 12억 지원 집행
- EPF: 우크라이나 전용기금 신설, 상한 누적 증액
- EDIRPA→ASAP→EDIP 순차 도입으로 공동조달·생산 프레임 확립
- EU 예산으로 방산 R&D를 제도화한 최초의 시도

한계 및 쟁점

- EU 프로그램 예산 vs. 회원국 국방지출 규모 격차
- R&D→양산 연계 '죽음의 계곡' 위험 상존
- EPF off-budget 구조의 민주적 통제·투명성 논쟁
- 2028~ MFF에서 방위 재원 확대가 핵심 쟁점

출처: Reg.(EU) 2021/697(EDF); CFSP 2021/509(EPF); Reg.(EU) 2025/2643(EDIP); Council EPF Timeline; EDA Defence Data 2024-2025

규범력 (Normative Power)

규범, 가치, 법적 기반을 통한 '정상적 상태' 를 추구

• '회복력(Resilience)'의 규범적 제도화

- Security Union Strategy (2020): 코로나19가 '안보 위협' 개념을 재구성했다고 명시, whole-of-society 접근 채택
- Strategic Compass (2022): ACT/SECURE/INVEST/PARTNER 4 트랙에 '회복력'을 관통 개념으로 내장
- ProtectEU (2025): 준비태세(preparedness)·정보공유·위협분석 정례화로 내부안보 규범 재편
- 학술평가: resilience가 '정책정당화·우선순위 재배치의 도구'로 동원됨 (Joseph et al. 2024, RIS)

• 규범적 확장의 영역

- 보건안보: EU4Health·HERA·ECDC/EMA 강화로 보건을 '안보 회복력'의 제도적 축으로 편입
- 사이버: 규제(NIS2)→연대 기반 공동대응(Cyber Solidarity Act)→EU Cybersecurity Reserve 법제화
- 경제안보: '경제 흐름이 안보위험이 될 수 있음'을 전면화 (JOIN(2023)20)
- **일일: '안보=회복력'이 되돌릴 수 없는 제도화 단계로 진입**

출처: COM(2020)605; ST 7371/22; COM(2025)148; Reg.(EU) 2021/522; Reg.(EU) 2025/38; JOIN(2023)20; Joseph et al.(2024, RIS)

규제력 (Brussels Effect)

- 역내 시장 규제의 역외적 파급효과 (Bradford 2020)

핵심: EU 규제가 역내 적용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기술기준·방산조달에 '사실상 표준' 압력을 행사

📡 사이버·디지털

- NIS2 Directive: 역내 사이버보안 의무화
- Cyber Solidarity Act: 연대 기반 탐지·대응
- Digital Europe Programme 연계 재원
- 역외 기업에도 준수 압력 파급

🏭 경제안보·공급망

- 경제안보전략 4대 리스크 범주 체계화
- 공급망·핵심기술·경제강압 대응
- '개방형 전략자율성' 프레임 정립
- FDI 심사·수출통제 강화 추세

🏥 보건·산업기준

- HERA: 의료대응물자 공급 체계 구축
- EMA 역할 강화·긴급사용 절차
- 방산 규격(EDIRPA 원산 비중 기준)
- 유럽 표준의 글로벌 확산 기제

출처: Reg.(EU) 2025/38(Cyber Solidarity Act); JOIN(2023)20(경제안보전략); Reg.(EU) 2023/2418(EDIRPA); HERA Decision 2021-09-16; Schmitz(2023, JCMS)

외교력 (Diplomatic Power)

- 설득, 인센티브 기반 분쟁해결과 파트너십 구축 (Michalski 2005, Shyrokykh 2020)

EU-NATO 협력 강화

- 2023 공동선언: 러시아 침공을 '수십 년 최대 위협'으로 규정
- 진행보고서 체계(10차)로 협력 제도화
- 방산·신흥기술·회복력까지 의제 확장
- 전략자율성과 동맹협력의 '병행' 구조 형성

EUMAM Ukraine: 군사역량 제공

- 2026-11-15까지 연장, 약 €4.09억 예산 배정
- EPF 누계 €6.10억(훈련+장비 패키지)
- 자금지원→군사역량 제공자로 역할 확장
- CSDP '임무·훈련·장비' 조합으로 진화

주요 행위자 역할 변화

회원국

국가주권 유지 + EU 인센티브·규범 활용 혼합 모델

European Defence Agency

CARD·HEDI로 협력 촉진자/분석자 역할 강화

European Court of Auditors

신흥 EU 방위지출 성과감사로 견제 기능 부각

NATO

회복력 핵심 과업화, EU와 분업적 상호보완 유지

출처: EU-NATO Joint Declaration 2023-01-10; Council press release 2024-11-08(EUMAM); Council military support Ukraine 페이지; NATO 10th progress report; Ewers-Peters(2025, European Security)

전략적 권력 (Strategic Power)

-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EU, 체제결정, 영향, 비효과형 (Toje 2008)

분야	역량
군사이동성 & 방위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F 군사이동성 예산 €16.9억 (2021-27) • 95개 프로젝트 선정, 평균 EU 지원 €1,800만 • EUDIS·HEDI·DIANA: 다중 혁신 플랫폼 병존 • ECA 감사: '충분히 견고한 기반 없이 설계' 지적
우주, 해양, 복합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우주안보전략 (2023): 위성·인프라 보호 • 해양안보전략 개정 (2023): 해저케이블·항만 보호 • 하이브리드/사이버 위협의 '전장 외 확장' 대비 • 복합안보 포트폴리오(내부+외부+경제+사이버+보건) 통합



출처: ST 7371/22(Strategic Compass); JOIN(2022)48(Military Mobility 2.0); ECA SR-2025-04; JOIN(2023)9(우주전략); Council 2023-10-24(해양안보); IFRI(2024, EUDIS/HEDI/DIANA)

정리: 코로나 19 이후 EU의 안보 전략 주요 이정표

위기 대응 (2020-21)	방위 전환 (2022-23)	제도 공고화 (202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urity Union Strategy (COM(2020)605) • EU Cybersecurity Strategy (JOIN(2020)18) • EPF 출범 (CFSP 2021/509) • EU4Health·EDF 법제화 • HERA 설립(집행위 D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ategic Compass (ST 7371/22) • Military Mobility 2.0 (JOIN(2022)48) • EU-NATO 공동선언(3차) • EDIRPA-ASAP 채택 • 경제안보전략 (JOIN(202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ass 2년차 이행보고 • Cyber Solidarity Act (Reg. 2025/38) • ProtectEU (COM(2025)148) • EDIP 채택 (Reg. 2025/2643) • 대테러 아젠다

출처: EUR-Lex 공식 법령; Council of the EU; EEAS; European Commission 공식문서 기반 정리

논의: EU의 다섯 가지의 힘의 변화 총 정리

- 경제력: EDF, EPF, EDIP 등 EU차원 예산동원의 제도화가 일어남. 그러나 회원국 국방지출 대비 규모는 제한적임. (회원국별 상이)
- 규범력: '회복력=안보'의 규범적 제도화는 완성되었음. 보건, 사이버, 경제 안보까지 안보 범주가 확장됨.
- 규제력: NIS2, 경제안보전략, EDIRPA, 원산기준 등으로 역외 규제 파급력이 강화되며, 브뤼셀 효과 안보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 외교력: EU와 NATO의 기능적 상호보완이 제도화 되고 있음. EUMMAM으로 군사역량 제공자 역할 확대 (군사비 증가와 연관이 있음)
- 전략적: Strategic Compass로 '실행전략' 프레임 확보 (보고서 발간 등), 복합안보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어 짐으로,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면모가 강화되고 있음.

결론: 향후전망

핵심 결론

-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EU 안보전략의 '이중 축매' 역할
- 안보의 확장('회복력→방위→경제→사이버→보건')이 되돌릴 수 없는 제도화 단계 진입
- EU는 5대 권력 모두에서 '실질적 힘'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으나, 집행·규모·거버넌스 격차 상존
- 전략자율성과 동맹협력의 '병행'은 EU 안보정체성의 핵심 특징으로 고착

향후 전망

- 2028~ MFF: 방위산업·군수·군사이동성 예산 안정성이 주요 쟁점
- EDIP 집행 경험이 '공동조달+산업동원' 모델의 표준 가 등성
- ProtectEU·후속 아젠다: 준비태세·정보공유의 EU 수준 조정 강화
- 경제안보 4대 리스크: 대중·대러 관리, 핵심기술 통제, 공급망 다변화의 상위 프레임
- 우주·해양 등 영역별 안보전략이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의 확장 뒷받침

참고문헌

EU·회원국·NATO 공식

- o European Commission, **Security Union Strategy 2020–2025**(COM(2020)605), 2020-07-2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0DC0605>
- o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Strategic Compass for Security and Defence**(ST 7371/22), 2022-03-21,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7371-2022-INIT/en/pdf>
- o EEAS, **Pro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Compass**(March 2024 report, PDF), 2024-03-미지정(월 표기), <https://www.eeas.europa.eu/sites/default/files/documents/2024/implementation-of-strategic-compass-2024.pdf>
- o European Commission + EEAS, **Action Plan on Military Mobility 2.0**(JOIN(2022)48), 2022-11-1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52022JC0048>
- o Council Decision (CFSP) **2021/509 establishing EPF**, 2021-03-22, <https://eur-lex.europa.eu/eli/dec/2021/509/oj/eng>
- o Council of the EU, **Timeline – European Peace Facility**(웹 타임라인), 발행일 미지정(상시 업데이트),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ropean-peace-facility/timeline/>
- o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European Defence Fund Regulation**(Reg. (EU) 2021/697), 2021-05-12(OJ), <https://eur-lex.europa.eu/eli/reg/2021/697/oj/eng>
- o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EDIRPA Regulation**(Reg. (EU) 2023/2418), 2023-10-18(채택),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2418/oj/eng>
- o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ASAP Regulation**(Reg. (EU) 2023/1525), 2023-07-20(채택),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1525/oj/eng>
- o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EDIP Regulation**(Reg. (EU) 2025/2643), 2025-12-16(채택; 2025-12-29 OJ),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_202502643
- o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Cyber Solidarity Act**(Reg. (EU) 2025/38; 2024-12-19 채택, 2025-01-15 OJ),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38/oj/eng>
- o European Commission + High Representative,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JOIN(2023)20), 2023-06-2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3JC0020>
- o European Commission + High Representative, **EU Space Strategy for Security and Defence**(JOIN(2023)9), 2023-03-1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3JC0009> [\[95\]](#)
- o Council of the EU, **Revised EU Maritime Security Strategy and Action Plan 승인(보도자료 PDF)**, 2023-10-24,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10/24/maritime-security-council-approves-revised-eu-strategy-and-action-plan/pdf/>
- o EU4Health Programme Regulation (Reg. (EU) 2021/522), 2021-03-24(채택; 2021-03-26 OJ), <https://eur-lex.europa.eu/eli/reg/2021/522/oj/eng>
- o European Commission, **HERA 설립 결정문**(Commission Decision), 2021-09-16, https://health.ec.europa.eu/system/files/2021-09/hera_2021_decision_en_0.pdf
- o Council press release, **EUMAM Ukraine mandate 연장 및 예산(약 4.09억 유로)**, 2024-11-08,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11/08/ukraine-council-extends-the-mandate-of-the-eu-military-assistance-mission-for-two-years/>
- o Council of the EU, **EU military support for Ukraine(정책 페이지; EUMAM/EPF 누계 포함)**, 발행일 미지정(상시 업데이트),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military-support-ukraine/>
- o Council of the EU, **EU–NATO Joint Declaration** (PDF), 2023-01-1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1/10/eu-nato-joint-declaration-10-january-2023/pdf/>
- o NATO, **NATO 2022 Strategic Concept**(공식), 2022-06-29(승인; 웹 게재 2023-03-03 표기), <https://www.nato.int/en/about-us/official-texts-and-resources/strategic-concepts/nato-2022-strategic-concept>
- o NATO, **Resilience, civil preparedness and Article 3**(baseline requirements 설명), 발행일 미지정(웹페이지), <https://www.nato.int/en/what-we-do/deterrence-and-defence/resilience-civil-preparedness-and-article-3>
- o NATO, **10th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EU–NATO common proposals**(PDF), 2025-미지정(문서 표지 기준; 파일은 2024–2025 범위 명시), <https://www.nato.int/content/dam/nato/webready/documents/publications-and-reports/EU-NATO-progress-report-nr10-2025.pdf>
- o European Court of Auditors, **Special Report 04/2025 EU military mobility**(PDF), 2025-02-06(OJ 공표), https://www.eca.europa.eu/ECAPublications/SR-2025-04/SR-2025-04_EN.pdf
- o European Defence Agency(EDA), **CARD 소개 페이지**(Aggregated Analysis 설명), 발행일 미지정(웹페이지), <https://www.eda.europa.eu/what-we-do/EU-defence-initiatives/coordinated-annual-review-on-defence-%28card%29>
- o European Defence Agency(EDA), **HEDI 페이지(승인 2022-05-17, 출범 2022-05-31 명시)**, 발행일 미지정(웹페이지), <https://eda.europa.eu/what-we-do/research-technology/hedi>
- o EDA, **Defence Data 2024–2025**(PDF), 2025-미지정(문서 발행일은 PDF 참조), https://eda.europa.eu/docs/default-source/brochures/2025-eda_defencedata_web.pdf

참고문헌

• 학술지

- o Boin et al., **Crisis management performance and the European Union**(Taylor & Francis), 2023-미지정(온라인 공개 기준),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3501763.2022.2141304>
- o Schmitz, **Understanding the Rise of Open Strategic Autonomy in EU Trade Policy**(JCMS), 2023,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pdf/10.1111/jcms.13428>
- o Joseph & (공저) **Conceptual politics and resilience-at-work in the European Union**(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Cambridge), 2024,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review-of-international-studies/article/conceptual-politics-and-resilienceatwork-in-the-european-union/F2101EC2FA92FBD2A7B89048F7605685>
- o McKee et al., **The path to a European Health Union**(The Lancet Regional Health – Europe), 2024,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epi/article/PIIS2666-7762\(23\)00213-2/fulltext](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epi/article/PIIS2666-7762(23)00213-2/fulltext)
- o Ewers-Peters, **EU-NATO cooperation reloaded: ...**(European Security, Taylor & Francis), 2025,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4702436.2025.2562975>

• 싱크탱크·정책기관 보고서

- o CEPS, **Health emergency response governance in the EU**(In-depth analysis, PDF), 2024-02-미지정, https://cdn.ceps.eu/wp-content/uploads/2024/02/CEPS-InDepthAnalysis-2024-04_Health-emergency-response-governance.pdf
- o IFRI, **EUDIS, HEDI, DIANA: What's behind three defense innovation initiatives?**(PDF), 2024-09-23, https://www.ifri.org/sites/default/files/2024-09/ifri_mohring_defense_innovation_2024.pdf
- o European Parliament EPRS, **EU–NATO cooperation**(Briefing, PDF), 2025-06-24,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5/772922/EPRS_BRI\(2025\)772922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5/772922/EPRS_BRI(2025)772922_EN.pdf)
- o European Parliament EPRS, **The third joint EU–NATO declaration**(At a glance, PDF), 2023-02-미지정,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ATAG/2023/739333/EPRS_ATA\(2023\)739333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ATAG/2023/739333/EPRS_ATA(2023)739333_EN.pdf)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골주의의 귀환인가, 전략적 적응인가 신고전적 현실주의로 본 프랑스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

심성은(국회입법조사처)

I. 서론
II. 신고전적 현실주의와 분석 모델
III. 국제 체제의 구조적 압력 증대
IV. 지도자 인식과 전략적 전통
V. 프랑스의 군사 전략과 재무장 전략: 구조적 압력에 대한 능동적 대응
VI. 결론

I. 서론

2022년 러우 전쟁에 이어 2026년 미-이란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공습으로 전쟁을 주도한 러시아와 미국은 냉전 주요국이었다는 점에서 냉전 시대로의 회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단극주의에서 다극주의로의 전환에 따른 국제질서 변동이라는 지적도 있다.

러시아라는 안보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재무장을 결정했다.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스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NATO 회원국들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은 시대전환(Zeitenwende)을 선언했으며, 핀란드와 스웨덴은 NATO에 가입하면서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는 등 유럽의 동맹 강화를 통한 세력 균형 전략이 모색되었다. 프랑스도 재무장과 핵무기 공유 및 확충을 강조하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주도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우 전쟁 이후 EU 재무장을 주도하며 유럽의 안보 질서를 재구성하고 있다. 2025년 7월 14일에 발표된 『2025 국가전략리뷰(Revue nationale stratégique 2025, RNS)』에서는 2030년을 전후하여 유럽 역외의 고강도 전쟁에 프랑스가 개입할 가능성을 명시하고, 4,130억 유로 규모의 “LPM 2024-2030(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 2024-2030)”을 통해 전력의 현대화를 이행하고 있다. 2026년 3월에는 일 롱그(Île Longue) 해잠수함 기지 연설에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핵탄두 확대를 선언했으며 '전진억제(dissuasion avancée)' 독트린을 발표하는 등 핵 전략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프랑스는 NATO 대신 EU를 중심으로 안보 체제를 재편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 축소와 유럽 자강론을 최우선 전략으로 한다.

최근 프랑스의 안보 전략 변화는 국제 체제 변화에 대한 능동적 결정에 기반한다. 러우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안보 위협 증대와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분쟁, 대서양 동맹 약화 등의 국제 체제의 구조적 압력이 지속되었다. 일련의 외부 안보 위협 증가에 대하여 프랑스는 NATO 대신 EU를 중심으로 한 안보 공동체 구축, 자국의 재래식과 핵무기 현

대화와 확충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외교안보 정책은 신드골주의(Neo-Gaullism)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외교안보 정책은 NATO 중심의 안보 정책을 선호하는 발트 3국이나, 최근 NATO에 가입한 핀란드와 스웨덴, 친러 경향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와 차이가 있으며, 프랑스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지만 NATO 채널 선호 경향을 보이는 독일, EU 중심 재무장 정책에 소극적인 스페인과 다른 면이 있다.

최근 프랑스의 외교안보 정책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본고는 신고전적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이론을 분석틀로 선택하였다.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국제 체제의 구조적 압력(독립변수)이 국가의 외교 정책(종속변수)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가진 전략 문화, 지도자의 인식, 국가 역량 추출(State power extraction) 등의 매개변수를 통해 굴절·변형된다고 본다. 본고는 프랑스가 국제질서의 구조적 압력에 대하여 역사적 전통과 지도자의 전략적 판단에 기반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능동적으로 채택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 장에서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할 분석 모델을 정립한 뒤, 3장에서는 독립변수로서 러우 전쟁 이후의 국제 안보 구조 변화와 체제적 압력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프랑스 내부의 매개변수인 전략 문화와 마크롱 행정부의 인식을 설명한 뒤, 5장에서는 프랑스의 실제 재무장 정책(핵 현대화, LPM 2024-2030 등)과 EU 주도 전략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신고전적 현실주의와 분석 모델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Kenneth Waltz의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현실주의의 이론적 분파이다(Waltz pp. 71-72). 구조적 현실주의는 국제 체제의 무정부성(anarchy)과 국가 간 세력 분포(distribution of power)만으로 국가 행동의 전반적 패턴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동일한 구조적 압력 하에서 국가들이 상이한 외교 정책을 실행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1998년, Gideon Rose는 신고전적 현실주의를 제안하며 한 국가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와 범위는 우선 해당 국가의 상대적 역량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러한 외교안보 정책은 단위 수준(unit-level)의 매개변수들을 통해 변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국제 체제의 구조가 국가 행동에 대한 결정 요인이 된다고 가정한 Waltz의 구조적 현실주의를 비판하였다. 각 국가 지도자들은 불분명한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불완전한 정보를 주관적 판단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적 압력 하에서도 국가마다 외교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Rose는 신고전적 현실주의가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라는 세 변수를 직접적 인과 연쇄로 연결한다고 명시한다. 즉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구조를 따른다는 것이다.

신고전적 현실주의에서 독립변수는 국제 체제 내 상대적 물질 권력의 분포이다. 로즈에 따르면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중심적 경험적 예측은, 장기적으로 국가들이 보유한 상대적 물질 권력의 규모가 그들 외교정책의 야망과 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Rose 152). 프랑스 외교안보 정책의 독립변수는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가시화된 러시아의 안보 위협,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화된 대서양 동맹,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들 수 있다.

Rose에 따르면 체제적 압력이 한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위 수준

의 매개변수들, 즉 의사결정권자의 인식과 국가의 사회적 자원 추출 역량의 영향을 받는다(Rose 157-160). 외교안보 정책은 정치 지도자와 엘리트들이 선택하므로 객관적인 물질적 자원이 아니라 상대적 권력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지도자의 인식은 그 국가가 역사적으로 형성해온 안보 관념과 전략적 전통에 의해 구조화되기도 한다. 프랑스의 경우 마크롱 대통령의 위협 인식과 전략적 판단 분석을 매개변수로 차용하되, 외교안보 면에서 신드골주의의 발현도 함께 고려한다. 국가의 사회적 자원 추출 역량도 주요 매개변수이다(Rose 146, 157-161). 프랑스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 군사비 지출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 역량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는 개별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대외 정책의 목적과 시기들을 설명한다. 최근 프랑스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 EU 중심의 안보 공동체 구축 전략, 자국의 재래식 무기와 및 핵전력 확충과 현대화(LPM 2024-2030, 전진억제 독트린), 대서양 동맹 재조정이라는 변화를 종속변수로 할 수 있다.

본고는 국제 체제의 구조적 압력이 마크롱 대통령 등 정치 엘리트들의 인식을 통해 외교안보 정책으로 산출되는 경로를 분석하여, 프랑스의 안보 전략이 구조 변화에 따른 독특한 전략 전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III. 국제 체제의 구조적 압력 증대

프랑스 안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 대두와 유럽 안보 상황 악화, 국제 체제의 변화로, 다극주의로의 전환, 대서양 동맹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실질적인 안보 위기로 촉발하였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 병합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NATO 회원국 영공 침범, 사이버 공격, 사보타주 등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전쟁과 방산 시설, 해저 케이블, 철도망과 같은 핵심 기반시설을 겨냥한 회색지대(grey zone) 공세로 러시아라는 안보 위협 요소를 가시화하였다. 2024년까지 미국과 유럽이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를 실행하였으나,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대서양 동맹 약화로 유럽의 부담이 대폭 가중되었다.

또한, 트럼프의 재취임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다극주의적 전략 전환은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팽창주의로 인한 단극 질서 와해의 결과이다. 미중 패권 경쟁은 중국의 경제적 굴기와 군 현대화를 통한 인태지역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인태전략 채택으로 공식화되었다. 2022년 러우 전쟁은 러시아가 단극적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명시적 도전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의 경찰' 대신 '보통의 강대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럽은 미·중·러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다극 경쟁 구도가 본격화됨에 따라 단극 질서가 제공하던 안보 공공재의 수혜자에서 다극 경쟁의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미국의 전략적 중심축이 유럽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은 2011년 오바마 행정부의 Pivot to Asia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트럼프 1기(2017-2020), 바이든 행정부(2021-2024)를 거치며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미국의 유럽 관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미-유럽 관계가 재정 의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NSS와

2026년 NDS에서 서반구를 최우선 지역으로 설정하고 유럽을 후순위로 두었다(NSS 27; NDS 13). 더 나아가 유럽 동맹국과의 안보 부담(burden sharing)을 강조하는 한편, 유럽은 쇠퇴를 지속하여 “문명 삭제(civilizational erasure)”의 위기 있다고 비판하는 등 유럽의 정치·안보·경제적 중요성을 폄하하였다(NSS 25-27).

트럼프 2기 행정 출범 이후 시작된 미-유럽 간 안보와 관세 갈등은 대서양 동맹을 약화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 위기, 방위비 부담 요구, 유럽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실행하는 등, 공동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파기하고 비용·편익 계산에 기초한 거래적(transactional) 관계로 재편하였다. 유럽의 입장에서는 대서양 동맹이라는 안보 공공재의 공급 축소를 의미하며, 독자적 안보 역량 구축의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강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 위협의 가시화, 다극 질서로의 전환, 미국의 전략적 재조정 등에 따른 대서양 동맹 약화는 국제질서 변화를 초래했으며, 이는 다시 프랑스 등 유럽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적 압력은 유럽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작용하지만 프랑스는 시대전환(Zeitenwende)을 선언한 독일,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NATO에 가입한 핀란드와 스웨덴, NATO 동맹 강화를 선호하는 일부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EU 중심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와 독자적 핵 역지력 확충이라는 차별화된 노선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프랑스의 안보 정책 변화는 구조적 압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인식과 프랑스의 역사적·전략적 전통과 같은 매개변수가 구조적 압력을 굴절·변형시킨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IV. 지도자 인식과 전략적 전통

신고전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 체제의 구조적 압력은 국가 내부의 매개변수를 거치며 굴절된다. 프랑스의 경우, 러시아의 위협과 다극주의, 대서양 동맹의 약화라는 독립변수는 프랑스 특유의 전략 문화, 지도자의 인식 체계, 방산 인프라와 기술적 자율성 간 관계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변형되었다.

우선,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드골주의(Gaullisme)와 위대한 프랑스(Grandeur de la France)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심성은 2021). 이는 1960년대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에 의해 확립된 전략적 배경으로, 국가 주권의 절대성, 강대국(Grandeur) 지위, 미국에 대한 외교안보적 전략 의존성 배제가 핵심 가치이다. 1960년대 드골 대통령은 “미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하여 뉴욕을 희생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 핵우산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핵 타격 능력(force de frappe nucléair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De Gaulle 1965). 맥나마라 미국 국방장관 등이 프랑스의 독자적 핵 전략의 위험성과 낮은 신뢰도를 비판하며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였으나 프랑스는 핵무기를 강대국 지위를 보장하는 정치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였다.

드골은 1966년 NATO의 통합 군사 지휘 체계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독자적 핵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자국 내 미군 기지를 철수시켰다. 이는 프랑스 안보의 독립성과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 배제를 실천한 것으로, 미국이라는 타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군사 지휘권과 핵 역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1년~1962년의 푸셰 계획(Plan Fouchet)을 통한 유럽 중심의 공동 외교안보 공동체 논의, 1963년 프랑스-서독 간의 안보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엘리제 조약(Traité d'Élysée) 등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안보 역

량 강화 전략을 추진하던 드골주의의 목적을 보여준다.

드골주의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인 폼피두 대통령(Georges Pompidou, 1969-1974), 시라크 대통령(Jacques Chirac, 1995-2007)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비공화당 출신인 데스탱 대통령(Valéry Giscard d'Estaing, 1974-1981), 사회당 출신인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에 의해서도 재해석하여 수용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드골의 후계자'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내 외교안보 정책과 EU의 전략적 자율성 실행에서 드골주의를 현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도자의 인식 체계도 국제 체제의 구조적 압력 변화에 대한 프랑스 내 매개변수로 작용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드골주의적 전통을 21세기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신드골주의와 프랑스의 핵전력을 유럽 차원으로 확장하는 전진역제를 통해 유럽 전략적 자율성(Autonomie stratégique), 유럽 주권(Souveraineté européenne)을 구축함으로써 '강력한 유럽(L'Europe puissance)'과 유럽 시민들을 '보호하는 유럽(L'Europe qui protège)'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1994년 프랑스 『국방백서(Livre blanc sur la défense)』에서 최초로 명문화되고 2016년 EUGS를 통해 EU의 공식 의제로 격상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자국의 핵심 외교 전략으로 발전시켰다. 2017년 소르본 연설을 기점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경제, 기술, 가치를 포괄하는 유럽 주권의 차원으로 확장하며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였다. 특히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유럽의 안보 의존성을 축소하고 독자적 안보 역량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실천적 정치 의제로 확립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서양 동맹 내 유럽의 하부 구조 지위를 탈피하고자 NATO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왔다. 2019년 언론 인터뷰에서 NATO를 뇌사 상태(Mort cérébrale)로 규정하며 미국의 리더십 부재와 동맹국 간 전략적 공조 결여로 인해 집단 안보 체제로서의 기능적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우 전쟁 발발로 이후 NATO 역할이 강화되자 EU의 재무장 정책, PESCO 등을 통해 EU의 안보 역량도 함께 강화하고자 했다.

프랑스가 드골주의를 기반으로 자국과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신고전적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국가의 자원 추출, 동원 역량이라는 물질적 토대를 보유한 덕분이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드물게 해상(SSBN)과 공중(Rafale) 기반의 핵 이원체계(nuclear dyad), 재래식 육·해·공군 전력 등의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탈레스(Thales), 나발 그룹(Naval Group)과 같은 방산 기업들에 대한 통제와 지원을 통해 핵심 무기 체계 국산화를 도모해왔다.

V. 프랑스의 군사 전략과 재무장 전략: 구조적 압력에 대한 능동적 대응

프랑스는 국제 체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프랑스의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핵억제력의 현대화, EU의 통합 방위 체계 강화 전략을 실행하게 되었다. 이는 프랑스 고유의 전략 문화와 지도자의 인식 등의 국내적 요소가 작용한 결과이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가 추진하는 첫 번째 대응 정책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이다. 프랑스 정부는 2023년 발효된 LPM 2024-2030에서 총 4,130억 유로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 예산을 투입하여 고강도 분쟁에 대비한 전력 구조 개편을 단행 중이다. 이 예산 규모는 LPM 2019-2025 대비 약 40% 증액된 것으로, 2017년 약 320억 유로이던 국방 예산은 2024년 472억 유로로 증가하였으며 2027년까지 640억 유로로 두 배 수준으로 증액될 예정이

다.

국방 예산 증가는 러우 전쟁 이후 전시 경제(Économie de guerre)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을 효율성 중심에서 지속 가능성과 속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Ministère des Armées Et des Anciens Combattants 2022). 이는 「국방법전(Code de la défense)」에 명시된 국가의 민간 산업 자원 신속 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징발 조항을 현대화한 것으로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가의 일반적 필요를 위한 징발”이라는 표제를 “국방 및 국가 안보를 위한 징발(RÉQUISITIONS POUR LES BESOINS DE LA DÉFENSE ET DE LA SÉCURITÉ NATIONALE)”로 수정함으로써 국가의 자원 동원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상원에서 민간 예금을 방산 금융조달 방안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방위산업 기술기반(BITD)의 중소기업들은 생산 라인 증속에 필요한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은 Livret A와 LDDS와 같은 민간 예금의 일부를 BITD 기업, 특히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같이 LPM 2024-2030은 프랑스 정부의 자원 동원 능력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국가 자원 동원 역량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프랑스의 핵 억제력의 현대화와 전진 억제 독트린 발표와 같은 프랑스의 핵 전략도 드골주의의 핵심인 전략적 안보 독립을 상징한다. 2026년 3월, 마크롱 대통령의 일 롱그(Île Longue) 기지 연설을 통해 공식화된 핵 전략의 변화는 국제 체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프랑스의 독자적 노선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선, 프랑스는 핵 이원체계(Nuclear Dyad)의 고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차세대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SNLE 3G) 4척의 건조를 확정하고, 라팔(Rafale) 전투기에 탑재할 차세대 초음속 핵미사일(ASN4G)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Elysée 2026). 이는 영국의 핵 전력인 미국산 W76 탄두와 미국산 미사일(Trident II)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프랑스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국산화함으로써 기술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의 핵 억제력이 자국 영토 수호를 넘어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공재가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했다(Elysée 2020). 프랑스 핵 전략의 유럽으로의 확대 의도는 2024년 스웨덴 방문에서도 재확인되었다(Elysée 2024). 이는 NATO의 핵 기획 그룹(NPG)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유럽 내 프랑스의 안보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미국의 핵우산 신뢰도가 저하된 다극 체제 하에서 프랑스가 유럽 안보의 종국적 보증인(Ultimate Guarantor) 역할을 자임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프랑스는 2025년 7월 10일, 영국과 노스우드 공동선언(Northwood Declaration)을 발표했는데, 이는 프랑스 핵 억제의 유럽화 구상을 동맹 간 공식 협의 차원으로 격상시킨 것이었다. 더 나아가 2026년 3월 2일, 마크롱 대통령은 일 롱그(Île Longue) 핵잠수함 기지에서 프랑스가 전진 억제라는 새로운 단계로 “점진적으로” 진입한다고 선언하며, 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을 프랑스 핵 억제 훈련에 참여시키고,¹⁾ 유럽 동맹국 영토에 프랑스 전략 전력을 상황에 따라 전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Gouvernement de la France 2026).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핵 전력의 유럽 확대 구상에 대하여 동유럽 국가들의 프랑스 EU 안보 의제 확보 의혹 제기(Weber 2022), 프랑스의 유럽 안보 주도권 장악 야망의 일환(Dempsey 2024),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 핵 결정권 독점(Nicoli and Pench 2026)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우려를 제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의 미국의 핵 억지력 대체 역량 부

1) 영국도 참여하였으나 이는 노스우드 공동선언으로 별도 협력 채널이 구축된 데 따른 것이다.

족(Nagy 2026), 재원 조달의 불투명성과 2027년 대선 변수 등으로 인해 이러한 목표가 “마크롱의 임기를 넘어서도 유지될 수 있는가”도 지적되는 등(Weber 2025),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판 핵 공유 프로그램 실현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프랑스는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 강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EU 중심의 전략적 자율성 실현이라는 목표를 확대하고 있다. NATO라는 기존의 집단 안보 체제를 존중하지만, 실질적인 역량은 EU를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이중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프랑스는 EU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 논의를 선도해왔으며, 구체적으로는 EDF를 활용하여 차세대 전투기(FCAS)와 지상전투체계(MGCS)와 같은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유럽 방산 생태계 통합을 통해 미국산 무기 체계(F-35 등)의 시장 점유를 축소와 유럽의 기술 주권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EU 공동군 창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EU는 2020년 독일의 발의로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을 구상하였으며, 2025년에 5,000명 규모의 EU 신속대응군(RDC)을 창설하였다. 프랑스는 의장국으로서 14개국에 공동 제안했던 RDC의 최종 채택을 이끌고 자국군을 RDC 구성에 기여하는 등 창설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NATO와 별개로 유럽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마크롱 대통령이 주창해온 강력한 유럽 실현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심성은,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021, 24(2): 119-150.
- De Gaulle, Charles, *Allocution du 27 avril 1965*, 1965.
- Dempsey, Judy, “Judy Asks: Will Macron’s Vision for European Defense Gain Traction?”, Carnegie Europe, April 25, 2024.
- Elysée, *Discours du Président Emmanuel Macron sur la stratégie de défense et de dissuasion devant les stagiaires de la 27ème promotion de l’école de guerre*, February 7, 2020.
- , *Visite d’État en Suède : discours à la communauté de défense*, January 30, 2024.
- , *Déplacement sur la base opérationnelle de l’île Longue*, March 2, 2026.
- Gouvernement de la France, *Discours du Président sur la dissuasion nucléaire*, March 5, 2026.
- Ministère des Armées Et des Anciens Combattants, *Économie de la défense et économie de guerre*, June 13, 2022.
- Nagy, Tomáš, “France Moves One Step Forward: What Macron's Nuclear Signal Means for Europe”, GLOBSEC, March 3, 2026.
- Nicoli, Francesco, and Pench, Lucio, “Europe Should Build on France’s Nuclear Deterrent Extension Offer”, Bruegel, March 16, 2026.
- President of the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vember 2025.
- Rose, Gideon, “Neoclassical Realism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World Politics*, October 1998, 51(1): 144-172.
- U.S. Department of Defense,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Restoring Peace Through Strength for a New Golden Age of America*, 2026.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 Weber, Gesine, “French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nder Macron: All in for European Sovereignty”, *UK in a Changing Europe*, April 4, 2022.
- , “It’s Not Enough for France to Be Right About Strategic Autonomy”, *War on the Rocks*, May 14, 2025.

한국유럽학회 춘계학술대회
패널 2. 불확실성의 시대 외교전략의 변화 토론문
고주현(연세대)

이번 패널의 발표문은 공통적으로 2020년대 중후반 국제질서의 불안정성과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가속되는 질서 전환, 동맹 구조의 재편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편의 발표는 각각 영국, 유럽연합, 프랑스, 그리고 분절화되는 세계질서와 중견국의 역할을 다루면서도, 모두 다극화·동맹의 재구성·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통해 오늘날 유럽과 중견국 외교의 방향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용민 선생님의 발표는 ‘특수관계’라는 신화이자 제도를 ① 핵 협력, ② 정보 동맹, ③ NATO 공동작전이라는 제도적 기반과, 탈제국 영국 정체성을 떠받쳐온 상징적 자산으로 동시에 재구성하고 계십니다. 그 위에서 트럼프 2기의 관세 부과,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관련 압박, 그리고 Reform UK의 부상이라는 외부·내부 요인이 특수관계에 구조적·행위자 차원의 균열을 가져오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 계십니다. 토론자로서 질문과 제안을 드리자면 이를 ‘특수관계의 균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화의 퇴색과 제도의 지속이 공존하는 재조정(recalibration)’으로 볼 것인지, 개념적 정리가 한 번 더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미·영 핵 협력과 Five Eyes와 같은 핵심 제도는 상당 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상징적 위상과 국내정치적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면, 영국이 장기적으로 미·EU 사이에서 일종의 ‘미니 스윙 스테이트’로 기능할 여지가 있는지, 혹은 브렉시트의 제도적 제약 때문에 선택지가 더 제한되는지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평가 측면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상철 선생님의 발표는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를 거쳐 ‘fragmenting global order(FGO)’로 이행하는 과정을 금융위기,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브렉시트, 트럼프 1·2기를 주요 분기점으로 설정하여 거시적인 서사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특히 트럼프 2기의 관세·방위비 5% 요구·일방적 군사작전 등을 “무기화된 상호의존”과 “포식적 경제”로 개념화하신 점이 인상적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분절화된 질서 속에서 중견국·스윙 스테이트의 역할이 의지에 비해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진단은 상당히 현실주의적입니다. 그렇다면 ‘스윙 스테이트’ 개념이 설명 변수라기보다 강대국 경쟁의 부산물에 가까워지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데, 한국·MIKTA·브라질·인도·사우디 등의 사례에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스윙’하고 있는지(이슈별 정렬, 제도 간 선택, 경제·안보의 분리 등)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면, 개념의 분석력이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정세원 선생님의 발표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중 촉매로 삼아 EU의 안보 체계가 2020-2026년 사이 ‘복합안보 포트폴리오’로 진화해 온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계십니다. 경내 안보(ProtectEU), 외교·방위(Strategic Compass), 경제안보, 보건안보, 사이버 안보를 포괄하는 방대한 법령·전략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점이 특히 돋보입니다. 더 나아가 EU의 힘을 시장권력, 규범권력, 규제권력, 외교력, 전략력의 다섯 축으로 분해하여, 방산 R&D(EDF), 대외 군사지원(EPF), 공동조달(EDIRPA-ASAP-EDIP) 등으로 ‘조용한 최고권력’의

물질적 토대가 강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EU 예산과 회원국 국방비 사이의 규모 격차, EPF의 민주적 통제 문제, 군사이동성과 방위혁신에서 드러나는 집행·거버넌스 한계를 짚어 주시으로써, EU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도화의 깊이에 비해 여전히 집행력·정치적 의지 측면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균형 있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표 끝부분에서 언급하신 Toje의 구분(체제결정형, 체제영향형, 체제비효과형)과 직접 연결하여, 현재 EU를 어디에 위치시키실 것인지—특히 NATO와의 ‘병행’ 구조가 장기적으로 협력인지, 잠재적 경쟁인지—를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패널 전체의 이론적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성은 선생님의 발표는 최근 프랑스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를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인과모델로 정교하게 분석하면서, 이를 신드골주의(Neo-Gaullism)의 현대적 발현으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위협, 트럼프 2기로 인한 대서양 동맹 약화, 단극에서 다극으로의 전환을 구조적 압력으로 설정하시고, 드골주의와 ‘위대한 프랑스’ 정체성, 마크롱 대통령의 전략적 자율성·유럽 주권 담론, 독자적 핵·방산 생태계 등을 매개변수로 세밀하게 추적하신 점은 이론과 경험연구의 결합 측면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RNS 2025, LPM 2024-2030, 핵탄두 확대와 ‘전진억제’ 독트린, EU 중심 안보공동체 구상 등 구체적 정책 변화들을 제시하신 것은, 추상적으로 논의되던 ‘전략적 자율성’을 실제 군사·예산·제도적 선택으로 연결해 준 중요한 기여로 보입니다. 다만 “드골주의의 귀환인가, 전략적 적응인가”라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1960-70년대 드골의 ‘유럽의 유럽’ 구상과 오늘날 마크롱의 ‘L’Europe puissance’ 사이의 연속성과 단절을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해 주시면 논제와 더 밀접하게 호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프랑스의 EU 중심 재무장·핵전략 전환이 독일·동유럽·북유럽 국가들의 NATO 선호와 어떤 긴장을 빚는지, 다시 말해 프랑스가 EU 전략적 자율성의 엔진이자 동시에 일부 회원국들 눈에는 잠재적 ‘분절 요인’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주변국 시각도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프랑스 모델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더욱 입체적으로 완성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네 발표를 관통하는 공통질문을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2기, 분절화된 질서, 유럽의 복합안보와 전략적 자율성, 신드골주의적 프랑스 전략이라는 맥락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견국들은 어느 정도의 전략적 자율성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한은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으면 합니다. 만약 스윙 스테이트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제약된다면, 오히려 EU·프랑스·영국 사례가 보여주는 다양한 ‘전략적 적응’의 레퍼토리를 참고하면서, 한국 외교가 자율성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 패널의 중요한 확장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론문 이성봉(서울여대 교수)

박상철교수님의 “The Fragmenting Global Order and Roles of the Middle Powers as Swing States”에 대한 토론문

박상철교수님께서서는 최근 국제질서가 파편화되는 상황에서 중견국의 부상과 그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분석하고 계십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을 중심으로 국제질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데, 특히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 시대가 저물고, 미국·중국·러시아 중심의 다극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트럼프 2기 'MAGA 독트린'은 기존의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거래적이며 불안정한 분절화(Fragmentation)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편화된 세계 질서(FGO)'의 주요 특징으로 무기화된 상호의존, 경제와 안보의 결합, 기술 및 공급망 민족주의 등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파편화된 세계 질서(FGO)' 속에서 주요 파워 그룹의 현황을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기존 유럽의 강대국은 러시아에 맞서 유럽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지만, 미·중 경제 의존도가 높고 독자적 군사 작전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인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은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며 역동적이지만, 플랫폼 내부의 이해관계 차이로 공동 행동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세계 질서(FGO)' 속에서 중견국들이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s)'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 브라질 등은 군사 안보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집중하며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는 '스윙 스테이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문화, 외교,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이들 스윙 스테이트를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중견국의 '스윙 스테이트' 전략은 미·중의 '진영 구축'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관세와 국방비 5% 연계'라는 강력한 경제·안보 결합 카드를 꺼내 들고, 중국이 '공급망 무기화'로 맞서는 상황에서, 중견국들이 추구하는 '경제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가 단순한 '희망사항(Illusion)'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력 및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둘째, 므타(MIKTA) 등 중견국 협의체가 '파편화된 질서'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발표 자료에서 언급된 기술 생태계의 분절화(AI 및 에너지 안보) 현상이 심화될 때, 지리적·경제적 접점이 부족한 MIKTA와 같은 중견국 협의체가 지역 블록화의 파고를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백을 메우는 '제3의 축'으로 기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결국 개별 국가 차원의 '각자도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김용민박사님의 '특수관계의 균열: 트럼프 2기와 영국외교의 재편'에 대한 토론문

본 발표는 핵 협력, 정보 공유(Five Eyes), 군사 동맹(NATO)이라는 3대 축으로 유지되어 온 영·미 동맹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래 중심 외교'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영·미 특수관계의 신화 해체와 영국 외교전략 재편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하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2월 미국의 이란 폭격 개시 당시 영국의 기지 사용 거부와 트럼프의 공개적 비판은 양국 신뢰 관계가 실질적으로 소멸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에 동감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영국에 예외 없는 10~15% 관세를 부과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를 압박하며 동맹에 '가격표'를 매기는 등 대외적 압박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Reform UK'의 급부상(지지율 28%)과 이민 반대 여론 심화 등 국내 정치의 우경화로 스타머 정부의 진보적 외교 및 대미 유화 정책의 입지를 좁히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외교의 재편 내용을 '전략적 삼각 균형'으로 평가한 부분은 탁월한 분석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영·미 동맹의 특수관계는 '붕괴'가 아닌 '변형' 중이며, 군사·정보 협력은 남았으나 정치적 신뢰와 경제적 우대는 사라진 상태라는 평가에 동감합니다. 본 발표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김박사님께서 제시한 한국의 과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 변화 앞에서는 영·미와 같은 '특수관계'조차 취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한미 동맹의 거래 압박에 대비한 독자적 외교 역량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에 동감합니다.

김박사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영·미 동맹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것으로 영국의 '기지 사용 거부'가 Five Eyes 체제의 근간을 흔들 위험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발표에 보면 이번 이란 폭격 초기 영국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사용 거부를 '전례 없는 균열'로 꼽고 있는데, 영국 안보의 핵심인 핵(Trident)과 정보(Five Eyes)는 여전히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국익을 이유로 미국의 군사 작전(이란 폭격) 협조를 거부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과시했지만, 이것이 역설적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 제공이나 최고급 정보 공유(Five Eyes)의 조건을 강화하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둘째, 'Reform UK'의 부상이 영국의 '유럽 안보 리더십' 전략과 충돌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발표자료에 보면 스타머 정부는 트럼프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유럽(프랑스·독일)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영국 국내에서는 트럼프와 친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Reform UK의 지지율이 노동당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유럽 중심의 안보 리더십' 전략이, 정작 급부상 중인 '영국판 트럼프즘(Reform UK)'의 고립주의 여론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을 스타머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민심의 우경화가 영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결국 '대미 굴종'으로 회귀시키지는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세원교수님의 “불확실성의 시대 EU의 안보전략”에 대한 토론문

본 논문은 불확실성이 증대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동안 EU가 국제질서의 변화에 안보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주요 문헌들을 분석하여 체계화한 아주 우수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 전략을 ① 내부안보(치안, 테러, 조직범죄, 국경, 중요기반), ② 외부안보 및 방위(공동안보방위정책 CSDP, 군사협력, 방산, 공동조달, 군사이동성, 대외안보파트너십), ③ 사이버 하이브리드, 보건안보, 경제안보(공급망, 핵심기술, 경제강압대응, 제제)의 상호연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EU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힘과 역할을 측정할 때, ① 시장권력, ② 규범권력, ③ 규제권력, ④ 외교력, ⑤ 전략력 등으로 나누어 평가한 것도 연구의 깊이를 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 안보의 확장('회복력→방위→경제→사이버→보건')이 되돌릴 수 없는 제도화 단계 진입하는 등 5대 권력 모두에서 '실질적 힘'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으나, 집행·규모·거버넌스 격차는 상존하며, 전략자율성과 동맹협력의 '병행'은 EU 안보 정체성의 핵심 특징으로 고착되었다는 결론은 아주 의미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발표와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권력 간의 충돌과 관련된 것으로 EU의 '규제력'이 '경제력'을 약화시킬 위험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발표에 보면 EU가 '브뤼셀 효과'를 통해 글로벌 규제를 주도하며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공급망을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EU가 사이버 연대법(Cyber Solidarity Act)이나 경제 안보 전략을 통해 '규제력(Regulatory Power)'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EU기업의 경제적 역동성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둘째는 거버넌스의 실효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도화된 안보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발표에 보면 EU의 안보 전략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고 평가하지만, 실제 국방 예산의 집행이나 군사 작전의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각 회원국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표에서 나온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등을 통한 전략력(Strategic Power)의 확보는 분명 성과로 볼 수 있지만,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급박한 안보 위기 시, 현재의 복잡한 EU 거버넌스가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심성은박사님의 “신고전적 현실주의로 본 프랑스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본 논문은 드골주의의 귀환과 능동적 재무장 전략을 중심으로 프랑스가 국제질서의 구조적 압력에 대하여 역사적 전통과 지도자의 전략적 판단에 기반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능동적으로 채택하였는지 분석하는 매우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론 분석 모델을 정립하고, 독립변수로서 러우 전쟁 이후의 국제 안보 구조 변화와 체제적 압력을 검토하고, 프랑스 내부의 매개변수인 전략 문화와 마크롱 행정부의 인식을 설명하고, 프랑스의 실제 재무장 정책(핵 현대화, LPM 2024-2030 등)과 EU 주도 전략의 채택을 논증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매개변수로 신드골주의(Neo-Gaullism)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점도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매개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근 프랑스가 취한 「LPM 2024-2030」을 통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 프랑스의 핵 역지력을 유럽 전체로 확장하는 '전진억제(dissuasion avancee)' 독트린의 공식화, 그리고 NATO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되, EU 신속대응군(RDC) 창설 및 공동 방산 프로젝트(FCAS 등)를 통해 독자적 군사 역량을 확보한다는 EU 중심의 안보 재편 등 세 가지 차원의 재무장에 대한 탁월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프랑스의 '전략적 자율성'은 NATO의 결속력과 공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프랑스는 EU 중심의 안보 재편을 강조하지만, 폴란드나 발트 3국 등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과 NATO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프랑스가 제안하는 '전진억제(dissuasion avancee)' 독트린과 EU 신속대응군(RDC) 창설이, 기존 NATO 체제 내에서 미국과의 안보 분담(Burden Sharing)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가속화하고 유럽 내 안보 양극화를 초래할 위험은 없는지 심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마크롱 이후(Post-Macron), 이 공세적 재무장 전략은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발표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 4,130억 유로라는 막대한 예산(LPM 2024-2030)과 핵 전력 확충은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프랑스 내부의 자원 조달 문제와 2027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드골주의'에 기반한 이 전략이 지도자 개인의 인식을 넘어 프랑스의 국가적 제도로 완전히 안착했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 리더십이 교체된다면 이 전략적 기조는 다시 '적응'이 아닌 '회귀'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심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패널 3

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한국유럽학회 춘계학술대회] 2026. 03. 27.

일본 커피도시 사례로 본 커피와 도시 전략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김현정

목차

01

들어가며: 커피도시

02

도시전략으로서의 로컬브랜딩과 커피 산업

03

일본 커피도시 사례

04

커피도시 부산: 인프라, 문화, 정책



Part 1.

들어가며: 커피도시

Part 1. 들어가며: 커피도시

커피의 이중적 가치: 글로벌 밸류체인(GVC)과 로컬리티의 결합

- 커피는 글로벌 경제를 연결하는 상징적 상품
 - 전 세계 하루 약 20억 잔 소비
 - 농업, 무역, 금융 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상품
- 커피의 글로벌 공급망
 - 전형적인 남-북 경제 구조
 - 생산: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Global South)
 - 소비: 미국, EU, 일본 (Global North)
- 커피의 의미: Commodity → Culture → City
 - 단순 소비재를 넘어 도시정체성을 형성 전략 자원



카페인 함량: 커피 > 차 > 코코아

-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기능적 소비재

현대인으로서의 각성, 범세계적 소비, 남→북, 1차~3차 산업

- 브라질(Cerrado), 에티오피아(Yirgacheffe), 베트남(Robusta)
- 1차: 생두 재배 및 수출 (저부가가치), 2차: 로스팅 및 블렌딩 (중부가가치)
- 3차: 카페 서비스 및 메뉴 개발 (고부가가치), 커피 문화 관광 및 도시 브랜딩

Part 2.

도시전략으로서의 로컬브랜딩과 커피 산업

Part 2. 도시전략으로서의 로컬브랜딩과 커피산업

로컬 브랜딩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능'에서 '경험'으로

- 로컬 브랜딩 (Local Branding)
 - 특정 지역의 정체성, 이미지, 경험을 형성하는 전략
 - 물리적 공간 + 문화적 의미의 결합
- 개념의 변화: 과거의 도시 브랜딩이 로고나 슬로건 제작에 그쳤다면, 현대의 로컬 브랜딩은 지역의 특화 산업을 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결합하는 '장소 기반 산업(Place-based Industry)' 전략으로 진화함.
- 커피의 매개성: 커피는 단순 소비재를 넘어 공간의 가치를 재생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로컬 콘텐츠임.



건축사무소 제공입니다. 엘리후니타 오물렌드에 본사를 둔 블루 보틀커피(Blue Bottle Coffee)는 일본에 첫 로스팅 공장 겸 커피를 팔며 블루 보틀 커피 브랜드의 생산 기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스웨디시 건축사 무츠(Syberate Architects)는 도쿄 시에키마키 키요스미(Kiyosumi Shikishima)에 위치한 기존 학교 건물을 로스팅 공장, 카페, 사무실, 테라스로 개조할 계획으로 개조하는 후발주자를 찾았습니다. 블루 보틀 커피

Part 2. 도시전략으로서의 로컬브랜딩과 커피산업

커피 산업이 도시 전략에 미치는 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Economic Impact): *원두 수입-로스팅-유통-카페 서비스로 이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지역 내 내재화.
- 부산 영도의 사례처럼 쇠퇴한 제조 시설을 R&D 거점으로 전환하여 신성장 동력 확보
- 사회적 재생 효과 (Social Regeneration): 도쿄 기요스미 시라카와의 '창고 재생' 사례처럼, 저평가된 유휴 공간에 '힙(Hip)'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청년 유입 및 생활 인구 증대.
-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로컬 로스터리 보호 정책과의 결합 필요
- 도시 마케팅 효과 (City Marketing): '커피 도시(Coffee City)'라는 브랜드는 국제적 인지도 상승 및 관광 수요 창출에 기여
- 예: 시애틀의 스타벅스, 멜버른의 플랫폼 화이트 등

무명일기



무명일기 / 서든-이노비즈

1950년대에 지어진 낡은 창고를 리노베이션하여 만든 카페로, 영도의 근대적인 창고가 줄어든 창고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Part 2. 도시전략으로서의 로컬브랜딩과 커피산업

일본 사례를 통한 전략적 시사점

- 전통과 혁신의 공존: 고베가 항구 물류라는 '전통' 위에 기업 R&D라는 '혁신'을 얹었듯, 로컬 브랜딩은 지역의 역사적 자산(부산항)을 현대적 기술과 연결할 때 완성됨.
- 제도적 뒷받침: 일본의 SCA 협업 사례처럼, 민간의 자생적 에너지를 공공의 'R&D 클러스터'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 지속가능성을 확보

① 교토 (Kyoto)



- 특징
- 일본 키시엔(Kisshiten) 문화 중심지
 - 옛 Asakura 등 글로벌 브랜드 진출
 - 관광 + 커피 문화 결합
- 핵심 포인트
- 커피 + 문화 관광 직결
 - 전통 도시 브랜드 강화

② 고베 (Kobe)



- 특징
- 일본 커피 수입의 관문 항구
 - UCC Coffee 본사
 - UCC Coffee Museum
- 핵심 포인트
- 커피 + 항구도시 관광 역사

③ 도쿄 (Tokyo)



- 특징
- Third wave coffee 중심지
 - 골목골 골목마다 진출
 - 스타트업 커피 문화
- 핵심 포인트
- 커피 + 도시 라이프스타일 산업

Part 3.

일본 커피도시 사례

Part 3. 일본 커피도시 사례: 京都

교토 전통과 관광의 결합

- 커피를 문화 관광 자산으로 정착
- 전통 킷사텐(Kissaten, 喫茶店) 문화 계승: 일본 고유의 장인 정신과 휴식 공간으로서의 가치 보존
- 로컬 브랜드의 글로벌화: % Arabica와 같이 교토의 미니멀리즘을 브랜드화하여 세계 시장 진출
- 장소 마케팅(Place-making): 아라시야마, 니넨자카 등 역사적 장소와 결합된 독보적인 카페 경험 제공

➔ 커피는 교토의 전통적 도시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매개체

교토의 커피 문화



교토의 커피 문화



교토의 커피 문화



Part 3. 일본 커피도시 사례: 神戸

고베 항민과 산업의 역사

- 커피, 항구도시의 핵심 제조산업
- 고베는 개항 이후 일본 커피 수입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며, 단순 물류를 넘어선 '제조 및 R&D 허브'로 성장
- UCC 커피 본사 및 박물관: 기업 자본이 도시 브랜딩과 교육에 기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의 전형
- 포트 아일랜드 로스팅 클러스터: 대규모 산업 단지 내 커피 제조 시설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경제 효과 창출

➔ 고베는 커피를 통해 '산업형 도시 브랜드'를 구축한 사례



Part 3. 일본 커피도시 사례: 東京

도쿄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

- 도시 라이프스타일로서의 커피 산업
- 도쿄는 전 세계 커피 트렌드가 가장 먼저 상륙하고 변주되는 '제3세대 커피(Third Wave)'의 성지
- 기요스미 시라카와: 블루보틀의 성공적 상륙과 함께 낡은 창고 거리를 커피 클러스터로 재생한 대표적 사례
- 스타트업 및 크리에이터: 커피를 매개로 한 커뮤니티 공간이 도시의 창의성을 높이는 역할 수행

➔ 커피를 통해 '글로벌 소비 도시'로 기능



Part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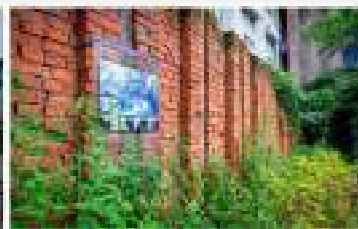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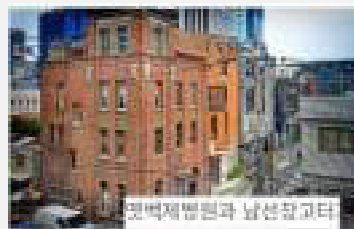
커피도시 부산: 인프라, 문화, 정책

Part 4. 커피도시 부산: 인프라, 문화, 정책

지형 커뮤니티 결합형: 초량 이바구길, 산복도로

스타벅스 교토 타넨자카 역사가 처야

- 산복도로의 굽이진 길을 따라 '전망대형 로스터리' 부산항 전망
- 고베의 전략: "역사적 건축물을 '스타벅스'와 '로컬 카페'로 치유하다"
- 고베 기타노이진칸 점(스타벅스). 1907년 건립된 미국인 소유의 목조 주택을 그대로 활용.
- 관광객이 단순히 밖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커피를 마시며 100년 전의 공간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함. 이것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역사적 가치'를 소비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



Part 4. 커피도시 부산: 인프라, 문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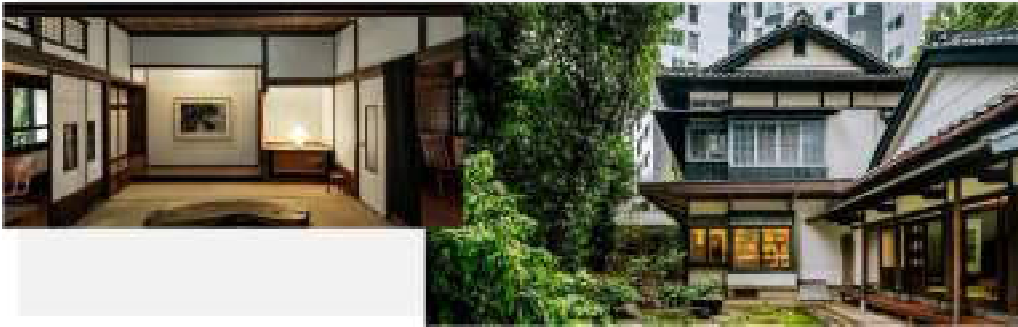
지형 커뮤니티 결합형: 초량 이바구길, 산복도로

- 이바구길의 서사를 완성하는 쉼표(Pause)
- 현재 초량 이바구길은 경사가 급하고 볼거리는 많으나, 관광객이 앉아서 그 동네의 공기와 조망을 즐길 만한 질 높은 휴식 공간이 부족
- 히스토릭 카페(Historic Cafe) 활성화

초량 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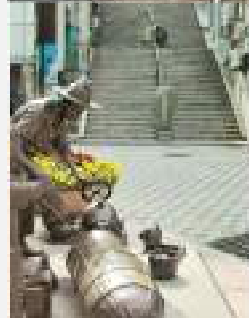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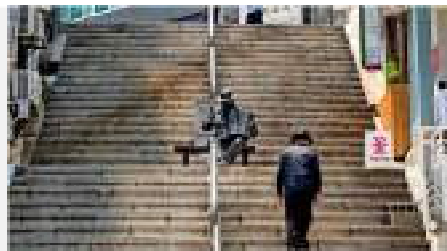
오초량



Part 4. 커피도시 부산: 인프라, 문화, 정책

커피, 미식과 보행의 공존: 중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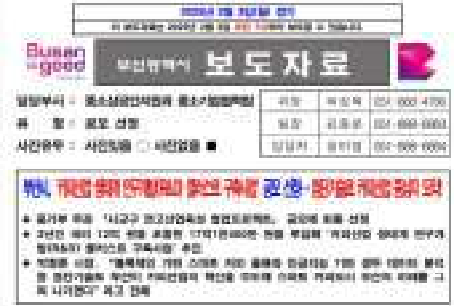
- 부산항 Gateway 커피 로드 (Port-to-City Connection)
- '페리/크루즈 여행객의 'Lost Time'을 'Golden Time'으로'
- 국제여객터미널에서 40계단과 중앙동 일대: 도보 전용 커피 루트를 조성, 짐 보관 서비스와 연계한 'Pre-boarding 카페 패키지' 운영.
- 공간적 연결: 관세청-40계단-인쇄골목의 선형(Line) 재생
- 터미널에서 나오자마자 마주하는 중앙동 일대 'Heritage Coffee District'
- 중앙동: 비즈니스맨과 여행객이 섞이는 '에스프레소 바' 중심의 도시형
- 40계단: 부산의 향수를 느끼며 노포 음식과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는 '인문학적 휴식'.
- 인쇄골목: MZ세대를 겨냥한 '인더스트리얼 감성 로스터리'



Part 4. 커피도시 부산: 인프라, 문화, 정책

도시재생형: 영도

- 원두 물류 허브에서 '로스팅 클러스터'로
- 부산에 개소된 '커피 연구개발 실험실'을 활용해, 단순 유통을 넘어선 로스팅 기술 표준화 및 고부가가치 가공 산업 육성
- 기존 자생적 구역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 로스터리 보호 정책과 공공 인프라(커피 거리 정비 등)의 결합
- '부산형 바리스타 인증제'나 '국제 커피 아카데미' 설립 등



Global Commodity (커피)
 ↓
 Cultural Reinterpretation (초대문화)
 ↓
 Spatial Embedding (카페-도시공간)
 ↓
 Urban Branding (도시 이미지 함양)

Thank You



한국유럽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패널 3 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커피는 어떻게 도시의 산업이 될까?

: 함부르크에서 부산의 가능성을 보다

일시: 2026년 3월 27일(금) 15:00 ~ 16:20

장소: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경영관 417호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주희

목차

한국유럽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패널 3 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01. 문제제기 - 커피는 도시의 산업이 될 수 있나?
02. 함부르크는 어떻게 커피를 도시 산업으로 키웠을까?
03. 부산은 어떻게 커피 도시가 될 수 있을까?

문제제기 - 커피는 도시의 산업이 될 수 있나?

01

- 카페
- 취향
- 소비문화



우리는 보통 커피를 소비와 문화의 언어로 이해한다.
그러나 도시 차원에서는 다른 질문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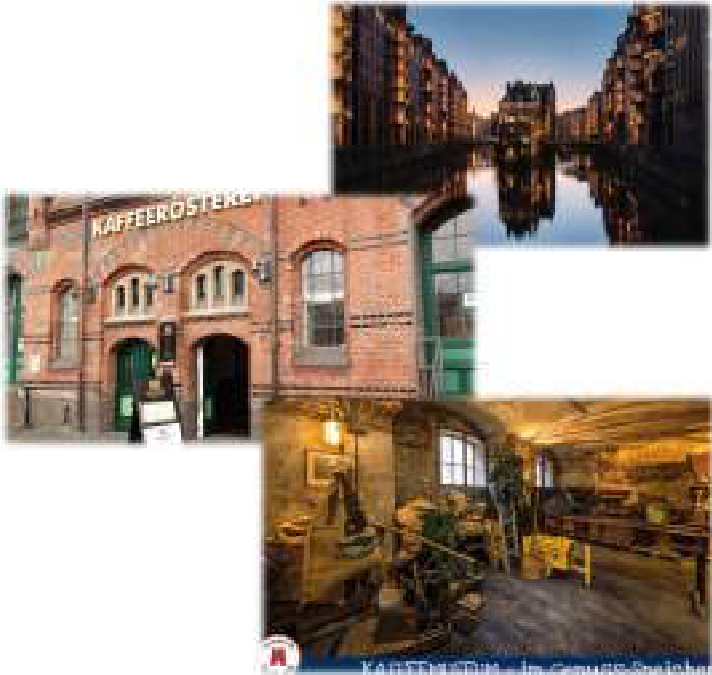
01 우리는 커피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 카페 경험
- 분위기와 취향
- 일상 소비



대부분의 도시에서 커피는 문화적 경험이자 일상적 소비로 자리 잡고 있다.

01 우리는 커피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 무역
- 가공
- 브랜드
- 유통

도시는 커피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02

함부르크는 어떻게 커피를
도시 산업으로 키웠을까?

- 항만도시이자 커피 산업 도시



함부르크는 유럽 물류와 상업의 결절점 위에서
커피 산업 기능을 키워왔다.

02 함부르크는 커피가 모이는 도시다.



- 항만 기능
- 글로벌 유입
- 유럽 물류 거점

함부르크의 힘은 생산이 아니라 흐름을 장악하는데 있다.

02 독일은 커피를 재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커피 산업은 강하다.

- 비생산국
- 거래 중심
- 가공 중심
- 브랜드 경쟁력



커피 산업의 힘은 생산만이 아니라 거래, 가공, 브랜드를 어떻게 묶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02 커피의 가치는 이동하면서 커진다.



원두의 가치는 산지에서 끝나지 않고,
유통과 가공을 거치며 다시 만들어진다.

02 항구에 들어온 커피는 여기서 산업이 된다.



- 저장
- 샘플링
- 분류
- 블렌딩
- 정제

항만은 단순한 통과 지점이 아니라
품질과 가격이 다시 정해지는 공간이다.

02 커피의 가치는 품질과 기준에서 결정된다.

- 커피핑
- 등급 구분
- 품질 기준
- 가격 형성



Grade	Weight	Qualitative	Common Defects	Flavours	Minimum Score
Very Large	1.25	Very Large	Broken	Harsh	AA
Large	1.00	Large	Broken		A
Medium	0.75	Medium	Broken	Harsh	B
Small	0.50	Small	Broken		C
Very Small	0.25	Very Small	Broken		D
Micro	0.10	Micro	Broken		E
Very Fine	0.05	Very Fine	Broken		F
Ultra-Fine	0.02	Ultra-Fine	Broken		G

맛을 보고 품질을 가르고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커피 산업의 핵심을 이룬다.

02 커피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이 있다.

Neumann Kaffee Gruppe



- Neumann Kaffee Gruppe
- 생두 무역
- 글로벌 네트워크
- 거래 조정 기능



함부르크의 경쟁력은 항만만이 아니라 글로벌 거래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다는 데 있다.

02 원두의 가치는 가공과 브랜딩을 통해 커진다.

- Tchibo
- 로스팅
- 브랜드화
- 소비시장 연결



같은 원두라도 어디서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상품이 된다.

02 기반 기업이 산업 생태계를 지탱한다.



- J.J. Darboven
- 장기 축적
- 로스팅 전통
- 산업 지속성

산업 도시는 유행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반 기업과 축적된 산업 생태계가 도시의 힘이 된다.

02 무역과 보관, 가공과 브랜드가 한 도시에 모여 있다.

- 가치사슬 집적
- 기능 간 연결
- 도시 차원의 시너지
- 산업 생태계 형성



함부르크의 경쟁력은 여러 기능이 한 도시 안에서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02 거래와 가공이 커피의 가치를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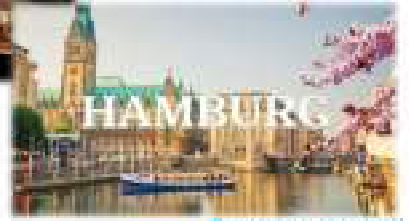


- 거래
- 가공
- 브랜드화
- 부가가치 창출

커피를 소비의 언어가 아니라 가치사슬의 언어로 볼 때 도시 산업 전략이 보인다.

02 커피 산업은 도시공공외교의 자산이 된다.

- 도시 정체성 형성
- 국제 네트워크 확대
- 전문성과 표준의 축적
- 도시 브랜드 강화



한국유럽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커피 산업은 경제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이미지와 신뢰, 국제적 연결성을 키우는 공공외교 자산이 될 수 있다.

03 커피는 어떻게 도시의 산업이 될까? : 함부르크에서 부산의 가능성을 보다

부산은 어떻게 커피 도시가
될 수 있을까?

03

03 그렇다면 부산은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까?

- 항만도시
- 커피 소비도시
- 산업화 가능성



부산도 항만과 소비 기반을 함께 갖춘 도시라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다.



03 부산은 커피 도시다.



- 강한 소비
- 활발한 카페 문화
- 높은 시민 친숙도
- 제한된 산업 집적



이제 필요한 것은 커피 문화를 산업 구조와 연결하는 일이다.

03 두 도시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함부르크

- 산업 중심
- 무역·가공 결합
- 글로벌네트워크
- 가치사슬 집적



부산

- 소비 중심
- 카페 문화 강점
- 지역 시장 기반
- 잠재력 보유

부산의 출발점은 모방이 아니라,
부산의 조건에 맞는 산업화 경로를 찾는 데 있다.

03 부산은 어떤 전략에 힘을 실어야 할까?



가공

- 로스팅
- 블렌딩



교육 및 품질 인프라

- 커피
- 기준
- 인력 양성



유통 확장

- 항만 연계
- 장기 전략

가공을 먼저 키우고, 교육과 품질 인프라를 붙이고,
장기적으로 유통 기능을 넓혀가는 접근이 현실적이다.

03 부산의 커피는 소비를 넘어 산업으로 자랄 수 있을까?

소비 도시

산업 도시

선택의 문제

전략의 문제



함부르크(Hamburg)



부산(Busan)

부산의 미래는 커피 소비 문화를 넘어서, 산업 구조로 확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감사합니다

중국 커피산업 현황과 전망 : 중국 커피수도 '운남' 커피를 중심으로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서창배 (rainmaker@pknu.ac.kr)

2026-03-27

2025년 중국 커피 재배 면적 및 생산량

中国咖啡种植区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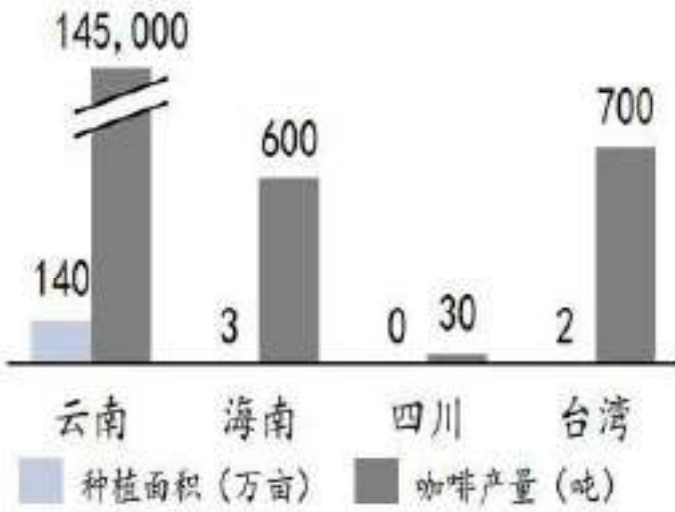
资料来源: 农业部, 农业农村部, 农业农村部

2026-03-27

자료: 中国咖啡产业报告-2025. p.14.

2025년 중국 커피 재배 면적 및 생산량

2025 中国咖啡面积及产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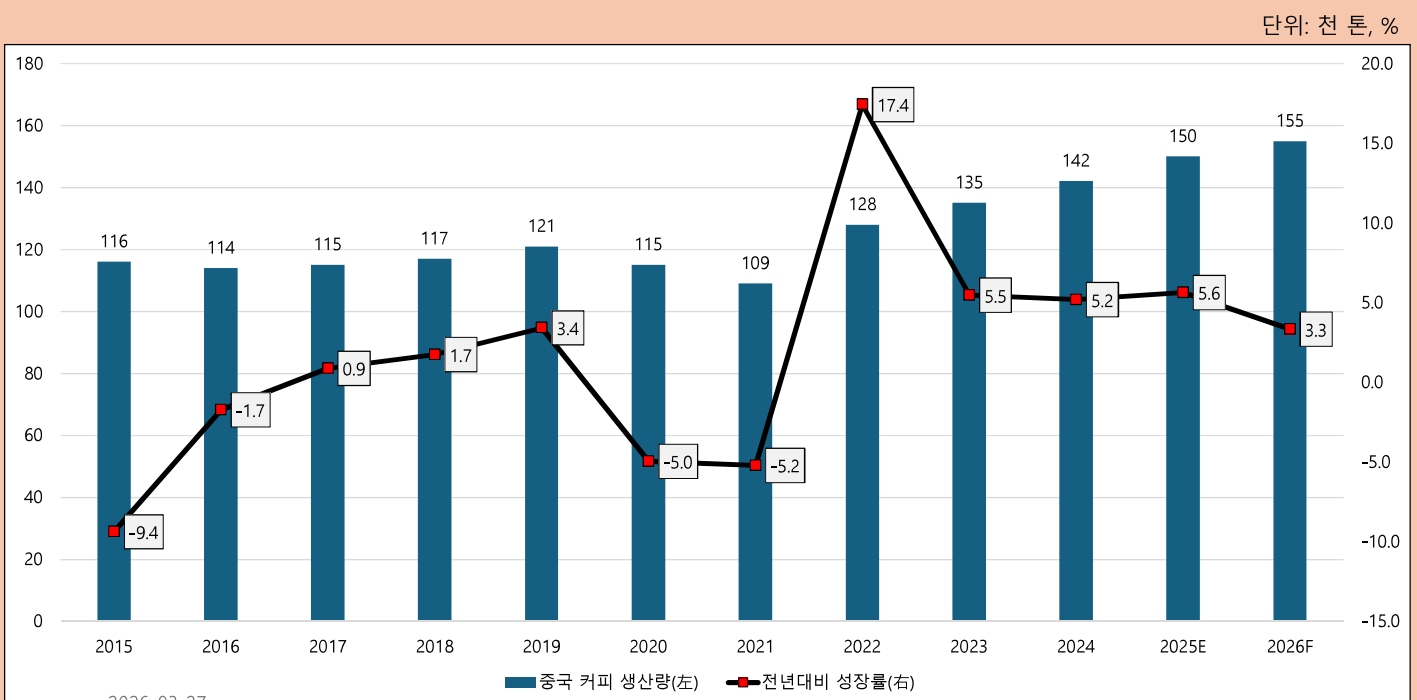


[중국 커피 재배 발전 동향]

- 재배 면적 확대 → 품질 향상
- 중국 커피 재배 면적(및 생산량)은 전 세계 총량의 2% 미만을 차지함
재배 면적 안정화, 고품질 커피 개발에 초점이 맞춰짐
- 단일 품종 → 다각화
- 원산 커피 80% 이상이 카티모르(Catimor) 품종
- 2025년까지 다각화 과정이 크게 가속화 될 것
게이샤(Geisha), 티피카(Typica), 버번(Bourbon), 옐로우 버번(Yellow Bourbon)과 같은 스페셜티 품종의 재배 면적 크게 증가 예정
- 생산량과 가치 동시 증가
- 시장 상황, 품질 향상(스페셜티 커피 비율 30% 이상), 심층 가공 기술의 발전으로 커피 가치가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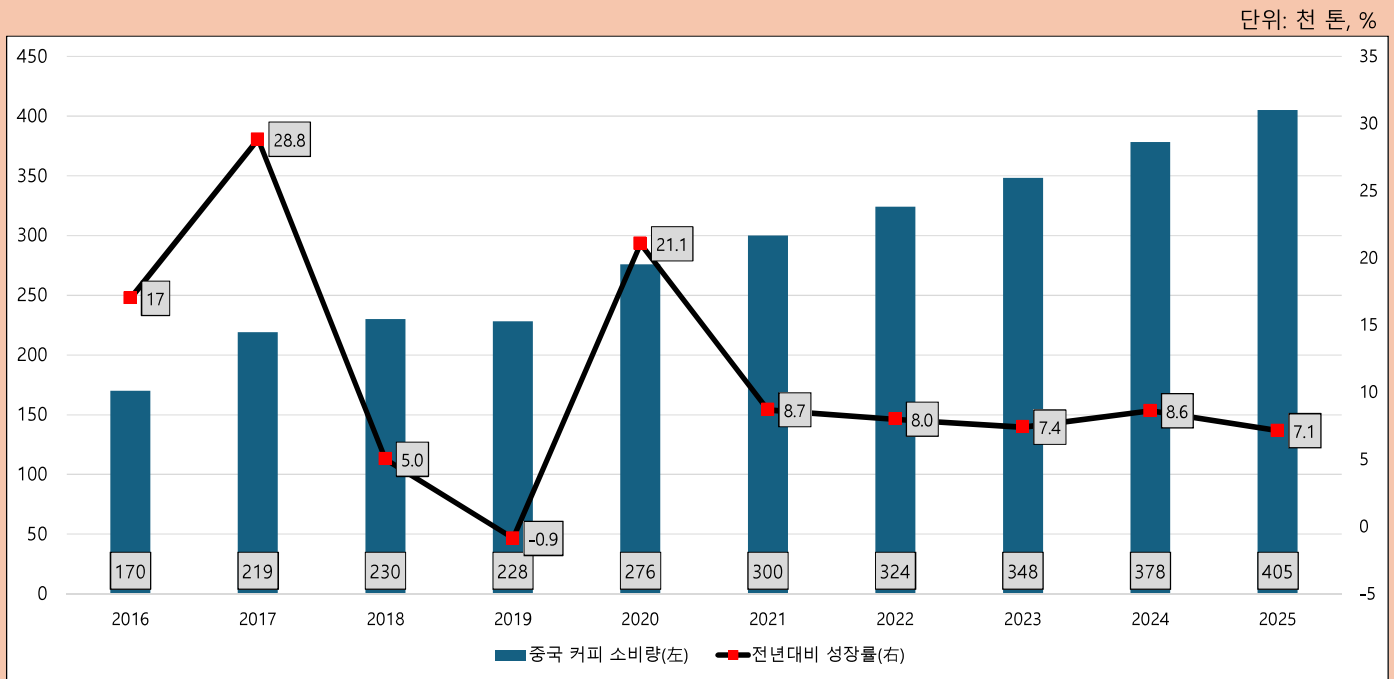
자료: 中国咖啡产业报告-2025. p.14.
2026-03-27

중국 커피 생산량(2015-2025)



자료: 中国咖啡产业报告-2025. p.15.
2026-03-27

중국 커피 소비량(2016-2025)



자료: 中国咖啡产业报告-2025. p.19.

2025년 커피브랜드의 중국 내 커피 원두 공급망 구축 현황

2025年全国部分咖饮品牌本土咖啡豆供应链建设情况

- **루이싱 커피(Luckin Coffee)**
 - ✓ 2024.3, 바오산시(保山市)에 커피 가공공장 시범운영
- **쿠디 커피(Cotti Coffee)**
 - ✓ 2025.5, 린창시(临沧市)와 계약체결
 - 전략적 협력 계약에 따라 린창에서 커피 재배, 신선 과일 처리, 심층 가공 등을 발전시킬 예정
- **스타벅스(Starbucks)**
 - ✓ 2012, 푸얼시(普洱市)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초의 커피 재배자(농가)지원센터 설립
 - 2012~2024년 윈난성에서 우수 품질 커피 6.5만 톤 이상 구매
- ❖ 그 외, 싱원카(幸运咖), Seesaw Coffee, Manner Coffee, 라이후이 커피(来回咖啡) 등의 브랜드 모두 윈난성의 품질이 좋은 원산지와의 협력 관계 구축



자료: 咖饮品类发展报告2025-专注餐饮产业发展研究及餐饮大数据分析. p.12



2026-03-27

作为中国最大的连锁咖啡品牌，瑞幸咖啡已在云南保山设立咖啡产业基地，深度参与本土咖啡原产地建设。

중국 최대의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루이싱커피는 이미 윈난성 보산시에 커피 산업 기지를 설립하고, 현지 커피 원산지 구축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커피산업 관련 정책 (1)

주요 정책	발표	관련 기관
• 커피 산업발전 지도 의견 《关于咖啡产业发展的指导意见》	2017.6	云南省人民政府办公厅
• 중국(쿤밍)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실시방안 통지 《关于印发中国(昆明)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实施方案的通知》	2019.1	云南省人民政府办公厅
• 중국공산당 윈난성위원회의 윈난성 14.5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제정 건의 《中共云南省委关于制定云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	2019.8	云南省人民政府办公厅
• 세계 일류 "녹색식품브랜드" 조성을 위한 윈난성 14.5발전 규획 《云南省"十四五"打造世界一流"绿色食品牌"发展规划》	2021.11	云南省农业农村厅
• 윈난성 농업 현대화 3개년 행동방안(2022-2024년) 《云南省农业现代化三年行动方案(2022—2024年)》	2022.6	云南省人民政府
• 스페셜티 커피 생산성 및 심층 가공 커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일부 정책조치 통지 《云南省农业农村厅 云南省财政厅 云南省工业和信息化厅印发关于推动咖啡精品率和精深加工率提升若干政策措施的通知》	2022.8	云南省农业农村厅
• 윈난성 스페셜티 커피 농장 인증관리규정(시범 시행) 통지 《云南省农业农村厅关于印发云南省精品咖啡庄园认定管理办法(试行)的通知》	2022.9	云南省农业农村厅
• 윈난성 제1차 스페셜티 커피 농장 명단 공고 《关于云南省首批精品咖啡庄园名单的通告》	2022.11	云南省农业农村厅绿色食品处

※ 精品咖啡(Specialty Coffee): 스페셜티 커피 협회(SCA)에서 평가한 100점 만점의 컵 스코어(Cup Score)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우수한 등급의 커피를 의미.

➢ 특징: 특수한 지리적 조건과 기후에서 재배되어 독특한 향미를 지니며, 재배부터 로스팅, 추출 과정까지 까다로운 관리를 거친 원두를 사용

➢ 품질: 결점두(defect)가 거의 없는 최고 품질의 원두를 의미, 생산량은 전체 커피 생산량의 약 10% 내외로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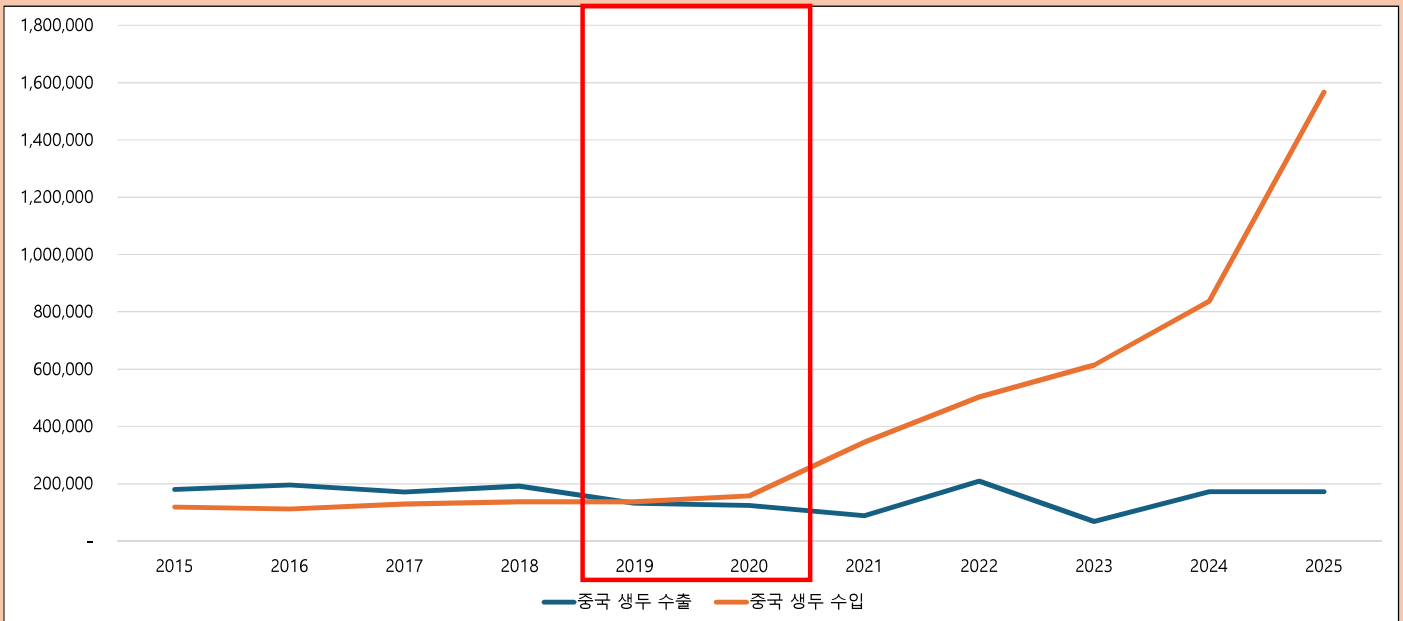
중국커피산업 관련 정책 (2)

주요 정책	발표	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 커피 및 심층 가공 커피 생산 확대 3개년 행동 계획(2022-2024년) 추진 지원 정책 및 조치 《云南省农业农村厅 云南省财政厅 云南省工业和信息化厅关于推动咖啡精品率和精深加工率提升三年行动支持政策措施(2022—2024年)》 	2023.5	云南省农业农村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난성 특수 커피 및 심층 가공 산업 증진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 기금 신청 지침 《云南省农业农村厅 云南省工业和信息化厅关于印发推动咖啡精品率和精深加工率提升三年行动政策支持资金申报指南的通知》 원난성 커피 산업 녹색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기금 신청 지침 《云南省咖啡产业绿色发展政策支持资金申报指南》 원난성 커피 체리 집중 가공 센터 건설 보조금 신청 지침 《云南省咖啡鲜果集中处理中心建设奖补资金申报指南》 원난성 커피 심층 가공 투자 보조금 신청 지침 《云南省咖啡精深加工投资奖补资金申报指南》 원난성 스페셜티 커피(Speciality Coffee) 농장에 대한 품종 갱신 보조금 신청 지침 《云南省精品咖啡庄园咖啡品种更新奖补资金申报指南》 	2023.5	云南省农业农村厅绿色食品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난성 농촌 부흥 책임제도 시행 세부규칙 《云南省乡村振兴责任制实施细则》 	2023.8	云南省农业农村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난성 제2차 스페셜티 커피 농장 선정 공고 《云南省第二批精品咖啡庄园名单的通告》 	2024.3	云南省农业农村厅绿色食品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도 스페셜티 커피 생산성 및 심층가공 커피 생산성 제고 정책 조치 지원자금 신청 지침 통지 《云南省工业和信息化厅关于印发2024年度咖啡精品率和精深加工率提升政策措施支持资金申报指南的通知》 	2025.3	云南省农业农村厅

※ **精品咖啡(Speciality Coffee)**: 스페셜티 커피 협회(SCA)에서 평가한 100점 만점의 컵 스코어(Cup Score)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우수한 등급의 커피를 의미.
 > **특징**: 특수한 지리적 조건과 기후에서 재배되어 독특한 향미를 지니며, 재배부터 로스팅, 추출 과정까지 까다로운 관리를 거친 원두를 사용
 > **품질**: 결점두(defect)가 거의 없는 최고 품질의 원두를 의미, 생산량은 전체 커피 생산량의 약 10% 내외로 제한적.

중국 글로벌 커피 수출입(생두) 카페인+디카페인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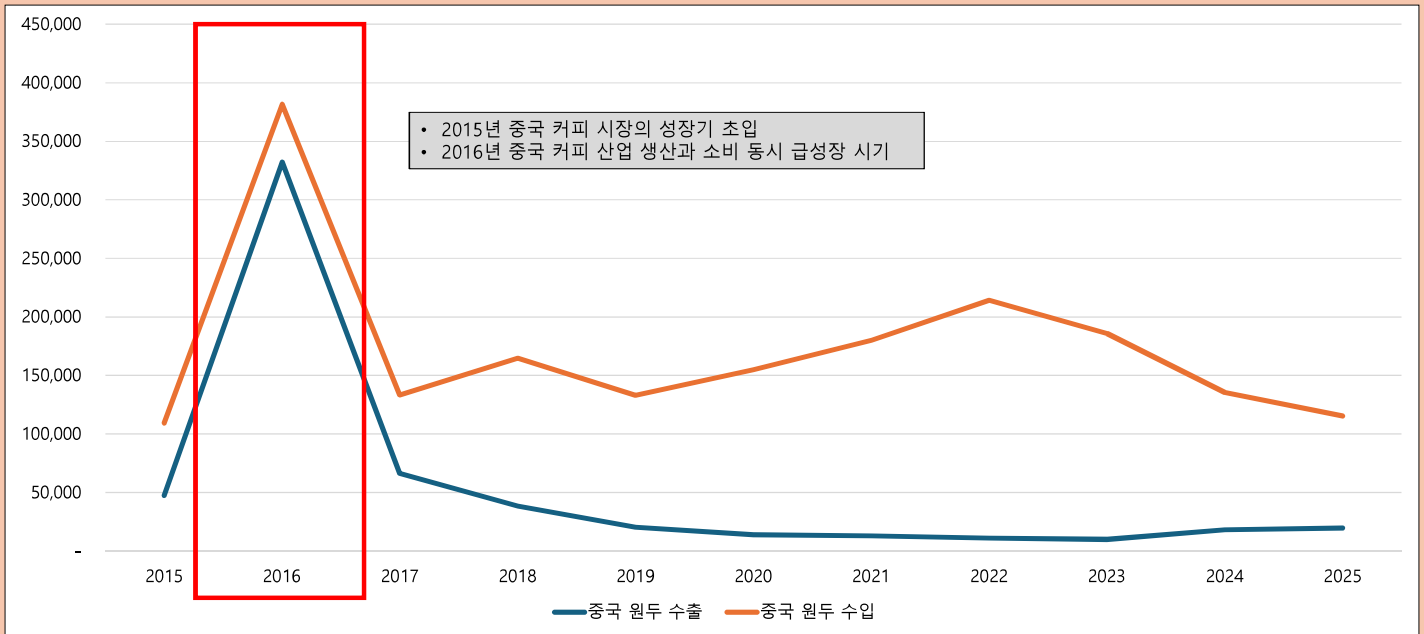


자료: ITC, Trade map [Online] <https://www.trademap.org/>

2026-03-27

중국 글로벌 커피 수출입(원두) 카페인+디카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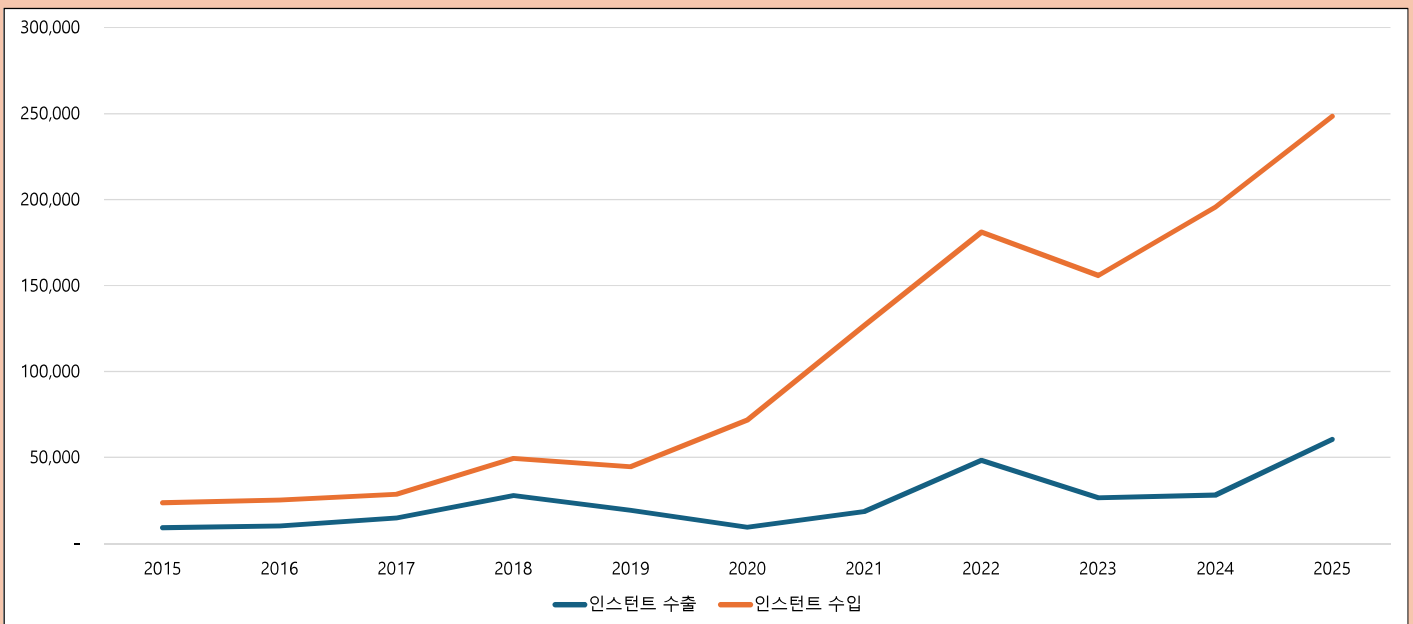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자료: ITC, Trade map [Online] <https://www.trademap.org/>

중국 글로벌 커피 수출입(인스턴트 커피, 커피 에센스, 분말 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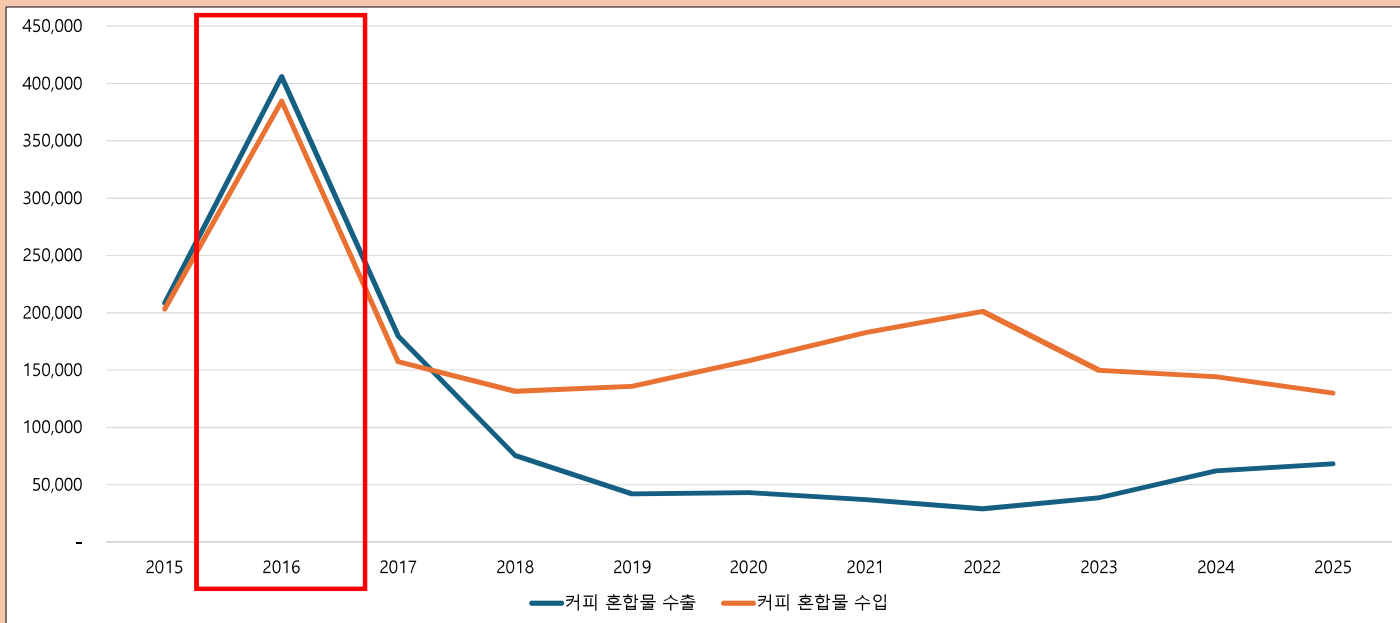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HS 코드: 210111.00



자료: ITC, Trade map [Online] <https://www.trademap.org/>

중국 글로벌 커피 수출입(인스턴트 커피 믹스OR커피 기반 음료 베이스)

단위: 천 달러
HS 코드: 210112.00



자료: ITC, Trade map [Online] <https://www.trademap.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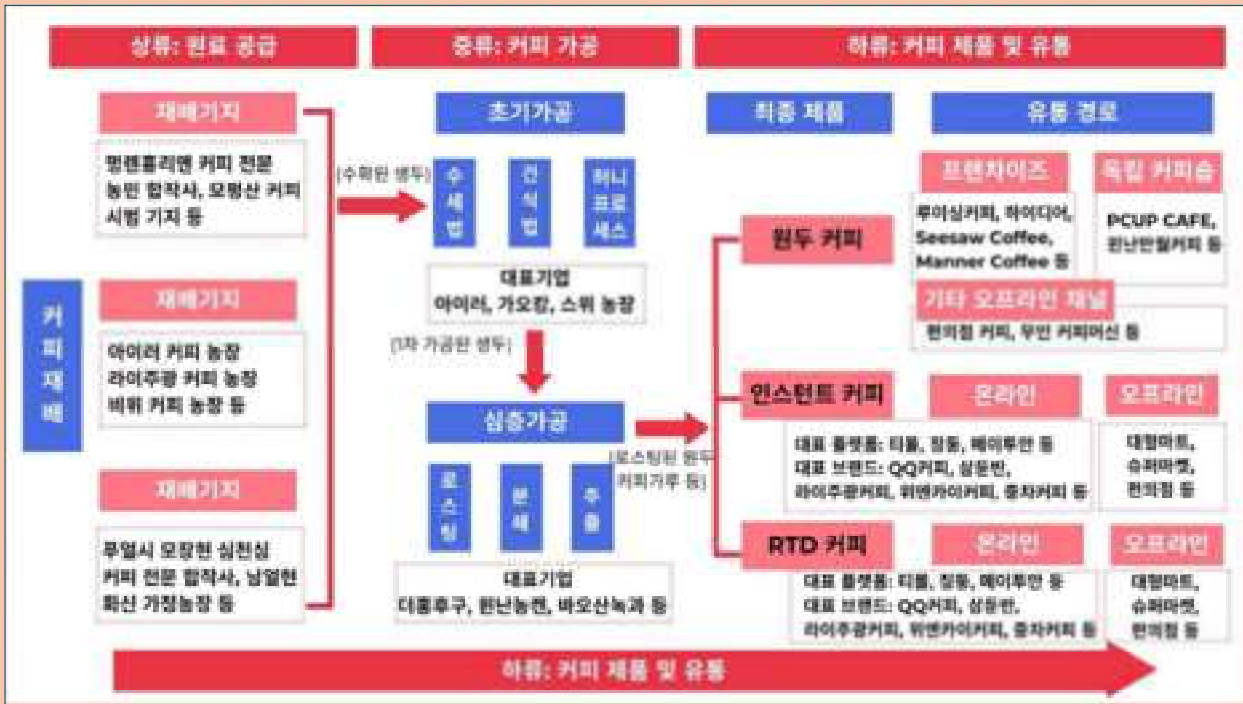
원난성 커피 생산 지역 분포



- 원난성: 중국 최대 커피 재배 지역
- 원난성 커피 재배: 누장강(于怒江), 란창강(澜沧江), 홍허강(红河), 진사강(金沙江)에 집중
→ 적합한 환경 조건으로 아라비카 커피 재배 원활
- 현재 원난성에서 9개 현 34개 현에서 커피 재배 중
→ 푸얼(普洱) 52%, 린창(临沧) 20%, 바오산(保山) 12%, 시쌍반나(西双版纳) 8%, 더홍(德宏) 7% 비중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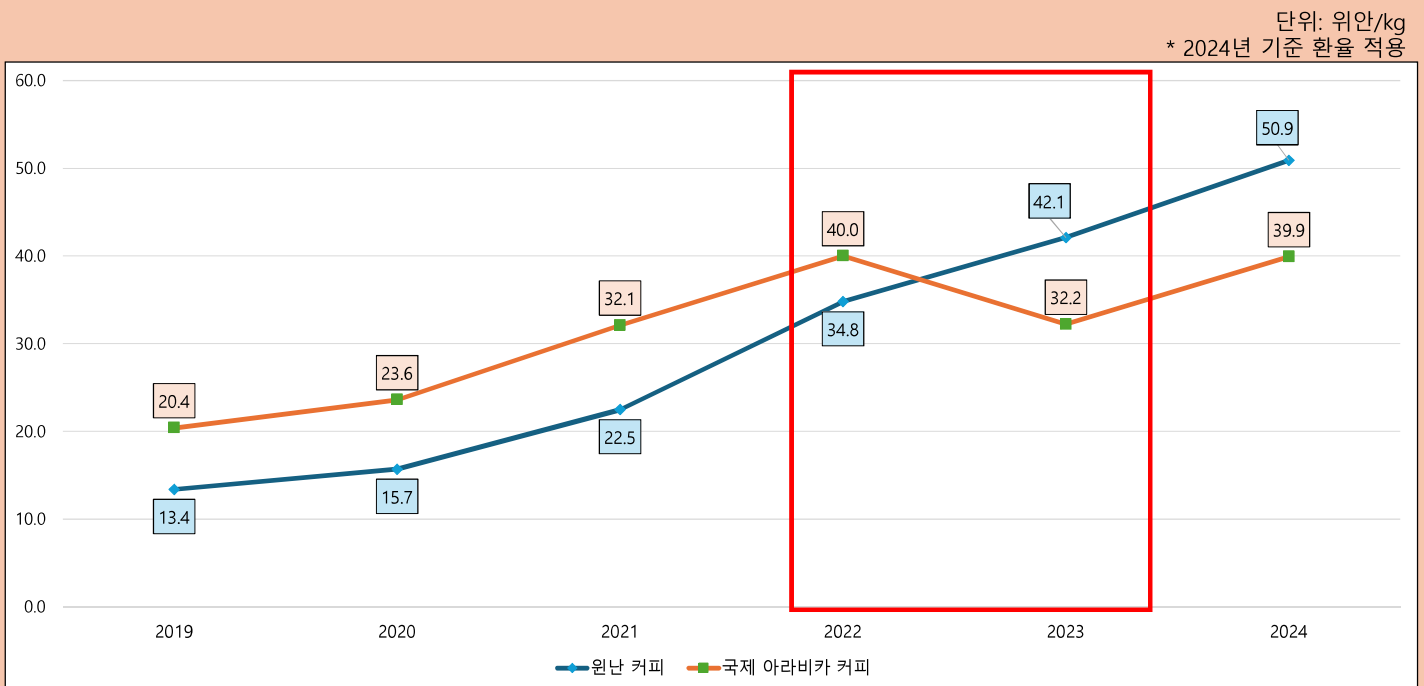
자료: 咖啡系列三: 云南咖啡产业链分析. p.4

원산 커피산업 산업체인



2024년 12월 12일
 자료: 중국 커피 수도 원산의 커피, 내수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KOTRA 해외시장뉴스 [Online]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55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26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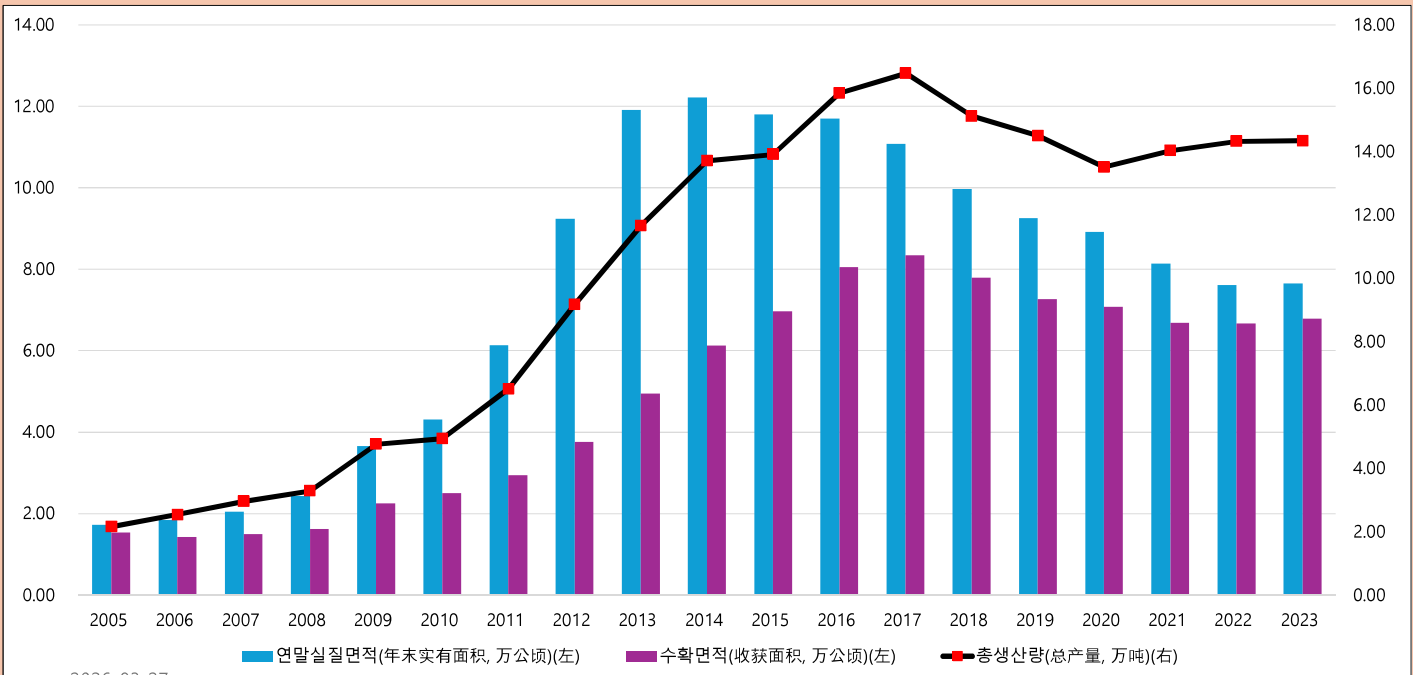
원산커피-국제 아라비카 커피 거래 가격 비교 추이



자료: 중국 커피 수도 원산의 커피, 내수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KOTRA 해외시장뉴스 [Online]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55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26602

원남성 커피 재배 면적 및 생산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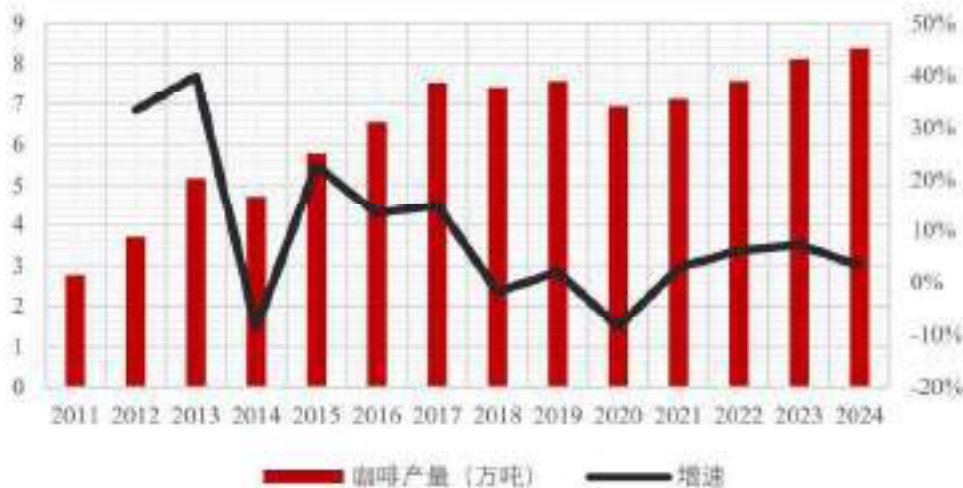
단위: 만 헥타르(万公顷), 만 톤(万吨)



2026-03-27
 자료: 2024년 云南统计年鉴, 7-15 橡胶、咖啡和香料作物面积和产量 (2005-2023年) (2024년 원남통계연감의 7-15 엑셀파일)

원남성 커피 재배 면적 및 생산량 변화

图 4: 普洱市 2011-2024 按咖啡产量及增速



2026-03-27
 자료: 咖啡系列三: 云南咖啡产业链分析, p.5.

원남성 커피 재배 면적 및 생산량 변화

图 5: 保山市 2012-2024 年咖啡产量及增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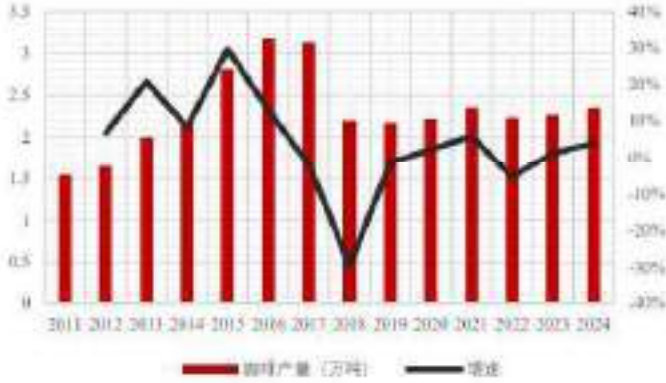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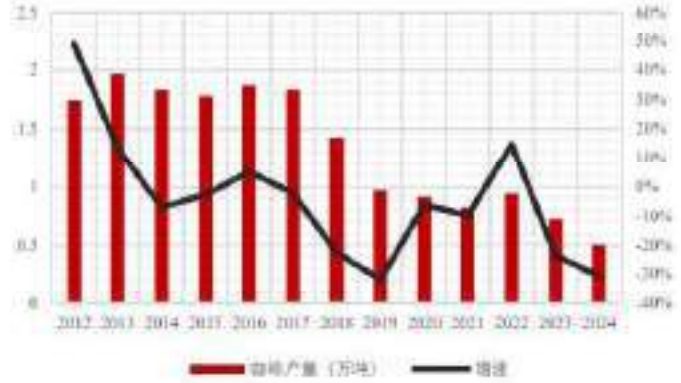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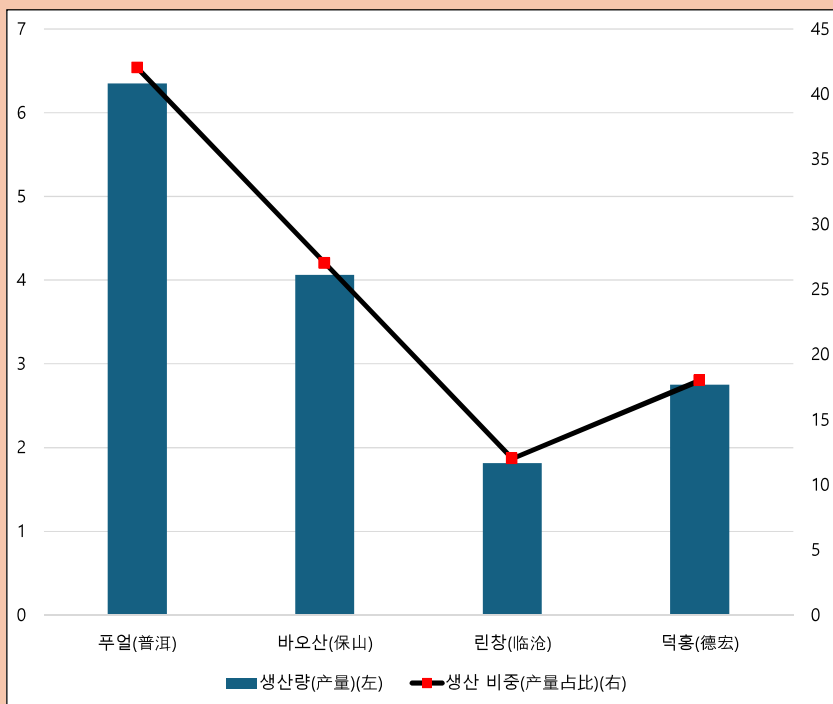
图 6: 德宏州 2012-2024 年咖啡产量及增速



자료: 咖啡系列三: 云南咖啡产业链分析. p.6.

2026-03-27

원남성 4대 커피 생산지의 커피 생산량(2024년)



● 원남성 4대 커피 원두 생산지

→ 푸얼, 바오산, 린창, 덕홍

● 푸얼 6.35만 톤(42%), 바오산 4.06만 톤(27%), 린창 1.81만 톤(12%), 덕홍 2.75만 톤(18%)

- 푸얼시는 현재 중국 최대 커피 생산지이자 최고 생산량과 품질을 보유한 주요 무역 중심지
- 네슬레, 스타벅스, 루이싱커피 등 중국 주요 커피 기업의 핵심 원료 공급처
- 린창시는 원남성 전통적 커피 생산지. 대규모 재배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으나 발전 속도는 빠름
- 바오산시는 커피 생산 및 가공 시스템을 적극 구축하여 커피 농장 경제 모델을 확립함. 바오산의 특산 아라비카 커피는 국가지리적 표시 보호를 받았으며, 스페셜 커피 및 심층 가공 비율은 원남성에서 1위를 차지함
- 덕홍현은 원남성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 재배 지역 중 한 곳으로 기후 조건 덕분에 스페셜티 아라비카 커피 생산이 가능함

→ 독특한 자연 환경과 고품질 커피 원두 생산을 바탕으로 원남성의 4대 커피 생산지는 원남 커피 산업의 핵심 축이 되어 커피 산업 전반의 발전을 주도하고 원남 커피의 전문화 및 브랜드화를 이끌고 있음

자료: 咖啡行业大有可为, 云南咖啡豆香飘世界. p.10

2026-03-27

원난성 선도 커피 기업

国家重点龙头企业

城市	企业名称	成立时间(年)	咖啡品牌
福建省	福建省咖啡有限公司	2007	新香
贵州省	贵州爱妮农场(集团)有限公司	2005	爱妮庄园

省级重点龙头企业

城市	企业名称	成立时间(年)	咖啡品牌
保山市	保山市新寨咖啡有限公司	2006	新寨
	保山比顿咖啡有限公司	2012	比顿
	保山市中咖食品有限公司	2013	中咖, 中麓, 黑钻
	保山纯征咖啡产业开发有限公司	2014	白虎山
	保山市高老庄农副产品开发有限公司	2005	高老庄园
	保山芙茵咖啡庄园有限公司	2015	芙茵庄园
	保山市隆阳区金麓农副产品有限公司	2003	/
	云南云黎咖啡产业有限责任公司	2014	/
普洱市	保山市亚通咖啡商贸有限责任公司	2005	/
	保山市喝客咖啡有限公司	2015	/
	普洱爱妮庄园咖啡有限公司	2006	爱妮庄园
	普洱金树咖啡产业有限公司	2009	金树
	普洱漫崖咖啡实业有限公司	2010	漫崖
	普洱市金源咖啡有限公司	2005	/
	普洱晟天咖啡有限公司	2013	/
大理州	云南爱妮咖啡产业开发有限公司	2009	/
	宾川高原有机农业开发有限公司	2010	东麓社

省“10大名品”

城市	企业名称	成立时间(年)	咖啡品牌
保山市	保山比顿咖啡有限公司	2012	比顿
	保山市中咖食品有限公司	2013	中咖, 中麓, 黑钻
昆明市	云南农垦咖啡有限公司	2017	云啡

2026-03-27

자료: 中智物流智库 [Online] <http://www.czzt.com/tuiguangzhishi/1199.html>

[커피 산업 공급망]

- 업스트림: 원두 재배, 수확, 1차 가공 및 커피 장비 공급
1차 가공단계: 탈피, 펄핑, 건조, 세척 등과 같은 기술적 공정 포함
- 미드스트림: 로스팅, 분쇄, 추출, 건조 및 추가 가공을 포함한 커피의 심층 가공에 중점을 둠
최종적으로 볶은 원두, 커피 가루, 액상 커피, 틴스턴트 커피 가루, 동결건조 커피 가루, RTD(Ready-To-Drink) 커피 등 다양한 커피 소비재 생산
- 다운스트림: 유통 및 판매 부문 의미
최근 국내 커피 소비 수요의 성장에 힘입어 원난성 커피 산업의 업-미드 스트림 기업들은 다운스트림으로 직접 사업을 확장하여 유통 경로를 탄축하고 매출 증대 및 산업 고도화에 기여함

→ 바오산시에는 30개 이상의 커피 전자상거래 업체 존재.

→ 많은 원난성 커피 브랜드들이 전자상거래 판매 채널에 집중하여 판매량과 판매 범위 확대함

원난성 선도 커피 기업(2021년)

지역(州市)	기업명(企业名称)	선정연도 (认定年份) (국가 또는 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해: (ex. 국가급 기업 인정 연도))	연간 매출액 (年销售额)(만 위안)
保山市	保山纯征咖啡产业开发有限公司	2014	2,507
保山市	保山市新寨咖啡有限公司	2014	3,800
保山市	保山市高老庄农副产品开发有限公司	2015	4,594
保山市	保山比顿咖啡有限公司	2015	4,745
保山市	保山市隆阳区金麓农副产品有限公司	2017	2,196
保山市	云南云黎咖啡产业有限责任公司	2018	2,100
保山市	保山市亚通咖啡商贸有限责任公司	2019	2,250
保山市	保山市喝客咖啡有限公司	2019	2,200
保山市	保山中咖食品有限公司	2021	12,375
保山市	保山芙茵咖啡庄园有限公司	2021	2,152
大理州	宾川高原有机农业开发有限公司	2012	2,200
普洱市	普洱爱妮庄园咖啡有限公司	2011	5,745
普洱市	普洱漫崖咖啡实业有限公司	2013	2,727
普洱市	普洱金树咖啡产业有限公司	2017	2,483

자료: 咖啡行业大有可为, 云南咖啡豆香飘世界. p.12, 2021年云南省咖啡产业发展报告. p.4

2026-03-27

중국 원산 원두커피 주요 수출국(수출액)(2022-2024)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수출액 및 증감률					
		2022		2023		2024	
총 계		125,778	319.6%	26,151	-79.2%	109,510	318.8%
1	네덜란드	17,247	625.9%	6,851	-60.3%	28,248	312.3%
2	독일	40,960	173.9%	1,231	-97.0%	24,766	1,911.8%
3	미국	6,206	6620.4%	91	-98.5%	15,391	16830.4%
4	베트남	2044	139.7%	1,838	-10.1%	8,107	341%
5	벨기에	11,048	223.6%	1,498	-86.4%	7,853	424.2%
6	이탈리아	4,694	366.5%	3,431	-26.9%	5,136	49.7%
7	러시아	4,899	671.8%	3,157	-35.6%	4,021	27.4%
8	스웨덴	3,986	154.1%	767	-80.8%	3,149	310.8%
9	그리스	4,254	777.5%	86	-98.0%	2,657	2993.9%
10	프랑스	4,824	1031.2%	703	-85.4%	2,062	193.5%
11	말레이시아	2,656	1236.6%	1,062	-60.0%	1,622	52.7%
12	한국	9,690	1,234.6%	1,163	-88.0%	1,313	12.9%

자료: 중국커피수출도 원산의 커피, 내수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KOTRA 해외시장뉴스 [Online]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55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26602

원산 커피 원두 제품 주요 형태 및 대표 브랜드(2023)

형태	브랜드 유형	대표 브랜드
원두 커피	글로벌 프랜차이즈	• 스타벅스(Starbucks), 팀호튼스(Tim Hortons), K coffee(모리 카즈야), 블루보틀 커피(Blue Bottle Coffee)
	원산 브랜드	• 프랜차이즈: 시에즈 커피(蟹子咖啡) • 독립브랜드: PCUP CAFE, 원산만월커피, 권이 커피, 올티튜드 1891
	기타 브랜드	• 기타 본토 브랜드: 루이싱 커피, Manner Coffee, Seesaw Coffee, M Stand, NOWWA 커피, 행운커피, 쿠디커피, 독수리커피, 본래없어야할커피, 대표학가커피, 우체국커피 • 독립브랜드: Dehome 커피관, 몽상관
인스턴트 커피	글로벌 프랜차이즈	• 네슬레, UCC, 라바짜
	원산 브랜드	• 후구곡커피, 아이러커피, 비위커피, 중화커피, 망랑커피, 원커피, 원진, 경란커피, 중타커피, 훈즈칭, 화텐주이
	기타 브랜드	• 삼둔반, 영포커피, 격전천커피, 감카페, 커린커피, AOKKA, 징둥커피, 남방고양이커피, 금고양이커피
RTD (Ready to Drink) 커피	글로벌 프랜차이즈	• 네슬레
	원산 브랜드	• 후구곡커피, 시에커피, 뽕취안커피, 오야커피
	기타 브랜드	• 판하커피

자료: 중국커피수출도 원산의 커피, 내수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KOTRA 해외시장뉴스 [Online]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55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26602

참고 문헌

- 중국 커피 수도 원난의 커피, 내수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KOTRA 해외시장뉴스 [Online]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55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26602
- 中华人民共和国昆明海关 [Online] <http://kunming.customs.gov.cn/eportal/ui?pagelId=2879850¤tPage=9&moduleId=6b0cab8f61494fa98939221b1e7e29cf&staticRequest=yes>
- 云南省供销社, 全产业链优势铸就“云咖”新标准, 北归咖啡荣获云南省企业标准“领跑者”称号 [Online] <http://yncoop.yn.gov.cn/sxjs/syqyfz/04784607307182389969>
- 中国农垦经济发展中心 [Online] <http://www.farmchina.org.cn/SearchArticle.php?PHPSESSID=28o0mgHcaa27irr40bf7bj8p52&s=%E5%92%96%E5%95%A1%E5%B8%82%E5%9C%BA%E5%8A%A8%E6%80%81>
- 云南省农业农村厅 政策文件 [Online] <https://nync.yn.gov.cn/html/zhengwugongkai/zhengcewenjian-new/guojiashenongwenjian/3.html>
- 云南省农业农村厅 农业产业报告 [Online] <https://nync.yn.gov.cn/html/shujufabu/nongyechanyebaogao/>
- 云南省统计局 [Online] <https://stats.yn.gov.cn/List22.aspx>
- 咖啡市场动态 [Online] <http://www.farmchina.org.cn/SearchArticle.php?PHPSESSID=28o0mgHcaa27irr40bf7bj8p52&s=%E5%92%96%E5%95%A1%E5%B8%82%E5%9C%BA%E5%8A%A8%E6%80%81>
- 中智物流智库 [Online] <http://www.czztz.com/tuiguangzhishi/1199.html>

2026-0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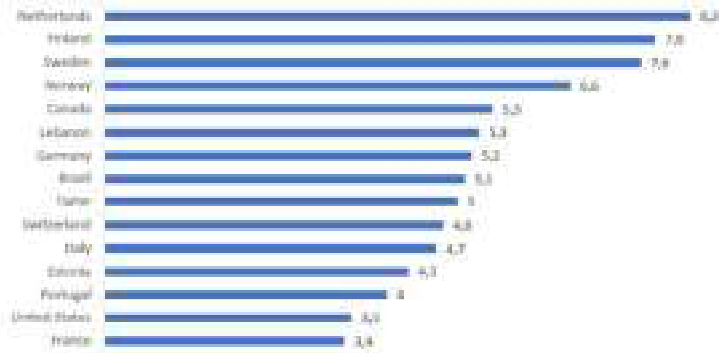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서창배 (rainmaker@pknu.ac.kr)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커피산업

충북대학교 김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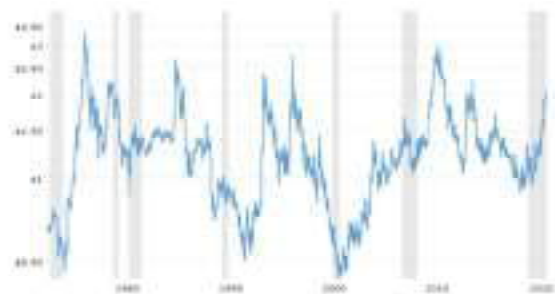
I. 현황

세계 15대 커피 소비국가(kg/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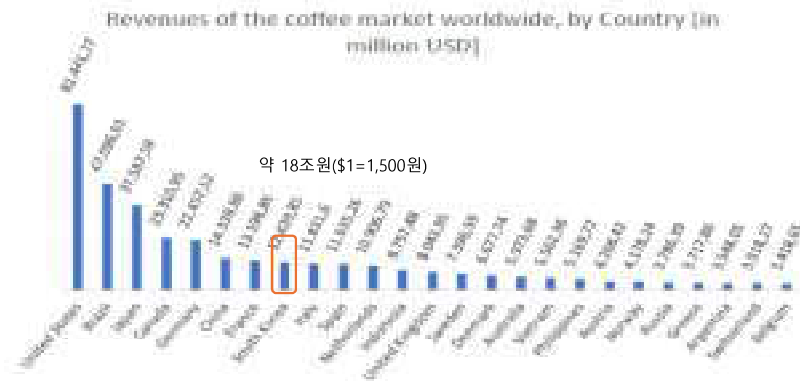
출처: Ciardulli Massimiliano(2021)

Arabica Coffee Price Trend



출처: Ciardulli Massimiliano(2021)

Revenue



출처: Ciardulli Massimiliano(2021)

커피 소비 증가

- 한국은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리움
- 커피 소비가 증가
- 수요측
- 커피가격 상승하는가?
- 커피가격 상승, 소비 증가
- 공급측
- 커피숍 증가, 퇴직 후 커피숍 운영, 커피숍 증가
- 수요자, 공급자, 이윤 배분

경제 모델로 본 커피 산업

- 수요-공급 모형, 독점적 경쟁시장*
 - *다수의 공급자, 자유로운 진입장벽, 고유의 커피 맛
- 가격차별, 버저닝이 활발(사이즈구분, 샷·시럽 추가, 디카페인, 매장-배달 및 세트-단품 가격차이, 멤버십, 시간대 할인)
- 입지이론, 공간 경쟁 모형: 브랜드, 매장 분위기, 위치, 맛, 굿즈
- 게임이론적 경쟁: 기업이 가격 결정력을 가짐, 대형 브랜드 진입 시 후발주자 대응, 배달할인, 프리미엄 vs 저가

계속

- 규모의 경제와 프랜차이즈: 원두 대량 구매, 물류비 절감
-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글로벌 가치 사슬, 노동시장 이중구조(높은 청년층 비중, 시간제-비정규직 노동비중, 쉬운 진입 대비 장기 숙련 축적 보상 낮은 케이스 많음)
- 배달과 모바일 주문으로 플랫폼 경제
- 틈새시장과 블루오션 전략으로 성숙시장이지만 여전히 틈새시장(스페셜티, 디카페인, 비건, 지역 로스터리, 무인, 디저트+커피 결합형, 저가 등)

II. 커피산업의 성장과 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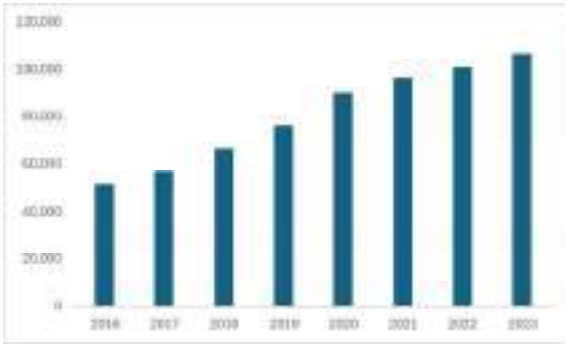
커피전문점 증가 요인

- 공급측: 실업으로 자영업 창업 증가, 낮은 진입장벽
- 수요측: local consumption 증가, 카페의 기능 복합, SNS 문화, 소비의 고급화 다양화로 제품 차별화(고객이동 쉬운 단점)
- 이는 over-entry 문제 발생, 매출 분산, 매장간 경쟁 과잉
- 높은 임대료, 인건비, 원두 및 재료비, 인테리어비,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
- 제품 차별화에는 한계
- 소비자는 인접한 카페, 저렴한 카페, 좋은 인테리어 카페에 몰림
- 소금빵, 아이스크림, 베이글 등 디저트와 연계된 마케팅

커피전문점 사업체 수(단위: 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51,551	56,928	66,231	76,145	89,892	96,437	100,729	106,452

출처: 통계청(서비스업조사), 식품산업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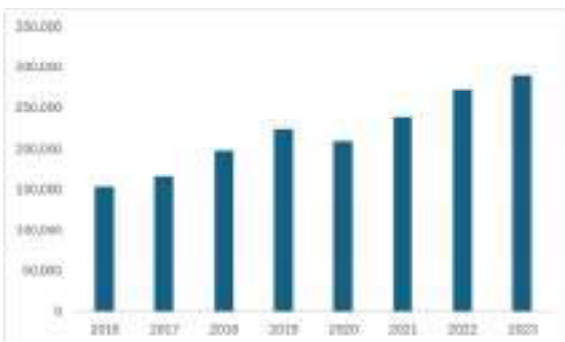


- 최근 7년간 약 106% 사업체수가 증가함
-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9만개 이상 증가
- 관광, 항공, 서비스업 위축으로 자영업 창업 증가
- 비교적 초기 진입장벽이 낮은 카페업종 인기
- 작은 매장, 테이크아웃 형태로 창업 가능
-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무경험자 창업 가능
- 실업 증가는 자영업 진입 증가 유인
- 코로나 19 이후 local consumption 증가
- 커피전문점, 복합공간으로 진화(학습, 근무, 모임 등), 배달 시장 확대

커피 전문점 종사자 수(단위: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52,523	164,512	197,088	224,328	208,936	238,849	271,794	289,400

출처: 통계청(서비스업조사), 식품산업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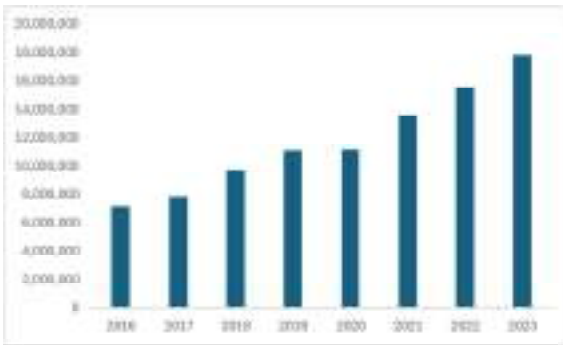


- 커피전문점 창업 증가, 프랜차이즈 확장, 공부와 모임 공간을 활용한 카페 문화 확산으로 커피전문점 종사자 수가 증가
- 매장 수 증가를 통해 고용 증가 현상이 발생
- 코로나 19 팬데믹은 사회적 거리두기, 매출감소, 외식 소비 감소로 커피 종사자 수도 감소함
- 이후 엔데믹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카페시장 확대와 창업이 증가함

커피 전문점 매출액(단위: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7,131,077	7,850,364	9,687,014	11,067,973	11,129,202	13,516,400	15,501,243	17,819,018

출처: 통계청(서비스업조사), 식품산업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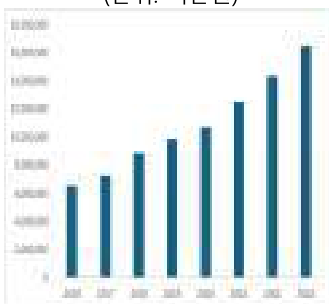
-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을 넘어 학습 공간, 미팅 장소, 디저트 카페 이용 증가 등으로 매출이 증가함
- 커피 수요 증가와 코로나 19 엔데믹으로 매장 확대는 커피 전문점 매출 증가에 기여함

커피 전문점 영업비용(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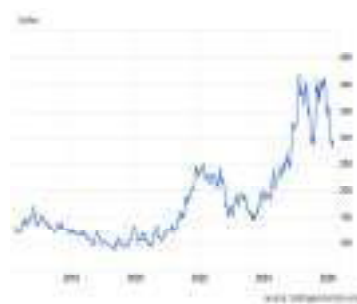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6,520,660	7,251,032	8,786,238	9,873,538	10,708,025	12,489,983	14,381,459	16,489,384

출처: 통계청(서비스업조사), 식품산업통계정보

커피전문점 영업비용
(단위: 백만원)



커피 원두가격 추이(USD/l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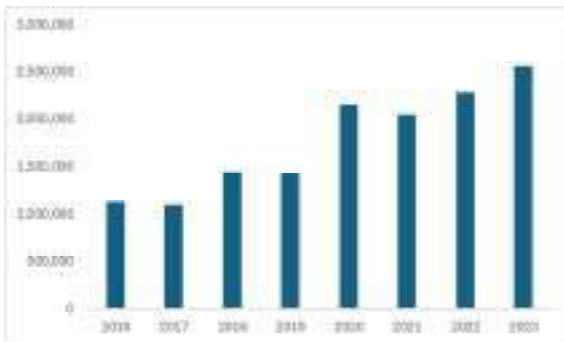


- 인건비 상승, 임대료 상승, 커피 원두 가격 상승, 운영비 증가는 영업비용 증가에 영향을 줌
- 커피 원두 가격은 최근 파운드당 2.94달러로 2020년 대비 약 세배 상승
- 커피 원두 공급 전망은 기후 변화에 많이 의존함

커피 전문점 급여액(단위: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115,256	1,089,830	1,434,439	1,425,429	2,145,764	2,045,269	2,277,767	2,555,551

출처: 통계청(서비스업조사), 식품산업통계정보



- 커피 전문점 급여액은 최근 7년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0년에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 19 이후 커피 전문점 수가 급증하여 종사자 수도 증가하였고 대형 프랜차이즈 증가로 직원 증가가 있었기 때문임
-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은 아르바이트 및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커피전문점의 특성상 급여총액 증가에 기여함

III. 커피가공산업의 성장과 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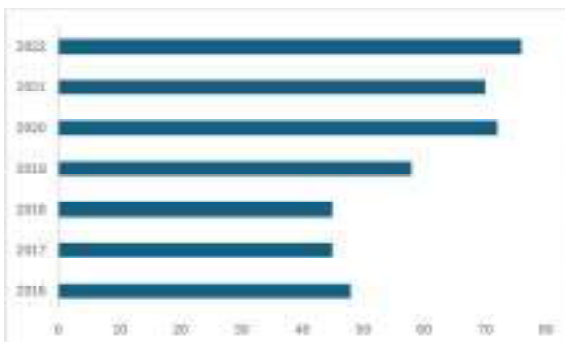
식품 제조업/커피 가공업 분석

- 커피원두(생두)를 가공하여 판매가능한 제품으로 만드는 산업
- 커피산업: 재배→가공 →유통 →판매
- 커피 가공업은 재배 이후 단계에서 커피를 가공하는 산업
- 생두가공, 로스팅, 분쇄 및 블렌딩, 제품 제조(원두커피, 분쇄커피, 인스턴트커피, 캡슐커피)
- 사업으로는 원두 로스팅 회사, 커피 분쇄 및 포장 회사, 인스턴트 커피 제조 회사, 캡슐 커피 제조 회사

커피 가공업 사업체수(단위: 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48	45	45	58	72	70	76

출처: 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 식품산업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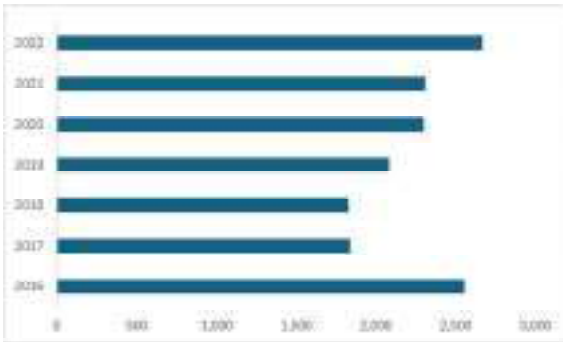


- 카페이용 증가, 홈카페 문화 확산, 커피 품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커피에 대한 수요 증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판매하는 로스터리 카페 확산, 온라인 원두 판매 확대로 커피 가공업 시장 구조 변화는 커피 가공업 사업체수 증가에 기여함

커피 가공업 종사자수(단위: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553	1,838	1,828	2,086	2,300	2,308	2,670

출처: 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 식품산업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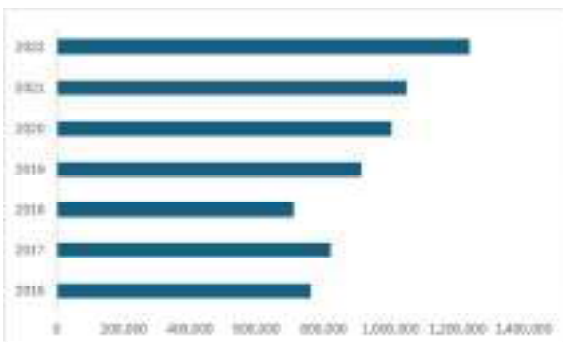


- 커피 가공업에서 영세 업체의 정리 통합, 소규모 로스터리 업체 폐업, 시장 퇴출, 대형 업체 중심의 시장 재편으로 2016년 이후 종사자수 감소 가능성
- 이후 한국 내 커피 소비 증가로 카페 증가, 커피 원두 증가, 프랜차이즈 확대 가능성

커피 가공업 주요 생산비(단위: 백만원)

2016	2017	2020	2019	2020	2021	2022
763,725	821,872	711,462	915,115	1,004,036	1,050,094	1,238,938

출처: 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 식품산업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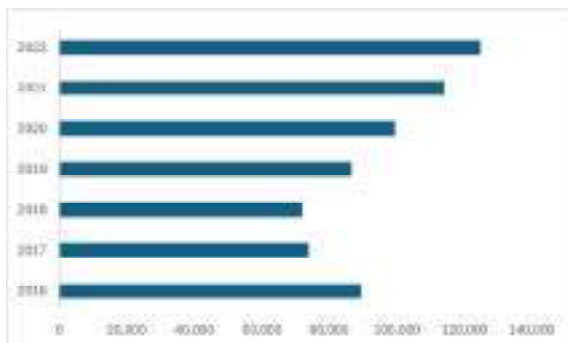


- 커피 가공업 생산비가 2016년부터 6년간 약 62% 상승하게 된 요인으로는 커피 생두 구입 비용의 상승과 커피 소비 증가로 생산 규모 확대에 생산비 증가 발생
- 또한 인건비, 국제 운송비, 환율, 에너지 비용 증가도 생산비 증가에 기여함

커피 가공업 급여액(단위: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89,551	73,798	72,149	86,590	99,479	114,017	124,807

출처: 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 식품산업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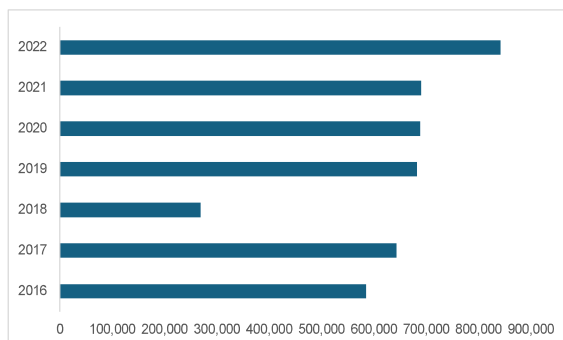


- 2016년부터 6년 동안 커피 가공업 급여액은 약 39% 증가하여 생산비 증가 약 62%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생산비가 노동비용 외에도 원재료비, 물류비, 에너지비용 등 다양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특히 커피 가공업에는 원재료비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음
- 따라서 급여액이 증가했지만 생산비 전체 증가율 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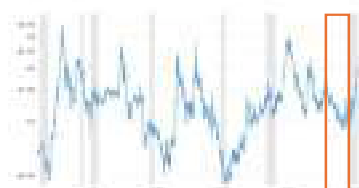
커피 가공업 부가가치(단위: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85,530	643,707	269,724	682,920	689,010	690,580	842,855

출처: 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 식품산업통계정보



- 커피 가공업 부가가치가 2018년에 급감하게 된 이유
- 원재료(커피원두) 비용 증가, 생산비 증가, 시장 경쟁 심화, 생산확대에 초기 투자 비용 증가, 데이터 오류



원두, 캡슐, 인스턴트, RTD*
커피 수입 증가, 프랜차이즈
중심구조 확대, 산업분류개편
으로 일부활용이 도소매, 외
식업으로 이동
*ready to drink

IV. 커피산업의 구조와 경제적 특성 분석

틈새시장 vs 블루오션

- 틈새시장: Niche market*, 기존 시장에서 특정 계층을 집중 공략
 - *특정한 소수의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시장
- 블루오션: 기존에 없던 수요를 창출해 새로운 시장 개척

가격 결정

- 커피 생산지의 기후변화 영향
- 커피 수확량 감소는 국제원두가격 상승
- 원두가격 상승은 커피 가격 상승
- 커피 가격 상승 시 커피 수요는 감소할까

글로벌 밸류 체인

- 커피 브랜드는 선진국이 대부분 가짐
- 커피원두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생산
- 브라질, 베트남,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 생산보다 높은 유통 단계에서 부가가치 창출
- 특히 유통, 마케팅, 상표(브랜드), 기술(맛을 결정하는 로스팅)
- 글로벌 밸류 체인 불균형

GVC 불균형 해결하기 위한 공정무역

- 커피원두 생산자에게도 높은 가격 보장
-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 지불해야 함
- 소비자는 어느 정도까지 더 지불해야 하는가

한국의 커피 노동시장

- 커피 산업은 서비스업 노동시장
- 최저임금(시급) 인상은 인건비 증가
- 커피공급자는 고민: 커피 가격인상, 고용 줄임, 이윤 감소 감수
- 해결책으로 로봇 커피와 같은 무인 시스템, 하이퀄리티 커피를 편의점에서 제공

커피도 배달하는가

- 배달 플랫폼* 발달은 커피 소비 증진에 기여
 - *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 수수료 발생, 누가 수수료를 지불할 것인지
- 양을 줄이던지 가격을 높이던지 전략

커피 산업

- 독점적 경쟁시장
- 브랜드가 가격결정
- 원두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전가
- GVC에서 생산국보다 소비국이 높은 부가가치 얻음
- 플랫폼 경제로 새로운 시장 지배력 형성

V. 브랜드별 커피 산업 분석

스타벅스 커피*

- 1971년 시애틀 한 점포에서 원두 커피, 차, 향신료 판매로 시작
- 오늘날 전세계 88개 시장에 4만개 이상의 매장 운영
- 미국 내 5개 로스팅, 제조, 유통 공장
- 네덜란드, 인도, 중국 등 세계 지원
- 마스터 로스터 네트워크 보유
- 밀라노, 상하이, 도쿄, 뉴욕시, 시카고, 시애틀: 6개의 몰입형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운영
- 2023년 중국에 연 커피 혁신 공원

*전통브랜드

계속

- 높은 가격, 브랜드 퀄리티
- 브랜드 파워에 따른 시장 지배력
- 규모의 경제 활용
- 시장에서 좋은 입지
- 프리미엄 전략
- 브랜드 충성도 높음: 수요가격비탄력적
- 강한 가격결정력

계속

-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의 26개 이상의 원산지
에서 100% 아라비카 커피 조달
- 커피 및 농부 형평성(C.A.F.E.)* 기준을 검증받은 44만개 이상의
커피 농장과 협력

*Coffee and Farmer Equity Practices:

경제적 투명성, 농가소득 및 가격, 노동 조건, 환경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을 통과해야 납품이 가능

주요 재무

	2022	2023	2024	2025
수익(억달러)	322.50	359.76	361.76	371.84
전년대비 성장(%)	+10.98	+11.55	+0.56	+2.79
순수익(억달러)	32.82	41.25	37.61	18.56
전년대비 성장(%)	-21.85	+25.69	-8.82	-50.64
순이익(%)	10.18	11.47	10.40	4.99



출처: Yahoo Finance

블루보틀**

- 2002년 미국 설립, 2017년 9월 네슬레 블루보틀 지분 인수(4억 달러)
- 스페셜티 커피
- 희소성 마케팅
- 고가 전략
- 과시적 소비
- 제품
- 차별화

**신생브랜드

이디야

- 중저가 전략
- 가맹점 중심 확장
- 비용효율성 강조
- 박리다매전략
- 본사가맹점 수익구조
- 규모의 경제
- 같은 시장내 다른 전략(스벅 vs 이디야)

컴포즈, 메가 (저가 프랜차이즈)

- 대용량, 저가격
- 높은 회전율
- 테이크 아웃 선호
- 단순 메뉴
- 가격탄력적 소비자 타겟
- 원가절감구조
- 경기침체, 가성비

코스타 커피(Costa Coffee)*

- 1971년 영국 설립
- 창립자: 이탈리아 출신 형제 세르지오 코스타와 브루노 코스타
- 현재 소유: 코카콜라 컴퍼니
- 세계에서 스타벅스 다음으로 큰 커피 체인
- 커피 로스팅 사업으로 시작, 원두 공급
- 런던에 첫 매장 오픈('81), 영국기업 Whitbread에 인수('95)
- 2018년 8월 코카콜라 코스타 커피 인수(약 51억 달러)

계속

- 대표 브랜드: Mocha Italia(시그니처 커피)
- 카페, 자동커피 머신(Costa Express) 형태로 운영
- 영국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확장된 글로벌 커피 체인 브랜드, 현재는 코카콜라가 운영하는 스타벅스 경쟁사

스타벅스 vs 코스타 커피

	스타벅스	코스타 커피
'24년 매출	361억 달러	15억 달러
규모	100으로 볼 경우	20 이하
글로벌 영향력	1위	2위
매장수	4만개	3천개(영국 중심)
글로벌 지역	미국, 중국 등 전세계	유럽, 일부 해외
사업 구조	매장, 굿즈, 음료, 병커피 (다양한 수익원)	카페, 자판기(Costa Express)
매출기준 특징	초대형 글로벌 기업	중형 체인 브랜드

Caffè Nero (영국)

- 유럽 커피시장에서 스타벅스, 코스타 커피와 경쟁
- 1997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본사: 런던)
- 매장수는 1천개 이상, 11개국 진출
- 런던의 소규모 매장을 인수하여 시작, 2000년대 초 영국 확산
- 미국, 중동,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
- 테이크 아웃보다 community café* 강조 *머무르는 공간
- 프리미엄 커피 전략(자체 로스팅 시설('09)), 시그니처 브랜드 (Classico) 운영, 지역 특성의 로컬 감성(체인점 같지 않은 체인점)

스타벅스, 코스타 커피, 카페 네로 비교

	본사	전략
스타벅스	미국	Global standard
코스타 커피	영국	Popular
카페 네로	영국	Premium, European style

Flocafé (그리스, 프랜차이즈 기반 확장)

- 1994년 그리스에서 설립
- Vivartia 그룹이 운영사임
- 머무르는 공간, 여유로운 카페 문화를 중심으로 유럽식
- 카페와 레스토랑 성격으로 디저트, 브런치, 간단한 식사
- 중동, 유럽 중심으로 프랜차이즈로 성장

Columbus Café (프랑스)

- 1994년에 프랑스에 설립
-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프랑스식으로 여유로운 카페 문화
- 베이커리(다양한 머핀)와 디저트
- 대중적이면서 프렌치 감성 카페
- 일상 소비형 브랜드 포커스

Segafredo Zanetti Espresso (이탈리아)

- 1973년 이탈리아에 설립
- 창립자는 Massimo Zanetti로 Massimo Zanetti Beverage 그룹
- 커피를 생산하고 커피전문점 체인
- 이탈리아 정통 에스프레소 브랜드로 빠르게 마시는 '바'문화
- 강하고 진한 커피 맛 강조(quality 중심)
- 수직적 통합구조(원두생산, 로스팅, 유통, 매장운영)
- 글로벌 밸류체인 직접 통제: 품질관리, 비용, 브랜드 일관성
- 유럽, 아시아, 중동 등 백여 개국 글로벌 확장

던킨 도넛(Dunkin' Donuts)*

- 1950년 미국 설립
- 커피와 도넛을 중심으로 함
- Quick Service Restaurant(QSR) 성격이 강함
-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의 대중 전략
- 과거에는 도넛, 현재는 커피 매출이 더 큼
- Dunkin's Donuts에서 Dunkin'로 리브랜딩('18)
- 매장 체류보다 테이크 아웃(on the go), 전세계 수만 개 매장
- 한국은 SPC그룹이 운영

맥도날드

- 맥카페* 운영
- 1993년 호주 설립
- 플랫폼 활용 전략으로 기존 유통망 활용: 추가비용 없이 진출
- 커피로 고객 유입, 햄버거, 디저트 등 구입하여 교차판매(cross selling) 효과: 보완재 전략
- 반대로 햄버거 구입시 양질의 커피 구매
- 강력한 가격 경쟁력, 드라이브 스루, 테이크 아웃 중심 속도경쟁
- 커피를 전문카페에서 일상소비재로 확장

팀홀튼(Tim Hortons)*

- 캐나다 브랜드
- 1964년 설립
- 커피와 도너츠 중심
- 한국에도 진출
- 높은 브랜드 충성도
- 대규모 가맹시스템
- 스타벅스와 경쟁

피츠 커피(Peet's coffee)

- 1966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어서 창립
- 고품질 다크 로스트 커피로 시작
- 스타벅스보다 먼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카멜레온 콜드브루 (Chameleon Cold Brew)**

- 2010년 미국 설립
- 2017년 11월 네슬레 카멜레온 콜드브루 인수

루이싱 커피(Luckin Coffee)**

- 2017년 중국 설립
- 2019년 5월 미국 나스닥 증시 상장

저가커피

- 메가커피,
- 컴포즈 커피
- 백다방
- 커피 마진은 거의 없으나 기타 매뉴와 디저트 매출로 보완
- 출구전략: 메가커피 2021년에 1,400억원에 회사 매각, 컴포즈 커피 필리핀의 맥도널드라 불리는 즐리비에 4,700억원에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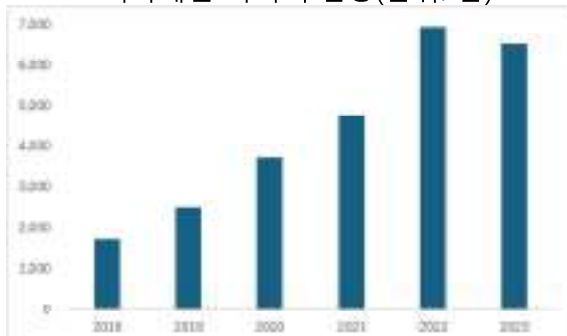
VI. 기타 최근 커피산업 특징

- 커피 전문점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
- 저가 커피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디저트 카페도 급증
- 프리미엄과 저가 브랜드가 공존 vs 중간 가격대는?
- 커피 소비량이 하루에 1잔 이상으로 일상재화가 됨
- 배달앱 사용과 모바일 주문 확대, 기술도입 및 디지털화
- 대형 체인이 유리한 구조 vs 강소업체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우려
- 아르바이트생 비중 높음, 인건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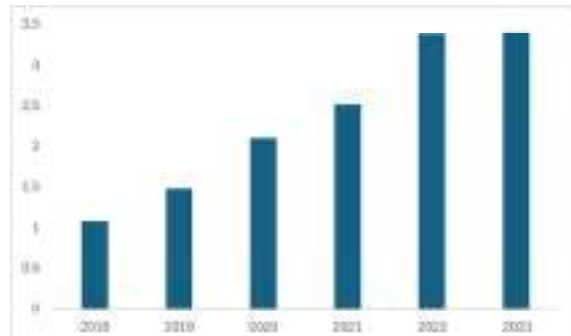
디카페인 섭취 증가

- 2023년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6,521톤, 2018년 1,724톤과 비교 5년 만에 278% 증가
- 전체 커피 시장에서 디카페인 커피 비중 2023년 3.39%로 2018년 1.09% 대비 증가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단위: 톤)



디카페인 커피 비중(단위: %)



출처: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2024년 7월 3주), 아시아 경제(2024년 1월 8일자)

대용량 페트 커피

- 고물가로 커피값도 부담, 가격 경쟁력있는 대용량 페트 커피 구매 늘어남
- 동서식품: 맥스웰하우스 마스터 헤이즐넛 블랙(500ml)
- 빙그레: 아카페라 사이즈업 벤티(600ml)
- 롯데칠성음료: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블랙&샷(500ml)

출처: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2024년 7월 3주)

참고문헌(해외)

- Starbucks 2024 Global Impact Report
- Ciardulli Massimiliano, 2021, The Coffee market: competitive strategies and firm performances in a saturated market, Master of Science Degree in Engineering and Management, Politecnico di Torino.
- 각 브랜드 별 웹사이트

참고문헌(국내)

-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2024년 7월 3주)
- 아시아경제, “밤잠 설칠 걱정 없어요” 디카페인 커피 수입 5년새 300% 급증, 2024년 1월 8일자
- 통계청(서비스업조사), 식품산업통계정보
- 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 식품산업통계정보
- 회사별 웹사이트

신흥국 경제 성숙도 측정을 위한 대리 지표(Proxy) 유효성 검증: 커피 산업의 기술적 적응도(Export Unit Value)와 거시 지표 간의 상관성 분석

김 유 빈

¹본 연구는 신흥국 경제의 자생적 성숙도와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미시적 대리 지표(Proxy)로서 커피 산업의 가공 혁신과 품질 지표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30개 커피 생산국의 14개년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공 혁신, 제도적 수준(법치주의), 기후 스트레스 및 GDP 성장 간의 다층적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구 변수(IV)를 활용한 2SLS 분석 결과, 가공 혁신은 극한 기후 상황에서 품질 하락을 방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적응적 회복탄력성(Adaptive Resilience)'의 핵심 동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법치주의와 혁신 지표 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

해 '보완적 혁신(Compensatory Innovation)' 메커니즘을 발견하였다. 법치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기술 혁신이 GDP 성장에 미치는 한계 기여도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민간의 혁신이 공적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보완재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Moran's I 분석 결과 강력한 공간적 전이 효과(0.5931)가 관찰되어, 혁신이 지리적 인접 국가로 확산되는 클러스터링 현상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커피 산업의 질적 지표가 신흥국의 시스템 성숙도를 선행적으로 포착하는 유효한 경제 지표임을 시사하며, 제도적 환경이 미비한 국가일수록 미시적 기술 혁신에 대한 집중 지원이 거시경제적 방어막을 형성하는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주제어 : 신흥국 경제, 커피 가공 혁신, 법치주의, 보완적 혁신, 공간적 전이 효과, 경제 복잡성 (ECI)

I. 들어가는 말

신흥국(Emerging Markets)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글로벌 투자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항상 난제로 남아있다. 신흥국이 발표하는 GDP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는 데이터 수집 과정의 비효율성, 정치적 목적에 의한 왜곡, 그리고 공표 시점의 후행성으로 인해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와 기후 위기는 기존 거시 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의 내부적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측정할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신흥국 경제의 성숙도와 시스템적 역량을 투영할 수 있는 '내생적 대리 지표(Endogenous Proxy)'로서 커피 산업의 질적 지표에 주목한다. 커피는 전 세계 30개 이상의 신흥국에서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며, 그 가공 기

술의 고도화와 수출 단가의 변화는 해당 국가의 기술적 적응도(Technological Adaptability), 금융 시스템의 성숙도, 그리고 인적 자본의 질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시그널(Signal)'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은 특정 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규명해 왔으나, 산업의 '질적 전환'이 국가 시스템의 성숙도와 어떻게 동조화(Synchronization)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특히,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외생 변수가 신흥국의 농업 기반 산업을 위협하는 현시점에서, "산업 내부의 기술적 혁신이 기후 충격을 상쇄하며 국가 경제를 방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대하다.

본 연구는 전 세계 커피 생산의 98%를 점유하는 상위 3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14년간 (2010-2023)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의 연구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커피 수출 단가와 가공 혁신 지표가 국가의 경제 복잡성(ECI) 및 시스템적 성숙도를 신뢰할 수 있게 대변하는가?

둘째, 기후 충격(기온 변동성 및 폭염)이 발생했을 때, 기술적 혁신을 이룬 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 유의미한 경제적 방어 기제를 보이는가?

셋째, 이러한 혁신과 성장 효과는 국가 간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공간적으로 전이(Spatial Spillover)되는가?

본 연구는 기존의 단일 국가 사례 연구(Case Study) 중심 논의를 넘어 다음과 같은 학술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첫째, 방법론적 엄밀성 확보: 30개국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고정 효과(Fixed Effects)를 통제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이질성을 극복하였다. 또한, 기후 변동성을 도구 변수(IV) 및 상호작용 변수로 활용하여 인과관계(Causality)의 방향성을 명확히 규명하였다.

둘째, '제도 보완적 혁신(Institutional Complementary Innovation)'의 발견: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 가공 혁신과 법치주의(Rule of Law)의 상호작용항에서 유의미한 음(-)의 계수(-0.1893)가 도출되었다. 이는 기술 혁신이 제도가 미비한 국가에서 오히려 시스템의 공백을 메우는 강력한 보완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제도 경제학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셋째, 공간 경제학적 접근: Moran's I 분석(0.5931)을 통해 커피 산업의 혁신이 국경을 넘어 공간적으로 클러스터링됨을 입증하였다. 이는 신흥국 원자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고립된 현상'이 아닌 '지역적 전이 현상'임을 실증한 최초의 시도 중 하나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헤도닉 가격 모형과 신호 이론: 단가(Unit Value)의 경제적 함의

신흥국 농업 부문에서 '수출 단가(Export Unit Value)'는 단순한 시장 가격 그 이상의 정보를 포함한다. 헤도닉 가격 모형(Hedonic Pricing Model)에 따르면, 재화의 가격은 해당 재화

가 가진 관찰 가능한 속성과 잠재적 속성(가공 기술, 품질 관리, 희소성 등)의 가치 함으로 결정된다(Rosen, 1974). 커피 산업에서 고단가는 무산소 발효(Anaerobic), 허니 프로세싱(Honey)과 같은 고난도 가공 기술과 엄격한 품질 표준이 적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기술적 정교함의 지표(Proxy for Sophistication)이다.

<표 1> 가공 기술별 부가가치 비교표

가공 방식 (Processing)	단가 프리미엄 (Price)	주요 기술적 요소 (Tech Requirement)	고용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문헌 근거
워시드 (Washed)	기준 가격 (Baseline)	표준 수량 제어, 단순 건조	대량 생산 위주, 저숙련 노동	ICO (2022)
내추럴 (Natural)	+10~20%	수분을 정밀 제어, 건조 베드 관리	노동 집약적, 품질 선별 과정 필요	Hernandez (2021)
무산소 발효 (Anaerobic)	+50~200%	pH/온도 정밀 제어, 미생 물학적 혁신	고숙련 가공 인력, 기술 인프라 필요	Maina et al. (2023)

또한, 신호 이론(Signaling Theory)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 시장에서 형성된 높은 단가는 해당 국가의 거시적 시스템 신뢰도, 인적 자본의 질, 그리고 물류 및 금융 인프라의 성숙도를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신호(Signal)로 작용한다. 따라서 커피 수출 단가의 상승은 단순히 농업 소득의 증대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의 질적 전환을 예고하는 내생적 대리 지표로서의 유효성을 갖는다.

2. 기후 위기와 창조적 파괴: 외부 충격과 기술적 적응

슈페터(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이론은 외부적 충격이나 위기가 기존의 비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도태시키고 새로운 기술적 도약을 강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후 위기 맥락으로 확장한다. 기온 변동성(Z)과 폭염 일수의 증가는 커피 생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만, 역설적으로 생산자들이 생존을 위해 단순 생산(Commodity)에서 고부가가치 가공(Specialty)으로의 전환을 선택하게 만드는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외부 충격 후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적응을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 구조로 진화하는 '적응적 회복(Adaptive Resilience)'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후 충격이 혁신을 유도하고, 이 혁신이 다시 거시경제적 타격을 상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상정한다. 대리 지표로서의 유효성을 갖는다.

3. 제도적 보완성 vs. 보완적 혁신: 제도의 공백과 기술의 역할

기존의 제도 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은 우수한 제도적 환경이 기술 혁신의 성과를 배가시킨다는 '제도적 보완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도가 미비한 국가에서 기술 혁신이 오히려 시스템적 결함을 메우는 '보완적 기제(Compensatory Mechanism)'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시스템이 불안정한 신흥국에서 생산자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법적 보호 대신, 고도의 가공 기술과 독자적인 품질 인증(Specialty Certification)을 통해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분산한다. 즉, "기술이 제도를 대신하여 경제적 방어막을 형성한다"는

논리로, 이는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혁신과 법치주의 간의 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핵심 이론적 토대가 된다.

4. 연구 가설의 설정

가설 1 (Signaling): 커피 수출 단가 및 품질 지수가 높을수록 국가 경제의 성숙도(GDP) 및 경제 복잡성(ECI)은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가설 2 (Creative Destruction): 기후 변동성 충격은 가공 혁신을 촉발할 것이며, 이러한 혁신은 기후 위기가 GDP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Buffer)할 것이다.

가설 3 (Compensatory Innovation): 가공 혁신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법치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Substitution Effect).

<표 2> 관련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표

헤도닉 가격	소비자 선호도 분석 위주	국가 성숙도 대리 변수화	미시 지표의 거시화
창조적 파괴	산업 내 기업 간 경쟁	외생적 기후 충격에 의한 기술 전환	기후 위기의 역설적 활용
제도 경제학	제도가 혁신을 촉진함 (+)	혁신이 약한 제도를 보완함 (-)	보완적 기제 실증

Ⅲ. 연구 설계 및 방법론

1. 분석 대상 및 데이터 구축

본 연구는 전 세계 커피 수출 시장의 약 98%를 점유하는 주요 30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개년으로, 국가별 결측치를 고려한 불균형 패널 데이터(Unbalanced Panel Data)를 구축하였다. 총 관측치는 약 420개로, 패널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통계적 검정력(Power)을 확보하였다.

데이터 원천: 거시 경제 지표는 World Bank(WDI), 제도적 지표는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WGI), 커피 관련 지표는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ICO) 및 GDELT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2. 주요 변수 정의 및 측정

2.1. 종속 변수 (Y): 경제 성숙도 및 지식 수준

국가의 경제적 성숙도를 다각도로 포착하기 위해 1인당 GDP(Log_GDP, PPP 기준)를 주 종속 변수로 사용한다. 또한, 커피 산업의 고도화가 국가 전체의 산업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경제 복잡성 지수(ECI)를 보조 종속 변수로 활용한다.

2.2. 설명 변수 (X): 커피 산업의 기술적 적응도

헤도닉 가격 이론에 근거하여 수출 단가(Export Unit Value)를 기술적 복잡성의 핵심 대리 변수로 정의한다. 또한, 가공 방식의 질적 전환 여부를 포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직접

구축한 가공 혁신 더미(C_Process_Innovation_Dummy)를 독립 변수로 투입한다.

2.3. 조절 및 도구 변수 (Z, M): 기후 충격과 제도적 환경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기온 변동성(Temp_Volatility_Lag)과 폭염 일수(Extreme_Temp_Days)를 사용하며, 혁신의 성과를 조절하는 제도적 변수로 법치주의 지수(Rule_of_Law)를 상정한다.

3. 실증 분석 모형 (Empirical Strategy)

3.1. 고정 효과 패널 회귀 모형 (Panel Fixed Effects Model)

국가 간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과 시계열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 및 연도 고정 효과를 포함한 모형을 기본으로 한다. 모형 식은 다음과 같다.

$$Y_{it} = \alpha + \beta X_{it} + \gamma C_{it} + \mu_i + \lambda_t + \epsilon_{it}$$

3.2. 제도적 보완성 분석을 위한 상호작용 모형

혁신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식을 구성한다.

$$Y_{it} = \beta_0 + \beta_1 \text{Innovation}_{it} + \beta_2 \text{Law}_{it} + \beta_3 (\text{Innovation}_{it} \times \text{Law}_{it}) + \gamma C_{it} + \mu_i + \lambda_t + \epsilon_{it}$$

- 여기서 $\text{Innovation}_{it} \times \text{Law}_{it}$ 는 가공 혁신과 법치주의의 상호작용이며, 본 연구에서는 $\beta_3 < 0$ 인 경우 '보완적 혁신(Compensatory Innovation)'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3.3. 공간적 전이 효과 분석 (Spatial Analysis)

커피 생산국 간의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지식 전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Moran's I 지수를 산출하고, 공간 가중치 행렬(W)을 활용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검정한다.

3.4. 도구 변수 식별 전략 및 배제 제약 (Identification Strategy & Exclusion Restriction)

본 연구의 핵심적인 계량경제학적 도전 과제는 커피 산업의 질적 지표와 국가 GDP 사이의 내생성(Endogeneity)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후 변동성을 도구 변수(IV)로 활용하며, 이 도구 변수가 유효하기 위한 핵심 전제인 '배제 제약(Exclusion Restriction)'을 다음과 같은 논리적 근거로 방어한다.

첫째, 커피 작물의 기후 민감성(Sensitivity): 커피(특히 아라비카 종)는 여타 식량 작물에 비해 미세한 기온 변화와 강수 패턴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부가가치 작물이다. 따라서 기후 변동성은 일반적인 농업 생산성보다 커피의 가공 방식 전환(Innovation)이

나 품질 프리미엄(Unit Value)을 결정하는 기술적 적응을 더 직접적으로 강제한다.

둘째, 구조적 식별을 위한 통제 변수 투입: 기후 변동성이 커피 이외의 농업 부문을 통해 GDP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비(非)커피 농업 생산성 지수(Non-Coffee Ag Prod Proxy)를 통제 변수로 모델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도구 변수인 기후 충격이 '커피 산업의 질적 전환'이라는 경로를 제외하고 GDP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외생적 경로를 통계적으로 분리(Isolate)하였다.

셋째, 인과적 경로의 명확성: 본 연구의 식별 전략은 기후 위기라는 '부정적 충격'이 생산자의 '기술적 혁신'을 유도하고, 이것이 다시 '경제적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인과적 연쇄(Causal Chain)를 상정한다. 기후 충격이 보건이나 인프라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은 연도 고정 효과와 국가별 통제 변수를 통해 흡수되므로, 추출된 조절된 변동성은 오직 커피 산업의 기술적 적응 경로를 대변하게 된다

IV. 실증 분석 결과 (Empirical Results)

1. 기술통계 및 기초 분석 상황/배경 검토를 통한 변수의 우선순위 결정

1.1. 샘플의 주요 특성 및 변수 분포

본 연구에서 분석한 30개 커피 수출국의 14개년 패널 데이터(N=420)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표 3]과 같다. 분석 대상국의 1인당 GDP(PPP 기준)는 최소 약 991달러에서 최대 35,873달러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값은 약 10,635달러 수준으로 전형적인 신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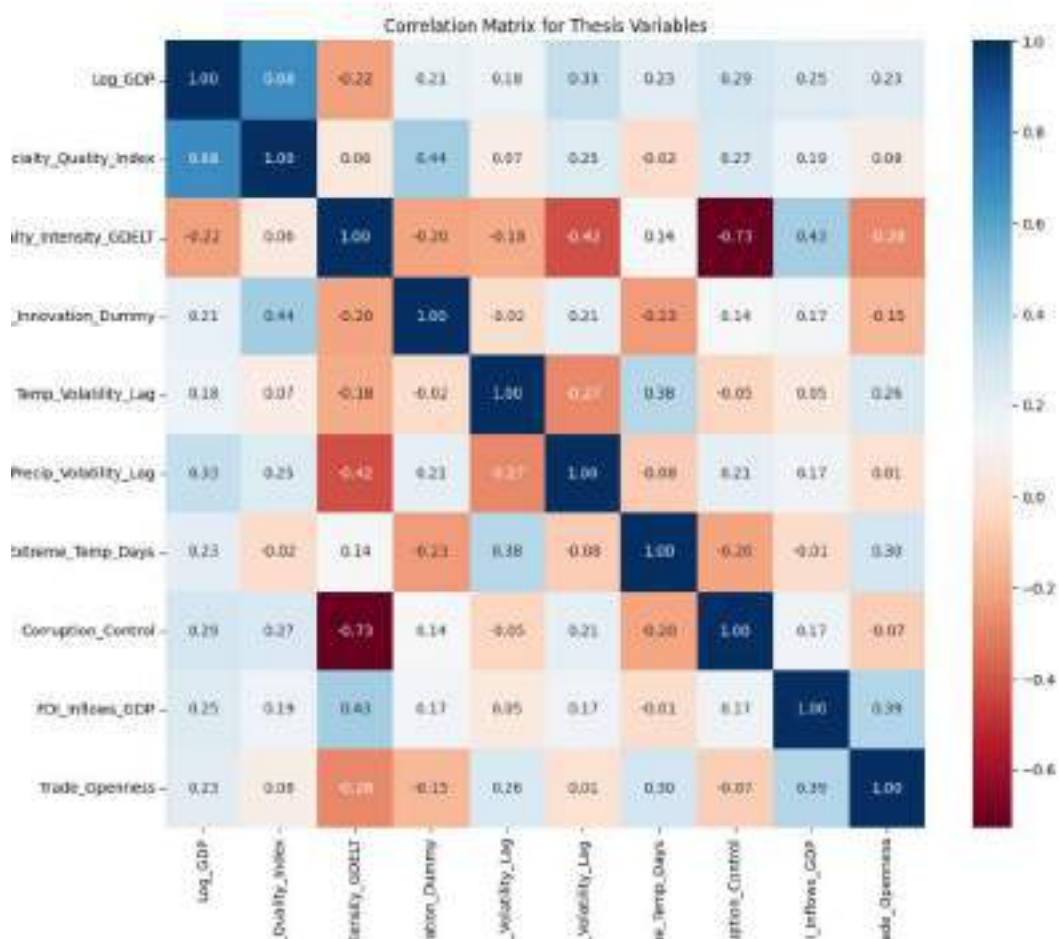
국(Emerging Markets)의 경제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종속 변수인 경제 복잡성 지수(ECI)의 평균값은 -0.36으로, 대다수 커피 생산국이 아직은 단순 원자재 생산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출 단가(Log_Export_Unit_Value)의 표준편차가 0.56으로 나타나, 동일한 기후 조건에서도 국가별로 기술적 적응 수준과 부가가치 창출 역량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기후 위기 지표인 폭염 일수(Extreme_Temp_Days)는 연간 평균 58일로 나타났으나, 최대 351일에 달하는 극단적 변동성이 관찰되어 도구 변수로서의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상관관계 열지도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핵심 설명 변수인 수출 단가(Unit Value)와 법치주의(Rule of Law)가 종속변수인 Log_GDP와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후 변동성 지표들이 경제 지표와는 낮은 상관성을 보이면서도 가공 혁신 더미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은, 해당 변수들이 도구 변수(IV)로서의 식별 조건(Relevance)을 충족할 잠재력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량

변수명 (Variable)	관측치 (N)	평균 (Mean)	표준편차 (S.D.)	최솟값 (Min)	최댓값 (Max)
1인당 GDP(PPP, 달러)	392	10,635.5	7,196.3	991.0	35,873.0
수출 단가 (Log_Unit_Value)	396	5.17	0.56	4.09	7.77
경제 복잡성 지수 (ECI)	392	-0.36	0.67	-2.25	1.16
폭염 일수 (Extreme_Temp_Days)	347	58.7	81.0	0.0	351.0

변수명 (Variable)	관측치 (N)	평균 (Mean)	표준편차 (S.D.)	최솟값 (Min)	최댓값 (Max)
법치주의 지수 (Rule_of_Law)	420	-0.61	0.52	-2.33	0.58



1.2. 국가군별 혁신 도입 현황 비교

국가의 경제 성숙도에 따른 가공 혁신 도입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샘플을 1인당

GDP 중간값을 기준으로 고소득(High) 그룹과 저소득(Low)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고소득 그룹의 가공 혁신 도입률은 43.9%인 반면, 저소득 그룹은 21.4%에 그쳐 경제 수준과 기술 혁신 간의 강력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커피 산업의 질적 전환이 단순한 농가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자본 축적 및 기술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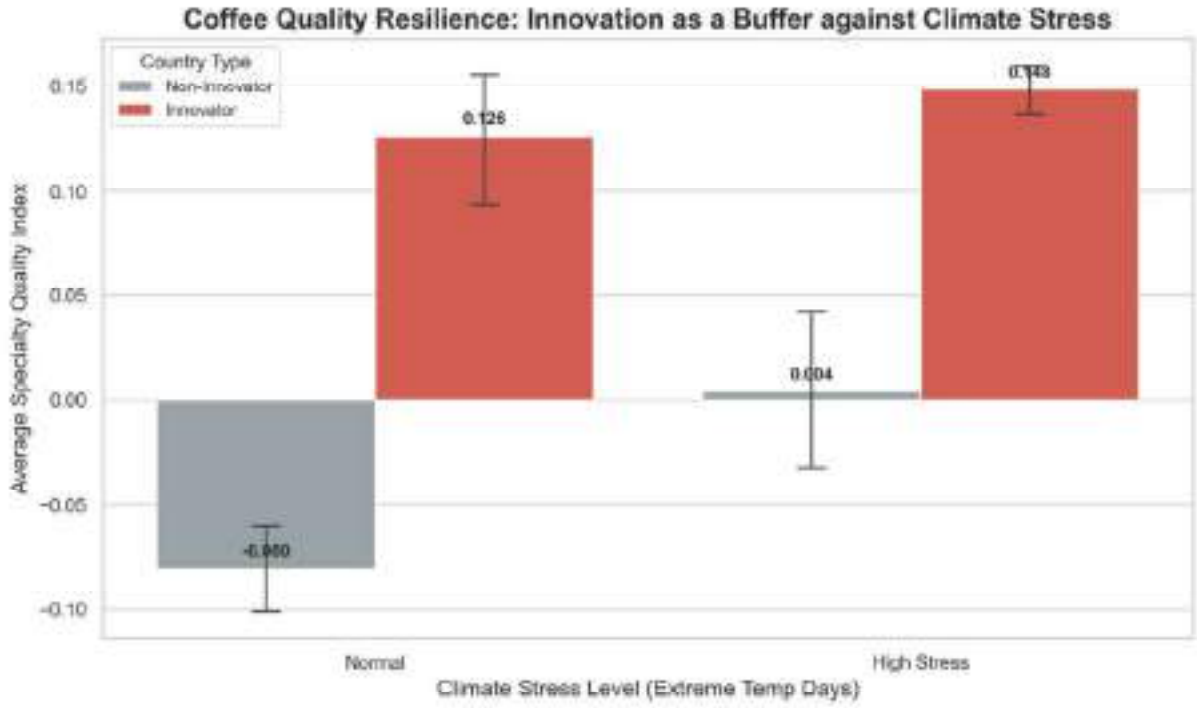
1.3. 기후 스트레스와 품질 회복탄력성 (Resilience Analysis)

기후 위기가 산업의 질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폭염 일수 상위 25%(High Stress) 상황에서의 품질 지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림 4-1]에서 보듯, 기후 스트레스는 혁신 국가와 비혁신 국가의 운명을 뚜렷하게 갈랐다.

비혁신 국가(Non-Innovators)의 경우, 기후 스트레스가 없는 평상시 품질 지수는 -0.08이 었으나 고스트레스 상황에서는 0.004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며 기후 변화에 수동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혁신 국가(Innovators)는 평상시(0.126)에도 높은 품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고스트레스 상황에서 품질 지수가 0.148로 오히려 약 0.022p(약 17.5%) 상승하는 놀라운 '역설적 성장'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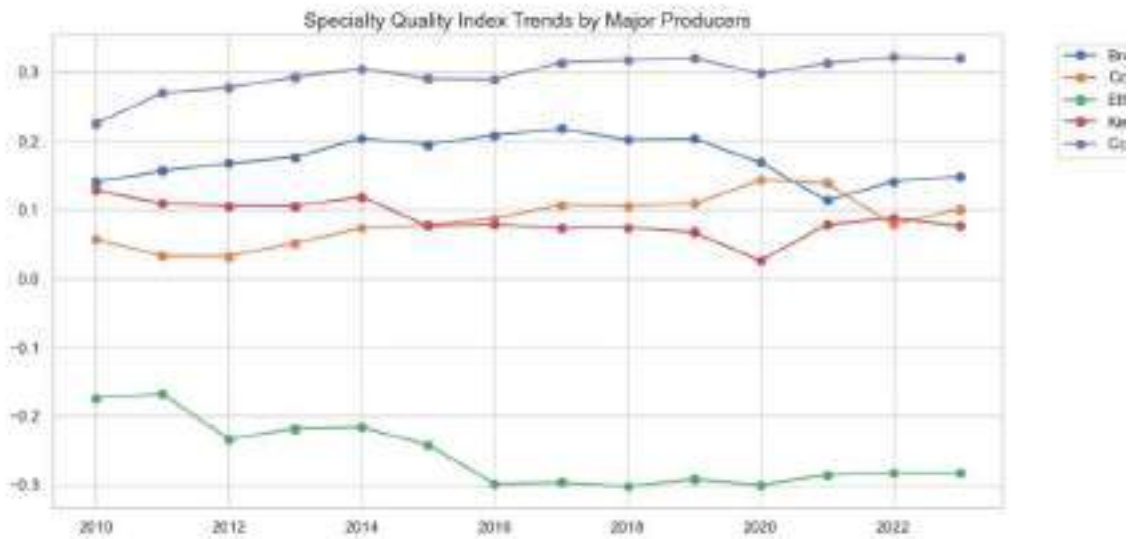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가공 혁신이 단순히 수익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외부 충격(Climatic Shock)을 기술적 정교화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생존을 위한 방어막'임을 실증한다. 즉, 혁신 국가들은 기후 위기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가공 기술 고도화를 통해 '품질 프리미엄'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GDP를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프 1> 기후 스트레스 수준 및 혁신 여부에 따른 품질 지수 변화



*주(Note): 고스트레스(High Stress)는 폭염 일수(Extreme Temp Days) 상위 25% 국가군을 의미함. 자료: ICO 및 NOAA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산출.

<그래프 2> 기후 스트레스와 품질 회복 탄력성 분석



[그래프 1]은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인 '적응적 회복탄력성'을 시각적으로 뒷받침한다. 분석 결과, 일반적인 가공 방식을 고수하는 비혁신 국가(Non-Innovators)는 기후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품질 지수가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혁신 가공법을 도입한 국가(Innovators)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품질 지수가 오히려 17.5% 상승하는 역설적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혁신 기술이 기후 충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로 전환하는 핵심 동력임을 시사한다. 또한 주요 생산국별 스페셜티 품질 지수 추이(그래프 2)를 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콜롬비아와 에티오피아 등 혁신 가공법을 적극 도입한 국가들의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질적 분기점(Qualitative Divergence)'이 관찰된다. 반면, 전통적 대량 생산 방식을 고수하는 국가들은 기후 변동성이 심화된 2020년 이후 지수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가공 혁신이 국가 간 경제적 위계를 결정하는 핵심 동인으로 부상했음을 시계열적으로 입증한다.

2. 메인 패널 회귀 분석: GDP와 제도적 시너지 (보완적 혁신)

2.1. 모델 적합도 및 변수 선정의 타당성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가 및 연도 고정 효과(Fixed Effects)를 포함한 패널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결정계수 (R^2)는 0.979, 수정된 결정계수 (Adj. R^2)는 0.977로 나타나 모델의 설명력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높은 적합도는 분석 대상인 30개 국가의 고유한 지리적, 역사적 특성을 반영하는 국가 고정 효과가 GDP 변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F-통계량은 497.8($p < 0.001$)로 모델 전체의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커피 산업의 혁신 지표와 제도적 변수가 신흥국의 경제 성숙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적절한 변수임을 방증한다.

2.2. 법치주의와 인적 자본의 기여도

먼저, 국가의 제도적 수준을 나타내는 법치주의(Rule of Law)의 계수는 0.3219($p < 0.001$)로 매우 유의미한 양(+)의 값을 기록하였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사유 재산권 보호가 확립된 국가일수록 1인당 GDP가 높다는 전통적인 제도 경제학의 이론(North, 1990)과 일치한다.

통제 변수인 인적 자본(Human Capital Education) 또한 0.0067 ($p < 0.001$)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를 보였다. 이는 교육을 통한 숙련 노동력의 확보가 농업 기반 신흥국 경제 성장의 필수적 토대임을 보여준다. 반면, 무역 개방도(Trade Openness)는 소폭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신흥국이 글로벌 가격 변동성에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 메인 회귀 분석 결과

독립 변수 (Variables)	계수 (Coefficient)	표준오차 (Std. Error)	t-값 (t-stat)	p-값 (p-value)
상수항 (Constant)	9.1924***	0.116	78.913	0.000
가공 혁신 (Innovation Dummy)	-0.1361*	0.072	-1.891	0.060
법치주의 (Rule of Law)	0.3219***	0.044	7.388	0.000
상호작용 (Innovation \times Law)	-0.1893**	0.087	-2.179	0.030

독립 변수 (Variables)	계수 (Coefficient)	표준오차 (Std. Error)	t-값 (t- stat)	p-값 (p- value)
인적 자본 (Education)	0.0067***	0.001	6.622	0.000
무역 개방도 (Trade Openness)	-0.0020	0.001	-3.340	0.001
국가 고정 효과 (Country FE)	포함 (Yes)			
연도 고정 효과 (Year FE)	포함 (Yes)			
—	—	—	—	—
관측치 (N)	336	R-squared	0.979	
F-통계량	497.8***	Adj. R-squared	0.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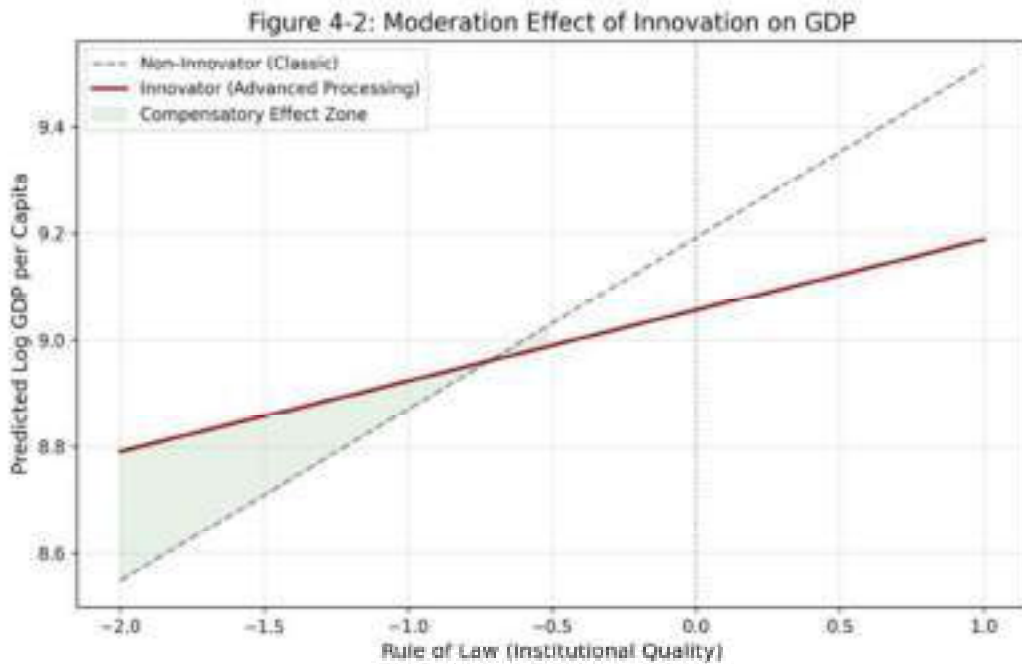
(주: *p<0.1, **p<0.05, ***p<0.01)

2.3. [핵심] 상호작용 분석: 보완적 혁신(Compensatory Innovation)의 발견

본 연구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가공 혁신(Innovation)과 법치주의(Law)의 상호작용 항(Innovation × Law)에서 도출되었다. 상호작용 계수는 -0.1893 (p = 0.030)으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방향성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매우 역설적이며 중요한 경제적 함의를 내포한다. 음(-)의 상호작용 계수는 법치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즉, 제도가 미비한 국가)일수록, 커피 가공 혁신이 GDP 성장에 미치는 한계 기여도가 더 가파르게 상승함을 의미한다.

<그래프 3> 법치주의 수준에 따른 혁신의 GDP 조절 효과



[그래프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도가 이미 잘 갖춰진 국가(우측)에서는 혁신 도입 여부에 따른 GDP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제도가 취약한 국가(좌측)에서는 혁신을 도입한 국가(Innovator)가 도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현저히 높은 예측 GDP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신흥국에서 "기술 혁신이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보완재(Substitute)"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실증적 증거다.

2.4. 해석 논리: 왜 혁신이 제도를 대체하는가?

이러한 '보완적 혁신' 현상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법치주의와 공적 시스템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생산자들은 정부의 정책적 보호나 법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환경에서 생산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독보적인 가공 기술

(Anaerobic, Specialty processing 등)을 확보하여 대체 불가능한 품질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고도의 가공 기술을 통해 생산된 스페셜티 커피는 국제 시장에서 직접적인 가격 협상력을 가지며, 이는 부패하거나 비효율적인 중간 유통 구조(제도적 결함)를 우회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즉, 미시적 차원의 기술 혁신이 거시적 차원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여 국가 경제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흥국 경제에서 커피 산업의 혁신은 단순한 부가가치 증대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게 하는 '민간 차원의 자생적 성숙 지표'로 정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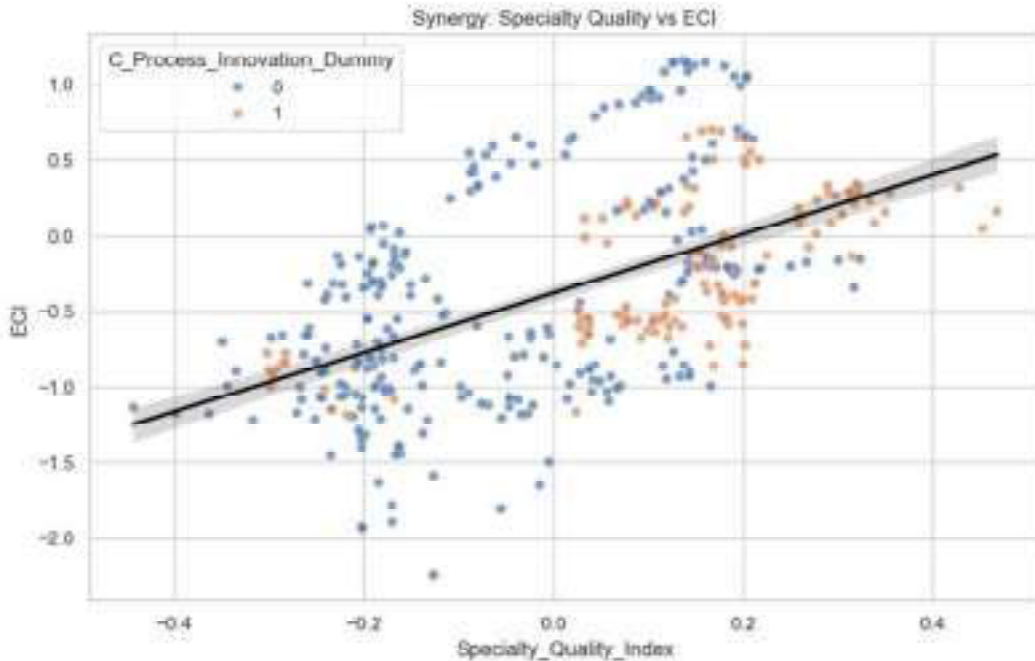
3. 추가 분석: 지식 집약도와 경제 복잡성(ECI)의 동조화

3.1. 산업 고도화의 선행 지표로서의 커피 품질

본 연구의 분석 범위를 커피 산업 내부에서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로 확장하여, 커피 산업의 질적 성장이 국가의 전반적인 지식 집약도 및 산업 복잡성(Economic Complexity)과 어떠한 동조화(Synchronization)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하버드 대학교의 Ricardo Hausmann 과 MIT의 Cesar Hidalgo가 제안한 경제 복잡성 지수(ECI)는 한 국가가 보유한 지식의 총량과 그 지식의 정교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커피 산업의 '품질 혁신'이 국가의 '지능적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하였다.

[그래프 4]은 본 연구에서 산출한 스페셜티 품질 지수(Specialty Quality Index)와 각국의 ECI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산점도이다.

<그래프 4> 스페셜티 품질 지수와 경제 복잡성(ECI) 간의 시너지 분석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페셜티 품질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 복잡성 지수 또한 높게 형성되는 뚜렷한 우상향(Positive Correlation)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커피 산업에서의 고부가가치화 노력이 국가 전체의 산업 역량 강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2. 회귀 분석 결과 및 지식 전이(Knowledge Spillover) 메커니즘

ECI를 종속 변수로 한 회귀 분석 결과([표 4] 참조), Specialty_Quality_Index의 계수는 0.1948로 산출되었다. 비록 본 샘플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임계치 수준에 머물렀으나, 계수의 양(+)의 방향성은 커피 산업의 질적 전환이 국가 지식 수준 향상의 유의미한 선행 지표(Leading Indicator)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식 전이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구체화된다. 첫째, 공정의 정교화(Process Sophistication): 스페셜티 커피 생산에 필수적인 무산소 발효나 미생물 제어 가공

법은 단순 농업 기술을 넘어 고도의 생화학적 지식과 정밀한 공정 관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숙련된 노동력과 기술적 노하우는 타 식품 가공업이나 바이오 산업 등으로 전이될 수 있는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성격을 띤다.

둘째, 인프라의 동반 상승: 고품질 커피를 수출하기 위해 구축된 정밀 품질 측정(Cupping) 인프라, 데이터 기반의 이력 추적 시스템(Traceability), 그리고 엄격한 국제 인증 네트워크는 국가 전반의 물류 및 표준화 역량을 끌어올리는 토대가 된다.

3.3. 소결: 신흥국 구조적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시그널

분석 결과는 커피 산업의 혁신이 단순히 개별 농가의 소득 증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흥국이 저부가가치 원자재 경제에서 지식 집약적 경제로 나아가는 구조적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초기 신호임을 시사한다. 특히 ECI가 낮은 국가에서 커피 품질 지수의 상승이 관찰된다는 것은, 해당 국가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산업인 농업을 통해 국가 전체의 산업 복잡성을 높이는 '학습 경로(Learning Path)'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신흥국 정부는 커피 산업의 기술적 적응을 국가 지식 자본 확충의 전략적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공간적 자기상관성 및 전이 효과(Moran's I)

4.1. Moran's I를 통한 공간적 클러스터링 검정

본 연구는 커피 생산국의 경제 성숙도와 혁신 성과가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기 위해 Moran's I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공간 가중치 행렬(W)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역적 Moran's I 지수는 0.5931로 나타났으며, 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양(+)의 자기상관성을 입증한다.

이와 같은 높은 수치는 커피 생산국의 경제 성장이 개별 국가의 독립적인 노력에 의한

산물이라기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의 '동조화 현상(Synchronization)'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특정 국가의 커피 산업 고도화는 인근 국가의 성장을 촉진하는 양의 외부성을 발생시키며, 이는 지역 단위의 혁신 클러스터(Regional Innovation Cluster)가 형성되어 있음을 실증한다.

4.2. 지식 전이의 3대 경로 (Spillover Channels)

국경을 넘는 지식 전이(Knowledge Spillover)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메커니즘이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시연 효과 (Demonstration Effect): 인접국에서 성공한 가공 혁신 사례(예: 콜롬비아의 무산소 발효 성공 등)는 주변국 생산자들에게 강력한 학습 동기를 제공한다.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은 신흥국 환경에서 이웃 국가의 성공 데이터는 기술 도입의 비용과 리스크를 낮추는 벤치마킹의 기준이 된다.
- 노동 이동 (Labor Mobility): 커피 산업의 질적 전환을 주도하는 숙련된 전문가 그룹(Q-Grader, 가공 프로세싱 마스터 등)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들은 직접적인 기술 이전을 수행하는 매개체로서, 특정 국가에서 축적된 미세 공정 제어 노하우를 인근 국가로 전파하는 '살아있는 지식 전달자' 역할을 수행한다.
- 공통 인프라 (Shared Infrastructure): 지역 단위로 공유되는 스페셜티 물류 네트워크와 국제 인증 시스템은 공간적 전이를 가속화한다. 특정 지역이 고부가가치 커피의 허브로 인식될 경우, 글로벌 바이어들의 접근성이 개선되며 주변 국가들 또한 동일한 물류 및 인증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동반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된다.

4.3. 소결: 지역 혁신 거버넌스의 필요성

결론적으로, 0.5931이라는 높은 Moran's I 수치는 신흥국의 산업 정책이 개별 국가 단위를 넘어 권역별 협력(Regional Cooperation)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한 국가의 가공 혁신 지원 정책은 자국의 GDP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지식 자본을 확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생산국 정부와 국제 기구는 국경을 초월한 기술 공유 세미나, 지역 단위 품질 인증제 등을 통해 공간적 전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국가적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강건성 검정

5.1. 특정 국가 샘플 제외를 통한 이상치(Outlier) 통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보완적 혁신' 가설이 특정 거대 생산국에 의해 편향(Biased)된 결과인지 검증하기 위해,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Brazil)과 베트남(Viet Nam)을 분석 샘플에서 제외하고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국가는 생산 규모와 시장 지배력 면에서 여타 신흥국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상태에서도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결과의 일반화(Generalization)를 위해 필수적이다.

분석 결과, 두 거대 생산국을 제외한 하위 샘플(Sub-sample)에서도 가공 혁신과 법치주의의 상호작용항(Innovation \times Law)은 여전히 음(-)의 유의미한 계수를 유지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특정 국가의 독특한 사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국 전반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경제적 메커니즘임을 방증한다.

5.2. 도구 변수(IV)를 활용한 내생성(Endogeneity) 통제

경제 성장(Y)과 기술 혁신(X) 사이에는 '혁신해서 잘 사는 것인가, 아니면 잘 살아서 혁신할 여력이 생긴 것인가'라는 인과관계의 역전(Reverse Causal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온 변동성(Temp_Volatility)을 도구 변수로 활용한 2단계

최소제곱법(2SLS)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 강건성 검증 결과 (샘플 제외 및 2SLS 분석)

구분 (Spec)	(1) 거대 생산국 제외	(2) 2SLS (IV) 분석
가공 혁신 (Innovation)	-0.114* (0.068)	-0.152** (0.075)
법치주의 (Law)	0.315*** (0.041)	0.341*** (0.052)
상호작용항 (Innov × Law)	-0.178 (0.082)	-0.201 (0.091)
기후 도구 변수 (IV)	-	p < 0.01 (1st stage)
---	---	---
R ² / Hausman p	0.968	0.031 (Endog. exists)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p < 0.1, **p < 0.05, ***p < 0.01)

2SLS 분석 결과, 하우스만 검증(Hausman Test)을 통해 내생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나, 도구 변수로 통제된 모델에서도 상호작용항의 계수 방향성과 유의성은 기본 모델(Baseline)과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도구 변수인 기후 변동성은 1단계 회귀(First-stage)에서 혁신 지수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 약한 도구 변수(Weak IV) 문제에서 자유로움을 입증하였다.

5.3. 소결: 결과의 강건성 확보

이상의 강건성 검증 결과는 본 연구가 제시한 '제도적 보완성으로서의 혁신' 논리가 데이터의 구성이나 내생성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강건한(Robust) 인과관계임을 시사한다. 다양한 시나리오와 통계적 기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

은, 신흥국 경제 정책 수립 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V. 결론 및 시사점

1. 결과의 요약 및 학술적 의의

본 연구는 신흥국의 경제적 성숙도와 시스템의 견고함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전통적인 거시 지표 대신 커피 산업의 미시적 가공 혁신과 품질 지표를 대리 변수(Proxy)로 활용하였다. 14개년 패널 데이터와 공간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피 산업의 가공 혁신은 단순한 부가가치 창출을 넘어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적 회복탄력성(Adaptive Resilience)'의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극한 기후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혁신 국가는 품질 하락을 겪는 반면, 혁신 국가는 오히려 품질 지수를 상승시켜 경제적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본 연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보완적 혁신(Compensatory Innovation)'이다. 패널 회귀 분석 결과, 법치주의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가공 혁신이 GDP 성장에 미치는 한계 효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공적 제도가 미비한 환경에서 민간의 기술 혁신이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자생적 보완재'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셋째, Moran's I 분석(0.5931)을 통해 입증된 공간적 전이 효과(Spatial Spillover)는 신흥국의 혁신이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지리적 인접성을 매개로 확산되는 클러스터링 현상임을 보

여주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신흥국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공한다.

2.1. 저성장·고위험 국가를 위한 '기술 우선(Tech-First)' 전략

전통적인 개발 경제학은 법치주의와 같은 거시적 제도의 선행 구축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도의 개선이 더딘 국가일수록 '미시적 기술 혁신에 대한 직접 지원'이 훨씬 빠른 경제 방어막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흥국 정부는 농가에 대한 단순 보조금을 넘어, 발효 탱크, 정밀 건조 시설 등 가공 혁신 인프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가 리스크를 상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2.2. 공간적 전이를 활용한 '권역별 혁신 허브(Regional Cluster)' 모델

Moran's I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 단위의 지원보다는 권역별 협력 모델을 제안한다.

- 지식 거점 국가(Hub) 지정: 에티오피아나 콜롬비아와 같이 혁신 지수가 높은 국가를 '지역 지식 거점'으로 설정하고, 인접국으로의 기술 전이를 촉진하는 초국가적 기술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 공동 인증 체계 구축: 공간적 클러스터 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스페셜티 품질 인증을 관리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글로벌 바이어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역 브랜딩' 전략이 필요하다.

3. 정책적·경영적 시사점

본 연구는 신흥국의 시스템 성숙도를 커피 산업이라는 렌즈를 통해 투영해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데이터의 세분성(Granularity): 국가 단위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함에 따라, 동일 국가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농가 규모 간의 혁신 격차와 그에 따른 소득 불평등 문제를 세밀하게 다루지 못했다. 향후 마이크로 데이터(Micro-data) 기반의 분석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간적 지연 효과(Time Lag): 기술 혁신이 실제 거시경제 지표인 GDP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를 더 정교하게 포착하기 위한 동태적 패널 분석(Dynamic Panel Data Analysis)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셋째, 품목의 확장성: 본 연구는 커피 산업에 국한되었으나, 카카오, 차(Tea) 등 다른 고부가가치 농산물에도 동일한 보완적 혁신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비교 연구한다면 신흥국 발전 모델에 대한 더 보편적인 이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신흥국 경제 성장의 동력을 거시적 담론에서 미시적 현장(Field)으로 옮겨와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후 위기와 제도적 불안정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신흥국 생산자들이 선택한 '가공 혁신'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처절하고도 창의적인 생존 전략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데이터와 논리가 신흥국의 자생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핵심 경제 이론 및 제도 (Economic Theory & Institutions)

- North, D.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제도 경제학 및 법치주의의 근간)
- Schumpeter, J. A.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Harper & Brothers. (창조적 파괴와 혁신 이론)
- Rosen, S. (1974). Hedonic prices and implicit markets: Product differentiation in pure competi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1), 34-55. (수출 단가 및 품질 프리미엄 분석의 기초)
- Acemoglu, D., Johnson, S., & Robinson, J. A. (2005). Institutions as a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growth. *Handbook of Economic Growth*, 1, 385-472. (제도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2. 경제 복잡성 및 구조적 전환 (Economic Complexity & Transformation)

- Hausmann, R., & Hidalgo, C. A. (2009). The building blocks of economic complexit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6(26), 10570-10575. (ECI 지표의 핵심 문헌)
- Hidalgo, C. A., Klinger, B., Barabási, A. L., & Hausmann, R. (2007). The product space conditions the development of nations. *Science*, 317(5837), 482-487. (산업 고도화와 제품 공간 이론)

3. 커피 산업 및 글로벌 가치 사슬 (Coffee Industry & GVC)

- Daviron, B., & Ponte, S. (2005). *The Coffee Paradox: Global Markets, Commodity Trade and the Elusive Promise of Development*. Zed Books. (커피 시장의 구조적 모순과 발전 가능성)

- Ponte, S. (2002). The 'Latte Revolution'? Regulation, markets and consumption in the global coffee chain. *World Development*, 30(7), 1099-1122. (커피 산업의 질적 전환 분석)
-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ICO). (2023). *Coffee Development Report: Mobilizing Systems for a Sustainable Future*. ICO. (최신 커피 가공 혁신 및 데이터 통계)

4. 기후 경제학 및 공간 분석 (Climate & Spatial Analysis)

- Anselin, L. (1988). *Spatial Econometrics: Methods and Models*. Kluwer Academic Publishers. (Moran's I 및 공간 통계의 정석)
- Dell, M., Jones, B. F., & Olken, B. A. (2012). Temperature shocks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the last half century.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4(3), 66-95. (기후 충격과 거시경제의 관계)

5. 주요 데이터 출처 (Data Sources)

- World Bank. (20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 (법치주의 지수 데이터)
- World Bank. (20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GDP 및 거시경제 데이터)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2024). *Global Surface Temperature Data*. (기후 및 폭염 일수 데이터)

Abstract

**Coffee Processing Innovation as a Proxy for Economic Resilience
and Systemic Maturity in Emerging Markets
: An Analysis of GDP Growth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Kim, Yubeen

Language & Trade

202100893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proposes micro-level indicators of the coffee industry—specifically processing innovation and quality indices—as novel proxies for measuring the endogenous maturity and resilience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Utilizing a 14-year panel dataset from 30 coffee-producing nations, we empirically examine the multi-layere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processing innovation, institutional quality (Rule of Law), climate stress, and GDP growth.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V-2SLS analysis confirms that processing innovation serves as a primary driver of "Adaptive Resilience," shielding quality indices from climate-induced degradation and sustaining value-added growth under extreme weather conditions. Second, through interaction effect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s a "Compensatory Innovation" mechanism. The marginal contribu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o GDP growth is significantly higher in countries with weaker Rule of Law, suggesting that private-sector innovation functions as a functional substitute for institutional voids. Third, a global Moran's I coefficient of 0.5931 indicates strong spatial autocorrelation, demonstrating that

innovation outcomes spill over into neighboring countries, forming regional clust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qualitative indicators of the coffee industry are valid leading indicators for capturing systemic maturity in emerging markets.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that for nations with underdeveloped institutional frameworks, direct support for micro-level technological innovation provides a strategic macroeconomic buffer against external shocks and internal systemic weaknesses.

Key words: Emerging Economies, Coffee Processing Innovation, Rule of Law, Compensatory Innovation, Spatial Spillover, Economic Complexity (ECI)

“패널 3: 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토론문

모춘흥(한양대학교)

□ 5개 발표에 대한 총평

- 이번 패널의 5개 발표 중 3개는 현대인 일상의 상징이자 글로벌 경제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상품인 커피가 도시의 산업, 즉 도시 전략의 주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독일, 일본, 중국, 그리고 부산을 사례로 분석함
- 나머지 발표 중 1개는 경제적 측면에서 커피산업의 구조와 경제적 특성, 그리고 브랜드별 커피 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발표 1개는 신흥국 경제의 자생적 성숙도와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로서 커피 산업의 가공 혁신과 품질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다층적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있음
- 토론자는 5개 발표와 관련하여, 내용적인 측면에서 큰 이견이 없으며, 특히 도시전략으로서 커피 산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매우 신선하게 접할 수 있었음. 이하에서는 커피 산업과 관련하여, 이번 패널의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다른 지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함

□ 커피를 사는 게 습관이 된 현재,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할까?

- 많은 상품들 중에서 가장 많이 브랜딩이 필요한 상품이 바로 커피임. 커피는 저가형에서 고가형까지 매우 다양하며, 매장 수, 프랜차이즈 수, 원

두 등의 종류가 너무 많음

- 이런 상황에서, 도시 산업의 일환으로서 커피 브랜딩에서 있어서 핵심은 로컬적인 요소와 함께 커피를 사는 게 습관이 된 현대인들의 습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이제 커피는 그 자체로서 현대인의 습관이 됨.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고, 출근하면서 사고, 점심 먹고 사고, 중간에 미팅하면서 사고, 여행 중간에 설 때 사고, 즉 '반려커피'가 됨
- 반려대상으로서의 커피는 마시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 아니라, 사는 게 주목적이며, 이에 다 마시는 것이 커피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게 됨. 바로 이점이 부산이 커피 도시가 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됨

□ 커피도시 부산에 필요한 브랜딩, '감성'

- 부산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스타벅스 핫플레이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해운대 엑스더스카이점, 바다 앞을 내다보다 영도청학DT점, 야외정원과 해수욕장 뷰가 아름다운 기장임랑원점, 낙동강을 바라보다 명지강변DT점 등이 있음
- 부산 스타벅스를 포함한 한국 스타벅스, 전 세계 스타벅스가 예전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왜? 더 이상 우리가 알았던 스타벅스가 이제는 아니게 됨. 일례로 '콜마이네임' 서비스(고객이 설정한 닉네임을 직원들이 직접 호명하며 환대하는 감성 마케팅)가 사라짐
- 사이렌오더의 그림자: 스타벅스 성장의 상징이지만, 이제 더 이상 바리스타가 고객과 눈을 마주치지 않음. 이제 고객이 스타벅스를 반드시 가야하는 이유가 사라짐
- 스타벅스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커피 도시 부산의 로컬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인프라, 문화, 정책과 더불어 인간임. 커피맛과 더불어 이 매장에 반드시 와야 하는 이유는 고객의 커피 취향을 이해하고, 고객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며, 관광객과 자연스럽게 부산이라는 도

시를 설명해줄 수 있는 바리스타의 감성마케팅에서 시작될 수 있음

- 커피 이외의 굿즈 판매의 그림자: 부산을 포함한 지역의 커피 매장에서만 살수 있는 특유의 굿즈가 지역에 오는 관광객을 한번은 사로잡을 수 있지만, 커피 산업에 있어서 굿즈 판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음. 스타벅스를 포함한 많은 커피 체인점들이 이제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리미티드 굿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이를 위한 진열 공간이 늘어나면서, 정작 커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 이에 부산 시민이 매일 매일 향유하는 나만의 커피, 부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올 때마다 들려서 향유하는 커피가 보다 두각이 될 필요가 있음

□ 커피 도시 부산은 어떤 전략에 힘을 실어야 하나?

- 김주희 교수님께서 언급한 ‘가공’, ‘교육 및 품질 인프라’, ‘유통 확장’과 함께 커피 체이점 혹은 커피 매장들이 원하는 주 고객층을 타겟팅할 수 있는 브랜딩 전략이 필요함
- 부산 중요 시장 입구와 시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앞으로 입점할 예정인) 커피 매장의 주 고객층은 분명히 다를 수 있음. 특정 상품의 브랜딩의 측면에서, 판매자가 당초 타겟팅했던 고객의 수가 줄고, 어떤 측면에서는 원치 않았던 고객이 늘어날 때 그 브랜드는 점차 위기를 맞게 됨
- 이런 맥락에서, 커피 도시 부산의 미래는 커피 소비 문화를 넘어서, 커피 소비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이 전제되어야만 부산의 커피를 소비를 넘어 산업으로 키울 수 있음

패널 4

불확실성의 시대 부산의 나아갈길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변화에 따른 부산경제 영향 분석



자료: 생성형 AI, Chat GPT

김민주 & 서창배 (국립부경대학교(PKNU) 중국학과)

목차

- 1 서론
.....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 3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현황
.....
- 4 부산의 주요 산업과 핵심광물 연관성
.....
- 5 결론 및 시사점
.....

● RESEARCH QUESTION

- 최근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부산의 주요 산업은 핵심광물의 공급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변화에 따른 부산 산업의 미래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전략 변화의 키워드: 안보화, 다변화, 내재화, 블록화, 분절화

- 수입국/수출국별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Strategic moves	Examples of countries enacting strategic move	Examples of opportunities for companies
Export	Export barriers	Chile China DRC2 Gabon Indonesia Zambia	Accelerated development of alternative supply routes
	Domestic downstream integration requirement	DRC Gabon Indonesia Zambia Guinea Zimbabwe	Established independent producers already benefiting or stand to benefit from gaining global foothold in downstream value chain
	Supply nationalization of strategic commodities	Chile DRC Indonesia Mexico Saudi Arabia Zambia	Partnership with long standing globally leading producers
Export&Import	Bilateral agreements	Canada China DRC EU and UK Indonesia Saudi Arabia	-
Import	Import barriers(tariffs)	US	Shift in domestic project economics, enabling new investments (eg, EGA announced investment in US aluminium smelter)
	Resource development funds	Australia Japan EU&UK US	Boost to project timeline and economics (DFC and EXIM, US Department of War and Department of Energy)
	strategic projects to secure access	Australia Japan EU&UK US	Boost to project timeline and economics
	Development of strategic stocks	Australia Japan EU&UK US China India Japan	Temporary boost to demand

●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전략 변화의 키워드: 안보화, 다변화, 내재화, 블록화, 분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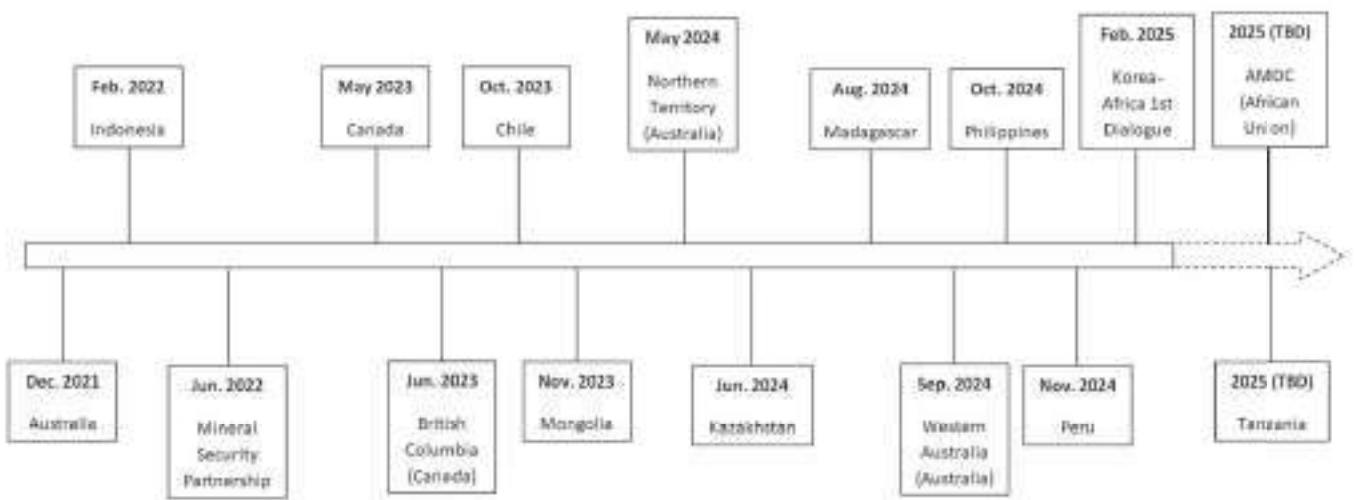
● 각국의 수출 통제 정책 시행 사례

Material	Producer Country	Market Share	Type of Control	Control Timeline
Lithium	Zimbabwe	9%	Export ban on raw ore (Dec 2022), export licensing for base minerals (Jan 2023)	Dec 2022 - Jan 2023
Gallium	China	99%	Export licensing (Jul 2023), export ban to US (Dec 2024)	Jul 2023 - Dec 2024
Germanium	China	74%	Export licensing (Jul 2023), export ban to US (Dec 2024)	Jul 2023 - Dec 2024
Antimony	China	74%	Export licensing (Sep 2024), export ban to US (Dec 2024)	Sep 2024 - Dec 2024
Rare earths	China	92%	Export reporting (Nov 2023-Oct 2025), export licensing on medium/heavy rare earths (Apr, Sep 2025)	Nov 2023 - Sep 2025
Graphite	China	98%	Export licensing (Dec 2023)	Dec 2023
Cobalt	DRC	68%	4-month export halt (Feb 2025)	Feb 2025
Tungsten	China	44%	Export licensing (Feb 2025)	Feb 2025
Bismuth	China	80%	Export licensing (Feb 2025)	Feb 2025
Indium	China	70%	Export licensing (Feb 2025)	Feb 2025
Tellurium	China	77%	Export licensing (Feb 2025)	Feb 2025
Molybdenum	China	81%	Export licensing (Feb 2025)	Feb 2025
Nickel	Philippines	9%	Proposed ban on raw mineral exports (Feb 2025)	Feb 2025

자료: IEA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전략 변화의 키워드: 안보화, 다변화, 내재화, 블록화, 분절화

● 한국의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대외협력 연혁



자료: Raphael Deberdt · Hyeyoon Park(2026), Securing critical minerals supplies in the context of a mineral poor country: reviewing South Kore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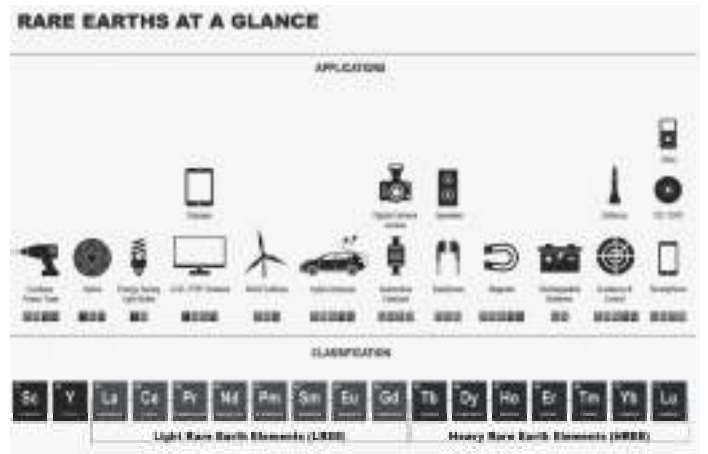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핵심광물의 글로벌 중요성 확대 배경 : 과거에 비해 '핵심광물'을 사용하는 산업의 부상

● 친환경산업과 핵심광물 수요 변화 현황



● 희토류 사용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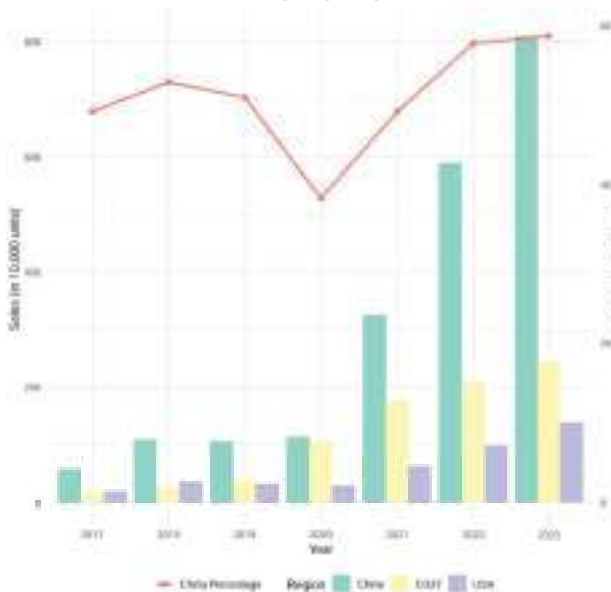


자료: IEA, Mineral requirements for clean energy transitions
<https://cdream.org/rare-earth-applications/>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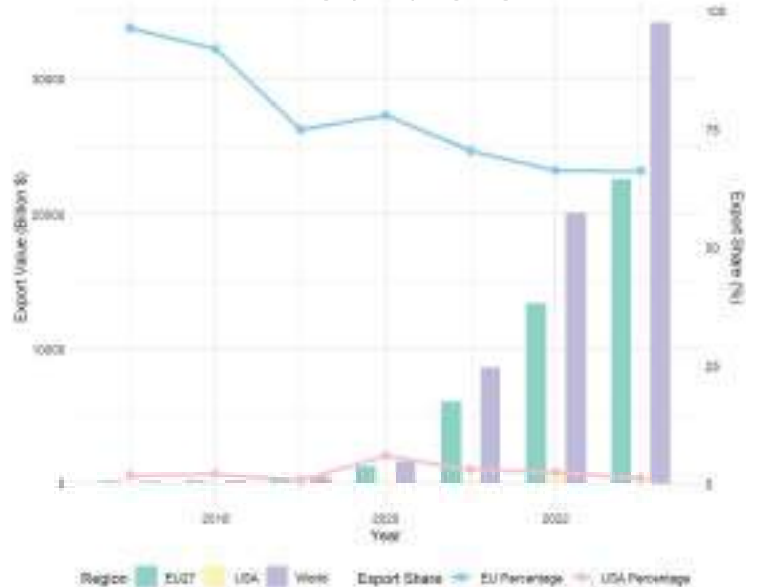
● 핵심광물의 글로벌 중요성 확대 배경 : 과거에 비해 '핵심광물'을 사용하는 산업의 부상

● 글로벌 EV생산량 현황



자료: 중국해관 Raw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중국 EV 수출량 현황



자료: UNCOMTRADE Raw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주요 선행연구

제목	이름 및 소속	주요내용
공급망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방법론 연구: 핵심광물에 대한 적용	김영귀·최원석·조성훈·이현진·정민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공급망 분절화는 무역집중도 상승과 정책적 장벽 확대를 통해 핵심광물의 가격·생산·무역구조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함. ·DID, 이벤트 스터디, 투입산출 및 CGE 모형 등을 활용해 이러한 충격의 산업·거시·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정량분석. ·핵심광물 사례 적용 결과, 공급망 재편은 생산비 상승과 산업구조 조정을 유발하며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시사.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전략과 시사점	김주혜·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중국은 전략자원 지정, 생산·수출 통제, 국유기업 중심 구조 개편 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통제력과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 ·채굴-정련-가공 전 단계의 수직계열화와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공급망 주도권을 공고히 함. ·이에 따라 주요국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비축, 기술 자립 강화 등 대응 전략을 병행할 필요성 제기.
Securing critical minerals supplies in the context of a mineral poor country: reviewing South Kore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Raphael Deberdt · Hyeyoon Park Mineral Economics(2026)	·저탄소·방위산업 강국임에도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한국의 핵심광물 전략 분석. ·한국은 중국과의 완전한 탈동조화 대신, 일부 의존을 유지하면서 아시아·아프리카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현실적 접근을 취함. ·자원빈국이면서 기술·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전략 모델을 제시. ·추가연구과제 제시: 중국과의 관계 속 전략적 균형 분석, 공공-민간 협력 구조 평가, 신형 공급원(아프리카·심해채굴 등)의 지속가능성 연구, 자원빈국 전략의 비교연구 확대.

3.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현황

● 국가별 핵심광물 지정 내역은 각기 상이한 상태

국가	정의	발표자료	지정개수
한국	가격·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 및 경제에 파급효과가 커서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	2023 핵심광물 안보전략	33
미국	경제 및 국방에 필수적인 (광물)자원 수급 위험이 있는 비연료 광물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	2020 Energy Act	60*
호주	기술,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며 수급 위험이 존재하는 (비)금속 요소	Critical Minerals Strategy 2022	26
EU	유럽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공급 리스크가 있는 원자재	Critical Raw Materials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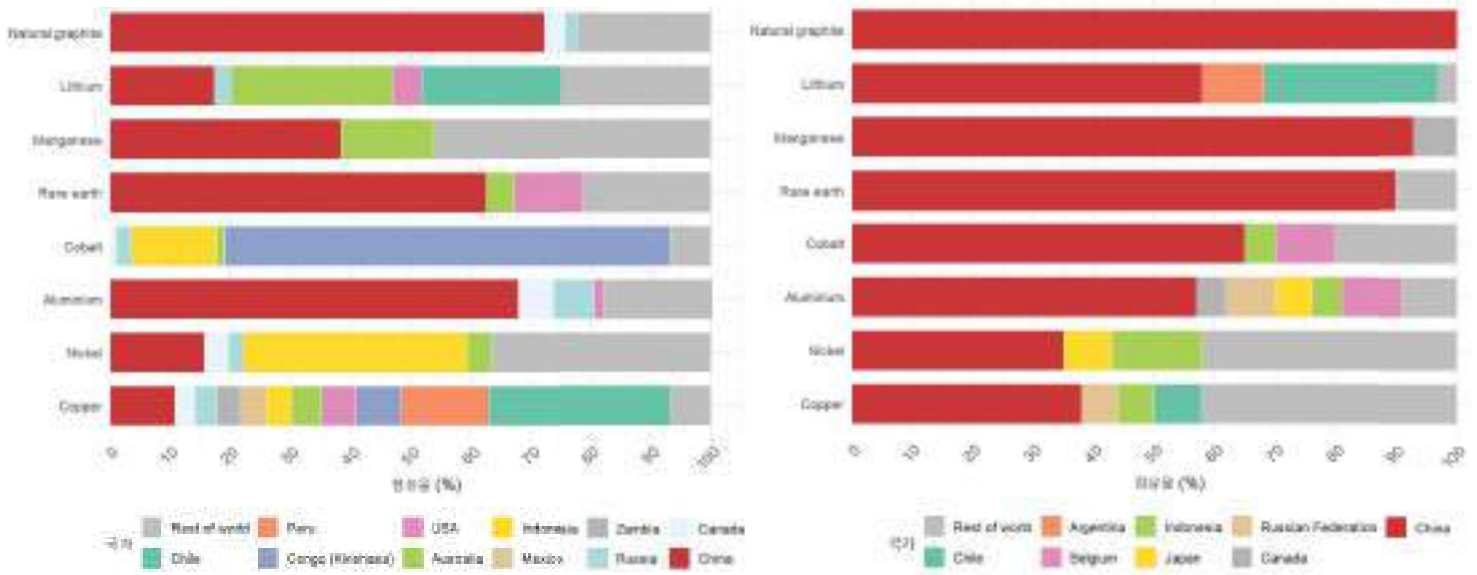
한미 공통 지정: 안티모니(Antimony), 베릴륨(Beryllium), 비스무트(Bismuth), **코발트(Cobalt)**, 갈륨(Gallium), 게르마늄(Germanium), 하프늄(Hafnium), 인듐(Indium), **리튬(Lithium)**, 마그네슘(Magnesium), 나이오븀(Niobium), 탄탈럼(Tantalum), 티타늄(Titanium), 텅스텐(Tungsten), 바나듐(Vanadium), **망간(Manganese)**, **니켈(Nickel)**, **희토류(REE)** 등을 포함, 총 25종

*2022년 당시 50개에서 2025년 60개로 업데이트

자료: 김민주·서창배(2023), 중국의 핵심광물 자원 확보전략과 정치·경제적 의미 분석; 리튬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3.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현황

● 글로벌 생산량 현황 (생산량 기준 → 정제련 기준)



자료: UNCTAD Digital economy report 2024, USGS 2026 Raw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부산의 주요 산업과 핵심광물 연관성

● 현재 부산의 주요산업과 핵심광물의 활용

산업	현황	핵심광물 연관도
조선기자재	대형조선소 및 수천 개의 선박 부품 및 기자재 업체 밀집	형석, 흑연, 코크스, 갈륨, 망간, 크롬
해운항만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의 약 75% 이상을 처리하는 세계적인 물류 거점	-
자동차부품	부산 제조 분야의 실질적인 고용과 매출을 담당하는 핵심 축	리튬, 몰리브덴, 텅스텐, 희토류(영구자석), 니켈
기계금속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정밀 가공업체들이 밀집	텅스텐, 티타늄, 몰리브덴

※ 기존 부산의 주요 산업: 주로 철강 분야에 핵심광물이 제한적으로 영향 ◀ 조선기자재 일부 및 자동차 부품에 주로 활용

자료: KIEP(2025), 공급망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방법론 연구: 핵심광물에 대한 적용 일부 활용

4. 부산의 주요 산업과 핵심광물 연관성

● 부산의 미래전략 9대 산업 中 핵심광물과 연관관계가 큰 산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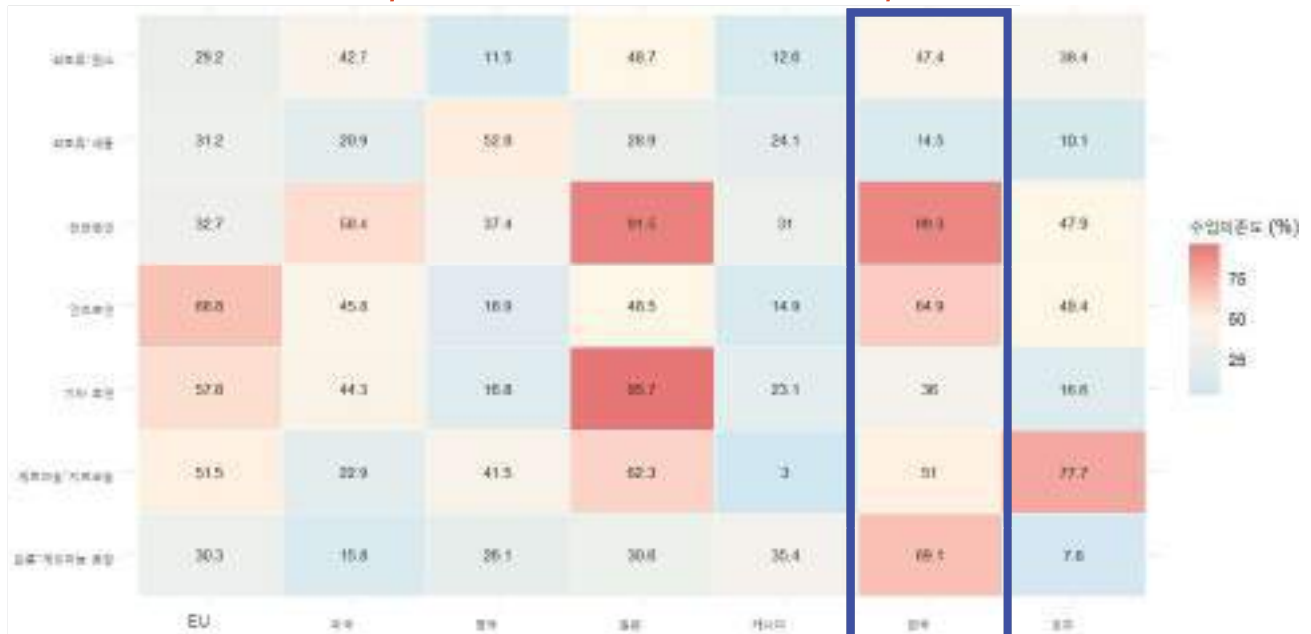
자료: 부산광역시 웹사이트

※ 부산시 미래전략산업에서 핵심광물이 주로 활용되는 산업군

- 1) 디지털: 갈륨, 게르마늄, 희토류 등
- 2) 미래 모빌리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등
- 3) 에너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 4) 융합부품소재: 희토류, 갈륨, 리튬 등

4. 부산의 주요 산업과 핵심광물 연관성

● 對중국에 대한 의존도: 한국은 흑연류, 갈륨 게르마늄 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다원화 고려가 필요



자료: KIEP(2025), 공급망 본질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방법론 연구: 핵심광물에 대한 적용 raw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5. 결론 및 시사점



6. 참고문헌

김영귀·최원석·조성훈·이현진·정민철(2025), 공급망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방법론 연구: 핵심광물에 대한 적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주혜·양평섭(2025),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민주·서창배(2023), 중국의 핵심광물 자원 확보전략과 정치·경제적 의미 분석: 리튬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한중관계연구.
UNCTAD(2024), Digital economy report 2024.
Raphael Deberdt · Hyeyoon Park(2026), Securing critical minerals supplies in the context of a mineral poor country: reviewing South Kore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Mineral Economics.
IEA(2025),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McKinsey&Company(2025), Global Materials Perspective 2025.
IEA(2022), Mineral Requirements for Clean Energy Transitions.
부산광역시 웹사이트, <https://www.busan.go.kr/index>
중국해관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v.cn/>
UNCOMTRADE 웹사이트, <https://comtradeplus.un.org/>
JCDREAM 웹사이트, <https://jcdream.org/>

감사합니다!

국립부경대학교(PKNU) 중국학과 서창배,
김민주 (eveai02@naver.com)

THE END

[한국유럽학회 춘계학술대회] 2026. 3. 27.

불확실성 시대, 부산의 SMR 산업 육성과 로컬전략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국제전문대학원 김현정

목차

01

문제제기: 왜 지금 SMR인가?

02

글로벌 SMR 경쟁 지형과 기술 주권

03

한국형 SMR의 지향점

04

결론 및 정책제언: 부산의 전략



Part 1.

문제제기: 왜 지금 SMR인가?

Part 1. 문제제기: 왜 지금 SMR인가?

[현상] 에너지-데이터 복합체의 탄생: 빅테크는 왜 원전을 원하는가?

- SMR은 이제 '발전소'를 넘어 AI 구동을 위한 '인프라 화폐'
- 기존 원전이 국가 주도의 전력망(Grid) 공급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민간 플랫폼 자본(빅테크)이 직접 에너지를 조달하는 '수평적 분업 모델'로 전환 중.
- 사례:
 - Microsoft: TMI(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 재가동 전력을 20년간 독점 구매하는 PPA 체결.
 - Amazon: SMR 개발사 'X-energy'에 투자 및 데이터센터 인근 SMR 건설 추진.
 - Google: 'Kairos Power'와 SMR 전력 구매 계약 체결.
- AI의 폭발적 전력 수요를 감당할 '무탄소 기저전원'으로서 SMR → 에너지-데이터 복합체(Energy-Data Complex) 출현

<표 1>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수직적 통합 vs. 수평적 분업(에너지-데이터 복합체)

구분	전통적 원자력 체계 (수직적 통합)	에너지-데이터 복합체 (수평적 분업)
중심 행위자	국가(정부) 및 국영 기업	빅테크(플랫폼 자본) 및 민간 벤처
네트워크 논리	국가 안보 및 공공 서비스	연산 권력 확보 및 데이터 인프라 최적화
자본 및 수요	공공 예산 / 불확정 다수 수용가	빅테크 유보금 / 초기대 데이터센터(확정 수요)
산업 구조	IDM 모델 (설계-건설-운영 통합)	반도체 모델 (팹리스-아웃리 분리)
규제 성격	지시-통제형 규제 (Command-and-Control)	수요자 맞춤형-성능 기반 규제 (Tailored)

출처: 저자 작성.

Part 1. 문제제기: 왜 지금 SMR인가?

[담론 에너지 지정학의 패러다임 변화: 자원에서 체제로]

- 21세기 에너지 패권은 석유 매장량이 아니라 '누가 기술 표준을 쥐느냐'
- 패러다임의 이동:
 - 과거 (Resource Politics): 화석 연료(석유/가스)의 지리적 확보 및 수송로 장악 경쟁.
 - 현재 (Technological Regime Competition): SMR-AI 융합을 통한 '기술체제(Technological Regime)' 선점 경쟁.
- 기술 주권의 핵심:
 - 단순한 기계 수출이 아님. SMR 운영 OS, 실증 데이터, 안전 규범을 패키지로 하여 타국에 심는 '인프라 주권'의 확장.
 - 한번 도입되면 60년 이상 해당 국가의 기술 생태계를 종속시키는 '제도적 잠금(Lock-in)' 효과 유발

<표 3> SMR-AI 융합을 둘러싼 국가별 전략 분석축

구분	핵심 내용	주요 비교 질문
기술체제 축 (Technological System)	과 세력이 구축하는 SMR-AI 기술 아키텍처의 구조적 특징. 개방형(open) 혹은 폐쇄형(closed), 검증 중심(validation-oriented) 혹은 실증 중심(proof-oriented) 접근 여부 등 구분	- AI가 SMR 운영에 어떻게 통합되는가? - 기술개발이 우선순위는 안전성인가, 실증성과 자율성인가?
거버넌스 축 (Governance Logic)	기술 운영 및 데이터 권력에서 국가·시장·국제기구 및 역할 분담. 규제체계와 산업의 자율성이 어떤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평가	- 규제기관이 AI 검증에 주도하는가, 산업이 자율적으로 통제하는가? - 데이터 투명성과 검증 절차가 확보되어 있는가?
규범·전략 축 (Normative Strategy)	기술체제가 국가전략 및 외교정책과 결합되는 방식. 개방형 규범 수립 모델과 폐쇄형 자국 통제 모델의 대비를 분석	- 기술은 민주적 인력 구축의 수단인가, 주권의 통제가 도구인가? - 기술표준과 외교 전략이 어떻게 연계되는가?

출처: 필자 정리

Part 1. 문제제기: 왜 지금 SMR인가?

• SMR 기술과 시의 결합: 분산형 패권의 기술적 기반

<표 3> SMR-AI 융합 단계별 기술 적용 수준 및 구현 범위

구분	주요 기술 요소	기술 내용	구현 단계(TRL)	적용 예시	지정학적 함의
1단계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SMR 시스템 전주기(설계-운영-유지보수)의 가상 모델링을 통해 실시간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피드백 구현	TRL 7-8 (실증 단계)	미국 NuScale, 영국 Rolls-Royce SMR	현재 표준화 및 기술 주권 확보
2단계	예측정비 (Predictive Maintenance)	센서·AI 알고리즘 기반으로 부품 수명 및 이상 징후를 조기 예측	TRL 6-8 (운영단계 도입 중)	한국 i-SMR, 캐나다 ARC Clean Technology	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
3단계	사이버보안 (Cybersecurity)	AI 기반 침입 탐지, 이상 징후 대응, 데이터 무결성 검증	TRL 5-7 (적용 확산 중)	OECD-NEA 공동 프로젝트, EU SMR 협력망	데이터 주권 및 기술동맹 강화
4단계	운영 최적화 (Operational Optimization)	AI가 운전 데이터를 분석하여 출력, 연료주기, 냉각 효율 최적화	TRL 6-8 (실증-상용화 단계)	프랑스 EDF SMR, 일본 JAEA 협력 연구	AI 통합 운전체계로의 전환
5단계	자율운전·안전관리 (Autonomous Operation)	AI가 운영 의사결정, 위험대응, 비상상황 시나리오를 실시간 수행	TRL 4-5 (개발·시험 단계)	IAEA AI-NPP 프로젝트(2023)	기술체제 간 신뢰화 규범전쟁 촉발

- SMR: 모듈화(modularization) & 소형화(scaling down)를 통해 생산·운영의 분산(distributed operation)을 가능하게 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
 - 건설 기간 단축
 - 비용 효율성
 - 지역별 분산 배치
 - 안전성 강화 등
- 기존 원자력 공급망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
- 중양집중형 에너지 체제 → '분산형 패권 (distributed hegemony)'
- SMR-AI 융합은 에너지 생산의 지역적 분산과 기술 통제의 글로벌 집중을 동시에 유발
- 이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모두에게 전략적 딜레마
 - 해양세력: AI 기반 글로벌 표준 통해 기술적 개방성 추구, 공급망 취약성 감소
 - 대륙세력: 자급적 기술체제를 강화하지만, 국제표준 경쟁에서 고립 위험 감소

Part 1. 문제제기: 왜 지금 SMR인가?

[진단] 불확실성 시대의 3중고(Triple Constraint)와 S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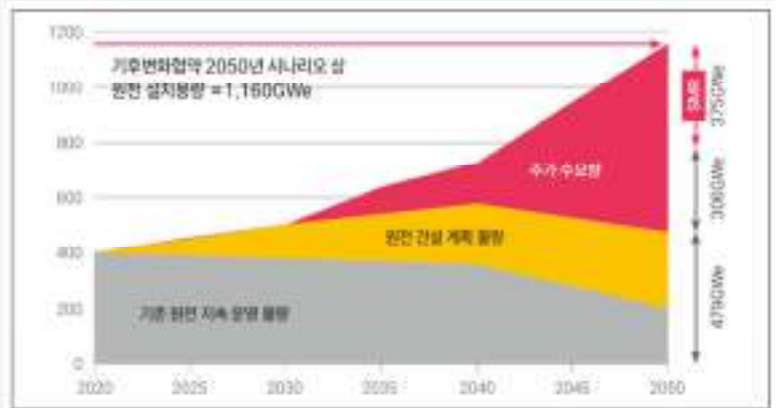
- 기후, 산업, 안보의 교차점에서 SMR은 유일한 전략적 돌파구

1. 기후 위기 (Net-Zero): 간헐성 문제가 있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탄력적 무탄소 전원'의 절실함.

2. AI 전력 수요 (Energy Crunch): 생성형 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 → 기존 계통망의 한계를 돌파할 '분산형 전원' 필요.

3. 안보 위기 (Geopolitics): 에너지 자립화 및 공급망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화·모듈화된 독립 에너지원 확보

- SMR의 위치: 이 세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다목적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 재정의



<https://www.pwc.com/kr/ko/insights/industry-focus/smr-guidebook.html>

Part 2.

글로벌 SMR 경쟁 지형과 기술 주권

Part 2. 글로벌 SMR 경쟁 지형과 기술 주권

[구도] 해양세력 vs 대륙세력: SMR-AI 전략의 이분법

- SMR 경쟁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술체제 (Technological Regime)'의 충돌
- 해양세력 (미국·영국·일본): '개방-검증-규범' 모델
 - 특징: 민간 자본 주도, 국제적 안전 규범 강조, 투명한 검증 절차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AI-SMR' 패키지 수출.
 - 목표: 글로벌 민주주의 가치사슬 내에서 표준을 설정하고 규범적 영향력 확대.
- 대륙세력 (중국·러시아): '폐쇄-실증-주권' 모델
 - 특징: 국가 주도(SOE) 강력한 재정 지원, 자국 내 빠른 실증을 통한 '운전 데이터' 독점, 수직 통합형 공급망.
 - 목표: 실전 배치 속도를 무기로 개발도상국 등에 인프라 영향력을 직접 투사(일대일로 연계).

<표 3>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기술체제 유형

구분	기술체제 유형	거버넌스 구조	규범 전략	대표국
해양세력형 (Open-Validation-Normative Export Model)	개방형 기술 아키텍처, 국제 검증 절차 중시	다자 규범 중심, 민간-국제기구 협력	기술표준의 외교적 수출, 투명성·신뢰성 강조	미국, 영국, 일본
대륙세력형 (Closed-Pro of-Sovereign Control Model)	폐쇄형 기술체제, 실증 중심의 자율운전 추구	국가 독점형, 중앙집중적 통제	기술 자립 및 디지털 주권 확보, 외부 의존 최소화	중국, 러시아

Part 2. 해양세력-대륙세력 구도와 기술지정학의 결합

• 해양세력-대륙세력 구도와 기술지정학의 결합: 전통적 세력구도와 공간적 권력 개념

해양세력: 기술개방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영향력 확장 중시

- Mahan 『해양력의 역사적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해양 교통로의 통제가 곧 국가의 번영과 세계 패권의 원천
- 해군력, 상업항로, 해상무역의 결합을 통해 해양세력이 개방성과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 형성

대륙세력: 자원 자급과 폐쇄형 공급망 구축을 기반으로 전략적 자율성 추구

- Mackinder 1904년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에서 유라시아의 심장지대(Heartland)를 지배하는 세력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 대륙세력이 자원과 영토에 기반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

전통적 해양세력-대륙세력 이론은 물리적 영토 경쟁을 넘어 기술체제와 네트워크 권력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새로운 이론적 해석틀로 재구성

- 정보기술·에너지혁신·데이터 네트워크의 확산은 권력의 공간적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
- 기술과 에너지가 결합한 현대의 패권은 더 이상 군사력의 지리적 확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기술체제(techno-regime)의 범위와 상호연결성에 의해 결정
- 결국, 21세기 기술·에너지 융합이 공간 권력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

Part 2. 해양세력-대륙세력 구도와 기술지정학의 결합

· 기술지정학의 부상과 에너지-데이터 패권

- ‘기술지정학(technological geopolitics)’ : 전통적 공간지정학이 영토를 중심으로 권력 관계를 이해했던 틀을, 기술과 데이터의 통제권이라는 새로운 권력 자원으로 확장하는 접근
 - Ruggie(1993) 근대 국제질서를 ‘영토성(territoriality)’ 이라는 조직원리로 규정
 - 오늘날 국가의 영향력은 영토를 넘어 기술표준, 알고리즘, 공급망이라는 비물질적 영역으로 확장해군력, 상업망, 해상무역의 결합을 통해 해양세력이 개방성과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 형성
 - Sovacool(2019) 핵 및 재생에너지 확산이 단순한 자원 이동이 아니라 기술 인프라와 규범의 경쟁으로 바뀌었다고 분석, 에너지 지정학을 기술·정치 복합체로 재정의
 - Yergin(2020) 이를 “에너지와 데이터의 융합된 세계지도(the new map)” 로 묘사, 디지털화된 에너지 체제가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권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강조

 - MR-AI 융합은 해양세력-대륙세력 구도를 재구성하는 핵심 기제
 - 해양세력은 기술표준을 개방적으로 확산시켜 연합형 공급망을 구축
 - 대륙세력은 기술 자립과 핵연료 통제를 통해 폐쇄적 구조를 강화
-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기술과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가치체계의 충돌을 의미

Part 2. 해양세력-대륙세력 구도와 기술지정학의 결합

SMR-AI 융합의 지정학적 의미: 기술체제의 경쟁 ⇔ 가치체제의 경쟁

- SMR-AI 기술은 권력의 공간적 분산과 디지털 집중을 초래
- SMR-AI 융합은 물리적 권력의 분산과 디지털 권력의 집중이라는 이중구조를 형성
- 소형모듈원전은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단위에서 전력 공급을 가능케 하면서, 에너지 주권의 분권화(decentralization) 촉진
- 그러나 동시에 SMR의 운영·안전·검증을 담당하는 AI 시스템은 데이터·알고리즘·클라우드 인프라를 통제하는 소수 기술 강국(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집중. 이로 인해 에너지 생산은 지역화되지만, 기술 의존 구조는 오히려 심화되어, ‘물리적 분산-디지털 집중’ 의 역설적 권력 구조

- SMR-AI 체제는 기술 네트워크를 통한 동맹 재편 촉구
- 해양세력: AI 기반 원전 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앞세워 기술표준 연합(standard alliance) 강화. 미국, 영국, 일본은 AUKUS Clean Energy Partnership과 OECD-NEA를 중심으로 협력, 기술 규제와 사이버보안 기준을 공유. 이들은 ‘기술을 통한 신뢰(techno-trust)’ 를 핵심 가치로 설정해, AI-SMR 시스템의 상호인용(Interoperability)을 국제동맹의 매개로 활용
- 대륙세력(중국, 러시아): 자율적 기술생태계 구축에 집중. 자국 중심의 AI 데이터센터 및 폐쇄형 클라우드 체계를 운영. 특히 중국은 ‘디지털 원자력 주권(digital nuclear sovereignty)’ 개념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여, AI 알고리즘과 운전데이터의 외부 공유를 제한. 이러한 상반된 기술 연합 구조는 전통적 군사·경제 동맹이 아닌 ‘기술기반 동맹(techno-alignment)’ 의 시대로의 이행 예고

- SMR-AI 기술은 에너지 규범의 재구성과 제도 경쟁 초래
- SMR-AI 융합은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의 규범 체계를 재구성
- IAEA와 OECD-NEA는 2023년부터 ‘AI 신뢰성·투명성 원칙’ 을 중심으로 한 공동 규범 논의를 추진하며, AI 운영과 안전성 검증에 관한 국제 표준을 마련
- 해양세력은 데이터 공개와 제3자 검증을 강조하는 반면, 대륙세력은 자국 규제기관 중심의 폐쇄적 검증체계를 유지.
-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기술표준의 차이를 넘어, AI 거버넌스의 철학—즉, 투명성 대 통제, 개방성 대 주권—의 충돌을 반영

Part 2. 글로벌 SMR 경쟁 지형과 기술 주권

[동례] '실증의 권력화' 데이터가 만드는 인프라 주권

- 누가 먼저 짓느냐가 왜 중요한가? 실증 데이터는 곧 미래의 권력
- 중국 링롱 1호(ACP100) 사례:
 - 세계 최초의 육상용 상용 SMR 실증을 통해 방대한 '운전 및 안전 데이터' 선점.
 - 실증의 권력화: 이론적 안전성보다 '실제 가동 데이터'를 가진 쪽이 차세대 원전 시장의 실질적 표준 (De Facto Standard)을 장악하게 됨.
- 인프라 주권의 확장:
 -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 패키지는 도입국의 에너지 의존도를 넘어, 디지털 관리 시스템(AI)까지 종속시키는 결과 초래.

<표 5> '실증의 권력화'

분석 차원	핵심 내용	중국 사례
제도적 구조	빠른 실증을 가능케 하는 승인 체계	국가에너지국(NEA) 주도의 집중적 지원
자본 동원	국유기업 중심의 대규모 자금 투입	CNNC 등 국유기업의 직접 투자 및 지배력
공급망 통제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표준화	국산화를 일정 비율 이상 달성 (기술 자립)
인프라 외교	에너지 데이터 패키지 수출 전략	일대일로(BRI) 연계 및 해수담수화·데이터센터 복합 수출

Part 2. 글로벌 SMR 경쟁 지형과 기술 주권

[동례] '실증의 권력화' 데이터가 만드는 인프라 주권

<표 6> 링롱 1호(ACP100) 주요 건설 마일스톤 및 실증 현황

구분	주요 단계(Milestones)	수행 일자 / 상태	기술적 전략적 관의
작공	세계 최초 육상 상용용 SMR 작공	2021년 7월	SMR 실증 경쟁의 본격화 신호탄
모듈 설치	원자로 핵심 모듈(Lift-in)	2023년 8월 10일	모듈화 설계의 실효성 입증 (공정 제어, 현장 조립)
구조 완성	외동(Outer Dome) 설치 완료	2024년 2월 6일	주요 도목 공정 완료 및 내부 설비 검증 단계 진입
제어 제어	수 제어실(Main Control Room) 가동	2024년 8월 21일	원전의 '두뇌' 가동을 통한 통합 제어 기반 마련
핵심 부품	제1호 주열교환기(Main Pump) 인수	2024년 4월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공급망 통제력 확보
기준 검증	냉각기능시험(Cold Test) 완료	2025년 10월 16일	고압 하에에서의 계통 및 구성 및 설계성 검증 완료
최종 검증	열대성능시험(Hot Test)	2026년 3월 현재 진행 중	상업 운전 전 '역중 시험, 설계 가동 환경 모의'
목표	상업운전(Commercial Operation)	2026년 내(예정)	세계 최초 3세대 SMR 상업 운전 달성

출처: 中国核工业集团公司(CAEC), "中核ACP100成为全球首个通过IAEA安全审查的小型堆技术," 2018.04.26; Linglong One(ACP100) 자료 모델링 및 제작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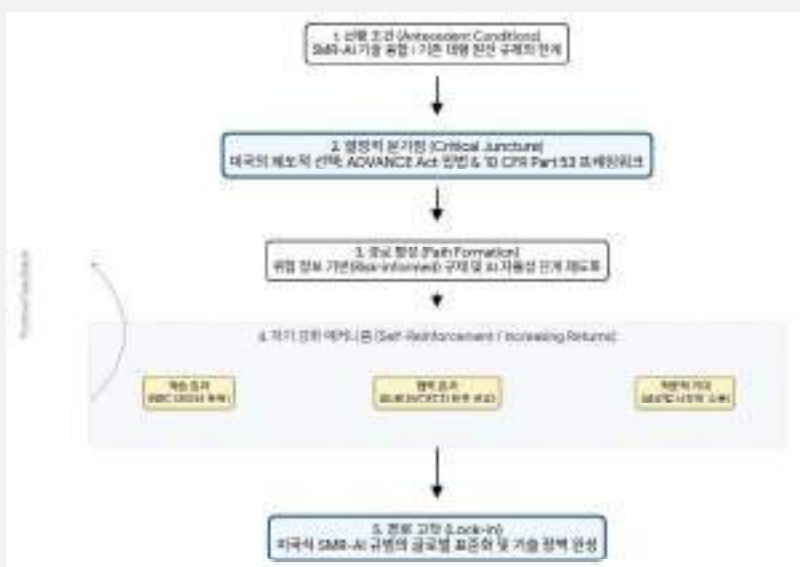
노명	COO 제출년도	현상	핵심내용 (기술적 혁신, 주요 추진 주요 사항)
베링가우 (BWR)	2004	표준 설계 인증	(2024.07) 제1호 간핵유압기반형에 필요한 SMR 관련 특허 인정
Muskegon VOYGR	2009	미국 원자력위원회	(2023.10) SMR용 SMR용 핵연료 FEED 2단계 착수 (2023.10) Standard Power의 2세대 SMR 설계 및 공급 계약
TerraPower의 Natrium	2008	미국: Pre-Licensing	(2024.06) Wyoming 원자력 발전소 착공 (2023.12) UAE (NEC) 용자로 공동 개발 MOU 체결
WECC의 eVinci	2007	미국: Pre-Licensing	(2023.10) 미국 원자력위원회 2026년 실증 예정 (2023.11) 캐나다 Saskatchewan에 도입 위해 제안서 검토 진행
GE Hitachi BWRX-100	2008	미국: Pre-Licensing	(2022.10) 캐나다 Ontario SMR 프로젝트 진행 (2023.02) 폴란드 및 에스토니아에서 도입 계획 발표
CNNC의 ACP100	2006	중국: 인허가 완료	(2021~) 중국 원자력 기업 Changjiang 원전 부지 실증용 건설중

<https://www.pwc.com/kr/ko/insights/industry-focus/smr-guidebook.html>

Part 2. 글로벌 SMR 경쟁 지형과 기술 주권

7. 규제 거버넌스와 제도적 잠김(Lock-in)

- 한번 결정된 설계 인증은 60년의 기술 경로 결정
- 미국 NRC의 표준 설계 인증(Standard Design Certification):
 - NuScale 사례 분석: 규제 기관의 승인은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 특정 기술을 '기준'으로 고착시키는 제도적 장치.
-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
 - 초기 설계 단계에서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표준을 만든 기술은 후발 주자가 넘기 힘든 '진입 장벽'을 형성.
 - 규제는 기술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특정 기술 경로를 가속화하고 타 기술을 배제하는 '정치경제적 필드'임.



Part 2. 글로벌 SMR 경쟁 지형과 기술 주권

7. 규제 거버넌스와 제도적 잠김(Lock-in)

<표 7> SMR-AI 시스템에 대한 주요 규제 검증 요소

규제 요소	내용	규제 목적
검증가능성 (Verifiability)	AI 기반 제어 시스템의 알고리즘과 의사결정 과정이 규제 기관에 의해 검증 가능해야 함	시스템 신뢰성 확보
설명가능성 (Explainability)	AI가 수행한 판단 과정이 인간 운영자와 규제기관에 의해 설명될 수 있어야 함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가능
자율성단계구분 (Autonomy Levels)	AI가 수행하는 기능을 자동화 보조, 제한적 자율 운영, 완전 자율 운영 등 단계적으로 구분	안전성 기준 설정
인간개입가능성 (Human-in-the-loop)	AI 제어시스템이 인간 운영자의 감독 및 개입을 가능하게 설계	사고 대응 능력 유지
시스템 검증 및 테스트	AI 알고리즘의 안전성 검증 및 시뮬레이션 테스트 수행	규제 승인 기준 충족

출처: U.S. NRC(2020, 2024) 토대로 필자 재구성.

<표 8> NuScale VOYGR 설계인증 신청 및 NRC 검토 절차

단계	주요 내용	NRC 역할	결과
설계 인증 신청 (2016)	NuScale PowerGen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 Application 제출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절차 개시	공식 검토 절차 시작
기술 검토 단계	설계 구조, 안전 시스템, 제어 시스템 평가	기술적 적합성 및 규제 기준 충족 여부 검토	기술 검토 진행
추가 검토 단계 (RAI)	NRC가 추가 기술 자료 및 설계 정보 요청	설계 세부 사항 검증 및 추가 자료 평가	설계 수정 및 보완
Safety Evaluation Report 작성	설계의 안전성 및 규제 적합성 종합 평가	설계 승인 가능 여부 판단	SER 발행
설계 인증 승인	NRC가 설계 인증 승인	규제 기준 충족 설계로 공식 승인	Standard-Design 확정

출처: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2020, 2025a)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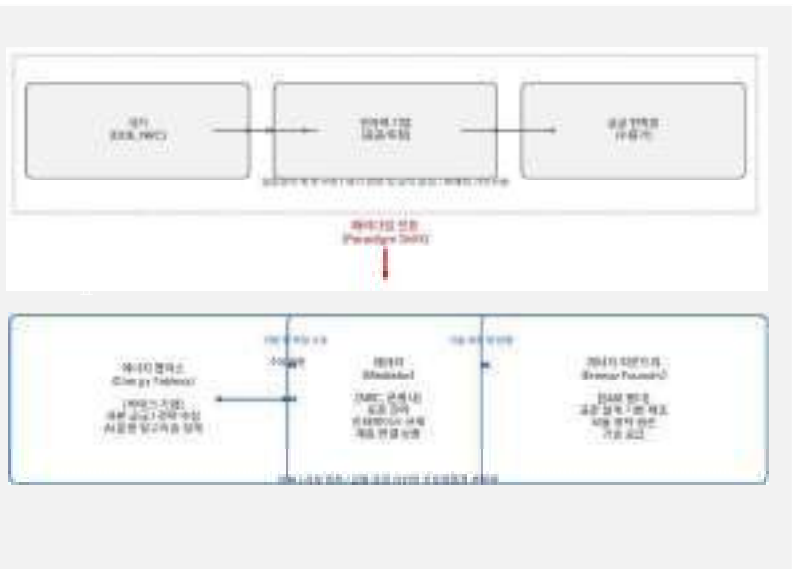
Part 3.

한국형 SMR의 지향점

Part 3. 한국형 SMR의 지향점

[전환] i-SMR의 지향점: '원전 수출' 에서 '에너지 플랫폼' 으로

- 한국형 SMR은 단순한 하드웨어 판매가 아니라, 디지털과 결합된 '에너지 운영 체제'를 파는 플랫폼 사업이 되어야 함
- 수직적 통합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 과거: 국가 주도(정부 예산) + 한수원 중심의 수직 계열화 모델.
 - 미래: 민간 플랫폼 자본(빅테크) + 지역 특화 공급망이 결합된 '에너지 파운드리' 모델.
- i-SMR의 차별화 전략:
 - Smart-Integrated: 설계 단계부터 AI 기반 자율 운전 및 원격 유지보수 시스템을 내장하여 운영 인력 부담 최소화.
 - Modularization: 공장 제작형 모듈 방식을 극대화하여 건설 기간 단축 및 자본 리스크 경감(빅테크의 빠른 투자 회수 요구에 부응).



Part 3. 한국형 SMR의 지향점

[전략 기술 주권의 확산 '표준 설계' 와 '데이터권' 확보]

- 하이테크 인프라 경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누가 표준을 쓰게 하느냐'
- 한국형 표준 설계(Standard Design)의 공고화:
 - 미국 NRC 인증 사례처럼, 한국의 i-SMR 설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준거 모델(Reference Model)'로 작동하도록 규제 외교 강화.
 - 제도적 잠김(Lock-in) 유도: 한국형 SMR을 도입한 국가가 향후 60년간 한국의 기술 생태계와 부품 공급망에 머물게 하는 제도적 설계.
- 실증 데이터의 자산화:
 - 중국의 속도전을 벤치마킹하되,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승부.
 - 운전 데이터를 축적하여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이를 다시 기술 패키지에 포함해 수출하는 선순환 구조.

노형	국내기업 투자 현황 (10억 원)	사업 참여 현황
테라헤르	SK(주) SK 이노베이션 2억 5000만	• (SK) 국내외 동남아 등에서 상용화 사업 공동 추진 계획 • (HD 인조계) 용융된 원자로 공동 개발 위한 기술 교류
	HD 한국프랜차이즈 3000만	
뉴스케일 파워	두산에너지솔루션 1억 4000만	• (두산에너지솔루션) 운영 제작상 검토 참여, 기자재 제작 준비 중 • (삼성물산) SMR 활용 수소 생산 연구 및 실증화 연구 참여 • (GS 에너지) 발전 생산 사업 타당성 검토
	삼성물산 7000만	
	GS에너지 4000만	
엑스에너지	두산에너지솔루션 500만	• (두산에너지솔루션) 후기 제작설계 협력 계약 체결, 후기가 제작방안 및 설계 최적화 방안 연구, 시제품 제작 등 수행 중 • (DL 이앤씨) 글로벌 SMR 플랫폼 사업 개발 추진 중
	DL 이앤씨 2000만	

<https://www.pwc.com/kr/ko/insights/industry-focus/smr-guidebook.html>

Part 3. 한국형 SMR의 지향점

[연결] i-SMR 생태계와 지자체의 결합(Bridge)

산업 179

지자체는 '유치전' 건설사는 '기술전'... SMR 주도권 다툼 후끈

- 한국형 SMR의 성공은 실험실이 아닌 '실증 거점(로컬)'의 역량에 달림
- 테스트베드로서의 지자체:
 - i-SMR의 첫 실증과 보조기기 공급망이 완성되는 장소가 곧 글로벌 SMR의 벤치마크가 됨.
- 부산의 전략적 가치:
 - 이미 구축된 원전 제조 밸류체인 + ICT 인프라 + 해양 물류 거점.
 - "한국형 SMR이라는 OS가 구동되는 하드웨어이자 서버"로서의 부산을 정의.



울주 '확장 전략' vs 영덕 '제도전 전략'... 동해안권 '신규 성장 거점' 부상

구분	울주 '확장 전략' (영덕 발전소)	영덕 '제도전 전략'	지자체 협력 목표(동해안권 등)
기본 논리	기존 원전·산업 인프라 기반 확대	원전 부지권 활용 지역경제 확대	지역 균형발전·신규 산업 유치
인프라 발전	삼거리 원전 건설, 송전망·열대·수소·발전	기존 원전 부지 활용	부지·핵심 장비 등 확보
산업 연계	수소·석유화학·조선 등 에너지 산업과 연계	지역 일자리·인구 유입 효과 부각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 추진
부동산 가치 상승	기존 원전 주변 개발 부담 '완화' 될 것으로 기대	주요산업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산업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적 협력	산업단지 조성 협력	지역소형 제조 기업 유치	지역산업 혁신 협력
지역 효과	한국형 SMR 플랫폼 구축	대규모 산업 유치·내수 확대	신규 성장 거점 확보

Part 4.

결론 및 정책제언: 부산의 전략

Part 4. 결론 및 정책제언: 부산의 전략

[현황]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의 전략적 재해석

- 부산의 3월 착공은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라, 한국형 SMR 공급망의 '제도적 입구'를 선점하는 것
- 전국 최초 SMR 보조기기(BOP) 센터의 가치 (2026.03.09 착공 반영):
 - 창원(주기기)과 차별화된 보조기기(펌프, 밸브, 배관 등) 특화 거점.
 - 실증 데이터의 축적: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데이터와 품질 인증 데이터를 자산화하여 '실증의 권력' 확보.
- 제조업의 서비스화: 단순 제작을 넘어, SMR 부품의 글로벌 표준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 플랫폼'으로서의 부산 정의.

2026년 3월 9일(월) 경기
이 보도자료는 2026년 3월 9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부산 is good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산업팀	과장	이옥진	051-889-3010
유 형 : 행사	팀장	조경아	051-889-3003
사전유무 : 사전합출 <input type="checkbox"/> 사전합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담당자	황득기	051-889-3031
공개여부 : 공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분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 자료 무단, 행사 등에 관해서 표시		

백종민, 'SMR 생애주기 구축형' ...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전국 최초

- 3.9. 10:30 강서구 미음동-센타건설 현장에서 착공식 개최—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등 200여 명 참석
-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온-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세 단계별 3개 과제 중 하나로 부산 선두 착공에 더욱 의미 커
- 시, 센터 구축되면 세계 각국의 삼중압 추진에 선제적 대응하고 독자 개발 노력은 중요-원전기술의 기술 발전 및 경쟁력 확보 등 역할 기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9일) 오전 10시 30분 소형모듈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건립 현장(강서구 미음동 1529-5)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Part 4. 결론 및 정책제언: 부산의 전략

[전략] 부산형 '에너지-데이터 복합 클러스터' (에너지 파운드리)

- 강서의 데이터와 기장의 에너지를 연결하여, 글로벌 빅테크가 찾아오는 '수평적 분업 모델' 완성
- 수평적 분업(Horizontal Specialization)의 모델화:
 - 공급(Upstream): 기장군 중심의 SMR 제작 및 실증 단지
 - 수요(Downstream): 강서구 미음 R&D 단지 및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단지.
- 에너지 파운드리(Energy Foundry) 전략:
 - 부산시가 중개자가 되어 'SMR 전력 + 데이터센터 부지 +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
 - 미국의 아마존-X-energy 사례처럼, 글로벌 플랫폼 자본을 부산의 인프라 네트워크로 포섭.

경남도, SMR 제조거점 구축 속도낸다...지역 원전기업과 간담회

2023.03.04 14:58

이영훈 기자

박원수 기자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 전망 밝"

[경남=연합뉴스] 이영훈 기자 -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으로 제1호 '원전산업 중심지' 경남도가 지역 원전기업과 함께 SMR 제조 거점으로 발돋움할 방안을 모색했다.

박원수 경남지사는 4일 SMR특별법 분야 핵심부품 제작 능력을 보유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호기업에 찾아 지역 원전 기업 16개사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

원전 후기기를 제작하는 후산에너지리퍼를 중심으로 원전기업이 밀집한 경남이 한 단계적으로 SMR 기술개발 생태력과 제조역량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꼽힌다.

SMR 특별법은 5년 단위 SMR 개발 기본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SMR 실증부지-연구개발 특구 지정,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지방연구 양성 등을 포함한다.

Part 4. 결론 및 정책제언: 부산의 전략

[거버넌스] 로컬 규제 샌드박스와 '경로 의존성' 창출

- 부산의 기준이 곧 국가의 표준이 되게 하는 '제도적 설계자'로서의 지자체
- 로컬 가이드라인의 선제적 제시:
 - 중앙정부의 인허가 절차와 별개로, 부산 제작지원센터 내에서 통용되는 'SMR 보조기기 품질 표준' 마련.
- 제도적 잠김(Lock-in) 효과 유도:
 - 부산의 표준을 거친 부품들이 i-SMR의 기본 사양(Reference)으로 채택되게 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수출시 부산 기업들의 공급망 독점권 확보.
- 지자체의 역할 변화: 민원 해결사에서 '미래 산업의 제도적 설계자(Institutional Designer)'로 격상.

기장군, '혁신형 SMR' 유치 본격화...TF 출범·주민 설명회 병행

www.kynews.com (2)

2023.03.04 14:58

최신기사

충수원 로컬 대응 전략 통해, 수도권 중심 특성에 역부족...
고려 인프라 활용 가능 설계부지 검토...2기장 대해 100만 상당 투자

경주시가 본파라 관련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및 정책제언을 위해 지난 2018년 '경주시장 소속'으로 발족한 경주시원안법시안대책위원회(이하 원안법대위)가 최근 4-SMR 1호기 '경주유치추진단'을 결성한다. 이에 법대위 설치 및 운영조례가 규정한 기능범위를 넘어선 행위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관'이 아니라는 문제제기

원전범대위 SMR유치추진단 결성, 조례 규정 위반 '논란'...경주시 "문제없다"

김종석 기자 | 2023.03.28 14:28 | 댓글 0

경주시가 본파라 관련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및 정책제언을 위해 지난 2018년 '경주시장 소속'으로 발족한 경주시원안법시안대책위원회(이하 원안법대위)가 최근 4-SMR 1호기 '경주유치추진단'을 결성한다. 이에 법대위 설치 및 운영조례가 규정한 기능범위를 넘어선 행위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관'이 아니라는 문제제기

Thank You

북극항로와 부산의 대응전략

2026. 03. 27

동아대학교
정성문

목 차

1. 북극항로 소개
2. 북극항로의 기회
3. 부산의 준비와 도전
4. 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대응전략

1. 북극항로 소개(1)

북극항로 vs 남방항로



<항로개요>

항목	남방항로 (Suez Canal Route)	북극항로 (Arctic Sea Route / NSR)
위치	말라카 해협 - 인도양 - 수에즈운하 - 유럽	동북아 - 베링해협 - 러시아 북극해 - 북유럽
거리	부산-로테르담 약 21,000km	부산-로테르담 약 13,000km (최대 약 30~40% 단축 가능)
운항 가능 시기	연중 가능	주로 7~10월 (얼음 해빙기), 일부 쇄빙선은 연중 운항 가능

<경제적 측면>

항목	남방항로	북극항로
운항 시간	약 30~40일	약 20~25일
연료비 절감	길고 혼잡한 항로로 연료소비 많음	항로 단축으로 연료비 30% 이상 절감 가능
운항 통행료	수에즈운하 통과 시 약 50만~100만 달러 발생	운하 통행료 없음 (다만 러시아 북극 항로 사용료 있음)
보험료	중간	높음 (기상 리스크와 인프라 부족으로 보험료 상승)

<리스크 및 제약 요인>

항목	남방항로	북극항로
통제권	국제 해양법 적용 (다수 국가 통과)	러시아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주로 통과
전략적 활용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축	기후 변화로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전략 항로
국제경쟁 및 협력	기존 G7 중심의 해상물류 경쟁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북극 진출국 간 협력 및 경쟁

항목	한국영향	주요위협/제약	관할국가
1. 운항	수출입	북극 항로 개항 시에 대한 영향	러시아
2. 운항	수출입	북극 항로 개항 시에 대한 영향	영국
3. 운항	수출입	북극 항로 개항 시에 대한 영향	미국/캐나다

1. 북극항로 소개(2)

북극항로 필요성

- 기존 남방항로(수에즈 항로) 대비 북동항로를 이용 시 항해 거리와 시간이 절약 가능
 - 기존 남방항로에는 다양한 안보 문제들이 잠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북극항로는 기존 아시아-유럽 항로 대비 운항거리가 짧아 운송시간과 운송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남방항로의 중요한 요충지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항만과 공항의 개발로 세계 최대의 물류거점국가가 되었으며, 금융·에너지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 북극항로 시대에는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산 및 동남권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1. 북극항로 소개(3)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북극이 미국과 러시아 등 국가간 주도권 경쟁으로 더 뜨거워지고 있음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안보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강조
 - 미국 해운력과 쇄빙선 역량 확충, 해양지배력 확보 등을 통해 북극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 (러시아) 2035년 '북극항로 개발 계획' 발표하고 5개 분야 152개 과제 설정, 핵추진 쇄빙선 추가 확보 및 자원 개발 확대 중
 -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 물동량을 2030년 1억 5,000만 톤, 2035년 2억 5천만 톤의 목표 수립
-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반영
 -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히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2025년 말에 이전
 - 25.06월 북극항로 TF 를 출범하고, 북극항로 정책자문위원회 출범(25.09), 북극항로 특별법 국회 발의 중
- (부산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북극항로 개척과 거점항구 조성을 위한 TF 발족 및 연구용역 실시
 - 미래혁신부시장을 단장을 맡은 부산 북극항로 개척 TF를 발족하고, 북극 경제권 시대에 적극 대비(25.02), 북극항로 비전 및 전략 발표(26.02)



1. 북극항로 소개(4)

북극이 가장 '핫한 땅'이 된 이유 (BBC 방송)

- 봄비는 북극: 미국, 캐나다, 덴마크(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8개국)
 - 냉전 이후 북극이사회를 결성하고 북극의 연구 및 환경 보호에 협력, 국가간 평화문제와 기후변화 문제가 공존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러-우 전쟁 직후 핀란드와 스웨덴은 NATO 가입 신청, 러시아와 NATO의 최전선
- 트럼프와 그린란드: 국가안보와 국제안보 측면에서 북극은 중요, 미국은 여전히 그린란드 군사기지 보유 중
- 러시아와 중국: 미국의 북극에서의 강력한 존재감은 러시아와 중국 간의 동반관계에 대응하는 핵심, 러시아도 중국과의 북극협력은 중국이 강력한 '근접 북극 국가'로 행동할 명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계하는 중
- 녹아내리는 북극: 260만제곱킬로미터(아르헨티나 면적) 해빙 감소, 잠재적 항로가 확대, 수에즈 운하 우회로, 풍부한 자원(미발견 가스의 30%, 석유의 13% 매장, 그린란드에 희토류 등 광물자원도 풍부)



2. 북극항로의 기회(1)

새로운 길, 새로운 문명: 북극항로는 우리나라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2. 북극항로의 기회(2)

러시아의 동진과 한러 상생 협력 기회

- (북극항로 실적) 2024년 북극항로 경유 물동량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307만 톤을 기록했으며, 총 97회(화물 56회, 공선 41회)의 운항이 이루어짐. 2025년에는 103회 통과 운항에 320만 톤의 물동량



VS



보안관계



대한민국



러시아

과거 러시아(포식경제) vs 조선(피식경제)

현재 러시아(피식경제) vs 한국(포식경제)

- 1 한국의 지정학적(geopolitics) 운명을 극복할 파트너
- 2 한국 미래산업의 자양분이 될 러시아의 에너지
- 3 산업 과학 기술 등 지경학적(geo-economics) 파트너
- 4 한국과 인적,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최적의 파트너

2. 북극항로의 기회(3)

대한민국과 부산의 글로벌 4대 지정학적 기회



남북러 가스관 및 육상 교통로
 +
 남방항로와 북극항로의 교차로
 +
 일본과 대륙의 연결점

자료 : 부산연구원, 부산신항 메가허브 추진전략과 과제, 2018.

9

2. 북극항로의 기회(4)

동남아시아의 허브



10

3. 부산의 준비와 도전(1)

극지 및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부산의 노력



자료 :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2019.

3. 부산의 준비와 도전(2)

본격적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활동 시작

- (북극항로 개척 TF) 2025년 2월 북극항로 개척 전담 조직을 출범하고, 선사, 학계, 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미래혁신부시장이 단장을 맡아 북극항로 개척에 선제적 대응
- (북극항로 연구용역) 부산을 북극항로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과 북극항로 활용 저널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25.7월~2026년.6월)
- (해양주간) 부산시, 국제신문, 해양관련 기관 등이 주최하여 해양경제포럼 등 다양한 해양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북극항로가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았음
- (북극항로 비전발표) 친환경, 물류허브,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북극항로 허브도시 조성 비전 발표(26.02)



자료 :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3. 부산의 준비와 도전(3)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도전과 기회

- 도전
- ❖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 러우전쟁, 미국의 야욕(그린란드), 중국과 일본의 개입 등
 - ❖ 물리적 환경적 위험 상존
 - 통신 인프라 부족, 항로 정보 부족, 기상변화 급격,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제한적 운항 등
 - ❖ 경제적 불확실성 및 운영상 문제
 - 선박 지원 비용, 높은 보험료, 특수 선박건조 비용 등
 - ❖ 법적 제도적 쟁점
 - 러시아 영해 중심의 NSR 통제권 논란, IMO 극지해역 운항 선박 안전 및 환경 보호 기준 강화

- 기회
- ❖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 환적항에서 거점항으로 성장 가능성, 새로운 물류 확장
 - ❖ 조선 산업 협력 확대 여지
 - 선박선, 친환경 LNG선 등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른 선박 발주 증대
 - ❖ 에너지 및 자원 공급망 다변화 모색
 - 러시아의 LNG, 천연자원, 희토류 등 에너지 및 자원 안보 강화
 - ❖ 부산항의 북극항로 관문항 역할 증대
 - 대한해협 중심의 북극항로 관문항 역할 기대

4. 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대응전략(1)

부울경 지역을 환적항이 아닌 북극항로 거점항으로 육성

- 거점항구란 단순한 물류 환적지가 아니라, 기술, 금융, 산업, 문화가 융합된 복합 네트워크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밸류체인의 심장을 의미함
- 물건이 '스쳐가는 곳' 이 아닌 '머무르고, 재생산되고, 자본과 지식이 축적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
- 북극항로 거점항구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과 더불어 러시아와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 또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파격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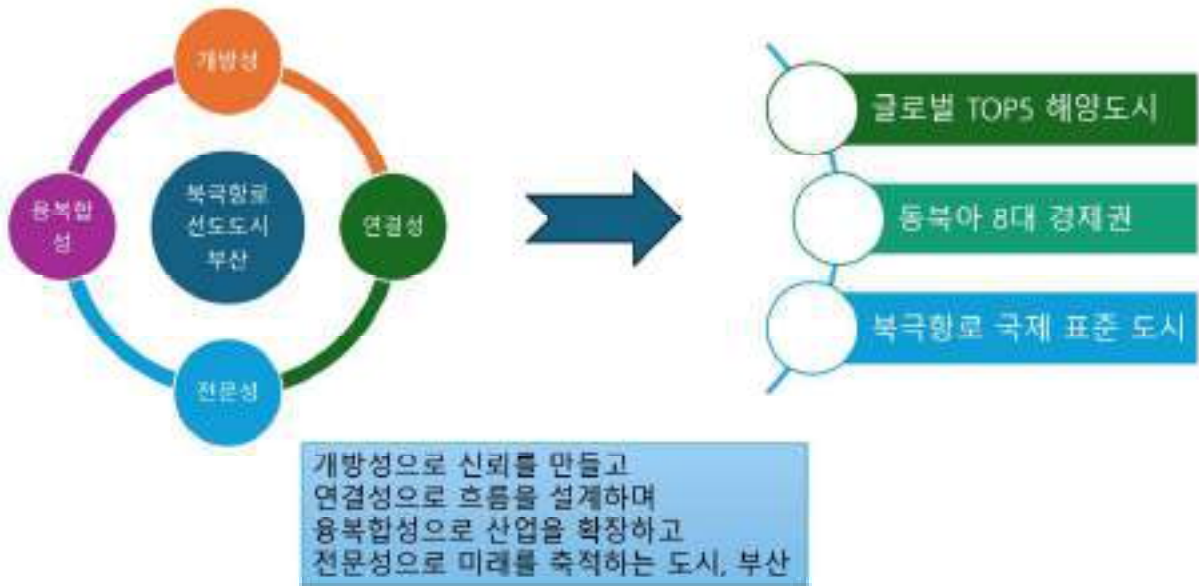
구분	부산항	다윈항(중국)	상하이항(중국)	후쿠오카항(일본)
비즈니스 목표	2025년까지 1400만 TEU(수출입) 달성	태평양 연안 30~40%의 지배	세계 최대 항만항 (2000만 TEU, 2040년 3000만 TEU)	선운항(항만)의 국제화 목표(세계 1위)
물류 처리능력	2,400만 TEU/년 (수출입 포함)	1,000만 TEU/년 (수출입)	2,000만 TEU/년 (수출입 포함)	50만 TEU/년 (수출입 포함)
에너지 공급망	중국의 석유(중-동)에 의존	중국 정부-러시아의 유류 공급망 우선	일본의 석유(중-동)에 의존	일본의 석유(중-동)에 의존
기술 인프라	스마트 항만 운영(자동화)	대형 선박(20000 TEU) 운영	세계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 (2000만 TEU)	일본의 항만 운영 체계



설명	설명
기능 중심	거점항만은 복합 기능(수출입+산업+교차+수출입) 중심 / 환적항만은 물류 재배치 중심
제후 연계	거점항만은 내륙과의 연변성(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이 중요 / 환적항만은 해상 네트워크 중심
질적 목표	거점항만은 국가 산업-경제 정책의 연계 / 환적항만은 국제 선세 유치와 효율성 증대에 주력
운영 구조	거점항만은 내수(물류창+수출입)+국제(환적) 운영 / 환적항만은 대부분 외국 간 화물 환적 전용

4. 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대응전략(2)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의 새로운 플랫폼, 북극항로



4. 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대응전략(3)

4대 전략 및 추진과제

전략1. 개방성(Openness)

글로벌 표준을 설계하는 해양 거버넌스

북극항로 거버넌스 발전	북극항로 거버넌스 실현방안	해양데이터(NAO) 발전	북극항로 국제협력 선도도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해양재단) 북극항로 위원회 신설 · 북극항로 특별법 통과 · 해군수도 특별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항로 전문부 부산 설립 · 해양 관련 공공기관 부산 이전 · HMM 등 해운기업 본사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해사 관련 기구 유치 · 해사전문 대학 · 북극항로 대륙 영수권 서비스 제공 · 해양교과 선도특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해양포럼 확대 · 일대스가 국제협력네트워킹고 산성 · 북극항로주간 연계 북극항로국제포럼 신설 · Arctic-Busan Adventure상을 영인해 구축

부산은 이해관계자가 모여 규칙과 신뢰를 함께 설계하는 거버넌스 플랫폼이 됩니다.

전략2. 연결성(Connectivity)

물류·인프라·데이터·금융이 결합된 복합 허브

북극항로 거점항만 구축	복합물류·인프라 구축	북극항로 정보시스템 구축	북극항로 물류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항로 전용 부두설 구축 · 친환경에너지, 저탄소설 · 친환경적 특수선박 시설 · 친환경적 유지·보수 시설 · 저가인 지원과 영안 구축 · 개항업권 개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선박·공항의 연결 고리로써 복합물류·인프라 구축 · 북극항로 전용 정보물류센터 구축 · 해상·항공·육로 복합물류 시설 · 동북아 물류물류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화된 거점 항만항로의 운영 관제체계 구축 · 북극항로 전용 정보물류센터 구축 · 해상·항공·육로 복합물류 시설 · 북극항로 전용 정보물류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해양금융센터 건립 · 북극항로 금융·보험·물류·인프라 지원 · 해양진흥공사 협력사업 추진 · 민간·기업·대학·연구소 등 혁신·특수 플랫폼 지원

부산은 허브가 허브는 공간을 넘어 플랫폼이 허브, 특화서비스가 동시에 흐르는 글로벌 플랫폼 선진성으로 도약합니다.

4. 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대응전략(4)

4대 전략 및 추진과제

전략3. 융복합성(Convergence)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확장성

북극항로 맞춤형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	해상 물류 허브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	북극항로 스타트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LNG 플랜트 구축 및 기업조성 ▶ 북극항로 운항 선박기타 및 고성능용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항만 정유·냉동·해빙 및 취락간척 기술개발 지원 ▶ 해상 물류 생태산업 단지 조성 ▶ 해상에서 부산항 연구개발·특수 조류 ▶ 해양과학기술 선진연구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수소화물유통망 조성 ▶ LNG-수소 기반 친환경 연료전지 조성 ▶ SMR 연구단지 조성 및 확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항로 혁신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부산시에 자유무역지구 및 국제자유무역 지대 ▶ 북항새마을지구 스타트업 밀려리 조성

부산은 북극항로를 통해 해운·항만 산업과 더불어 교통·에너지·신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도시로 도약합니다.

전략4. 전문성(Expertise)

시대를 설계하는 미래 인재

북극항로 연구 지원	북극항로 전문대학원 설립	북극항로산업 연구개발 혁신성장단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항해 관련 양성 ▶ 북극 연구 전문직 양성 ▶ 부산시 산하연관 북극항로 연구원육성 지원 ▶ 차세대 해양연구인 육성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 산하 북극항로 전문대학원 설립 ▶ 해양공형대학원 지점 및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항로 산업인력 및 해양산업 리더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 해양산업 인재 양성 ▶ 해양신산업 혁신역량 신장

부산은 미래의 북극항로 시대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자라나는 도시가 되고자 합니다.



북극항로의 미래는 우리의 의지와 전략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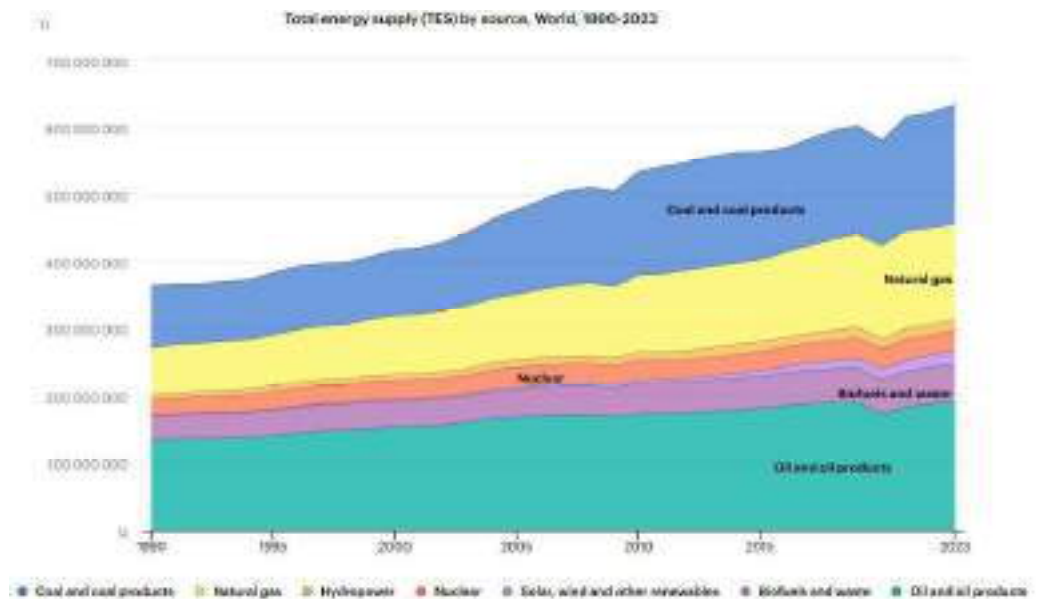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변화와 부산의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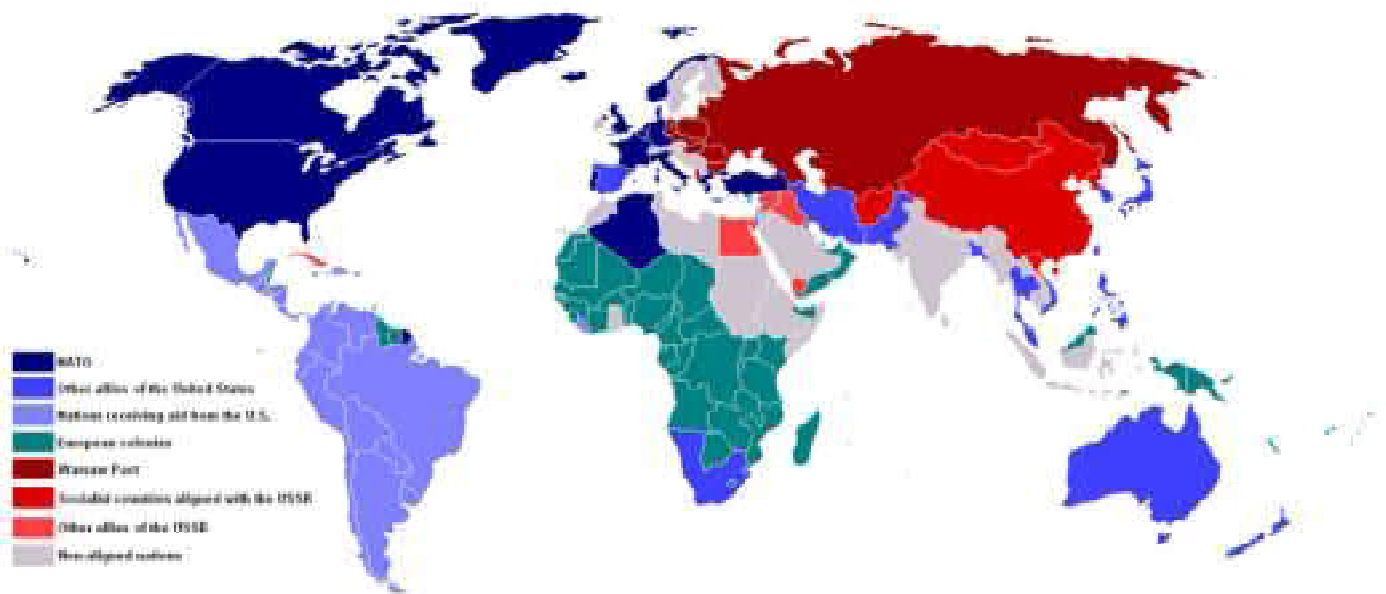
국립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안상욱

에너지 공급원별 세계 에너지 공급 (1990년-2023년)

- 전 세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미국의 셰일 혁명 등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
- 천연가스는 석유, 석탄에 이은 제 3위의 에너지원으로 세계 에너지공급에서 자리매김함



냉전 (Cold War)



냉전시절부터 서유럽으로 도입된 러시아 천연가스

- 러시아에서 서유럽 국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구상은 이탈리아의 국영에너지 기업인 ENI가 1966년에 최초로 시도
- 서방진영에서 안보위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ENI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협상은 실패
- 유럽국가로 러시아의 최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1967년에 당시 사회주의 진영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건설됨
- 1968년 오스트리아의 에너지기업인 OMV가 구 소련과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
- 본격적으로 구 소련 천연가스가 서방으로 수입된 계기는 1970년 서독 루르가스(Ruhrigas)가 구 소련과 천연가스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임
- 1973년 소련의 천연가스가 서독에 처음으로 공급됨.

서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심화

- 냉전이 종식되면서, 자국의 저가 에너지 정책에 고통받던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적극적으로 서유럽으로 가스 수출을 확대
-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가스수출은 1973년 68억 입방미터에서 1990년 1100억 입방미터로 확대
- 러시아 천연가스가 EU 천연가스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주요요인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임
-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서유럽의 주요 천연가스 공급국의 하나인 알제리의 천연가스에 비해 해마다 10-20% 낮은 가격으로 서유럽 지역으로 수출
-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서유럽 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는 냉전 종식이후 점차 심화. 2020년 러시아는 EU 천연가스 공급의 36%의 비중을 차지했음.

반복되었던 천연가스 공급위기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증가했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의존

- 2020년 EU회원국 천연가스 수입의 18.5% 가량이 LNG 방식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미국과 카타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순으로 LNG 방식으로 천연가스를 공급
- 특히 독일의 경우 2020년 전체 PNG 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55.2%. 이탈리아의 경우 전체 PNG 수입에서 38.8%가 러시아로부터 도입.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EU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EU회원국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EU는 2006년, 2009년,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천연가스 분쟁으로 러시아로부터 EU회원국으로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던 경험이 있음. 또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EU는 러시아에 경제제재 조치를 실시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장하였음. 그러나 2020년 러시아에 대한 EU의 천연가스 의존도는 2014년에 비해서 감소하지 않았음.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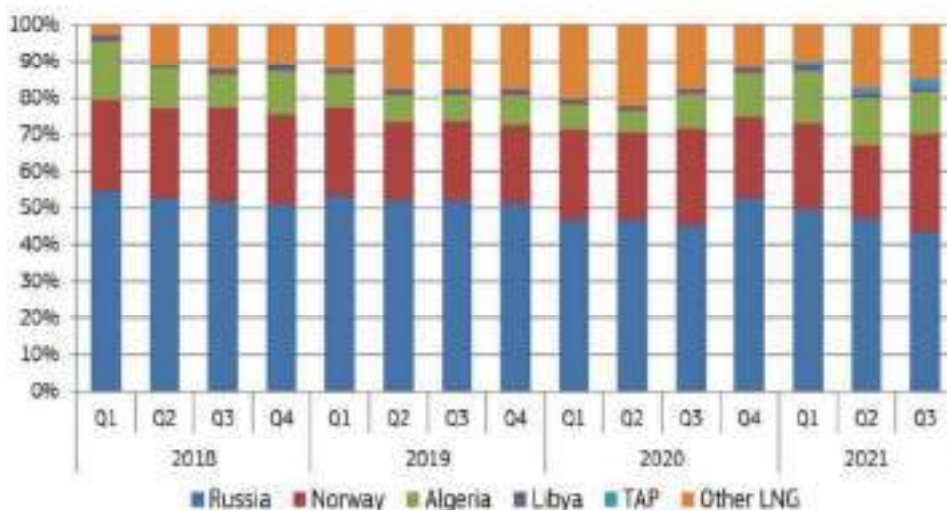
EU 천연가스 수입에서 수입원별 수입 비중 (PNG와 LNG) (단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러시아	30.6	32.2	31.9	36.6	33.3	33.6	39.6	38.4	37.9	38.0	38.2
노르웨이	19.3	19.4	21.1	19.0	21.0	20.7	16.3	16.6	16.1	14.7	18.5
알제리	13.1	12.2	12.1	11.1	10.5	9.5	12.3	10.5	10.8	7.2	7.5
카타르	5.4	5.1	3.9	3.4	3.0	3.3	3.0	3.8	4.2	5.0	4.2
미국	0.0	0.0	0.0	0.0	0.0	0.0	0.1	0.4	0.6	2.9	4.0
영국	3.3	3.6	2.9	2.5	2.7	3.4	2.5	2.3	2.2	2.5	3.4
나이지리아	3.8	3.8	2.9	1.5	1.3	1.8	2.0	2.5	2.6	3.3	3.0
리비아	2.6	0.6	1.7	1.5	1.9	1.9	1.3	1.1	1.1	1.3	1.1
기타	22.0	23.1	23.3	24.4	26.3	25.9	23.0	24.5	24.6	25.1	20.1

출처: EU집행위원회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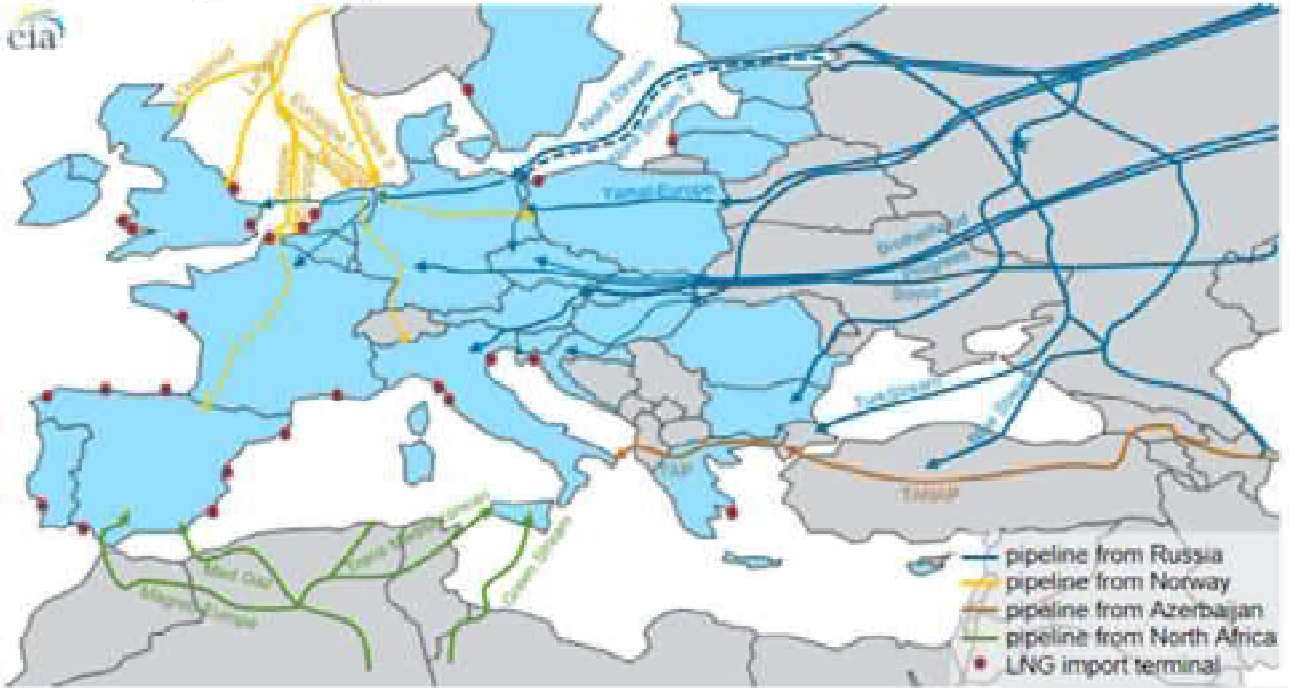
EU 천연가스 수입에서 공급원별 비중



출처: EU집행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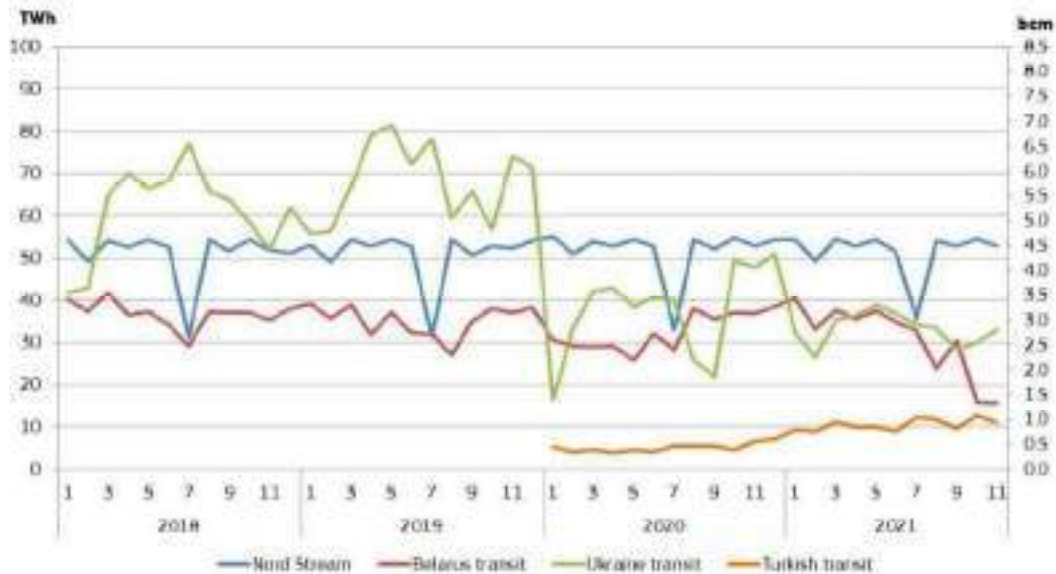
EU의 주요 PNG 공급망

Major natural gas delivery routes into the European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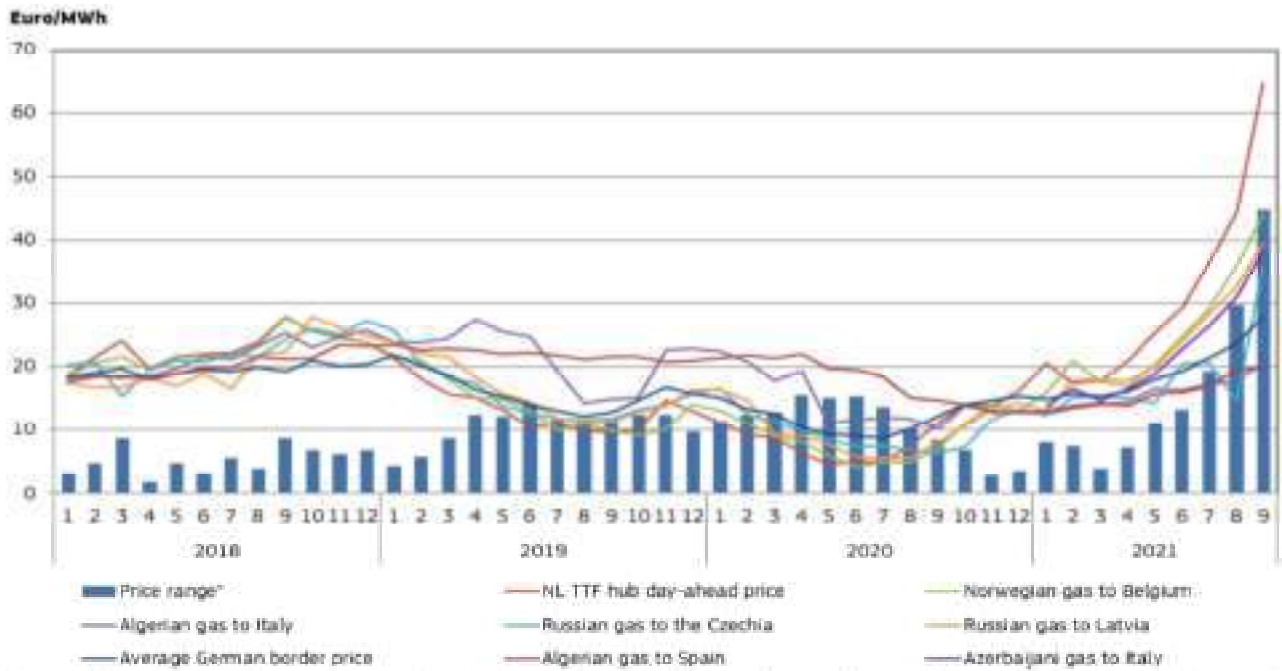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전쟁 전 EU의 주요 러시아 PNG 공급루트

EU의 주요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루트 (2018년-2021년)



출처: EU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 전쟁 전 EU 내 PNG 루트별 천연가스 공급가격



EU의 PNG 수입 루트별 안전성 문제

- 노르웨이로부터 연결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제외하고 EU회원국과 연결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잠재적인 분쟁의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 2021년 12월 말 러시아는 벨라루스, 폴란드를 통해 EU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야말-유럽(Yamal-Europe)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
- 러시아 아나파(Anapa) 근처 루스카야 압축 설비(compressor station)로부터 흑해(Black Sea)를 통과하여 터키 키일코이(Kiyıköy)와 유럽을 연결하는 930km 거리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투르크스트림(TurkStream)이 2020년 1월 8일부터 운영을 개시

EU의 PNG 수입 루트별 안전성 문제

- 알제리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모로코를 통과하여 스페인으로 연결되는 마그레브-유럽(Maghreb-Europe) 파이프라인, 알제리에서 스페인으로 직접 연결되는 메드가즈(MedGaz) 파이프라인, 알제리에서 튀니지를 거쳐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Trans Mediterranean) 파이프라인으로 EU로 운송
- 그런데 알제리와 모로코의 관계 악화로 2021년 8월 24일 알제리는 모로코와 국교 단절을 선언하였고, 2021년 11월 1일부로 모로코를 통과하는 마그레브-유럽(Maghreb-Europe)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EU의 LNG 터미널 인프라 부족

-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EU에 천연가스가 PNG방식으로 주로 도입된 요인 중 하나는 EU회원국에 LNG터미널 인프라가 갖추어진 국가들이 그리스, 몰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에 불과했다는 점임
-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50%가 넘었던 독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LNG터미널을 운용하지 않았음.
- 대부분의 EU회원국에 LNG 터미널이 없었던 이유는 LNG시장가격이 PNG보다 높기 때문에, 러시아, 노르웨이, 알제리 등의 국가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 조달이 용이했던 EU회원국은 주로 PNG 방식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았기 때문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EU의 LNG 터미널 인프라 현황

EU의 LNG 인프라



출처: EU 집행위원회



미국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노드스트림 사업 확대를 지지했던 독일정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미국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노드스트림 I’을 확대한 ‘노드스트림 II’ 파이프라인이 유럽의 對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과 러시아에서 EU회원국들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기존 가스관이 통과하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들면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모두 일관되게 반대하였음
-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가스관 사업이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취임 초 반대했었음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손상된 유럽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시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7월 노드스트림 II 파이프라인을 조건부 승인
- 미국은 러시아가 서유럽에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 독일이 가스관을 잠그도록 하는 이른바 ‘킬-스위치’ 조항을 요구했으나, 독일은 민간 사업에서 국가적 간섭은 법에 저촉된다고 반대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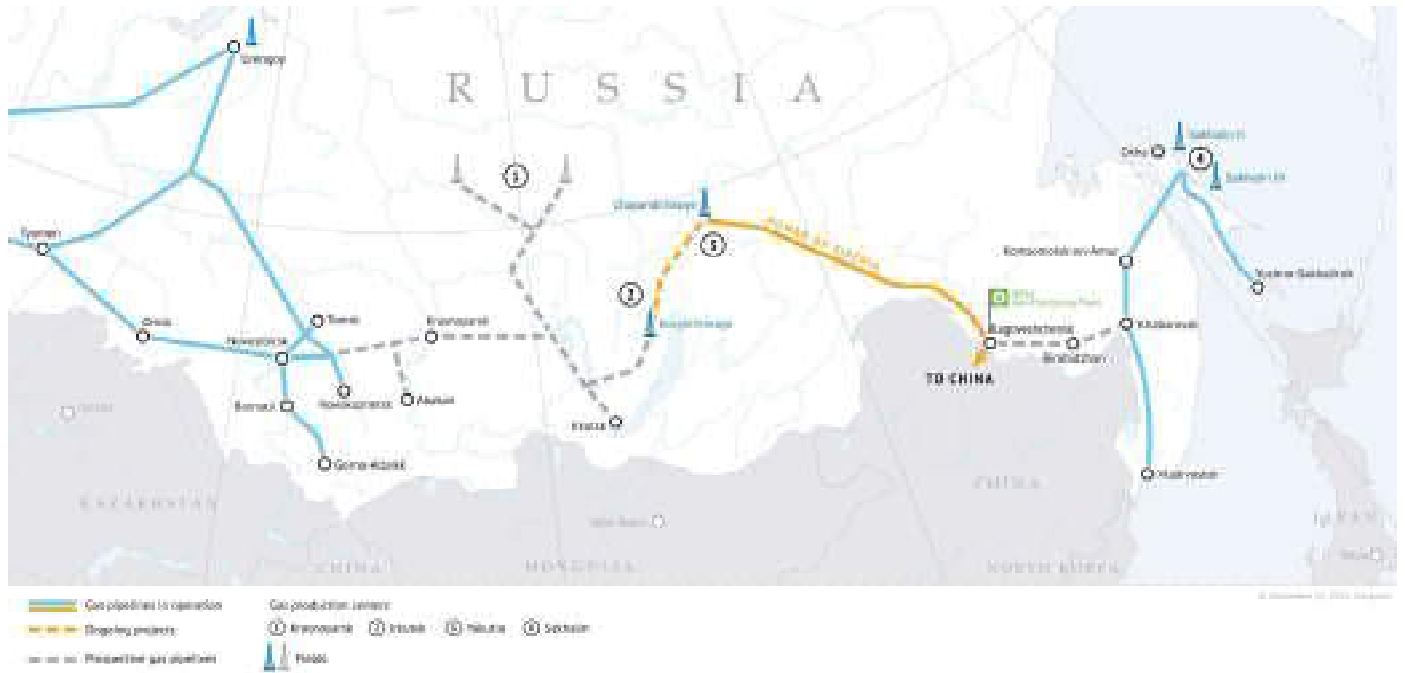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서유럽 기업

- 노드스트림I의 지분은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러시아의 Gazprom(51%), 독일의 천연가스 및 석유 생산기업인 Wintershall DEA AG(15.5%), 독일의 에너지기업인 E.ON(15.5%), 네덜란드의 에너지 네트워크 운영사인 Gasunie(9%), 프랑스의 에너지기업인 ENGIE(9%)가 보유하고 있음
- 노드스트림 I의 성공에 힘입어 노드스트림II가 2018년 3월에 착공되었음
- 2019년 4월 EU가스지침의 개정으로 천연가스 생산법인과 운송법인은 법적으로 분리되어야 했기에 현재 노드스트림II의 지분은 가스프롬의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음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다변화 노력과 각국의 이해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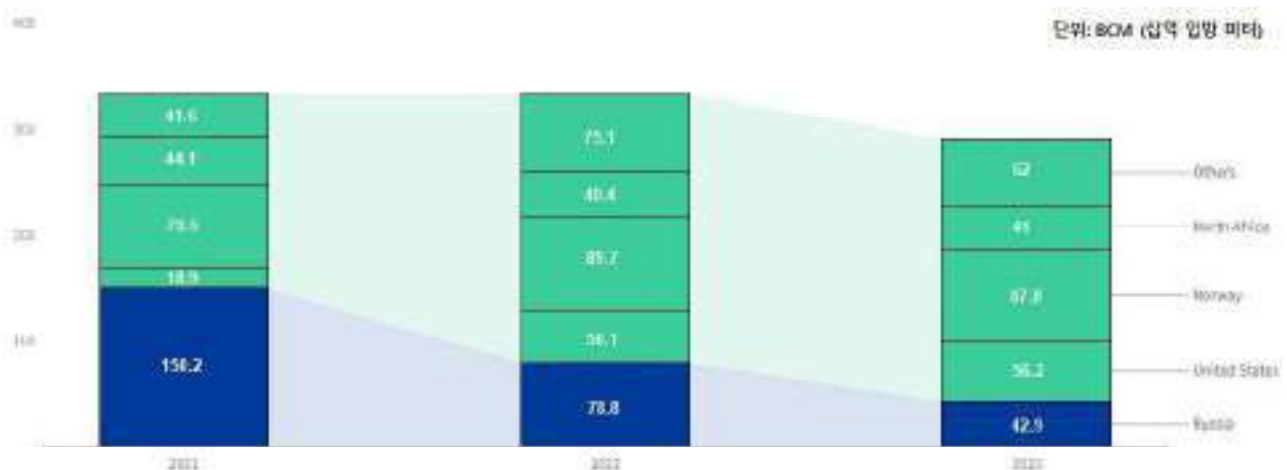
- 러시아도 EU의 제재에 대응하여 서유럽 중심이었던 천연가스 수출을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음
- 2019년 12월 시베리아 가스전에서 중국 북동부를 직접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Power of Siberia가 개통됨
- Quad의 참가국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중요 파트너인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시장에서 제재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러시아 원유수입을 확대하고 있음.
- 인도는 UN의 러시아 규탄 관련 표결에서 계속 기권하고 있음 (2022년 2월 25일 UN 안전보장이사회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 기권, 2022년 2월 27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논의하기 위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긴급특별총회 소집안 기권, 2022년 3월 2일 UN 총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 기권)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다변화: Power of Siberia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의 대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 감소

- EU 수입에서 러시아 PNG의 비중이 2021년 40%에서 2023년 8%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LNG를 합칠 경우 EU전체 천연가스 수입에서 러시아가 2023년 차지하는 비중은 15% 미만임.



2023년 EU의 천연가스 수입현황 (수입 비중, 수입량)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입지역으로 부상
- 노르웨이: 30.3%, 87.8 bcm
- 미국: 19.4%, 56.2 bcm
- 북아프리카: 14.1%, 41 bcm
- 러시아(PNG): 8.7%, 25.1 bcm
- 러시아(LNG): 6.1%, 17.8%
- 영국: 5.7%, 16.6 bcm
- 카타르: 5.3%, 15.5 bcm
- 기타: 10.3%, 29.9 bcm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 LNG 터미널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 LNG 터미널 확대

LNG 터미널 명칭	국가	운전개시 연도(예정 연도)	2024년 1분기 재기화 용량 (bcm)
Gdańsk FSRU	폴란드	2028	0
Porto Empedocle	이탈리아	2026	0
Tallinn	에스토니아	2025	0
Paldiski	에스토니아	2025	0
Ravenna FSRU	이탈리아	2024	0
Mag Mell FSRU	아일랜드	2024	0
Alexandroupolis FSRU	그리스	2024	0
Wilhelmshaven 2 (Excelerate Excelsior FSRU)	독일	2024	0
Stade 2 (onshore)	독일	2024	0
Stade 1 (Energos Force FSRU)	독일	2024	0
Ostsee/Mukran 2 (Neptune FSRU)	독일	2024	5
Ostsee/Mukran 1 (Energos Power FSRU)	독일	2024	0
Vasiliko	사이프러스	2024	0
Saros (Vasant 1 FSRU)	터키	2023	0
Piombino (Italis LNG FSRU)	이탈리아	2023	5
Ostsee/Lubmin (Neptune FSRU)	독일	2023	0
Brunsbüttel 2 (onshore)	독일	2023	0
Brunsbüttel 1 (Hoegh Gannet FSRU)	독일	2023	5
Le Havre (Cape Ann FSRU)	프랑스	2023	5
Inkoo (Exemplar FSRU)	핀란드	2023	5
Eemshaven (Eemshaven FSRU)	네덜란드	2022	9
Wilhelmshaven 1 (Hoegh Esperanza FSRU)	독일	2022	6

LNG Terminal (Onshore)



- 영국 South Hook LNG Terminal: 2009년 운전개시, 2024년 상반기 재기화 용량 21 bcm
- 네덜란드 Gate LNG Terminal: 2011년 운전개시, 2024년 상반기 재기화 용량 16 b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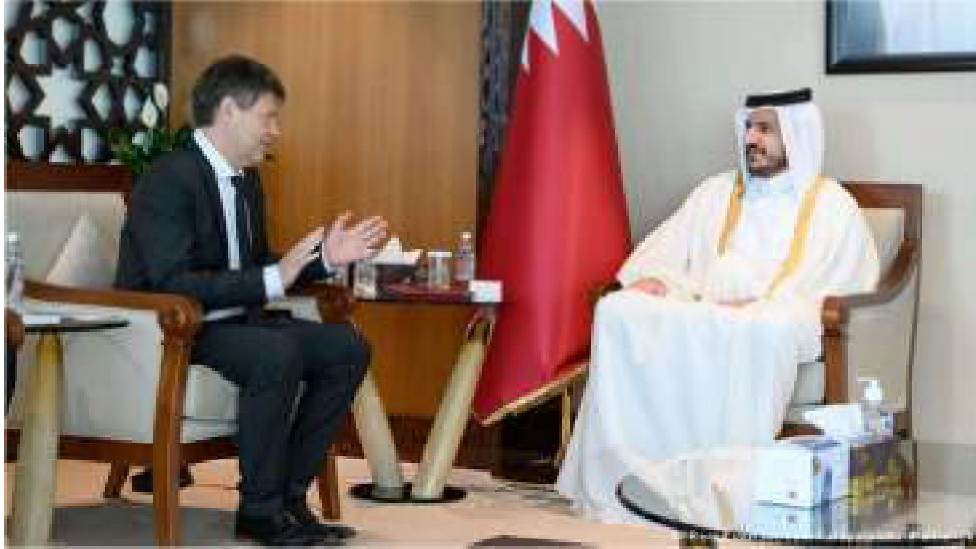
LNG Terminal (FSRU: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EU와 카타르 간 기존 갈등해소 및 협력강화

- EU는 천연가스 공급원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임
- 2022년 2월 EU집행위원회는 과거 카타르 석유(Qatar Petroleum)였던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의 2020년 가스 공급계약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중단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8년 카타르 석유(현재 카타르에너지)와 유럽 수입국 간 공급 협정이 EU의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럽 경제 지역 내의 자유로운 가스 흐름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었음
- EU의 카타르에너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중단은 러시아의 대 유럽 가스 공급 차질 우려 속에서 나온 조치였음
- 독일과 카타르는 2022년 3월 20일 '장기 에너지 파트너십 협정' 체결에 합의함. 카타르 군주는 독일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약속

2022년 3월 20일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과
셰이크 타미ม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에미르)회담 (카타르 도하)



2022년 5월 20일
카타르-독일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 공동성명 (베를린)

- 카타르와 독일은 에너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에 2022년 5월 20일 서명
- 셰이크 타미م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에미르)는 카타르에 독일에 2024년에 LNG공급을 시작할 것임을 약속하였음.



2021년 세계 PNG 교역

To	From																				Total Exports
	Canada	Mexico	US	Other S. & Cent. America	European Union	Rest of Europe	Other Europe	Australia	Indonesia	Russian Federation	Other CIS	Other Middle East	Other Africa	Asia Pacific	Other Asia Pacific	Other	Other	Other	Other	Other	
Canada	-	-	25.5	-	-	-	-	-	-	-	-	-	-	-	-	-	-	-	-	-	25.5
Mexico	-	-	58.7	-	-	-	-	-	-	-	-	-	-	-	-	-	-	-	-	-	58.7
US	75.9	-	-	-	-	-	-	-	-	-	-	-	-	-	-	-	-	-	-	-	75.9
North America	75.9	-	84.3	-	-	-	-	-	-	-	-	-	-	-	-	-	-	-	-	-	160.2
Argentina	-	-	-	4.6	-	-	-	-	-	-	-	-	-	-	-	-	-	-	-	-	4.6
Brazil	-	-	-	7.0	0.1	-	-	-	-	-	-	-	-	-	-	-	-	-	-	-	7.1
Other S. & Cent. America	-	-	-	0.9	-	-	-	-	-	-	-	-	-	-	-	-	-	-	-	-	0.8
S. & Cent. America	-	-	-	11.5	0.9	-	-	-	-	-	-	-	-	-	-	-	-	-	-	-	12.4
European Union	-	-	-	-	-	12.3	85.9	11.2	8.2	-	132.3	-	-	-	-	-	-	-	-	-	299.8
Rest of Europe	-	-	-	-	-	31.9	-	-	11.3	-	34.7	-	-	-	-	0.1	-	-	-	-	99.3
Europe	-	-	-	-	-	12.3	117.8	11.2	19.8	-	167.0	-	-	-	-	0.1	-	-	-	-	299.1
Belarus	-	-	-	-	-	-	-	-	-	-	18.7	-	-	-	-	-	-	-	-	-	18.7
Kazakhstan	-	-	-	-	-	-	-	-	-	-	2.7	-	-	-	-	-	-	-	-	-	2.7
Russian Federation	-	-	-	-	-	-	-	-	-	4.6	5.7	10.5	-	-	-	-	-	-	-	-	15.1
Other CIS	-	-	-	-	-	-	-	-	-	-	-	0.2	-	-	-	-	-	-	-	-	0.4
CIS	-	-	-	-	-	-	-	-	-	4.6	27.1	10.5	0.2	-	-	0.5	-	-	-	-	42.9
United Arab Emirates	-	-	-	-	-	-	-	-	-	-	-	-	-	-	-	19.5	-	-	-	-	19.5
Other Middle East	-	-	-	-	-	-	-	-	0.2	-	-	-	-	-	7.7	1.6	3.8	-	-	-	13.1
Middle East	-	-	-	-	-	-	-	-	0.2	-	-	-	-	-	7.7	21.1	3.8	-	-	0.7	32.5
South Africa	-	-	-	-	-	-	-	-	-	-	-	-	-	-	-	-	-	-	-	-	3.5
Other Africa	-	-	-	-	-	-	-	-	-	-	-	-	-	-	-	3.8	4.0	-	-	0.9	8.5
Africa	-	-	-	-	-	-	-	-	-	-	-	-	-	-	-	3.8	8.0	-	-	0.9	13.0
Australia	-	-	-	-	-	-	-	-	-	-	-	-	-	-	-	-	-	-	-	-	4.8
China	-	-	-	-	-	-	-	-	-	5.8	7.6	91.5	4.0	-	-	-	-	-	-	-	109.9
Malaysia	-	-	-	-	-	-	-	-	-	-	-	-	-	-	-	-	-	-	-	0.4	0.4
Singapore	-	-	-	-	-	-	-	-	-	-	-	-	-	-	-	-	-	-	-	7.2	7.2
Thailand	-	-	-	-	-	-	-	-	-	-	-	-	-	-	-	-	-	-	-	6.1	6.1
Asia Pacific	-	-	-	-	-	-	-	-	-	5.8	7.6	31.5	4.0	-	-	-	-	-	-	7.5	44.4
Total exports	75.9	-	84.3	11.5	0.9	12.3	112.9	11.2	19.8	19.8	201.7	42.1	4.5	17.3	21.1	6.7	38.9	3.1	6.2	7.5	704.4

2023년 세계 PNG 교역

To	From																				Total Exports
	Canada	Mexico	US	Other S. & Cent. America	European Union	Rest of Europe	Other Europe	Australia	Indonesia	Russian Federation	Other CIS	Other Middle East	Other Africa	Asia Pacific	Other Asia Pacific	Other	Other	Other	Other	Other	
Canada	-	-	28.0	-	-	-	-	-	-	-	-	-	-	-	-	-	-	-	-	-	28.0
Mexico	-	-	61.1	-	-	-	-	-	-	-	-	-	-	-	-	-	-	-	-	-	61.1
US	79.0	-	-	-	-	-	-	-	-	-	-	-	-	-	-	-	-	-	-	-	79.0
North America	79.0	-	89.1	-	-	-	-	-	-	-	-	-	-	-	-	-	-	-	-	-	168.1
Argentina	-	-	-	3.2	-	-	-	-	-	-	-	-	-	-	-	-	-	-	-	-	3.2
Brazil	-	-	-	5.4	-	-	-	-	-	-	-	-	-	-	-	-	-	-	-	-	5.4
Other S. & Cent. America	-	-	-	1.6	-	-	-	-	-	-	-	-	-	-	-	-	-	-	-	-	1.6
S. & Cent. America	-	-	-	7.6	1.4	-	-	-	-	-	-	-	-	-	-	-	-	-	-	-	9.2
European Union	-	-	-	-	18.0	85.1	95.6	11.7	-	25.7	-	-	-	-	-	-	-	-	-	-	259.1
Rest of Europe	-	-	-	-	0.2	25.5	4.8	11.9	-	24.1	-	-	-	-	-	5.7	-	-	-	-	71.7
Europe	-	-	-	-	18.2	110.7	100.3	23.6	-	49.8	-	-	-	-	-	5.2	-	-	-	-	340.8
Belarus	-	-	-	-	-	-	-	-	-	10.6	-	-	-	-	-	-	-	-	-	-	10.6
Kazakhstan	-	-	-	-	-	-	-	-	-	0.2	0.4	-	-	-	-	-	-	-	-	-	0.6
Russian Federation	-	-	-	-	-	-	-	-	0.3	0.7	4.7	-	-	-	-	-	-	-	-	-	5.7
Other CIS	-	-	-	-	-	-	-	0.3	-	7.3	3.0	-	-	-	0.4	-	-	-	-	-	11.9
CIS	-	-	-	-	-	-	-	0.2	0.3	0.7	24.3	9.0	-	0.4	-	-	-	-	-	-	34.9
United Arab Emirates	-	-	-	-	-	-	-	-	-	-	-	-	-	-	-	19.0	-	-	-	-	19.0
Other Middle East	-	-	-	-	-	-	-	-	-	-	-	-	-	-	8.8	1.5	2.8	-	-	0.6	13.6
Middle East	-	-	-	-	-	-	-	-	-	-	-	-	-	-	8.8	19.5	2.8	-	-	0.6	31.6
South Africa	-	-	-	-	-	-	-	-	-	-	-	-	-	-	-	-	-	-	-	-	4.1
Other Africa	-	-	-	-	-	-	-	-	-	-	-	-	-	-	-	8.4	3.9	-	-	1.0	14.2
Africa	-	-	-	-	-	-	-	-	-	-	-	-	-	-	-	8.4	3.9	-	-	5.1	18.2
Australia	-	-	-	-	-	-	-	-	-	-	-	-	-	-	-	-	-	-	-	0.9	0.9
China	-	-	-	-	-	-	-	-	-	4.8	21.2	30.5	1.2	-	-	-	-	-	-	-	61.3
Malaysia	-	-	-	-	-	-	-	-	-	-	-	-	-	-	-	-	-	-	-	0.4	0.4
Singapore	-	-	-	-	-	-	-	-	-	-	-	-	-	-	-	-	-	-	-	4.1	4.1
Thailand	-	-	-	-	-	-	-	-	-	-	-	-	-	-	-	-	-	-	-	5.4	5.4
Asia Pacific	-	-	-	-	-	-	-	-	-	4.6	24.3	30.5	1.2	-	-	-	-	-	-	4.5	60.0
Total exports	79.0	-	89.1	7.6	1.4	18.2	110.7	101.4	23.9	5.3	95.4	39.5	1.2	14.1	19.5	11.1	34.9	2.4	5.7	4.5	677.0

천연가스 가격 변화

	LNG USD\$/mmBTU			Natural gas USD\$/mmBTU			
	Japan ¹	China (mainland) ²	South Korea ³	Zeebrugge ⁴	UK NBP ⁵	Netherlands TTF ⁶	US Henry Hub ⁷
1984	5.10	-	-	-	-	-	-
1985	5.23	-	-	-	-	-	-
1986	4.10	-	-	-	-	-	-
1987	3.35	-	-	-	-	-	-
1988	3.34	-	-	-	-	-	-
1989	3.28	-	-	-	-	-	1.70
1990	3.64	-	-	-	-	-	1.64
1991	3.99	-	-	-	-	-	1.49
1992	3.62	-	-	-	-	-	1.77
1993	3.52	-	-	-	-	-	2.12
1994	3.18	-	-	-	-	-	1.92
1995	3.46	-	-	-	-	-	1.69
1996	3.66	-	-	-	1.87	-	2.76
1997	3.91	-	-	-	1.95	-	2.53
1998	3.05	-	-	-	1.86	-	2.08
1999	3.14	-	-	-	1.58	-	2.27
2000	4.72	-	-	-	2.71	-	4.23
2001	4.64	-	-	-	3.17	-	4.07
2002	4.27	-	-	-	2.37	-	3.33
2003	4.77	-	-	-	3.33	-	5.53
2004	5.15	-	-	-	4.46	-	5.85
2005	5.80	-	7.18	7.11	7.11	5.81	8.80
2006	8.86	-	8.64	7.83	7.49	7.26	6.74
2007	7.47	3.76	8.84	6.09	5.08	5.00	6.95
2008	12.24	4.79	13.27	10.78	10.66	10.67	8.84
2009	8.73	4.41	9.28	4.84	4.79	4.91	3.52
2010	10.55	6.19	9.74	6.61	6.52	6.69	4.38
2011	14.30	8.80	12.37	9.14	9.00	9.18	3.99
2012	16.17	10.69	14.37	9.39	9.42	9.37	2.75
2013	15.55	11.15	14.47	10.52	10.60	10.52	3.72
2014	15.73	11.76	15.84	8.13	8.22	8.11	4.34
2015	9.96	8.66	10.28	6.41	6.52	6.45	2.61
2016	6.73	6.54	6.69	4.50	4.65	4.53	2.81
2017	7.87	7.33	7.84	5.66	5.78	5.71	2.96
2018	9.78	9.43	9.96	7.84	7.97	7.88	3.12
2019	9.70	9.15	9.58	4.39	4.46	4.46	2.51
2020	7.65	6.73	7.41	3.07	3.17	3.13	1.99
2021	9.93	10.66	10.50	15.57	15.45	15.67	3.84
2022	16.98	15.59	20.00	30.96	24.55	37.09	6.38
2023	13.22	12.11	14.82	12.69	12.30	12.87	2.53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한국 참여 압박

-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 LNG투자 문제로 한국, 일본, 대만을 압박하고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아시아 수출 확대 전략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간주하며 알래스카 LNG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함.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의 North Slope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해 남부 항구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이송한 뒤 액화하여 아시아에 수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추진한 알래스카 LNG사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 변화 대응, 야생동물 보호구역 환경파괴, 알래스카 원주민 공동체와 환경단체들의 반대, 그리고 법적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야생동물 보호지역 환경파괴 문제로 2024년 1월 중단시켰음.



미국 정권교체에 따른 알래스카 LNG 정책 변화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가 4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며,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기존 인프라가 완비된 지역과 비교할 때, 알래스카는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액화하고 수출항까지 운반하는 데 전용 파이프라인(800마일), 액화시설, 항만 인프라 등 모든 것을 새로 건설해야 함.
- 미국 정권교체에 따른 리스크와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기존 LNG 인프라가 잘 완비된 지역에 비해서 알래스카 LNG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아시아 국가로 LNG를 주로 공급하고 있는 카타르, 호주, 말레이시아의 LNG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알래스카 LNG 사업참여를 주저하고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일본, 대만을 압박하고 있음. 특히 대만은 트럼프의 알래스카 LNG개발 참여압박에 굴복하여, 알래스카 LNG 구매·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했지만, 이후 미국과 상호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진행할 때 알래스카 LNG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수를 함.

천연가스 공급망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는 러시아로 부터 PNG수입을 다른 인근 국가로 부터 확대하여 안정화시키면서 LNG 공급을 미국, 카타르 등으로 부터 확대하였음.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후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던 EU의 천연가스 도입가격도 한국의 천연가스 도입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형성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서, EU가 천연가스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한국의 기존 천연가스 공급망은 영향을 받게 있음.
-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 정권교체에 따라서 지속 추진이 불확실하기에 참여에 신중해야 함.
- 한국도 에너지 문제에서는 보다 실리적인 에너지 공급망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부산의 대응전략

- 부산은 해양도시로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의 파급을 직접 받는 동시에, LNG 벙커링 허브 및 차세대 해양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LNG 벙커링 허브 구축: 부산항 신항 일원에 LNG 벙커링 전용 터미널 구축; IMO 탄소 규제 강화로 급증하는 친환경 선박 연료(그린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공급 인프라 단계적 확충.
- 해양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LNG선 건조 기술 활용; FSRU 설계·건조·유지보수(MRO) 기능과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을 집적한 해양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에너지 물류 허브 기능 강화: 미국 정권교체 리스크·경제성 한계가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신중하되, 카타르·호주·미국 등 기존 공급원 다변화를 통해 부산항의 LNG 재수출(re-export) 기능을 강화하여 동북아 에너지 물류 거점으로 육성.

Q & A

안녕하십니까. 발표에 토론을 맡은 세종대학교 황규연입니다. 과거 요소수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특정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 차질은 곧바로 산업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희토류를 비롯해 갈륨, 게르마늄, 흑연, 안티모니 등 핵심광물을 둘러싼 중국의 수출통제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계속 부각되면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제조업 전반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의 변화가 부산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지역산업의 관점에서 검토하셨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핵심광물 문제를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나 통상전략 차원에서만 다루지 않고, 부산의 주력산업 및 미래전략산업과 연결하여 해석하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장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시적 변화를 부산의 지역경제 문제로 연결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에서 제시하신 것처럼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은 안보화, 다변화, 내재화, 블록화, 분절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은 수출규제, 전략비축, 양자협정, 자원개발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해외 자원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의 제조업과 미래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핵심광물의 중요성이 왜 높아지고 있는지를 친환경 산업과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신산업이 확대되면서 리튬, 코발트, 니켈, 구리, 희토류와 같은 광물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생산과 정제 단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오늘 발표의 핵심 배경으로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점은 부산의 주요 산업과 핵심광물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등 부산의 주요 산업이 각각 어떤 핵심광물과 연결되는지를 제시하신 것은, 공급망 문제가 지역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파급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테크,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테크, 융합부품소재와 같은 미래전략산업 역시 핵심광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신 부분은 부산의 산업정책이 앞으로 원재료 조달전략과도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추가된다면 독자의 이해와 연구의 주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째, 발표 제목에서 ‘부산경제 영향 분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영향의 크기와 경로를 보다 정량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발표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변화가 부산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조와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산업이 얼마나 취약한지, 특정 광물 가격 급등이나 수입 차질이 부산의 생산, 수출, 고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계량적으로 보여준다면 발표의 설득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부산 산업과 핵심광물의 연계는 잘 제시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산업과 어떤 광물이 가장 우선적인 위협요인인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결국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약성의 정도와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 주시면 실제 정책 설계에도 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다변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로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비용, 안정성, 대체 가능성, 기업의 부담 능력 같은 현실적 제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단순한 다변화 필요성뿐 아니라, 어떤 국가나 지역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산의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과 제도적 지원은 무엇인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더욱 균형 잡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에 대해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정책 차원에서 보았을 때 부산의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급선 다변화 전략은 어떤 방식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 수입선 확보, 재활용 확대, 대체소재 개발,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 중 어떤 방향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에 토론을 맡은 세종대학교 황규연입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방금 해주신 발표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SMR 을 단순한 차세대 원전 기술이 아니라, 기후위기·AI 전력수요·에너지 안보가 교차하는 전략산업으로 재해석하고, 그 안에서 부산의 역할을 매우 입체적으로 제시하셨다는 점에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해당 연구에는 왜 지금 SMR 인가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SMR 경쟁의 구조와 기술주권의 문제를 설명하고, 한국형 SMR 의 지향점과 부산의 로컬 전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매우 선명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발표의 가장 큰 장점은 SMR 을 단순한 발전설비로 보지 않고, AI 시대의 에너지-데이터 인프라 경쟁이라는 더 큰 구조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료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또는 SMR 기반 전력조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상은, 에너지 문제가 더 이상 전력회사의 공급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산업의 기반 인프라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발표가 제시한 ‘에너지-데이터 복합체’라는 관점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설득력 있게 들었습니다.

또한 발표는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를 단순한 자원 경쟁이 아니라 기술체제 경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SMR 경쟁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상이한 기술체제 경쟁으로 설명하시고, 실증 데이터, 규제 승인, 표준 설계, 운영 알고리즘이 향후 기술주권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부분은 많은 시사점을 주셨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증의 선점이 곧 표준의 선점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장기적인 제도적 잠김 효과로 연결된다는 설명은 SMR 산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점은 부산의 전략을 단순한 산업 유치 차원이 아니라, 실증거점과 공급망, 데이터센터 수요, 그리고 제도설계까지 포괄하는 지역 생태계 전략으로 제시하신 부분입니다. 발표에서 부산은 원전 제조 밸류체인, ICT 인프라, 해양물류 기능을 동시에 갖춘 공간으로 제시되며,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와 에너지-데이터 복합 클러스터, 로컬 규제 샌드박스가 핵심 정책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를 단순한 행정 지원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제도적 설계자로 재정의한 부분은 매우 참신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추가된다면 독자의 이해와 연구의 주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SMR 과 AI 를 연결하는 문제의식은 매우 시의적절하지만, 실제 상용화 과정에서의 제약요인도 조금 더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SMR 의 경제성, 주민 수용성, 인허가 기간, 안전 규제 비용, 사용 후 핵연료 문제 등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술적 비전과 함께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된다면 발표의 균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로컬 전략과 국가 차원의 원전정책 및 규제체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전 산업은 지역 차원의 전략만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중앙정부, 규제기관, 공기업이 맡아야 할 영역을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면 실행 가능성이 더욱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극항로와 부산의 대응전략 발표의 토론을 맡게 된 세종대학교 황규연입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북극항로의 부상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산의 대응전략을 지정학, 물류,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셨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특히 북극항로를 단순한 새로운 해상 통로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물류질서의 변화 가능성과 부산의 미래 전략까지 연결하여 설명하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표 전체의 구성도 북극항로의 개념과 필요성, 기회 요인, 부산의 준비와 도전, 그리고 대응전략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발표의 강점은 북극항로를 단순한 운송거리 단축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해양물류의 축 변화와 국가 및 도시의 전략적 선택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자료에서 제시하신 것처럼 북극항로는 부산-로테르담 기준으로 기존 남방항로보다 거리와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점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또한 싱가포르가 남방항로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세계적 물류거점으로 성장했듯이, 북극항로 시대에는 부산 역시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발표에서는 북극항로의 기회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 물리적 환경 위험, 경제적 불확실성, 법·제도적 쟁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극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경쟁, 통신 인프라 부족, 기상 변화, 보험료와 쇄빙 비용 문제 등은 북극항로의 현실적 제약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산의 대응전략을 단순한 환적 기능 확대가 아니라, 거점항 육성이라는 보다 큰 비전으로 제시하신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발표에서 거점항을 기술, 금융, 산업, 문화가 융합된 복합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정의하신 점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또한 개방성, 연결성, 융합성, 전문성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전략을 정리하신 점도 부산의 미래 비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단순한 항만도시가 아니라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 확장하려는 구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아래와 같은 부분이 추가된다면 독자의 이해와 논문의 주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째, 북극항로의 잠재력과 현실적 상용화 가능성을 조금 더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에서 북극항로의 거리 단축 효과와 전략적 기회는 매우

잘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상업항로로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환이 어느 시점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극항로는 잠재력은 크지만 상용화의 속도와 범위는 불확실하다는 제약이 큼니다. 다시 말해, 북극항로가 “가능한 미래”인지, 아니면 “가까운 장래의 현실적 대안”인지에 대한 단계적 전망이 조금 더 제시되면 발표의 정책적 함의에서 부산이 즉각적 대전환이 아니라 단계전 준비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둘째, 부산의 비교우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실증적으로 제시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와 잠재력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산이 북극항로 거점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내외 경쟁 항만(울산, 광양, 인천, 일본 항만, 중국 동북연해 항만 등)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우위가 있는지, 어떤 인프라와 제도 보완이 추가로 필요한지, 그리고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제시되면 정책 제언의 설득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러시아와의 협력 문제는 기회와 리스크를 보다 입체적으로 함께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발표에서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산업, 기술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협력은 분명 기회인 동시에 외교적·제도적 불확실성도 매우 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협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부산이 취할 수 있는 대안적 전략도 함께 검토해 보시면 연구의 균형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의 대응전략을 개방성, 연결성, 융합성, 전문성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 전략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 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전략이 실행 단계로 넘어갈 때, 특히 어떤 주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북극항로의 전략적 가능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 그리고 인프라 제약 등 다양한 리스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북극항로의 상용화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진행될 경우, 부산이 취할 수 있는 대안적 해양물류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세종대학교 황규연입니다. 좋은 연구를 해 주셔서, 토론문을 작성하면서도, 현장에서 발표를 들으면서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변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한 유럽의 천연가스 조달구조 재편을 역사적·지정학적·산업전략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표에서는 냉전 시기부터 형성된 러시아와 서유럽의 천연가스 연결 구조,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산 가스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심화된 유럽의 의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중심의 공급망 다변화가 어떻게 빠르게 진행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며, 부산이 어떠한 전략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셨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첫 번째 인상 깊었던 점은 이번 발표가 에너지 문제를 단순한 자원 조달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산업전략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과 기존 파이프라인 인프라에 의존하면서 공급안보 측면의 위험을 상당 부분 누적시켜 왔습니다. 이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 재편이라는 높은 비용을 치르게 된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오늘날 한국이 에너지안보와 경제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발표가 유럽의 대응을 구체적인 인프라 변화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산 PNG 의존도 감소, 미국·노르웨이·카타르 등으로의 공급선 다변화, 그리고 LNG 터미널과 해상 LNG 공급장치(FSRU) 확대 사례를 통해 유럽의 대응이 단순한 외교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인프라 재편으로 이어졌음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점은 공급망 변화가 결국 물류·항만·저장·재기화 설비와 같은 실물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발표의 후반부에서 부산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신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부산을 LNG 병커링 허브,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 FSRU 및 해양에너지 산업의 집적지로 구상하신 것은 단순한 항만 경쟁력 차원을 넘어, 에너지·조선·해양물류 산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발전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이 해양도시라는 점과 한국 조선산업의 강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략 제시는 상당한 정책적 상상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아래와 같은 부분이 추가된다면 독자의 이해와 논문의 주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왜 부산이라는 특정 지역의 전략과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발표는 큰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지만, 부산이 실제로 다른 항만도시나 경쟁 거점과 비교하여 어떤 비교우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LNG 벙커링 허브나 채수출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추가된다면 지역전략으로서의 설득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천연가스 전략과 에너지 전환 전략의 관계를 조금 더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LNG 와 PNG 공급망 재편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탈탄소와 친환경 해운연료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LNG 중심 전략은 과도기적 전략인지, 아니면 암모니아·메탄올·수소 등 차세대 연료 인프라로 확장되는 중장기 플랫폼 전략인지가 더 분명해지면 발표의 정책적 방향성이 한층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한국의 대응전략에 있어서도 보다 세분화된 정책 프레임이 제시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선 다변화, 장기계약과 현물조달의 조합,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역할 분담, 대미 통상압력 대응, 에너지안보와 가격안정의 균형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면, 오늘 발표의 정책적 함의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에서 부산을 LNG 벙커링 허브 및 해양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제시하셨는데, 발표자께서 보시기에 부산이 동북아의 다른 경쟁 항만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가장 결정적인 비교우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천연가스 공급망 재편은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전환이 불가피한데, 발표자께서는 부산의 전략이 LNG 중심의 과도기 전략인지, 아니면 향후 암모니아·메탄올·수소까지 포괄하는 장기 에너지 허브 전략인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유럽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불확실성의 시대 부산의 나아갈 길” 토론문

영산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김윤경

[주제 1]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변화와 부산 경제의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은 과거의 비용 효율성 중심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보화 (Securitization), 내재화, 블록화, 그리고 분절화라는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광물 자원들이 이제는 국가 간 패권 다툼의 핵심 병기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자원 보유국들은 자국 내 자원 보호를 위해 수출 금지나 국유화와 같은 자원 민족주의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흑연, 망간, 희토류 등 미래 첨단 산업의 필수 광물 정제련 분야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목죄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과거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기자재나 기계금속은 주로 철강재를 활용했기에 이러한 광물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가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미래전략 9대 산업'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테크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은 물론, 디지털테크와 융합부품소재에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특정국 의존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의 89.3%, 인조흑연의 64.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 혼합물의 경우 69.1%에 달하는 수입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글로벌 공급망의 작은 균열만으로도 부산의 신성장 동력 자체가 마비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부산은 정부의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 대외 협력 채널을 지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산항의 세계적인 물류 거점 기능을 극대화하여 핵심광물의 전략적 비축 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단순 수입을 넘어 폐배터리 등에서 희귀 광물을 추출하는 '도시 광산' 형태의 재활용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배후 단지로 육성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공급망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주제 2] 불확실성 시대 부산의 SMR 산업 육성과 로컬 전략

SMR(소형모듈원전)은 이제 단순한 전력 생산 시설의 개념을 넘어, 생성형 AI 구동을 위한 필수 인프라 라이자 일종의 '인프라 화폐'로 그 가치가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 체제가 국가 주도의 중앙 집중형·수직적 통합 모델이었다면, 현재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자본이 직접 에너지를 조달하고 설계에 참여하는 수평적 분업 모델인 '에너지-데이터 복합체'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SMR 시장은 미국 중심 해양세력의 개방형 규범 모델과 중국·러시아 중심 대륙세력의 폐쇄형 주권 모델이 충돌하는 기술지정학적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실증의 권력화' 현상입니다. 중국이 링룽 1호(ACP100)를 통해 세계 최초의 육상용 상용 SMR 실증 데이터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은 이론적 안전성을 넘어 실제 가동 데이터를 가진 쪽이 차세대 원전 시장의 실질적 표준(De Facto Standard)을 장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입니다. 한 번 결정된 설계 인증과 운영 데이터는 향후 60년 이상의 기술 경로를 결정하는 강력한 '제도적 잠김(Lock-in)' 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2026년 3월 9일, 전국 최초로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를 착공하며 이러한 글로벌 기술 경쟁의 전초기지로서 전략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이 나아갈 길은 주기기 제작 중심의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SMR 시스템의 두뇌와 혈관 역할을 하는 보조기기(BOP)의 글로벌 표준 검증을 수행하는 '인증 플랫폼' 역할을 선점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장의 무탄소 에너지 생산 능력과 강서의 데이터센터 수요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부산형 에너지 파운드리 전략'을 통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에너지를 찾아 부산으로 직접 입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부산이 에너지 수용가에서 벗어나 미래 에너지 생태계의 '제도적 설계자'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주제 3] 북극항로(NSR) 개척과 부산의 관문 항만 전략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해빙의 가속화는 인류 공동체에는 거대한 위협이지만, 역설적으로 동북아 물류 지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혁명적인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NSR)는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남방 항로 대비 부산과 유럽의 로테르담 간 거리를 약 37% 단축시키며, 항해 시간을 1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이 항로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아시아-태평양 항로의 기점으로서, 북극항로 시대의 '관문 항만(Gateway Port)'이 될 최적의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이 북극항로의 실질적인 허브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과 선박을 유치하거나 물동량 지표에 연연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북극의 가혹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항만 서비스 생태계를 지역 내에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극지 항해용 쇄빙선 및 내빙 선박의 특수 수리·개조 수요에 대응하는 조선 기자재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영하의 기온에서도 가동되는 기자재 보급 거점으로서 배후 단지의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북극해 연항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북극권 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된 전진 기지 역할을 선점해야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극지의 실시간 기상과 빙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부산항을 단순히 물리적인 항구가 아닌 '글로벌 해양 전략 정보 플랫폼'으로 진화시켜야 합니다. 북극항로는 부산이 싱가포르나 상하이와의 양적 경쟁을 넘어 질적으로 차별화된 세계 1위 항만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주제 4]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변화와 부산의 대응 전략

전 세계적인 에너지 지정학은 이제 석유와 가스라는 '자원 매장량' 중심의 정치를 넘어, 무탄소 에너지 기술 표준과 공급망 통제권을 다투는 '기술 체제 경쟁'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대형 전력망이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송전망 포화라는 3중고(Triple Constraint)에 직면함에 따라, SMR과 같은 분산형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체질 개선은 이제 부산 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핵심 대응 전략은 '에너지의 지역화'와 '기술의 글로벌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산형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산업 단지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를 통해 확보된 '탄소 중립 경쟁력'을 글로벌 표준과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한 '부산형 i-SMR 운영 모델'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이는 부산이 단순히 전력을 소비하는 수용가에서 벗어나, 미래 에너지 생태계의 규범을 만드는 '제도적 설계자'로 거듭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자체 주도로 로컬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부산만의 특화된 에너지 관리 표준과 안전 규범을 정립하고, 이를 OECD나 IAEA 등 국제기구의 기준과 연계함으로써 부산의 기술 생태계가 글로벌 레퍼런스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결국 에너지 주권 확보는 부산의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규제라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부산의 복합 신성장 전략과 대전환의 길

오늘 우리가 논의한 네 가지 핵심 주제인 핵심광물 공급망, SMR 산업 육성, 북극항로 개척,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가 부산이라는 도시 생태계에 던지는 복합적인 도전이자,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로 엮어내야 할 통합적 과제입니다. 현재 부산은 자원 공급망의 분절화로 인한 제조 기반의 위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업 원가 리스크, 그리고 기후변화가 불러온 물류 경로의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부산은 파편화된 개별 전략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로 통합하는 '입체적 설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SMR을 단순한 전력 공급원을 넘어 핵심광물을 정밀 가공하고 초거대 AI 데이터센터를 구동하는 '미래 산업의 심장'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기장의 무탄소 에너지 생산 능력과 강서의 하이테크 수요처를 수평적 분업 구조로 연결함으로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부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데이터 복합 클러스터'를 완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에너지 주권은 새로운 물류 영토인 북극항로와 전략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북극항로는 부산항이 기존 물류 체계를 넘어 유럽의 첨단 소재와 북극권의 풍부한 자원을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경제적 동맥이 될 것입니다. 부산은 단순히 배가 드나드는 물리적 기점이 아니라, 극지 항해 선박의 수리·관리와 기자재 보급을 책임지는 '글로벌 해양 전략 플랫폼'으로서 그 가치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결국 불확실성 시대의 지자체는 단순한 행정 지원자를 넘어, 산업의 표준과 규칙을 창조하는 '제도적 설계자'로 진화해야 합니다. 부산의 제작 지원 역량이 글로벌 시장의 레퍼런스가 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와 항만 운영의 새로운 규범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1세기의 패권은 자원의 매장량이 아니라, 그 자원을 통제하는 기술 표준과 자원이 이동하는 경로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논의된 담대한 전략들이 부산의 행정력과 결합한다면, 부산은 동북아의 항구 도시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물류 패권의 중심 플랫폼'으로 당당히 우뚝 설 것입니다.

관광산업과 연계한 전략 제언

부산의 미래 전략 산업과 산업 관광(Industrial Tourism)의 융합 모델

1. 에너지 테크(SMR) 기반의 글로벌 비즈니스 및 교육 관광

부산이 추진하는 SMR(소형모듈원전) 산업은 전 세계 에너지 정책 입안자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야입니다. 이를 활용해 기장의 원전 단지와 강서의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를 잇는 '글로벌 에너지 테크 시찰 코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내빈 및 기업인들에게 부산의 정밀 제조 역량을 직접 확인시키는 '세일즈 관광'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 관광객과 학생들을 위해 미래 무탄소 에너지 기술을 가상현실(VR) 등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Eduainment)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부산을 탄소 중립 교육의 세계적 명소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2. 북극항로(NSR)와 연계한 극지 해양 문화 및 크루즈 관광

북극항로의 관문 항만이라는 부산의 지정학적 지위는 물류를 넘어 독보적인 해양 관광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부산항을 북극해로 향하는 '북극 탐험 크루즈의 모항(Home-port)'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관광객들이 부산을 기점으로 북극의 생태계를 경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극

향로의 역사와 미래 기술을 전시하는 '북극해 해양 박물관'이나 극지 체험관을 건립한다면, 부산은 전 세계에서 북극을 가장 가깝고 전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북극권 문화의 아시아 거점'이라는 새로운 관광 브랜드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3. 공급망 안보와 연계한 전략적 MICE 산업의 육성핵심광물 공급망의 안보화와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당면 과제입니다. 부산은 이러한 거대 담론을 논의하는 '글로벌 공급망 안보 서밋(Summit)'이나 '차세대 에너지 소재 전시회'를 정례화하여 MICE 산업의 고도화를 꾀해야 합니다. 자원 보유국과 수요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부산에 모여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비즈니스 관광객(Business Traveler)의 유입을 극대화하고 부산을 글로벌 공급망의 '제도적 설계자'들이 모이는 지적 허브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4. 스마트 시티와 에너지 자립 모델의 관광 상품화분산형 에너지(SMR)와 스마트 그리드가 결합된 부산의 미래형 도시 모델 그 자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강서구 스마트 시티 시범 지역 등에 구현될 에너지 자립 마을과 지능형 전력 관리 시스템(EMS) 시찰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도시 계획가와 환경 운동가들에게 탄소 중립 시대의 '미래 도시 견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 시민의 삶과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보여주는 고차원적인 산업 관광 모델이 될 것입니다.

[결론] 산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허브 도시' 완성

결국 이러한 전략적 분야와 관광의 연결은 부산을 단순한 '여름 휴양지'에서 '미래의 통찰력이 흐르는 산업 관광의 메카'로 진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핵심광물과 에너지가 부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라면, 이를 시각화하고 체험화한 산업 관광은 부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도시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융합 전략을 통해 부산은 산업과 관광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References

- 부산광역시. (2026. 3. 8.). 박형준 시장, "SMR 상용화 전초기지 구축 환영"...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전국 최초 착공[보도자료]. <https://www.busan.go.kr/index>
- 김민주, 서창배. (2023). 중국의 핵심광물 자원 확보전략과 정치·경제적 의미 분석: 리튬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한중관계연구*, 9(2), 115-142.
- 김영귀, 최원석, 조성훈, 이현진, 정민철. (2025). 공급망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방법론 연구: 핵심광물에 대한 적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주혜, 양평섭. (2025).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현정. (2026, 3, 27). 불확실성 시대, 부산의 SMR 산업 육성과 로컬전략(학술대회 발표자료). (사)한국유럽학회·한국아시아학회 공동 춘계학술대회, 부산.

- 안상욱. (2026, 3, 27).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변화와 부산의 대응* 전략학술대회 발표자료]. (사)한국유럽학회·한국아시아학회 공동 춘계학술대회, 부산.
- 정성문. (2026, 3, 27). *북극항로와 부산의 대응* 전략학술대회 발표자료]. (사)한국유럽학회·한국아시아학회 공동 춘계학술대회, 부산.
- Deberdt, R., & Park, H. (2026). Securing critical minerals supplies in the context of a mineral poor country: Reviewing South Kore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Mineral Economics*, 39(1), 45-67.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2). *Mineral requirements for clean energy transitions*. <https://www.iea.org/reports/the-role-of-critical-minerals-in-clean-energy-transitions>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5).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https://www.iea.org/reports/global-critical-minerals-outlook-2025>
- JCDREAM. (n.d.). *Rare earths applications*. <https://jcdream.org/rare-earths-applications/>
- McKinsey & Company. (2025). *Global materials perspective 2025*.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metals-and-mining/our-insights/global-materials-perspective-2025>
- PricewaterhouseCoopers. (2024). *SMR(소형모듈원전) 시장 현황 및 전망 가이드북*. <https://www.pwc.com/kr/ko/insights/industry-focus/smr-guidebook.html>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24). *Digital economy report 2024: Shaping the future of the digital economy in a changing world*. <https://unctad.org/publication/digital-economy-report-2024>
- 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2020; 2024).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 & licensing process for SMR*.



패널 5

불확실성의 시대 사회 패러다임 변화





AI 규제의 정치경제

: 규제모델의 분화와 국가 간 질서 경쟁

일시: 2026년 3월 27일(금) 16:40 ~ 18:00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주희

목차

01. 문제제기

02. 분석틀

03. 사례 분석

04. 결론

문제제기

01

-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의 생산 비용을 급격히 낮추었고 그 결과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자동 생성 콘텐츠가 공론장에 대량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음.
- 문제는 기술 발전 자체보다, 무엇이 사실인지 판별하는 사회적 기준이 약화된다는 점으로 AI 규제는 기술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질서와 신뢰 구조의 문제로 바뀌고 있음.

생성형 AI는 기술 혁신인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조건이 되고 있음.

01

문제제기 - 왜 이것이 불확실성의 시대의 문제인가?

- 오늘의 불확실성은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상시적 조건이 되고 있음.
- 생성형 AI는 사실과 허위, 원본과 복제, 인간 판단과 자동 생성의 경계를 흐리고 있음.
- 이는 정보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책임의 불확실성, 권력의 불확실성으로까지 확대됨.
- AI 규제는 위험 대응을 넘어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AI는 불확실성을 예외가 아니라, 정상으로 만들.

Beck(1992); van der Heijden(1996)



01

문제제기 -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질서다.

- 생성형 AI는 세 가지 질서 문제를 동시에 만들.
 - 첫째, 정보의 진위 판단을 어렵게 함.
 - 둘째, 플랫폼과 모델 제공 기업의 권력을 강화함.
 - 셋째, 기술 경쟁을 경제안보와 외교 전략의 문제로 전환시킴.

AI 규제의 핵심은 정보-권력-안보 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있음.

김주희(2024); 김현정·김주희(2024)



01

문제제기 - 연구질문

- 첫째, 주요국은 생성형 AI의 어떤 위험을 가장 중대한 문제로 정의하는가?
- 둘째, 그 위험 인식은 어떤 규제모델로 제도화되는가?
- 셋째, 이 차이는 왜 국가 간 질서 경쟁으로 이어지는가?

기술은 같은데 규제모델은 왜 다른가?

02

AI 규제의 정치경제
: 규제모델의 분화와 국가 간 질서 경쟁

02

분석틀

02

분석틀 - 기존 연구는 무엇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는가?

- 기존 연구는 국가별 정책과 법제도를 충실히 탐색
- 그러나 대체로 무엇을 규제하는가를 설명하는 데 머물고 있음.
- 따라서 왜 국가마다 다른 규제원리와 다른 거버넌스 구조를 택하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 이 발표는 그 차이를 위험 인식과 질서 선택의 차이로 구별하고자 함.

법과 정책 소개만으로는 규제모델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움.

김주희(2024); 김주희·김현정(202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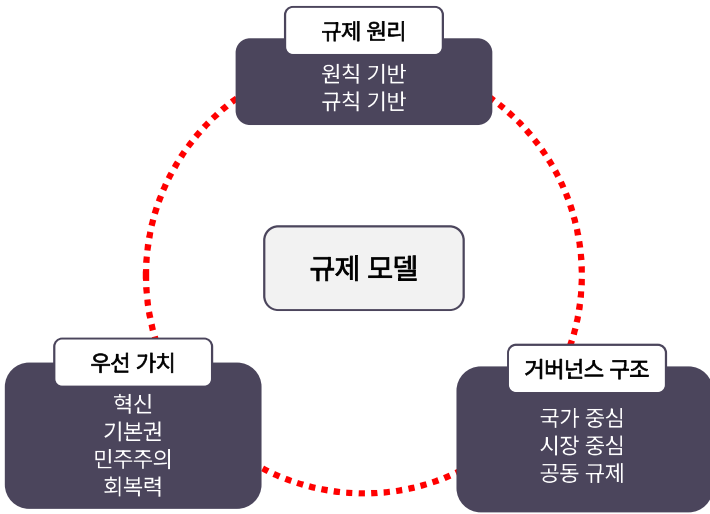
분석틀 - 발표의 핵심 주장

- AI 규제는 객관적 위험에 대한 동시적 반응이 아님.
- 국가는 동일한 기술에 대해 서로 다른 위험을 위협으로 느낌.
- 그 결과 규제원리, 거버넌스 구조, 우선 가치에 따라 그 조합이 달라짐.
- 즉 규제모델의 차이는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선택의 차이에서 나옴.

규제는 기술 대응이 아니라 가치 우선순위의 제도화임.



02 분석틀 - 왜 세 가지 차원인가?



- 이 발표는 AI 규제를 세 차원으로 분석함.
 - 규제원리 - 어떻게 규제하는가의 문제
 - 거버넌스 구조 - 누가 규제하는가의 문제
 - 우선 가치 - 무엇을 위해 규제하는가의 문제
 - 이 세 요소의 결합이 국가별 규제모델을 만든다고 할 수 있음.

**How, Who, Why를 함께 봐야
규제 모델이 보임.**

Di Lorenzo(2012); Braithwaite(1992); Börzel(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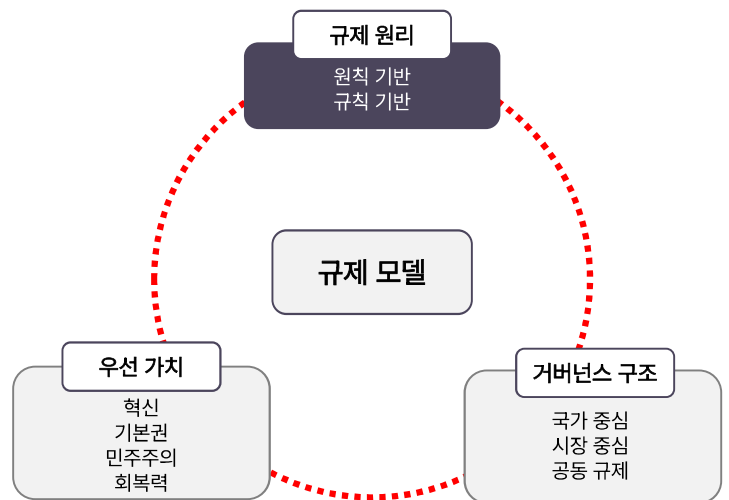


02 분석틀 (1)

1) 규제 원리 - 원칙 기반과 규칙 기반

- 원칙 기반 규제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중시
- 기술 변화가 빠를수록 이 방식은 혁신 친화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
- 반면 규칙 기반 규제는 명확한 기준, 사전 통제, 법적 예측 가능성을 중시함.
- 생성형 AI처럼 적용 영역이 넓은 기술에서는 이 차이가 규제모델을 분기하게 함.

원칙 기반과 규칙 기반의 차이는 법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불확실성 대응 방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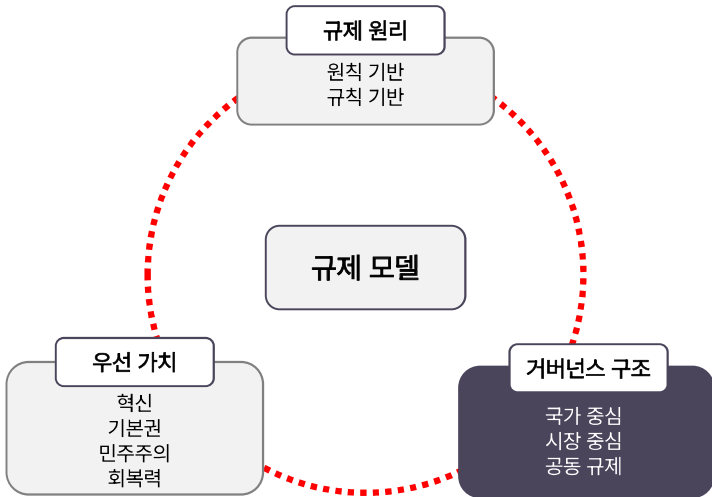


Di Lorenzo(2012); 김주희·김현정(2024)



02 분석틀 (2)

2) 거버넌스 구조 - 국가, 시장, 공동 규제



- AI 규제는 국가가 단독으로 설계하기 어려움.
- 기술 전문성, 데이터, 실행 역량이 민간 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 그러나 시장에 집중될 경우 공공성과 책임의 문제가 제기됨.
- 따라서 AI 규제는 국가 중심, 시장 중심, 공동규제라는 권한 배분의 문제로 나타남.

AI 규제의 차이는 곧 권한과 책임을 누구에게 배분하느냐의 차이임.

김주희·김현정(2024); Börzel(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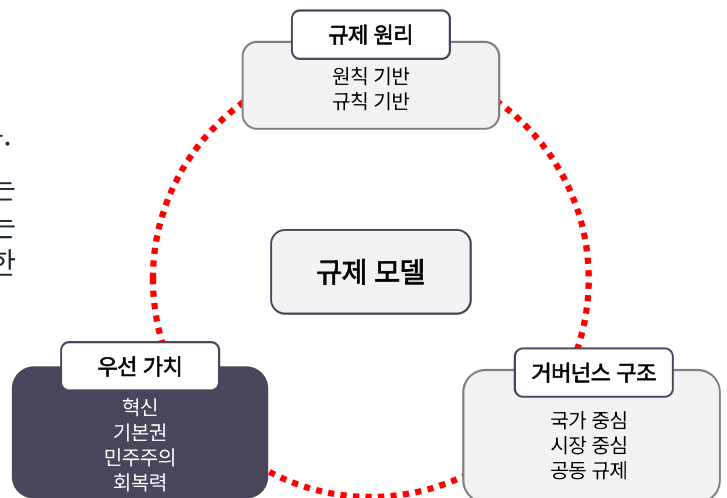


02 분석틀 (3)

3) 우선 가치 - 무엇을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가?

- 모든 국가는 AI의 혁신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식
- 그러나 무엇을 더 본질적인 위험으로 보는지는 다름.
- 어떤 국가는 혁신 저해를 더 우려하고, 어떤 국가는 기본권 침해를 더 우려하며, 또 어떤 국가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의 약화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삼음.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규제 강도가 아니라, 핵심 위험의 정의임.



김주희(2024); 김현정·김주희(2024)



03 사례 선택 – 왜 이 다섯 국가인가?

- 미국과 EU는 규제모델의 두 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
- 영국과 스위스는 그 사이에서 조정과 혼합의 가능성을 보여 줌.
- 핀란드는 법률 중심 규제를 넘어 사회적 회복력이라는 대안을 제시
- 따라서 이 다섯 사례는 국가 비교가 아니라 규제모델 비교를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사례들은 서로 다른 규제 논리와 질서 비전을 대표함.

03

AI 규제의 정치경제
: 규제모델의 분화와 국가 간 질서 경쟁

사례 분석

03

03 사례 분석 (1)

1) 미국 - 미국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 미국의 2025년 AI 정책은 규제 강화보다 리더십 회복과 경쟁력 확보를 전면에 두고 있음.
- 백악관은 2025년 1월 "미국 AI 리더십의 장벽 제거"를 공식화했고, 7월 AI Action Plan에서는 90개 이상의 연방 조치를 제시했음.
- 이 문서들은 혁신 가속화, 인프라 구축, 외교·안보 주도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음.
- 즉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AI 자체보다 혁신과 주도권 상실이라고 할 수 있음

정책 기조

- AI 리더십 회복
- 혁신 가속화
- 안보·외교 주도

대표 문서

- 2025. 1 행정명령
- 2025. 7 AI Action Plan

핵심 위험

- 혁신 저해
- 경쟁력 상실

미국은 AI의 위험보다 혁신 상실의 위험을 더 크게 봄.

White House(2025); 김현정·김주희(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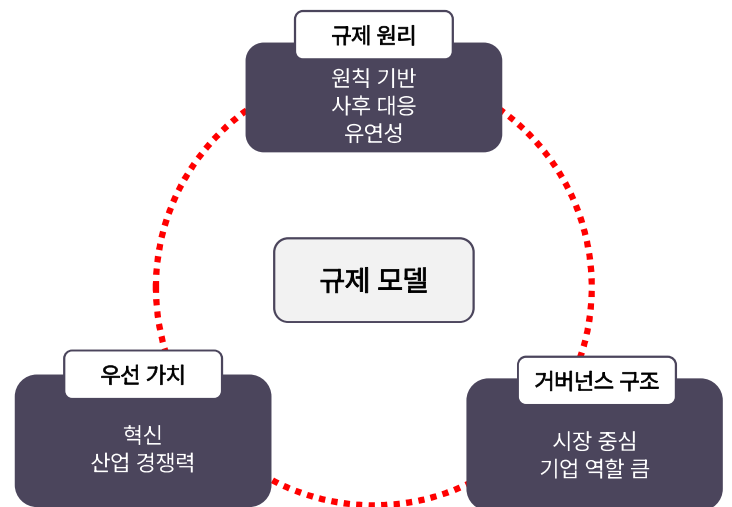


03 사례 분석 (2)

1) 미국 - 미국 규제모델의 구조

- 규제원리 - 원칙 기반 접근에 가까움.
- 거버넌스 구조 - 시장 중심성이 강하며, 기술 기준과 실천 규범은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
- 정책의 우선 가치 - 혁신과 산업 경쟁력
- 따라서 미국 모델은 원칙 기반 + 시장 중심 + 혁신 우선의 결합으로 정리할 수 있음.

미국 모델은 통제보다 혁신 질서 유지에 더 가까움.



White House(2025)



03 사례 분석 (3)

2) EU - EU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 EU는 생성형 AI를 혁신 자산인 동시에 사회적 위험의 원천으로 인식
- AI Act는 2024년 채택되었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구조를 법제화
- EU의 공식 설명도 목적을 safe and trustworthy AI systems의 촉진과 기본권 보호로 제시하고 있음.
- 즉 EU가 가장 크게 보는 위험은 혁신 지연보다 기본권 침해와 구조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음.

EU는 혁신 둔화보다 권리 침해와 사회적 위험을 더 심각하게 봄.

정책 기초

- Trustworthy AI
- 기본권 보호

대표 문서

- AI Act 2024/1689
- EU 공식 요약

핵심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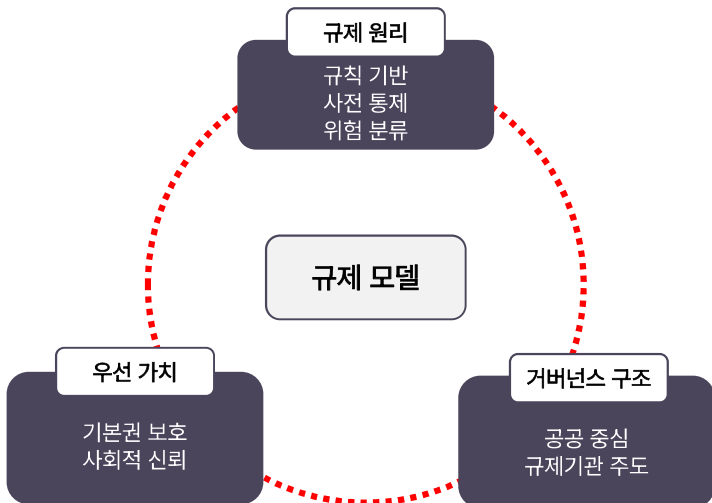
- 권리 침해
- 구조적 위험

EU AI Act; 김현정·김주희(2024)



03 사례 분석 (4)

2) EU - EU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 EU는 규칙 기반 규제를 통해 사전 통제를 제도화
-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투명성, 사람에 의한 감독, 데이터 품질, 책임성 같은 의무를 부과함.
- 거버넌스는 공공 권위와 규제기관 중심으로 운영
- 따라서 EU 모델은 규칙 기반 + 공공 중심 + 권리 보호 우선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음.

EU 모델은 시장 이전에
규범 질서를 먼저 세우려는 모델임.

EU AI Act



03 사례 분석 (5)

3) 영국 - 영국은 무엇을 조정하려 하는가?

- 영국 정부는 AI 규제를 공식적으로 pro-innovation, proportionate, future-proof한 접근으로 제시함.
- 2023년 백서와 2024년 정부 응답은 단일 포괄 입법보다 기존 규제기관을 활용하는 부문별 접근을 택했음.
- 즉 영국은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경직된 규제가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동시에 우려
- 따라서 영국이 조정하려는 것은 사회적 위험만이 아니라 규제 자체가 낳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영국은 강한 규제와 약한 규제 사이가 아니라 유연한 조정을 선택

정책 기초

- pro-innovation
- proportionate
- future-proof

대표 문서

- 2023 White Paper
- 2024 Government Response

핵심 위험

- 경직성 비용
- 신뢰 상실

UK Government(2023, 2024); 김주희·김현정(2024)



03 사례 분석 (6)

4) 스위스 - 스위스는 무엇을 균형 잡으려 하는가?

- 스위스의 경우 현재 AI에 관한 별도의 포괄 입법이 없음
- 동시에 스위스는 유럽평의회 AI 협약 비준과 국내법 조정을 추진하면서도, 부문별 규제와 연성 규제를 병행하고 있음.
- 2025년 Digital Switzerland Strategy는 AI의 법적 상황과 연방행정 내 활용을 핵심 의제로 설정
- 즉 스위스가 추구하는 것은 강한 일괄 입법보다 외부 규범과 내부 자율성 사이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음.

스위스 모델은 통제보다 조정과 균형 유지에 가까움.

정책 기초

- 연성 규제
- 협의-조정
- 부문별 대응

대표 문서

- Federal AI materials
- Digital Switzerland 2025

핵심 위험

- 불균형
- 조정 실패

Swiss Federal documents(2025); 김주희·김현정(2024)



03 사례 분석 (7)

5) 핀란드 - 핀란드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 핀란드의 AI 4.0 프로그램은 AI를 경쟁력과 공공서비스 혁신의 도구로 보면서도, 사회 전체의 역량 강화와 신뢰를 함께 강조함.
- 2025년 공공행정용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되 책임성과 안전성, 공공행정의 신뢰를 함께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
- 또 핀란드 정부는 EU AI Act의 개시를 공식 발표하여 국가 차원의 조정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즉 핀란드는 기술 통제보다 사회가 AI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민주주의적 회복력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핀란드는 기술을 막기보다 사회의 회복력을 강조

정책 기초

- AI 4.0
- 공공행정 혁신
- 신뢰 확보

대표 문서

- AI 4.0 Final Report
- 2025 Generative AI Guideline

핵심 위험

- 정보 질서 훼손
- 민주주의 약화

Finnish Government(2025); 김주희(2024)



03 사례 분석 - 주요국 규제모델 1차 비교

국가	규제원리	거버넌스 구조	우선 가치	핵심 위험 인식	요약
미국	원칙 기반	시장 중심	혁신	혁신 저해, 경쟁력 상실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험 관리
EU	규칙 기반	공공 중심	기본권 보호	권리 침해, 구조적 위험	시장 이전에 규범 기준을 선제적으로 설정
영국	혼합형	조정형	혁신 + 신뢰	경직성, 신뢰 상실	친혁신을 유지하면서 공공 신뢰를 조정
스위스	연성·혼합형	공동규제	균형·조정	불균형, 조정 실패	강한 일괄 규제보다 조정과 합의 중시
핀란드	사회적 대응 결합형	사회-국가 결합형	민주주의·회복력	정보 질서 훼손, 민주주의 약화	법률 규제보다 사회적 회복력 강화

출처: 저자 작성

주요국의 차이는 규제 강도보다 무엇을 가장 위험하게 보는가의 차이에서 나옴.



03 사례 분석 - 규제원리 중심 비교

구분	기본 접근	통제 시점	규제 성격	대표 특징
미국	유연한 원칙 제시	사후 대응 중심	혁신 친화적	투명성, 공개, 자율성
EU	명시적 규칙 설정	사전 통제 중심	공공성·권리 보호 중심	위험기반 분류, 의무 부과
영국	원칙 + 선택적 규칙	분야별·점진적 개입	적응형·실용형	pro-innovation, 부문별 대응
스위스	연성 기준과 권고	조정과 협의 중심	균형형	soft law, 협의 구조
핀란드	법률 + 사회적 대응 병행	예방과 역량 강화 중심	회복력형	리터러시, 민주주의 방어

출처: 국가 문서 및 선행연구

원칙 기반과 규칙 기반의 차이는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시간감각과 통제 방식의 차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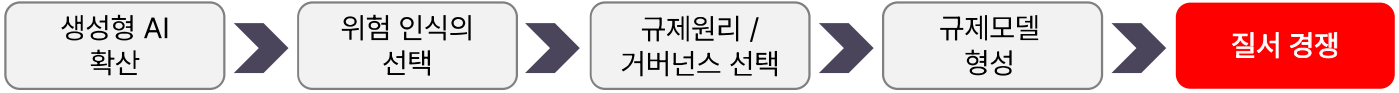
03 사례 분석 - 거버넌스 구조와 우선 가치 비교

국가	핵심 행위자	가장 증대한 위험	지키려는 질서
미국	기업·시장	혁신 상실	시장 중심 혁신 질서
EU	공공기관	권리 침해	규범 중심 공공 질서
영국	정부 + 규제기관	경직성 + 신뢰 상실	유연한 조정 질서
스위스	정부 + 기업 + 전문가	불균형과 조정 실패	협의와 균형을 질서
핀란드	정부 + 교육기관 +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화	사회적 회복력 질서

출처: 저자 작성

AI 규제의 차이는 권한 배분의 차이이면서
동시에 질서 비전의 차이임.

03 사례 분석 - 왜 규제모델은 갈라지는가?



미국: 혁신 상실 | EU: 권리 침해 | 영국: 경직성·신뢰 상실 | 스위스: 불균형 | 핀란드: 민주주의 약화

-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두고도 각국은 서로 다른 위험을 중심 문제로 설정
- 그 위험 인식이 규제원리와 거버넌스 구조, 우선 가치를 다르게 결합시킴
- 즉 규제모델의 분화는 기술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 방식의 차이에서 생김.
- 따라서 규제모델의 차이는 곧 국가가 지향하는 질서 비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음.

분화는 정책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해석의 차이에서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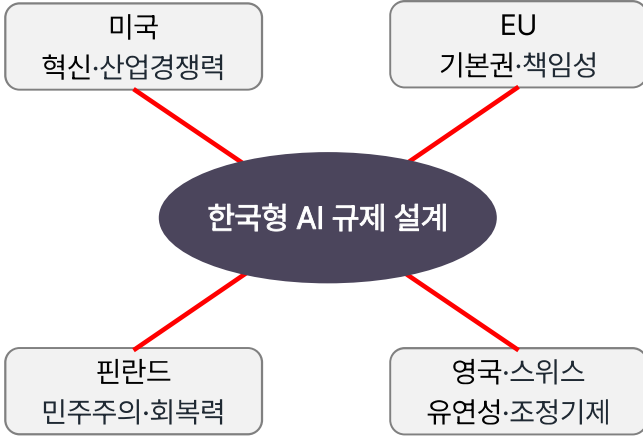


04 AI 규제의 정치경제 : 규제모델의 분화와 국가 간 질서 경쟁

04

결론

04 질서 경쟁과 한국의 과제



- EU는 규범을 통해 기준을 선도하려 하고, 미국은 산업과 기술력으로 질서를 조직하려함.
- 영국과 스위스는 그 사이에서 조정과 실험의 공간을 만들고, 핀란드는 사회적 회복력이라는 다른 축을 보여 주고 있음.
- 한국은 어느 하나를 채택하기보다, 혁신·권리·민주주의 대응을 설계된 방식으로 결합해야 함.
- 따라서 한국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설계라고 할 수 있음.

한국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설계

04 결론

- 생성형 AI 규제는 기술을 억제할 것인가 촉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님.
- 그것은 불확실성이 구조화된 시대에 어떻게 위험을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어떻게 사회 질서를 지킬 것인가의 문제임.
- 주요국 규제모델의 분화는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위험 인식과 질서 선택의 차이를 보여 줌.
- 따라서 AI 규제의 정치경제를 읽는다는 것은 국가가 어떤 미래 질서를 상상하고 제도화하는가를 읽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AI 규제는 기술 통제가 아니라 질서 선택의 정치경제

감사합니다

2026 한국유럽학회 춘계 학술대회 (3월 27일)

불확실성의 시대 극단화된 정치와 사회분열: 프랑스의 정치 양극화를 중심으로

croh@pknu.ac.kr

차례

- 01 문제제기
- 02 프랑스 정치 양극화의 배경
- 03 좌/우 포퓰리즘의 공통점과 차이
- 04 프랑스 극우 정당의 동원 전략
- 05 불굴의 프랑스(LFI)의 동원 전략
- 06 결론

✓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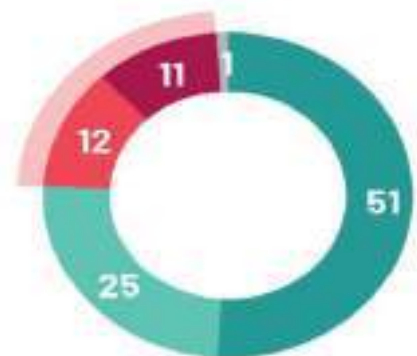
- 프랑스 3인 선거에서 극우-중앙 / 중도 좌파보다 왼쪽에 위치한 정당에 투표가 감소함
 - 전통 3당이 약해진 자라니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부상함
 -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크게 약화되고, 양자 공진에 세 개이 블록으로 강어림
 - **좌파 블록, 중도 블록, 극우 블록의 삼분화(tripartition)**
- 민주주의의 위기: 2024년 프랑스 경제사회개발위원회(CESE) 연례 보고서
 - 프랑스인의 약 4분의 1은 프랑스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
 - 응답자 76%는 정치인들이 시민의 청담과 등받어져 있다고 생각함
 - 응답자 23%는 민주주의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답변함
- 프랑스의 정당 정치 양극화 및 민주주의 위기의 배경을 살펴보고, 비교의 맥락에서 정치적 참여를 높이기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최선의 정치 제도라 생각하십니까?

비동의의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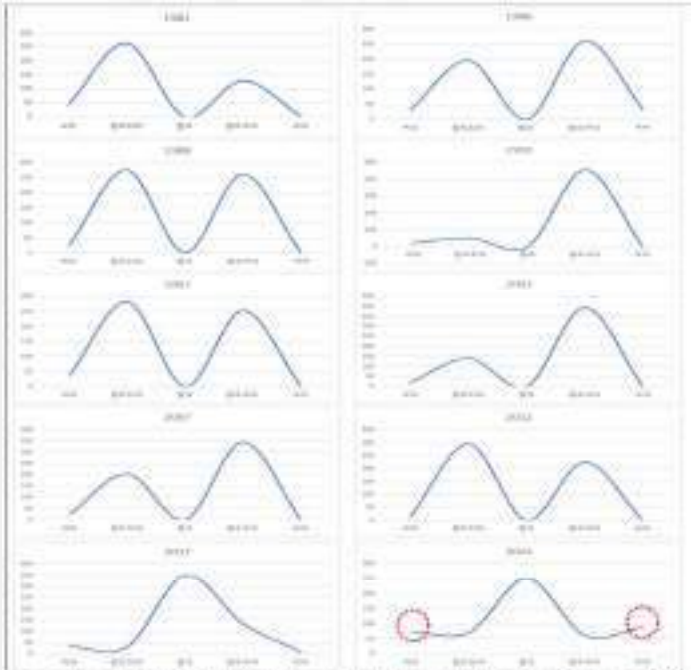
- ▶ 생활 필수 구매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층 : 41%
- ▶ 평균보다 더 큰 불평등의 피해자라고 느끼는 층 : 38%
- ▶ 노동자 계층 : 36%
- ▶ 35세 미만 : 31%
- ▶ 총선 1차 투표 기권자 : 30%
- ▶ 가구 월 순수소득 2,000유로 미만 : 28%
- ▶ 해외 영토(DROM) 거주자 : 43%

■ 매우 동의 ■ 어느 정도 동의 ■ 별로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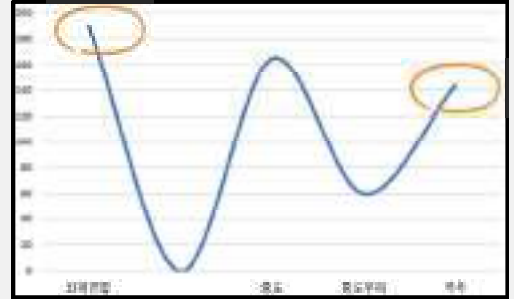
출처: CESE, 2024. "Rapport annuel sur l'état de la France en 2024 - Sortir de la crise démocratique," 53.

프랑스 총선 의석 수 변화



출처: "Electors Legislatives" (<https://www.france-politique.fr/elections-legislatives.html>) (최종검색일: 2022.07.01)

<1981-2022 총선 결과>



<2024 총선 결과>

✓ 프랑스 정치 양극화의 배경 I

- 권력 전달계의 약화와 대표성 위기
 - 중도 좌파(사회당)과 중도 우파(국민연합)은 오랫동안 프랑스 정치의 양대 축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둘 다 급속히 쇠퇴성을 겪음
 - 누적인 대표성 위기: 소수인 이익, 구세대 이익, 국가 불안,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 증가
 - 양대정당이 더 이상 체제 달인을 흡수하는 수인 못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됨
- 새로운 경쟁 구도의 형성
 - 국가 차원 정치이념 양극화 정서를 주축한 세 유급이 등장함
 - 미크롱의 중도 자유주의, 르펜의 부패 보물극비, 멜랑송의 적대 보물극비
 - 특히 극우의 경우 반이민 정서가 여전한 핵심 지지층인 구세대, 사회불안정 정서에서 나온 유권자들에게 호소

✓ 프랑스 정치 양극화의 배경 II

- 포퓰리즘의 확산
 - 극우 국민연합(RN)이 급진적 우파 불공정 프랑스소파의 상징
 - 포퓰리즘 담론이 문체 불경정식이 정서과 전제화 확산됨
 - 가장 정치에 대한 환멸, 인민 대 엘리트의 대립구도, 수권 탈환, 직권 만수무강의 최대 등
 - 프랑스 제5공화국 자체가 '포퓰리즘 가속기(accelerateur de populisme)' 역할을 한다는 비판 (Marc Lazar 2015)
- 대표성의 위기 속에서 극단주의/급진주의 정치 세력이 어떻게 유권자를 동원했는지 심리를 필요가 있음
 - 극우 국민연합(RN)과 급진좌파 불공정 프랑스소파의 포퓰리즘 전략은 무엇이었는가?
 - 두 정당에 '인민'을 구성할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 좌/우 포퓰리즘의 공통점과 차이 I

- 좌파 포퓰리즘(LP)과 우파 포퓰리즘(RP)은 포퓰리즘의 공통 전제 위에서 성장(Grzeski and 2019)
- 최근 사례 공통점
 - LFI와 RN은 모두 상처를 준 수권 인민 대 부패한 엘리트의 대립으로 계급성
 - 가장 정당, 과두지배, 특권층을 공격하면서 자신이 진정한 인민의 대표라고 주장
 - 두 세력 모두 기존 내외정치에 대한 불신과 대표의 위기를 핵심 쟁점 자리로 삼음
- 성장 배경의 공통점
 - 경제위기, 쇠퇴 중기, 만수무강에 대한 환멸이 극우 포퓰리즘 확산의 공통 배경
 - 2017년 선거에서 미국중 중도 노선의 선전이 두드러짐
 - 그러나 이후 중도 정치 공간 중 LFI와 RN이 크게 성장함

✓ 좌/우 포퓰리즘의 공통점과 차이 II

- LFI와 RN은 공화민인(people)을 상자의 주체로 주장하지만, 내정상 차이가 있음
 - LFI = 사회경제적 지배에 맞서는 **보급적 인민**
 - 인민은 경제의 지배를 받는 다수사회 계층과 다양한 피지배 집단의 연합으로 구성
 - 최대 대상: 신자유주의 세계 금융과두제, 경제 및 정치 엘리트
 - 핵심 의제: 복지 확대, 공공서비스 강화, 노동권 보호, 기후 정책 반대 등
 - RN = 국민의 내부와 외부 관계 설정
 - 인민은 '잊혀진 소용수인', '배려된 사람들', 침묵하는 다수 등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공동체
 - 최대 대상: 정치 엘리트 + 이민, 다문화주의, 이슬람 공동체주의자 같은 외부적 위협
 - 핵심 의제: 이민 억제, 국민우선주의, 치안 강화, 문화 독립성 수호

✓ 좌/우 포퓰리즘의 공통점과 차이 III

- LFI와 RN은 모두 유권자, 자유무역, 세계화, 초국적 금융업에 기반적이며 보호주의의 수경 개혁을 강조
 - **유권연합 비판**: LFI는 **간혹과 시장 자유화 비판**, RN은 **국경, 이민, 문화적 정체 수호에 초점**
 - **주권 탈본**: LFI는 **시간권 회복의 성격이 강하고**, RN은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함**
- 하지만 제도 차등, 조직 방식, 지지 기반에서 차이를 보임
 - **제도 차등**: LFI는 제2공화국 원형 제정, 비례대표 확대 등 민주주의 재구성 강조, RN은 강한 지도자, 국민투표 확대 실시 의욕 강조
 - **조직 방식**: LFI는 **사회운동형** 뿌리인 중심 조직을 지향 (그럼에도 명량승 개인 의존성 강함), RN은 중앙집권적 지도부 통한 집단 구조 유지
 - **지지 기반**: LFI는 중간계급과 하층계급, 저분배 요구가 강한 계층의 지지를 받음, RN은 저소득, 저학력, 노동계급에 집중

✓ 프랑스 극우 정당의 동원 전략 I

- 극우정당의 역대 이미지
 - **일제강점기 독립 직후 노골적협박 암살 추진**(1989년 6명의 당원이 9월인 추방을 호치미 벨인 식별)
 - 1995년 5월 1일 전도로 7의 날 기념 행진 도중 도로변의 청년부원들 앞을 다리 위에서 뛰어 뛰어사자
 - 장-마리 르펜은 비서장관을 비하하고 유대인 학살을 시조한 시간으로 평가
- **노동계 후원** (Ouvriers-épargnants)
 - 프랑스 노동자들의 저지른 많은 피해 상응
 - 1980년대 당시(일상) 임금, 가동 수단, 주권취입 시금 국가보조, 일사비 보호 등의 복지정책 제시
 - 세계화와 이민에 맞서 프랑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 '실업률의 정체성' 혹은 '국민 우선' 등의 슬로건으로 빈 이민자 장시 없애
 - 생산적 노동자/ 시장적 노동자의 국민정신 지지
 -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정신을 지지

✓ 프랑스 극우 정당의 동원 전략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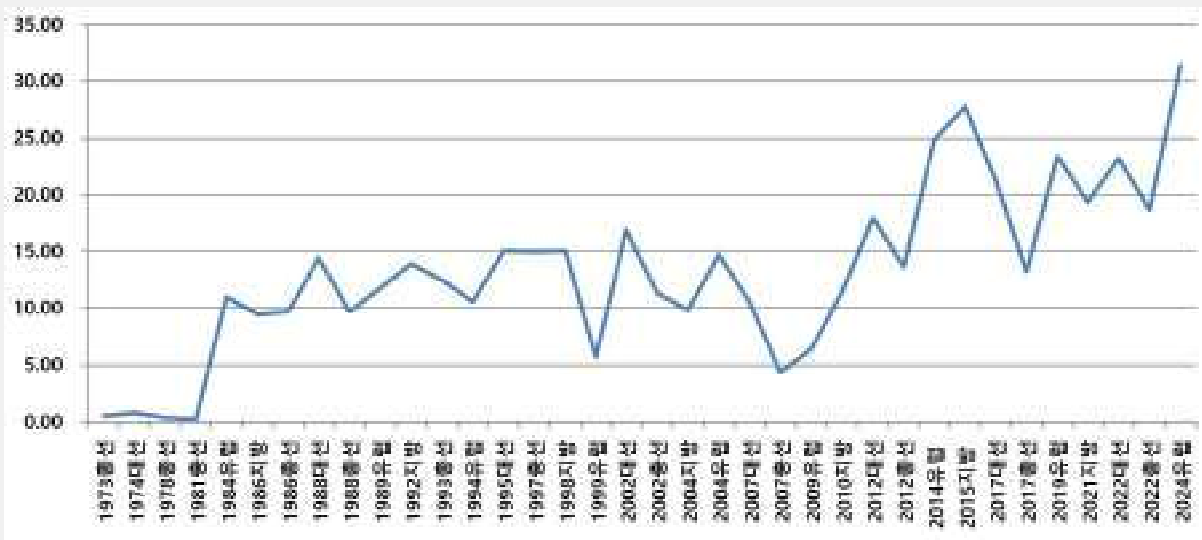
- 마리 르펜의 역대 이미지 재삼
 - 2011년 마린 르펜의 도대대 취임 **백시종을 칠**으려는 것으로 간주, 거부져 무명명인 공개 비판
 - 2011년 4월 나사 상양 시진을 유포한 청년당원 총담
 - 2011년 7월 노르웨이 테러사건을 블로그에서 유포한 당원 총담
- 라이스테(Laënnec) 마린 캉조
 - 라이스테: 국가가 종교의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석구 보호한다는 사회 원칙
 - 세속공화국 헌법 제1조 제1항에 명시
 - 국가 주권정당인 라이스테: 이민이 프랑스 전통의 정통을 위협한다고 비판
 - 2012년부터 라이스테: 합의를 일반적으로 언급하며 영의 주요 이념으로 전기 수형
 - 금학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변모

✓ 프랑스 극우 정당의 동원 전략 III

- 라이스테(Laïcité)의 무기화
 - 종교적 역할과 권력이로부터 자유를 지켜주는 보편 원칙이 이민자 집단들 향한 배제와 공격 원인으로 변모
 - 공공장소에서 모든 종교적 상징을 착용 금지
 - 공립학교 입학 금지에 대한 논쟁
 - 2015년 파리 테러에서 희생자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도포 위기도
 - 파리시에서 기도 시설을 세운 일로 → 이슬람교에 대한 상부 지원 비난
 - "우리가 파리 테러(9/11)의 무슬림 신도들에게 구명 장갑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권력이 어떤 권리로 라이스테의 우리의 법을 주종하는가?"



• 국민연합(RN) 득표율 변화 (1973-2024)



✓ 불굴의 프랑스(LFI)의 동원 전략 I

- LFI 창당의 배경
 - **몽탕송은 2016년 7월 LFI를 출범**시킴. 기존 정당이 등에서 새로운 다수파를 형성할 수 없다고 주장
 - 2016년 10월 **성관** 「공당의 미래」를 위한 온라인 집회로 제1기 온 상남과 다른 공동 주지임을 강조
 - **세금적 이해관계를 정당의 일반적 이해관계로 확장**하려는 방향 전환
- 정당 상징의 변화
 - 2012년 **붉은 배럴** 포스터와 「공약을 심도하는 구호」 → 2017년에는 **무슨 하는 배럴**과 「인민이 힘 이라는 문구
 - **집회에서 좌파의 전통적 상징인 적색기**의 한테서 없기 내지, 프랑스 국기와 2기 리 하르세에즈 시분
 - **몽탕송은 스스로를 재국주의자라** 표명, 공산당 당원들에게 정당의 기존 적색기(붉은 배럴)를 몰지 않거나 **탈색**의 명 뒤에 위치할 것을 요청
 - **좌파의 언어를 공화국적 언어로** 확장하여 넓은 유권자층을 끌어들려는 시도

불굴의 프랑스 대선 포스터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

✓ 불굴의 프랑스(LFI)의 동원 전략 II

- 주관주의 전략
 - 불굴의 프랑스의 '주관' - 유산법률의 재정규율, 자유무역, 시장 중심 통치가 프랑스 시민이 정치적 선택과 사회 경제 정책의 사용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 지방의회 소집, 재(공)회고 수립, 공적자 소환제, 공공은행, 최저임금 인상, 자유무역협정 거부 등을 요구
- 극우 유권자 흡수 시도: '반노동자(反勞動者) 파시스트는 아닌 자'(l'achés pas l'achos)
 - 주관주의 노선은 원래 극우 시지종 일부까지 흡수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시도됨
 - 국민을 지지하지만 반드시 파시스트는 아닌, 세상에 분노, 한 유권자를 끌어올 수 있다는 기대
 - 시간이 지나면서 주관주의 전략의 강세가 드러남
 - 극우 지지자들이 실제로 불굴의 프랑스의 강령에 동의할 가능성은 그저 없다는 판단이 확산

✓ 불굴의 프랑스(LFI)의 동원 전략 III

- 크레올화적 포퓰리즘(Le populisme créolisé)의 등장
 - 주관주의/이데올로기의 결핵 단위로 이후 비정규직, 저임금, 도시 외곽 지역의 가난층, 일용노동자(日雇者)에 대해 열광
 - 유권자들을 동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2020년 하반기부터는 프랑스를 통일성의 공동체가 아니라 혼종성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로 제시
 - 크레올화는 집단 중심의 기독교적 문화주의의 해체적 국민 개념을 비판하면서 프랑스 공화국의 보편성을 전부 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이행함
 - '일용직 취업주에 / 이민자' 대면 대상으로 축소하려는 비판에 대응
- 불굴의 프랑스의 선거 성과
 - 2022년 대선 1회 투표에서 11.1% 득표율, 2회 마인 르리에 약 42만표 차이
 - 2022년 총선에서 72석 확보 (2017년 17석, 약 4배 증가), 좌파 정당 중 최대 세력 부상 (사석당 26석)
 - 2024년 조기 총선 확대연장 결정하여 차관 세법적으로 득표 (19.5%, 불굴의 프랑스 72석)



“조르당 바르델라의 국민연합(RN)은 언제나 LGBT+를 지지합니다.”



프랑스 국기를 흔드는 불굴의 프랑스(LFI) 집회

✓ 결론

- 프랑스의 정치 양극화: 중도 우파 및 중도 좌파 성향이 대표성 역할을 하는 동안 극우 및 급진 좌파가 영향력을 확대하며 선진형
 - 양극화가 단기 유권자의 감정적 분투이다. 이해 거의 없게 판으로 설명되지 않음
- 좌/우 포퓰리즘 양상은 이념적 극단성을 추구할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대 진영의 상징과 의제를 사용하며 위연급 넘기는 전략을 취함
 - 극단은 정치 정당성이 사용했던 사회적 보호, 국가 개념의 수사로 관해함
 - 급진 좌파는 무례의 국가, 배국주의, 주권 낭만을 활용함
 - 가장 성급에 신성한 승려자를 끌어오기 위해 상징적 상징과 이념을 유력권에 조성함
- 한국에서 정치 양극화기 시민사회 차원의 국민적 대립, 가장 양대 정당 지지층의 적대적 분리라는 맥락으로 이해됨
 - 반면 프랑스 사례는 극단적 대립 대립이 아니므로, 누가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는가의 경쟁이었음

감사합니다.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I. 서론

이 논문은 ‘기반시설’(infrastructure)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 자원과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자원을 관리하는 원칙으로서 공유지(communs)를 결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를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이 제안하는 거시경제적 접근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반시설은 그 자체로 소비재보다는, 투입요소로서 문화, 교육, 혁신, 산업 등 사회·경제적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한 자원들의 집합이다. 투입요소의 기능이 중요한 자원인 기반시설과는 구별되는, 공유지는 자원의 관리 원칙 또는 전략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공유지는 신분이나 사용 목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비차별적으로 접근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관리 원칙이나 전략 또는 이 원칙이나 전략이 적용된 자원을 지칭한다. 실제로, 스타브리데스(Stavrides)는 공유지를, 사람들이 자원을 공유하며 연대와 평등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커모닝(Commoning, 공동화)’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이자 사회적 관계로 정의한다.¹⁾ 기반시설과 공유지는 개념의 층위는 다르지만, 두 개념이 결합해, 공유지의 원칙이 기반시설의 관리에 적용될 때, 큰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반시설의 공동화만으로는 기후 위기와 AI의 범용화가 초래하는 미래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처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은 지역화폐와 이를 보증하는 지방정부라는 구조적 접근으로 공동체에 의한 기반시설의 공동화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전지구적으로 확장 가능한데, 이는 ‘생태 부채’(Dette Ecologique)개념에 기반한 ‘다자간 국제 통화 제도(Multilateral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으로 구체화된다²⁾.

공유지와 관련해서, 주류 경제학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여전히 패러다임으로 삼고 있다. 하딘(Garrett Hardin)이 1968년 Science에 발표된 논문 « The tragedy of the commons : The population problem has no technical solution ; it requires a fundamental extension in morality »에서 기원한 공유지의 비극은, 목초지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의 방식으로 관리하면, 그 결과는 목초지가 소멸한다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1) Stavros Stavrides(2016), 「Common Space_ The City as Commons」, Zed Books.

2) 참조: Michel Aglietta et Etienne Espagn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Paris, Odile Jacob, coll. « Économie ».

지향하는 양치기들이, 공유지로서 관리되는 목초지를 이용할 때, 선택하는 합리적 행위는 자신이 돌보는 양의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양치기들은 돌보는 양의 수가 늘어날수록 수입이 증가하지만, 목초지 이용에 따르는 목초지의 유지·관리 비용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치기들이 돌보는 양의 수를 증가시킨 결과는 목초지의 소멸이다. 이 논문에서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목초지의 관리 방법 변경을 제안한다. 하딘의 제안은 공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도입해, 목초지의 소유권자가 당해 목초지의 유지·관리·보수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딘의 제안에는 공유지로 이용될 경우, 목초지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의 명목으로 개인들이 부담하는 가격은 목초지 이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에 비해 작았지만, 공유지에서 사유지로 전환돼, 목초지의 소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목초지의 소유권자가 목초지 이용 가격을 상승하면 목초지는 효율적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돼 공급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제돼 있다.

주류 경제학의 ‘공유지의 비극’ 패러다임 고수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및 AI 혁명가 초래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확장된 기반시설을 공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 위기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탄소 혹은 물의 순환 같은 지구의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생물·화학적 순환을 교란한 결과로서 정의된다. 즉, 기후위기의 개념에는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다루지는 인간의 활동이 자연과학으로 분류되는 지구과학의 연구가 밝혀낸 과학적 질서를 교란한다는 의미가 함의돼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후 위기는, 근대 자연 및 인문·사회 과학의 출발점인 자연과 인간 혹은 문화 사이에 구축된 경계를 무효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의해 교란된 환경 속에서 비인간 존재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로 자각하게 한다. 이런 자각을 통해서, 기반시설은 도로, 전력망, 상·하수도 시스템처럼 단순히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입요소를 넘어 인간 및 비인간의 생존 가능성(viability)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성과 연관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개방된 공유자원(communs)으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³⁾. 그리고 인간은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비인간 존재들과 공진화를 상상할 수 있고⁴⁾,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은 실제로 공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규정될 수 있다.

3) 참조: Ash Amin(2014), “Lively Infrastructure”, *Theory, Culture & Society*, Vol. 31(7/8), pp. 137-161; Lauren Berlant(2016), “The commons: Infrastructures for troubling tim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34(3), pp. 393-419; Frischmann, B. M. (2012), 「Infrastructure : The Social Value of Shared Resources」, p. 230, Oxford University Press.; Michiel de Lange and Martijn de Waal(2019), 「The Hackable City: Digital Media and Collaborative City-Making in the Network Society」, Springer; Simon Marvin, Colin Mcfarlane, Jonathan Rutherford(2025), “INFRASTRUCTURAL EXTENSIONS: Rethinking Infrastructure in Urban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Colin McFarlane(2011), “The city as assemblage: dwelling and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29, pp. 649-671; Lisa Overholtzer & Cynthia Robin (2015), “The Materiality of Everyday Life: An Introduction”, *ARCHEOLOGICAL PAPERS OF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Vol. 26, pp. 1-9; A. M. Simone(2004), “People as Infrastructure: Intersecting Fragments in Johannesburg”, *Public Culture*, Volume 16, Number 3, pp. 407-429; Stavros Stavrides(2016), 「Common Space_ The City as Commons」, Zed Books.

4) Donna J. Haraway(2016), 「Manifestly Harawa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디지털 혁명과 그 뒤를 이은 AI의 보급과 확산은 인간과 이번에는 기계 혹은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비인간 존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센서, 사물인터넷, 카메라, 드론 등으로 구성되는 센서 네트워크와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시스템을 가상 환경에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기계 학습을 통해 알고리즘을 추론하는 컴퓨팅 등이 사회·경제생활에 통합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AI를 기반시설에 결합해, 일정 공간과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를 대상으로, 대기, 물, 기온 등 자연력, 에너지, 공중 보건, 교통 및 물류 등 자원 배분과 위험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디지털 혁명과 AI의 범용화를 통해, 기반시설은 인간과 비인간의 공진화의 장소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검토할 본 논문의 이하에서는 먼저, 기반시설의 개념 확장을 기술하고, 기반시설 공유화의 주장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지적한 다음, '화폐에 대한 프랑크 제도주의적 접근'의 제안을 살펴볼 것이다.

II. 기반시설의 확장

기반시설은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과 함께 구별없이 사용되는데, 민간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관여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1994년 세계은행 보고서⁵⁾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공공 시설(public utilities: 전력, 통신, 상수도, 위생 및 하수도, 고형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도시 가스), 공공 사업(public works: 도로, 주요 댐 및 관개 및 배수용 운하 사업), 기타 교통 부문(other transport sectors: 도시 및 도시간 철도, 도시 교통, 항만 및 수로, 공항) 등으로 구분하고 다음처럼 규정하고 있다. "기반시설은 (...) 개발 경제학자들이 "사회 간접 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라고 부르는 여러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다. 두 용어 모두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술적 특징(예: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과 경제적 특징(예: 사용자에서 비사용자로의 파급 효과(spillovers from users to nonusers))을 공유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기후 변화, 대기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과 같은 지구적 한계(planetary boundaries)를 넘어서는 위기 속에서, 기반시설은 인간이 자연에 구축한 사회 및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입되는 구조물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 존재(동물, 식물, AI, 빅데이터, 지형, 기후)의 '생존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함께, 강, 호수, 숲, 대기와 같은 환경 자원도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에 물 정화, 기후 조절, 홍수 방지 등의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로 재정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센서, IoT, 카메라, 드론 등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 학습과 알고리즘 추론을 통해, 도시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적응하며 재구성하는 사이버-물리적 기반시설이 등장했다. 이런 기반시설은 에너지 사용부터 공중 보건, 물류 등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 홍수, 지진 등 기후 및 자연재해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처럼 기반시설은 인간 뿐만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이 서로의 존속과 상호의존성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생성에 참여하는 자원부터, 생명, 물질, 인지의 영역을 조절

5) The World Bank(1994), "World Development Report 1994: 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p2.

(modulation)하는 거대하고 복합적인 '사회-기술-생태적 네트워크'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⁶⁾.

Simon Marvin, Colin Mcfarlane, Jonathan Rutherford(2025)는 기반시설의 확장을 다음에 열거하는 5가지 분야에서 식별하고 있다.

1. 자연력 기반시설 (Elemental Infrastructures)

기후위기와 AI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은 자연환경 자체를 기반시설로 부각시키고 있다. 자연력 기반시설은 공기, 물, 흙, 화학물질, 온도와 같은 '자연력 물질'을 조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AI 데이터 센터가 발열관리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추운 기후 지역을 선호하는 것은 기후, 온도가 기반시설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자연력 기반시설은 도시의 공기질, 온도, 습도 등이 일상적인 통치(governance)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나 쾌적한 온도 등을 제공하는 자연력 기반시설은 누구의 비용으로, 누가 접근성을 가지는가 등 사회적 정의 문제를 내포한다.

2. 돌봄의 기반시설 (Infrastructure of Care)

코비드 상황에서처럼 전염병이 창궐해 의료시설과 서비스가 포화된 상황에서, 돌봄의 기반시설은 특히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취약성을 공유하고 돌봄의 상호부조를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존재로 부각됐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신자유주의의 지배로 복지국가 체제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정 내, 커뮤니티 가든, 편의점, 디지털 플랫폼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식량 공유, 주거 지원, 양육·돌봄 등의 상호 부조, 정서적 노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의 기반시설을, 도시 기능 및 주민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반시설 계획에서는 어떻게 인정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3. 다종 기반시설 (Multispecies Infrastructure)

동·식물이나 미생물이 단순히 환경의 일부가 아니라 기반시설의 공동 생산자 혹은 개별 행위자로 재정립되고 있다. 예를 들어, 폐수 처리에 미생물이 활용되거나, 도시의 열을 식히는 식물 시스템, 동물의 이동을 돕는 생태 통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반시설을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비인간 생명체와의 얽힘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인 다종 기반시설의 개념은 다음 세 가지 양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① 용도 변경(Repurposing): 비인간 생명체가 인간이 만든 기반시설의 틈새나 남겨진 공간에 서식하며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② 재조합(Recombinant): 인간의 계획과 무관하게, 혹은 저항하여 하이브리드적 기능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하수시설이 바이러스의 확산 통로가 되는 동시에, 미생물을 채집하여 공중 보건 데이터로 활용하는 하수 역학(wastewater epidemiology)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 Simon Marvin, Colin Mcfarlane, Jonathan Rutherford(2025), "INFRASTRUCTURAL EXTENSIONS: Rethinking Infrastructure in Urban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참조.

③ 화해(Reconciliation): 야생동물 이동통로(wildlife overpasses) 혹은 녹지축(green corridors)처럼 비인간 생명체와의 공존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반시설을 포함한다. 다종 기반시설은, 기후 위기와 그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위기 상황에서, 기반시설을 통해 누구 혹은 어떤 종은 생존을 위한 지원을 받는지 혹은 배제되는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4. 사이버 공생 기반시설 (Cybersymbiotic Infrastructures)

사이버 공생 기반시설은 인공지능(AI), 센서 네트워크, 로봇 시스템 등이 도시 환경에 깊숙이 통합되어 도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재조직하는 기반시설로 정의되는데, 인간, 기계, 그리고 환경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및 물리적 융합을 함의한다. 일반적으로는 자동화된 물류 창고나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처럼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과 센스 또는 로봇장치를 이용한 자동화된 운영이 융합된 반응형 시스템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사이버 공생 기반시설은 단순한 기술적 연결을 넘어 '알고리즘적 행위자성'이 자원 배분이나 위험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통제권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인공지능과 연결된 자동화 시스템의 블랙박스적 성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디지털 흔적을 수집·분석·시각화해 공공 공간에 되돌려주는 실험적 예술 프로젝트인 IAQOS(Intelligent Artificial Quantum Observatory for Society)가 로마 등에서 진행됐다.

5. 신경 기술 기반시설 (Neurotechnical Infrastructures)

이 기반시설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감정 컴퓨팅(affective computing) 등을 통해 인간의 지각, 감정, 의도를 기술 시스템과 직접 연결해, 인간의 인지와 감정, 스트레스 수준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조명, 온도, 작업 흐름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표정과 신체 언어를 센서로 포착하여, 혼잡 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조명이나 디지털 안내판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처럼, 공공 장소에서 생체 인식 감지, 사용자의 감정 상태에 반응하는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작업자의 집중도에 따라 반응하는 일련의 피드백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작업 공간 등이 신경 기술 기반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 신경 기술 기반시설을 통해 인간의 내면(감정, 인지)이 인프라적 통치(governance)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신경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프라이버시, 그리고 기반시설에 내재해 있는 '정상적인' 인지 상태나 감정에 대한 강요(normativity)라는 심각한 윤리적 쟁점이 내포돼 있다.

Ⅲ. 기반시설의 공유지화

앞서 논의에서 자연력, 디지털 지식, 돌봄, 다종 생태계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된 기반시설은 더 이상 고정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유동적이고 참여적인 자원으로 다시 규정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생태적, 정치적, 기술적 차원의 복합적인 위기와 한계를 고려할 때, 확장된 기반시설을 '공통화(Commoning)'하려는 노력을 통해, 비차별적인 접근이 가능한 자원으로 정의될 수 있는 '공유지(Commons)'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확장된 기반시설을 공유지로서 관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확장된 기반시설은 기후위기와 AI혁명이 초래한 불확실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확장된 기반시설에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절된 기온이나 대기 같은 자원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공유지로 규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무차별적이고 개방된 접근을 통해, 모든 인간 및 비인간 존재들이 기반시설에 포함된 모든 자원을 이용해 인간 및 비인간 존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 교육, 담론 혹은 커뮤니티 등을 생산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유화된 기반시설이 가능하게 한 인간 및 비인간 존재의 다양한 활동은 스펠오버(spillovers), 즉 긍정적 외부효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반시설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자원의 생산과 배분을 시장에 일임하는 경우에는 환경이라는 기반시설이 초래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는 과소생산될 수밖에 없다. 시장은 소유권 개념을 기반으로 현재 시점에서 식별 가능하고 전유 가능한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기초과학 연구자나 비영리 활동가가 생산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는 현재 시장 메카니즘에서는 금전적으로 전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공유지로서 관리되는 경우에 비해서 시장 메카니즘 하에서는 자연력, 디지털 지식 등의 확장된 기반시설이 생산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교육 등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캐롤 로즈(Carol Rose)가 제안한 ‘공유지의 희극(Comedy of the Commons)’을 참조할 만하다⁸⁾. 그에 따르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는 경합성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운영된다면, 상업과 사회적 교류가 늘어나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하는 수확 체증(scale returns)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경합성을 내세워 시장 논리에 따라 기반시설을 배제적으로 관리한다면, 기반시설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생산을 허용하지 못하거나 과소적으로만 허용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기반시설의 관리를 시장에 일임하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장의 승자 선별(picking winners) 기능이 미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위기를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승자 선별 기능은 현재 시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전유가능한 수익 전망을 가진 용도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속성을 가졌기에, 시장은, 기후위기와 AI 혁명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옵션 가치(social option value)⁹⁾를 보전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 자연력이나 디지털 지식 같은 기반시설을 공유지로서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범용성이 유지되어, 미래에 위기가 구체화되거나 혁신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필요가 출몰할 때,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 사회적 옵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

7) Frischmann, B. M. (2012), “Infrastructure : The Social Value of Shared Resources”, p. 5, Oxford University Press.

8) Frischmann, B. M. (2012), “Infrastructure : The Social Value of Shared Resources”, p. 6, Oxford University Press.

9) Frischmann, B. M. (2012), “Infrastructure : The Social Value of Shared Resources”, p. 230, Oxford University Press.

뿐만 아니라, 자연력이나 디지털 지식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이용에 시장을 이용한 관리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별 혹은 사용 용도에 따라 차별적인 가격을 책정하거나 접근을 통제하려면, 사용자 식별, 감시, 요금 징수 등에 막대한 정보 비용과 거래 비용이 초래된다. 이에 반해, 공유화는 이러한 복잡성을 줄이고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끝으로, 디지털 지식 같은 기간시설이 포함하고 있는 자원은 추가 사용자를 허용할 때 한계비용이 '0'에 가깝고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방해하지 않는 비경합적 혹은 부분적으로 비경합적 성격을 가진다. 이런 경우에, 시장 관리방식을 채택해, 가격 적용으로 일부 사용자 혹은 용도를 배제하는 것은 기반시설의 무차별적 이용이 초래할 사회적 효용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비효율성을 생성한다.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¹⁰⁾은 하단의 '공유지의 비극'을 과학적으로 해체한다¹¹⁾. 실제로 오스트롬은, 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나 중앙 정부의 위계적 개입 없이도 명확하게 경계 지어진 사용자 공동체가 자치구조를 통해 명확하게 정의된 자원을 공유지로서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사례 연구와 이론 작업을 통해 입증했다. 자치구조는 사용자가 참여해 공동체의 공유지 관리 규칙 제정 및 수정에 참여하는 장치, 참여자가 부담하는 공유지 관리 비용과 획득하는 공유지 사용 편익 간에 비례성 보장,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점진적 제재 장치,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 해결 장치 등을 포함한다. 오스트롬에 의하면, 이러한 자치구조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 소통과 상호작용의 반복을 통해 상호 신뢰가 구축됨으로써 형성된다.

시장과 국가 외 제 3의 길인 공동체 관리를 제시한 오스트롬의 기여는 오늘날의 디지털 네트워크나 생태 환경과 같은 확장된 기반시설이 국가나 시장의 통제를 넘어 자율적인 공유지로 유지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오스트롬은 공유 자원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의 문제로 환원하는 대신, 접근, 회수, 관리, 배제, 양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권리 다발로 제시한다¹²⁾. 이렇게 세분화된 권리 다발은 환경이나 디지털 지식 같은 기반시설에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기반시설에 포함된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사용 방식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공동체가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현지(local)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동체 기반의 자율적인 공유지 관리 모델이 기후위기 대처 혹은 인터넷의 시민적 관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오스트롬은 다중심적 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 모델을 제시한다¹³⁾. 이 모델에 의하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한 차원의 해결책은 없으며, 대신, 단일한 위계적 질서와 관계없는 독립적인

10) 참조: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 Aglietta, M. et Espagne, 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p. 50. coll. « Économie », Paris, Odile Jacob.

12) Ostrom, E. (2012), « Par-delà les marchés et les États. La gouvernance polycentrique des systèmes économiques complexes », *Revue de l'OFCE*, 120, p. 13-72.

13) Ostrom, E. (2009), « A polycentric approach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Background paper to the 2010 world development report »,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095

혹은 상호의존적 의사결정의 중심이,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지 수준부터, 지역, 국가를 거쳐 글로벌 수준까지 여러 계층에 걸쳐 중첩된(nested)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¹⁴⁾

오스트롬의 제안하는 공유지 관리 모델에서 핵심적인 전제는 공유지로서 관리되는 대상 그리고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명확한 경계 설정이다. 실제로, 공유 대상 자원 혹은 공동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임 승차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자율적인 공유지 관리는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자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 대상 자원과 그 책임을 맡은 공동체를 규정하는 것이 해당 자원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부정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¹⁵⁾

그리고 오스트롬의 모델은 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과 상호작용이 신뢰로 이어져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공유지를 관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만, 민족적 혹은 계급적 차이 같은 사회적 이질성(social heterogeneity)¹⁶⁾으로 인한 갈등이 규칙 제정 혹은 집행에 필요한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오스트롬이 강조한 지역 단위의 공동체에 의한 공유지의 자치적 관리 모델은 국가의 인정과 존중에 기반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저작권법에 기반한 국가 차원 혹은 글로벌 차원의 법률 시스템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지식을 공유화하려는 해커들의 개방형 라이선스(open source license) 같은 자율적 규범 체계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은 개방형 하이선스가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들)이 개입하기 때문이다.¹⁷⁾

주류 경제학의 ‘공유지의 비극’ 패러다임은 마거릿 대처가 표현한 대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개인과 시장뿐이다”¹⁸⁾라는 자유주의적 명제와 이 개인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격 신호에 담긴 완벽한 정보에 의존해, 익명성을 유지하며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개념을 전제한다. 사회는 개인들이 가격 정보에 따라 자신의 수요 또는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성된다. 주류 경제학은 자연력이나 디지털 지식도 이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다루고자 한다.

14) Geores, M. E.(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Resource Definition and Scale: Considering the Forest”, The Commons in the New Millennium ; Challenges and Adaptations, edited by Dolšak, N. & Ostrom, E., The MIT Press.

15) McCay, B. J.(1996), “FORMS OF PROPERTY RIGHTS AND THE IMPACTS OF CHANGING OWNERSHIP”, Research Papers in Economics, https://core.ac.uk/outputs/7044371/?utm_source=pdf&utm_medium=banner&utm_campaign=pdf-decoration-v1

16) Acheson, J. M.(2006), “Institutional Failure in Resource Managemen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ume 35.

17) Frischmann, B., M. (2012), “Infrastructure : The Social Value of Shared Resources”, Oxford University Press.

18) 마거릿 대처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문장으로 Aglietta, M. et Espagne, 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p. 77. coll. « Économie », Paris, Odile Jacob에서 재인용.

이에 반해, 오스트롬에서 출발하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를 주장하는 전통에 따라 확장된 기반시설의 공동화를 제안하는 입장은, 개인은 불완전한 가격 정보를 통하지 않고서도 서로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전제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정보 부족으로 불완전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작용이 보다 나은 사회 상황을 낳을 것이라는 제도적 신뢰를 바탕으로, 불완전 선택의 반복 과정에서 발전하는 상호 신뢰와 상호 공감을 통해, 내생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의 전략과 규칙에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 제한된 합리성을 부여받은 개인들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공동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공유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생태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이 여러 사례들을 통해 드러났다.

주류 경제학이 소유권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회관계에 집중했다면, 오스트롬의 다중심주의적 거버넌스는 권리를 접근, 회수, 관리, 배제, 양도 등으로 분리해, 일부 권리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허용해, 사용자들이 상황에 맞게 기반시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동체 관리 체제의 성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IV.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의 거시적 제안¹⁹⁾

기반시설의 관리 전략과 관련해, 주류 경제학의 ‘공유지 비극’ 패러다임이나 공동화는 모두 미시적 차원의 제안이었다. 반면, 이 장에서는 거시적 차원의 제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제안은 Aglietta, M. & Espagne, E. (2024)가 제시한 ‘생태 부채(Ecological Debt)’에 기반한 통화금융 질서로의 구조적 전환에 관한 것이다.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은 주류 경제학의 화폐 이해에 문제제기를 하며 등장했다²⁰⁾. 주류 경제학은 화폐를 ‘중립적’ 성격을 가지는, 시장에 종속된 것으로 이해한다. ‘중립적’ 성격은 상대가격에 의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정되는 시장의 물물교환적 성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시장에 종속된’의 의미는 화폐는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것이다. 따라서 주류 경제학에서 화폐의 의미는, 다른 상품의 경우처럼, 균형 가격에서 일정 규모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화폐를 교환의 매개로 사용하고, 화폐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는 화폐경제하고 하더라도, 화폐의 가격이 영, 다시 말해 균형 상태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으면 화폐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화폐 경제는 일시에 물물교환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 가격의 변화에 따라 가역적으로 물물교환경제에서 화폐경제로 혹은 물물교환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

19) 참조: Aglietta, M. et Espagne, 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coll. « Économie », Paris, Odile Jacob.

20) Benetti, C. & Cartelier, J.(1979), 「Marchands, salariat et capitalistes」, Intervention en économie politique, La Découverte; Aglietta, M. & Orléan, A.(1982), 「La Violence de la monnai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등 두 저작이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을 형성하는 토대로 기능함.

주류 경제학이나 오스트롬과 달리, 아글리에타 자신이 대표적 저자로 분류되는 ‘화폐에 대한 프랑크 제도주의적 관점’은 가치 체계에 기반해 성립되고 영속화된 사회가 개별 구성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총체적(holistic)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에 의하면, 화폐 경제는 구성원들보다 논리적으로 미리 존재하는 전체(totality)이며 구성원은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지위와 의미가 규정되고 전체의 질서와 목적을 위해 상호의존적으로 통합된다. 화폐 경제의 총체성은 화폐에 의해 담보되는데, 이것은 한 사회를 아우르는 ‘이념과 가치의 총체적 집합’인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존재가 화폐이기 때문이다. 이는 화폐가 화폐 경제에서 공통의 언어이자 기준틀로 기능함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가치체계 내부에서 가치들이 구조적으로 서열화되는 가치 위계화되는 데에도 화폐는 관여한다. 이는 공통의 언어로서 화폐가 전체와 관련해 구성요소들을 등급화하는 원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반영합니다.

‘화폐에 대한 프랑크 제도주의적 접근’은 부채에 기반한 화폐 개념이, 근대사회는 물론 전 근대사회에도 총체성으로서의 사회와 그 동학을 고려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즉, 상품의 교환과는 독립적으로 발생했고 논리적으로도 선행하는 부채는 ‘금융(finance)’과 이로부터 파생된 화폐를 이용해 사회의 구성을 설명한다. 화폐는 주권에 종속된 신민을 정의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화폐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경전이나 법률 등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화폐를 사용하는 인간 사회는 초월적 존재 혹은 세속적 통치세력 등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호 호혜적 수평적 관계를 포함한다. 사회에 대한 소속을 나타내는 ‘부채’는, 수직적 위계 질서가 의무의 형태로 부과하는 채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채의 영속성이야말로 당해 사회의 영속성 그리고 총체성으로서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하는 위계적 권위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발생한 화폐의 유통도 영속적이 된다.

‘화폐에 대한 프랑크 제도주의적 접근’은 인류학이나 역사학의 연구 성과를 이용해, 화폐의 존재를 ‘삶의 부채(dette de vie)’ 혹은 ‘시원적 부채(la dette primordiale)’라는 개념을 통해 도입한다. 실제로, 1998년에 출판된,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André Orléan)이 편지한 “La Monnaie Souveraine”은 화폐에 대한 고대 로마, 고대 인도 베다 문명에 대한 역사적 연구 혹은 아프리카와 멜라네시아 지역의 인류학적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연구²¹⁾에 포함된 예를 들면, 유럽 문명의 기원 중 하나인 인도의 신화에 의하면, 인간은 죽음의 신으로부터 삶을 위탁받아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 자체가 신에 대한 부채로 이해됐다. 화폐에 대한 프랑크 제도주의적 접근은 ‘삶의 부채(dette de vie)’ 혹은 ‘시원적 부채(la dette primordiale)’라는 개념을 사용해, 문명에 따라, 인간이 공동체 내에서 정의되는 자신의 삶을 신, 조상, 성인 혹은 베다(Védas) 등 초월적 존재에 대해 부담하는 부채라는 인식을 일반화했다. 인간은 그의 생애 동안 이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상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존재로 전제됐다. 이처럼, 삶의 부채 또는 시원적 부채는 개인의 사회 전체에 대한 종속을 표현하는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관계다. 이 부채를 인정하면서, 개인들은 공동체의 조상신 혹은 신 등 초월적 존재에게 정기적으로 의례,

21) 구체적으로 Charles Malamoud, “Le paiement des actes rituels dans l’Inde védique”, pp. 35 ~52, Jean-Marie Thiveaud, “Fait financier et instrument monétaire entre souveraineté et légitimité. L’institution financière des sociétés archaïques”, pp. 85~126. 참조

희생, 공물 등을 받치는 것으로 채무를 이행한다. 이러한 채무이행의 반복 과정에서 여전히 초월적 존재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질서는 유지되지만, 의례, 희생, 공물을 주재하는 사제, 수장 등이 공동체 통치권력을 장악해, 상기한 위계 질서에서 초월적 존재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삶의 부채 또는 시원적 부채가 세대를 이어 전승되면서 공동체의 세속권력은, 의례, 종교 영역에서 법, 재무, 군사 영역 등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세속권력의 확대 과정에서 화폐가 주도되기 시작했다. 화폐는 총체성으로서 사회가 성립하기 위해서 최초의 구성원들이 신이나 조상신 등 초월적 존재와의 수직적 관계에서 부담하게 된 부채의 상환 과정에서 유래했고, 시원적 부채를 물려받은 동일한 사회의 후대 구성원들에게 화폐는 사회에 내재된 위계화된 가치 질서를 표현하고 강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근대사회에서도, 화폐의 정당성은 화폐를 정의하는 주권이 사회의 총체성을 나타내는 데 달려있다. 화폐는 주권을 대리하는 제도로서, 시장에서 상품의 거래 방법을 규정하고 노동의 사회적 분업구조를 구축한다. 근대 화폐 경제는 노동의 사회적 분업체계로 인해, 아담 스미스가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개인들이 교환을 통해서 생존하는, 다시 말해, 모두가 상인이 되는 사회다. 주류 경제학은, 화폐 분석 사례가 보여주듯이, 사회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화폐는 결제 시스템으로서 존재한다. 결제 시스템으로서 화폐는, ① 경제적 관계를 가격이나 부의 규모처럼 수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회계 단위; ②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화폐화(monnayge)”; ③ 화폐경제에서 등가성 원칙의 표현으로서 잔고 정산의 원칙 등 세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결제 시스템을 상술하면, 화폐화 과정을 통해, 개별 경제주체는 시장에서 판매가 실현되기 이전에 구매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자신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지는 부채로서 획득한다. 그리고 시장 기간 동안 거둬들인 판매 수입을 이용해 화폐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가치 체계로서 지급 시스템에 내재한 가치 위계를 부연하자면, 첫 번째 층위에서는 개별 경제주체의 부채를 화폐화 과정에서 부채 교환을 통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신의 부채로 전환하는 특정 경제주체가 있다. 시장에서 일상적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부채를 발행하는 경제주체는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이라고 한다. 두 번째 층위에서는 화폐화 과정을 통해 제공한 자신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어떠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상업은행이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중앙은행의 부채가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뱅크런(bank run)은 결제수단으로서 상업은행의 부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 주권으로부터 화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의 부채는 중앙은행의 부채로 교환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결제수단으로서, 해당 상업은행의 부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통화금융 질서가 새로운 것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통화금융 질서가 기반으로 삼는 부채의 성격이 바뀐다는 것이다. Aglietta, M. & Espagne, E. (2024)에서는, 산업화된 국가와 현재 세대가 생태 발자국을 축적하는 데 기여한, 자본의 수익성 전망을 기준으로 화폐화 대상이 될 부채를 선별해온 통화금융 질서를 생태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통화금융 질서로 대

체할 것을 제안한다. 생태부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통화금융 질서는 자본의 수익성 대신 환경과 사회의 상호의존성 위에 가치체계를 구성할 것이다. 환경과 사회의 상호의존성은 구체적으로는 ‘행성적 경계(planetary boundaries)’로 알려진 지구 환경을 구성하는 9가지 생물물리학적 임계치로 표시될 수 있다²²⁾.

생태 부채의 개념에는 자연을 더 이상 단순히 개발하고 개척해야 할 재화를 포괄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간 종이 지속하기 위해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의 지속성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져야 한다는 인식이 함의돼 있다. 부연하자면, 선진국들과 현재 세대가 오랜 산업화 과정과 그 정점에 대응하는 생산 및 소비 양식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자연 자원을 단순히 투입요소로서 여기고 대량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축적된 생태 발자국이 일정 지역 또는 부문에서 생태 용량(biocapacity)을 초과하여, 환경 고갈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수질·대기·토양 오염, 생물종 다양성 위기 등을 초래했는데, 이러한 환경 위기가 선진국과 현재 세대가 개발도상국과 미래 세대에 대해 축적해 온 생태 부채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 및 개발도상국과 미래 세대에 대한 연대라는 윤리적 관점에서 산업화된 국가와 현재 세대가 생태 부채를 인정하고, 청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저자들에 의하면, 저탄소 혹은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하려면, 저탄소 혹은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부합하는 통화금융 질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생태 부채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는 참여 국가들의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실효성을 부과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이뤄져야 한다고 두 저자는 제안한다. 생태 부채와 그에 따른 채무이행을 통해 형성되는 금융자산은 화폐로 전환되어, 생태발자국을 축소하면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새로운 국제통화금융 질서다. 생태 부채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 통화금융질서는, 자국 내에서 생태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전략인 생태 계획(ecological planification)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국가들의 자발적인 관계와 국가 간 관계에, 생태 부채에 기반한 화폐화라는 공통의 기준을 부과함으로써 실체를 부여해 효율성을 담보하는 국제기구로 구성될 것이다. 현실적 해석하면, Aglietta, M. & Espagne, E. (2024)의 제안은, 산업화된 국가들이 생태 부채에 내포된 윤리적 태도를 통해,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 그리고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탄소 발자국을 저감하고 저탄소 내지 탈탄소 사회·경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태 계획(formes émergentes de la planification écologique)’²³⁾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국제 금융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생태 계획은 유럽연합이나 한국 등에서 수립한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등에서 기본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그린 뉴딜에는 지구적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 및 사회 체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통화금융 질서에 대한 고려가 결여돼 있다.

22) Aglietta, M. et Espagne, 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pp. 107-110. coll. « Économie », Paris, Odile Jacob

23) 상세한 내용은 Aglietta, M. et Espagne, 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pp. 321-346. coll. « Économie », Paris, Odile Jacob

Aglietta, M. & Espagne, E. (2024)는 대기, 물, 다종 생태계 등으로 확장된 기반시설을 시장으로 조절가능한 '자연 자본'으로 취급하는 것을 비판한다. 이들은 확장된 기반시설을 인간과 비인간 모두 그리고 지구의 '생존가능성(Viability)'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에서 측정할 수 있는 9가지 행성적 경계들이 임계치를 넘지 않도록 생태 계획과 함께, 회계, 금융, 화폐 제도의 구조적 전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요약된다.

1. CARE(Comprehensive Accounting in Respect of Ecology)-TDL(Triple Depreciation Line) 회계 모델: 이 회계 모델에 의하면, 환경적 자원과 인간의 역량은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소모하는 자산이 아니라, 반드시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상환해야 할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부채로서 대차대조표에 기입돼야 한다. 기업은 확장된 기반시설을 훼손한 만큼 미래세대와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가를 위해 이를 복원할 비용(감가상각비)을 재무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이는 자연 생태계가 기업의 거버넌스에 주주와 동등한 권리자로서 참여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2. '그린 스완(Green Swan)'과 잠재 가격(Shadow Prices) 부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금융 위기를 지칭하는 '그린 스완'에 대비한 금융 재편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나 생물다양성 파괴와 같은 생태 기반시설의 붕괴는 과거의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는 파괴적이고 비가역적인 현상을 낳지만, 탄소의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 기반 시설에 내포된 자연력 자원의 사회적 가치도 측정할 수 없는 시장은 내재적으로 금융 재편을 인도할 수 없다. 경제 주체들이 '그린 스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장기적인 생존가능성을 반영하는 '잠재 가격'을 하향식으로 강제해야 한다. 잠재 가격의 도움으로 산정된 '회피된 탄소' 등의 가치는 새로운 녹색 자산으로 인정되며, 중앙은행은 이를 재용자 담보로 적극 수용하여 금융 시장에서 보다 많은 재원이 생태적 인프라 복원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3. 다중심적 거버넌스와 결합된 '지역 화폐(Local Currencies)'의 활성화: 지역 차원의 환경 기반시설을 '공유지(Communs)'로서 관리하기 위해, Aglietta, M. et Espagne, E. (2024)는 지자체와 시민이 주도하는 공익 협동조합(SCIC)²⁴ 형태의 지역 화폐 발행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시장 수익성이 낮아 기존 금융권이 투자하지 않는 생태 전환 프로젝트(공유림 관리, 지역 바이오매스 난방, 수질 개선 등)는 이 지역 화폐를 통한 대출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정부가 이 화폐로 세금 납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화폐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며, 투기를 막고 확장된 기반시설을 돌보는 실물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글로벌 생태 부채 상환을 위한 국제 통화 시스템의 개혁: 전 지구적인 기후 및 생태 기반시설 위기를 자본의 수익성을 중심에 두고, 자연을 천연자원의 저장고로 간주해, 자원

24) Aglietta, M. et Espagne, 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p. 365. coll. « Économie », Paris, Odile Jacob

채굴을 강제해 온 결과로 발생한 생태 부채로 간주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행과 할당이 이뤄지도록 개혁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을 이용해, 각국의 탄소 감축이나 생물다양성 보존 기여도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한다.

V. 결론

기후 위기와 AI의 공용화가 초래하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자연력과 디지털 지식 같은 기반시설을 공유화하는 방안과 기반시설의 구축과 구축된 기반시설의 공유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금융 체제의 구축을 기술했다. 두 가지 대응방안 모두 '공유지의 비극'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주류 경제학의 시장 중심적 방안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한다. 하지만 두 방안은 전자가 지역 공동체, 시민 네트워크, 사용자 그룹 등이 비차별적 접근, 다중심적 거버넌스 등을 이용해 미시적 차원에서 기반시설이 공급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한다면 후자는 국가,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이 지역 화폐, 특별 인출권 등을 이용해서 거시적으로 자본의 흐름을 재편해서 행성적 경계를 경제에 내재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두 방안은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1. 변화의 층위와 메커니즘

기반시설의 공통화는 물, 대기, 기온 같은 자연력이나 디지털 지식을 이윤 추구가 가능한 사유재가 아니라 비차별적 접근 또는 이용이 가능하고 공동체가 관리할 수 있는 '공유지(commons)'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의하면,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다중심적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국가나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시민들이 자연력과 디지털 지식 등의 관리 규칙을 직접 만들고 통제할 수 있다.

미시적이고 상향적(Bottom-up)인 기반시설의 공통화에 비해, 생태부채에 기반한 새로운 통화금융 질서 구축은 자본의 흐름을 화석연료에서 생태적 전환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거시적이고 하향식(Top-down) 접근이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자체가 보증하는 지역 화폐를 발행하여, 지역 내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가 자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생태적 전환 프로젝트(예: 바이오매스, 지역 농업 등)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생태 부채에 기반하는 것으로 개혁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을 글로벌 최종 대부자로 활용하여, 탄소 감축 노력이나 기후 위기 대응과 연계해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2. 가치 평가와 시장 실패에 대한 관점

기반시설의 공통화의 관점은, 공통화된 기반시설이 공급하는 자원을 개방적으로 공유할 때 사람들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공공재와 사회재를 생함으로써, 광범위한 긍정적 파급효과(Spillovers)가 생성된다고 본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내포하고 있는 자원은, 나누어 쓸수록 가치가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교류와 혁신이 증폭되는 '공유지의 희극'의 원천으로 해석한다.

생태부채에 기반한 통화금융체제의 구축 방안은 기존의 이윤(Profit) 중심 회계를 넘어서, 자연을 파괴한 것을 갚아야 할 '생태 부채'로 부채 항목에 기록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시장이 자발적으로 형성할 수 없는 생태 가치에 정부가 '잠재 가격'을 부과하고 이를 금융 자산화하여 저탄소 투자를 유도할 것도 제안한다.

이 두 방안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위기와 AI 혁명이 초래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전략이다. 기반시설을 사유화하여 시장의 단기적 이윤 논리에 맡기면 자연력이나 AI 관련 필수적인 공공재가 과소 공급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를 막기 위해 자연력이나 AI 등 확장된 기반시설을 '공유지'로 두어야 하지만, 자연력이나 AI 등 확장된 기반시설을 공유지를 유지하기 이와 관련된 거대한 생태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때 생태부채에 기반한 새로운 통화 금융 질서가 공유지 기반의 기반시설 구축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자금 조달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부유하는 주체 “베이피아오(北漂)”와 베이징 공간의 의미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유전공학부
이보고

목차

- 서론: 당대 중국 사회 이동의 변화와 “베이피아오(北漂)”
- 본론: 베이징의 안과 밖, 떠도는 청년들
 - 샤오즈(小资)의 꿈을 쫓아서: 청년들의 의도된 도시 안 부유(浮遊)
 - 위계화된 도시의 질서와 베이징을 떠나는 청년들
 - 베이징이라는 도시 공간에 대한 베이피아오들의 감각
- 결론: 도시 간 위계를 넘어 진정한 “사람의 도시화”를 위하여

0. '액체 근대' 즉, 근대의 유동성적 성질에 대하여

▶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

“우선 녹여야 될 견고한 것, 우선 세속화되어야만 할 신성은 수족을 얽어 매고 이동을 가로막고 야심찬 기획을 짓밟는 전통에 대한 충성심과 관습적 권리, 의무였다. …… 게다가 ‘견고한 것들을 녹이는’ 일은 전반적 사회관계의 복잡한 그물망을 느슨하게 만들어, 이제 그 그물망은 헐벗고 보호받지 못하고 비무장인 채로 노출되며, 기업 정신으로 충만한 행동 규칙들과 기업 형태의 합리성에 대한 기준에 맞서 효과적으로 경쟁하기는 커녕,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다.” - 23~24쪽

“액화하는 힘은 ‘체제’를 ‘사회’로, ‘정치’를 ‘생활정책들’로 바꾸고, 사회적 공존의 ‘거시적’인 차원을 ‘미시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린다.” - 16쪽

“근대의 고체 단계 전반에 걸쳐, 유목적 습관은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시민의 권리는 정착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었고 ‘고정된 주소’가 없고 ‘국적이 없다는 것’은 법을 수호하고 법으로 보호되는 공동체로부터 배제됨을 의미했으며, 종종 적극적 박해는 아닐 망정 이 죄인들에게 법적 차별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사실이 원형감옥의 낡은 기술들(이제 대규모의 사람들을 통합하고 훈육하는 주요 수단으로는 폐기된)에 예속되어 있는 집 없는 이들이나 여기저기 떠도는 ‘하층민들’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만, 유목민에 비해 정주하는 삶이 무조건 우월하다는 시대, 정착한 자들이 이동하는 자들을 지배하는 시대는 이제 급격히 종말을 향해가고 있다.” - 11쪽



유연화, 유동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의 문제들

0. 노동력의 저수지로서의 농촌, 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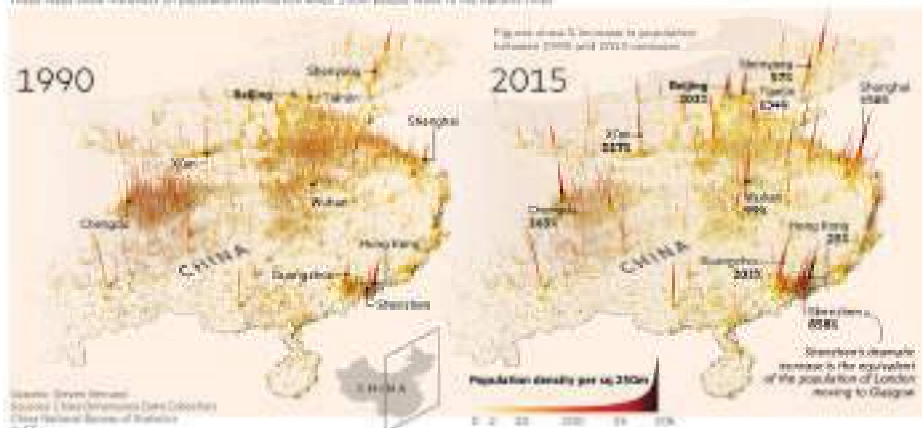
- 외지 노동력의 공헌, 경제적 보상
- 도시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이나 사회 서비스시스템의 미비

1. 대표 단위 - 도시의 만행이와 농촌의 인민공사

- 원테권, “사람들이 분배와 점유에는 다투어 달려들었지만, 이원적 체제의 모순 해결의 어려움은 후대인들에게 떠넘겼다.”

China's great rural migration

If China's major cities formed a country, it would be almost as populous as the US. Their rapid urban in-migration is population redistribution under 200m people from the vast rural areas.



2. 이동이라는 문제의식

- 농민공(农民工)

→ 도시로 진입하여 노동자가 된 농민, 그리고 타지 혹은 현지에서 향진기업에 취업한 농민들로, 장기간에 걸쳐 실제 존재한 집단 개념으로 이미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 일반적인 인식은 엇갈려서 한쪽으로는 이들이 저임금과 장기 노동을 버텼기 때문에 중국 경제 발전이 지속 가능했고 반면으로는 사회 불안의 요소로서 타자화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함.

- 중국국가통계국의 「2017년 농민공감측조사보고 (2017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 2018)」에 의하면,

2017년도 중국 전역에는 총 2억 8652만 명의 농민공 존재 (약 1억 7185만 명의 외지 농민공 + 약 1억 1467만 명의 본지 농민공)

- 초기 이동 목적 : **농업 소득 + (임금 노동) → 도시와 농촌의 경직된 이원 구조 돌파 + 도시의 방향을 향해 농민의 진입로 확보**의 의미
그러나,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농민공의 실업과 귀향 문제가 격화** : 2000만 명에 달하는 귀향 농민공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

- 인구의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온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일방향적 추세는 여전히 주류이기는 하지만, 또한 이제는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추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



- 본 논문은 이들 신세대농민공들이 만들어 내는 기존의 이동과 다른 성격과 방향의 이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임. 그리고 그러한 이동을 만들어 내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사회 내부의 위계가 어떻게 공간에 의해 재편되는지에 대해 실험적으로 논의를 진행.

- **이 같은 계급의 공간적 재배치라는 사유와 가장 부합하는 중국 사회 문제의 주제가 바로 “베이피아오(北漂)”**

3. 반농반공의 농촌 경제 형식

- 도농이원구조 내부의 가역성 구조

: 1세대의 농민공의 경우 대부분 10대, 20대부터 도시로 나왔던 청년들이 이제 50대의 중·장년이 되었고, 도시의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입지가 없어지면서 귀향을 선택하는 농민공의 수 증가

: 현재 중국에서는 약 70%에 해당하는 농촌의 세대가 ‘세대별 분업’, 즉 부모 세대는 대도시로 이주해 임금노동을 하고, 자식과 조부모는 고향에 남아 농업 소득을 얻는 형태의 **반농반공의 가계 형태**를 유지

- 1세대 농민공들이 도시로 이주할 때의 논리

① 도시에서 일을 한 후 변듯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과 준거를 농촌으로 삼고 있는 1세대 농민공의 대부분의 경우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거나 도시에서 하던 일을 농촌으로 돌아가 할 수 있다는 일종의 회귀 의식을 가지고 있음

② 도시에 완전히 정착하는 것

새롭게 성장한 2세대 농민공의 경우에 해당 농촌의 환경과 그 무료함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보다 어떻게든 도시에서 정주하고자 하는 욕망이 큼

※ 세대론에 대한 비판

: 김선기(2014)의 인용에 따르면, 정치가, 저널리스트, 대중적 지식인들이 세대의 중심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문제들을 세대의 개념으로 풀어 이야기하는 현상을 세대주의라 할 수 있음

: 특정한 출생코호트를 세대로 명명하고 그것 내부의 공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 내부의 다양성을 경시하고 그야말로 세대담론 수용자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

4. 신세대농민공 개념의 대두 : 정부의 「신형성진화」 정책과 맞물림

- 기존 농민공에 대한 인식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용납하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배척하는 태도

: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처우에 있어서 커다란 개선 부재

: 도시로 진입하는 농민공의 수가 많다고 해서 이들이 시민화되어 왔다고 오해, 오히려 도시 안에서는 외래주변인구[外来边缘人口] 혹은 반도시화[半城市化], 심지어는 허구적 도시화[虚城市化]의 대상으로 방치되었던 것이 사실

- 2010년 1월 31일 발표된 중국국무원 2010년 중앙1호 문건인 「关于加大统筹城乡发展力度进一步夯实农业农村发展基础的若干意见」에서 처음 신세대농민공[新生代农民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신세대농민공 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



5. 기존 연구

리우지엔어(刘建娥)의 경우, 『중국의 향촌-도시 이민의 도시 사회 진입(中国乡-城移民的城市社会融入)』이라는 저서에서, 농민공의 문제 성격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 정책적 대응은 단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은 거시적이며, 장기적인 시야를 통해 단순 임금 상승이라는 접근보다, 이들이 도시 사회 내부로 녹아들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조건들을 만들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화적 배척을 개선하며,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그리고 사회참여 권리에 대해 전향적으로 개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랑허우,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자본주의를 살아간다[80后]』의 양칭샹(杨庆祥)은 이들 세대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실패의 감각과 은밀하지만 무엇보다 넓게 퍼져 있는 역사적 허무주의 사이의 연계를 읽어내면서, 이들의 미세 서사 속에 들어 있는 희망의 단서를 찾아 그들과 같은 높이의 시선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뤄투(吕途)는 신세대농민공을 포함한 농민공이라는 용어가 도시인들이 이들 노동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거부하는 대신 신노동자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노동의 단기화에 대항하기 위한 저항 주체로서 신노동자 집단의 형성에 대해 주목하고는 있으나, 이들은 아직 정치영역에서 침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이들이 아직 조직되지 못하고, 또 그들의 권익 또한 지속적으로 훼손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 구체적인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대안적 공동체 문화 실험 등의 사례에서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통해 희망을 발견해 나가고 있다.

리지에(李捷)는 「“베이피아오” 청년의 외부 도시로의 이주 희망과 그 영향 요소 - “2015년 베이징시 청년 인구 발전 상황 조사”와 베이징 동부권 인구 변천에 대한 분석」(“北漂”青年的离京意愿及其影响因素-基于“2015年北京市青年人口发展状况调查”及京东圈人口变迁的分析)라는 논문을 통해서 베이징에서 떠돌고 있는 베이피아오 청년이 베이징을 떠나고자 하는 바람과 그것의 영향 요인을 분석

6. 샤오즈(小资)에서 신세대농민공, 베이피아오에 이르기까지

양칭상

문화대혁명 직후의 샤오즈 : “80년대의 샤오즈의 관심과 사유는 자아를 보존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역사와 상호작용적인 대화를 진행”

90년대가 만들어낸 샤오즈 : “90년대의 샤오즈들에게서는 관심과 사유가 스스로 역사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이러한 도피를 통해 방종과 향락을 얻는 것”

- 다시 말해 80년대에는 샤오즈가 특별한 삶의 가능성이었고, 이런 가능성이 바로 혁명의 원동력이지만, 90년대에 이르러 샤오즈는 어느 정도 예정된 삶
- 특히 바링허우, 지우링허우의 중국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삶이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하며,
- 시대에 따른 샤오즈의 형상 변화는 특히 바링허우, 지우링허우의 등장과 함께 탈정치적 맥락 속에서 소비 취향과 문화 욕구가 강화되는 배경과 부합하고 있음을 강조

양칭상은 특히나 **바링허우의 계급적 속성을 규정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샤오즈’**라고 주장

- 모든 바링허우의 내면에는 샤오즈가 되는 꿈이 자리 잡고 있으며, 대체로 “독립과 자유, 존엄이 있는 삶”이 그들의 목표
- 이들의 삶은 이전과는 달리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에 대한 이중의 보장 속에서만 가능한데, 그는 본질적으로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샤오즈 의식’이 출현
- 이는 정치나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신자유주의**나 역사 관념과 관련해 **허무주의, 그리고 실존주의 등의 90년대 이데올로기가 축적된 결과**

7. 신세대농민공의 부유(浮遊)

•北漂

: 이전 세대 농민공에 비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농촌으로 돌아가느니 비슷한 급 간의 도시 이동을 선호

: 이전 직장에 비해 낮은 노동 강도와 높은 임금을 주는 직업이 관심사이고 비슷한 조건의 성내·성외의 다른 도시로 취업해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김

: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동의 성격은 이전 1세대 농민공이 가지고 있었던 ‘농촌-도시’의 단순한 이원구조,

즉 농촌에서 도시로의 취업,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귀향이라는 구조가 아니라, 취업을 위해 ‘소도시-중등도시-대도시-특대도시-초대도시’ 사이를 부유하는,

즉 ‘도시 간 유동’의 경향을 보이는 추세가 강함

: 성 내외의 도시 사이에서의 유동은 농촌 고향과 관계가 끊어진 신세대 농민공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들의 불균형적 분포는 단기적으로 도시 노동력 부족 및 쏠림 현상으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개인의 차원에서는 사회 계층 상 저층화를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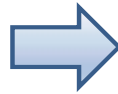


8. 첼밀밀(甜蜜蜜)에서 먼훗날 우리 (后来的我们)

- 중국 젊은이들의 이산 양상 변화

첼밀밀 : 1997년 대륙-홍콩-뉴욕

먼 훗날 우리 : 2017년 야오장-베이징



9. 北京情动 : 北漂

『먼훗날 우리[后来的我们]』

「北漂十年——真实记录我的北漂生活」

“나는 베이징의 떠돌이로, 사방팔방으로부터 또 하늘과 땅으로부터 베이징으로 흘러 들어왔다. 베이징에 기대어, 베이징을 떠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여기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뿌리의 촉각을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가져 올 수 있기를, 또 그래서 도시에 그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역방향의 이동 : 베이징으로만 향하던 이동이 왜 베이징 바깥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들과 추세의 변화가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유추 가능
우선 비(非) 베이징 호적 청년들의 베이징 이탈 의지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상황이 장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것(34.3%)”,

둘째 “자녀들이 베이징에서 진학할 수 없다는 것(21.6%)”, 셋째 “직업의 발전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10.8%)”, 이 세 가지 원인이 총 66.7%를 차지한다.

그리고 만약 베이징을 떠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7가지 지역이 선택되었는데,

“국외(7.5%), 천진과 허난의 대도시(23.9%), 장강삼각주의 대도시(8.9%), 주강삼각주의 대도시(8.5%), 기타 성회도시(16.6%), 그리고 2, 3선 소도시 (18.4%)와 농촌(12.8%)”을 들었는데, 가운데에서 천진과 허난의 대도시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10. 北京에 대한 이들의 감성

이들의 베이징 생활은 호적 제도의 영향으로 여전히 “떠다니고 방황하는” 감각 속에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베이징은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여전히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이기도 하다. 한 편으로 성공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베이징과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집을 사거나 차를 사고, 혹은 교육에 있어서도 호적제도는 지속적으로 이들을 간섭하고 따라서 일상 속에서의 부자유는 여전히 지속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베이징의 내부로 완전하게 녹아 들어가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는 상황이다.

아파두라이와 앨브로의 견해를 참고해 보면, **탈영역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혼종의 공간에서는 내부자와 외부자가 뒤섞이고 따라서 공동체의 결속력이 단순히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개인적·집합적 행동의 차원에서, 공동체에 매몰되지 않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또한 **전통의 가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로컬리티 자체도 퇴색한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장소에서는 문화의 동질화와 이질화가 서로 경합적인 관계양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지적한다.**

바로 베이징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가지고 있는 로컬리티로서만 규정되는 공간이 아니며, **이들 부유하는 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탈영역화의 과정 속에 있다.**

베이징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종의 **실패자로서의 감각**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청년들은 자신들의 부유와 불안을 이제는 인정하고 타협하면서 또 다른 방향을 찾아나서고 있다. **베이징 주변의 텐진이나 허난 지역으로의 청년 인구 유입의 증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의 신세대 농민공에 베이피아오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링허우와 지우링허우의 경우, 근본적으로 그들이 농촌에 귀속되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권에서는 베이징의 시민 역할을 지속해 오면서도 문화적으로나 생활 습관의 수준에 있어서 그 차이가 현저했던 것도 사실이다. 어쩌면 이들이 그만큼 자신의 문화 소비와 도시 취향에 대해 집착하고 갈망해 온 것은 이 같은 지금까지의 실패자로서의 감각을 떨쳐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11. 휘투 : “어쩔 농민공도 아니고, 노동계급도 아니다”

중국에는 이제 “새로운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 이들은 농민공이라 불러서는 안되며, 사회주의 시대의 노동계급과도 동일시 될 수 없다.
- 농촌의 집이란 실제로 돌아갈 수 없는 기호로서의 집일 뿐이며, 우리들의 진정한 귀착지는 도시이다. 이들은 농촌으로 돌아가도 토지가 없다.
- 90허우, 즉 3세대 신노동자들은 농사 경험이 없고, 도시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노동하지 않는, 학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성취하는 베이피아오

- 새로운 노동자들은 하나의 계급인가? 그렇지 않다.
- 신빈민 문제
- 그러나 희망 없음

2억 5천만의 신노동자

- 심천의 신세대 노동자는 평균 1년 6개월, 소주의 노동자는 2년 마다 이직
- 신노동자는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진퇴양난 : 고향에 집을 마련하지 못한 품팔이는 평생 도시에서도 품팔이 - 지방 소도시나 농촌의 집은 단지 기호로서의 집에 불과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농촌에 집을 짓는다)

12. 피촌에서의 생활

“집은 남루했지만, 월세가 300위안이라 꽤 절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몇 달 전 갑자기 10만 위안이 넘는 차를 사 버렸다. 평사는 지금 차를 사는 건 낭비라고 생각했다. 남편의 직장이 피촌에서 가까워 굳이 차가 필요 없고,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피촌의 좁고 더러운 도로를 걷다 보면, 쓰레기 더미 앞에 주차된 차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길도 자주 막혀서 오토바이조차 지나다니기 힘들다. 월세 1000위안짜리 아파트를 얻으면 부엌, 화장실, 샤워실, 냉난방 시설이 다 있다. 그리고 10만 위안이면 10년을 살 수 있다. 평사는 차에 대한 욕망이 일상생활의 질은 높이려는 요구를 물어 버리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차가 있다는 게 부유함과 성공의 표시이긴 하다. 아늑하고 편한 곳에 산다고 해서 남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우리들은 정당하다[女工传记]-중국여성노동자 삶, 노동, 투쟁의 기록』 (뤼투 지음, 286쪽)

베이징 청년들의 정동 : “실패의 느낌” 그러나 “또 다른 선택은 없다 There is no alternative”

“어찌 되었든 현재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젊은이들은 거대한 성공의 환호성 속에서 시대적 고통이 담겨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 고통 가운데는 견딜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의 것들도 있다. 개인이 본인의 실패를 전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 역시 개인의 실패를 완전히 각 개인의 탓으로만 돌려서도 안 된다.”

『바링허우,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자본주의를 살아가다』(양칭상 지음, 31쪽)

13. 샤오즈의 꿈과 현실의 복수

- 샤오즈의 꿈도 세계화와 자본 질서가 우리에게 더해준 일종의 기획이자 상상일 수 있다는 사실
- 그렇지만 샤오즈 계급은 바링허우에게 마지막 구원의 지푸라기, 갖가지 노력과 학습, 발전의 개념이 모두 샤오즈 꿈의 마지막 실현에 의존
- (주말 저녁에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아내를, 뒷좌석에 아이들을 태우고서 밖에 나가 푸짐한 외식을 한 다음, 함께 예술영화를 한 편 보는 것)
- 이러한 꿈은 항상 현실에 의해 잔혹한 형식으로 파괴
- 바링허우들의 유일한 출구는 빈털터리, 즉 새로운 도시 프롤레타리아가 되는 것
- 거페이格非의 작품 <隱身衣>

예정된 실패, 그 원인

“하나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약탈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갈수록 **고착화되는 특권계층**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 바링허우들이 처한 세계사적 위치”

비판적 지점 : 동아시아의 사회가 이러한 자본의 약탈 시스템을 서구로부터 복제하여 자신들 내부에 동형의 모순 구조를 재생산, 사회의 구조 자체를 고착화 한다는 것

『바링허우,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자본주의를 살아가다』(양칭상 지음, 137쪽)

14. 신형성진화 계획 가운데 '사람의 성진화, 즉 사람의 도시화' 전략

- 신형성진화 계획 가운데 '사람의 도시화[人的城镇化]' 전략을 전개

: 『국가신형성진화계획(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年)』

“按照走中國特色新型城鎮化道路、全面提高城鎮化質量的新要求，明確未來城鎮化的發展路徑、主要目標和戰略任務，統籌相關領域制度和政策創新，是指導全國城鎮化健康發展的宏觀性、戰略性、基礎性規劃。”

- 3가지 1억 명 전략

- ① 약 1억 명의 농촌 후커우 이주 인구를 성진으로 후커우를 옮기며,
- ② 약 1억 명이 거주하는 성진 안의 판자촌과 성중촌(빈민 집결촌)을 개량하며,
- ③ 약 1억 명을 중서부 지역 근방에서 성진화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



15. 농민공들의 앞에 놓인 교육 문제 : 신세대농민공의 부유(浮遊)

: 농민공 부모에 의해 막연히 도시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갖고 있던 자녀 세대는 학업을 끝까지 잘 마치겠다는 의지보다는

어떻게든 도시로 나아가 자신의 수입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됨.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세대 농민공이라는 세대가 등장하게 된 것

: 이전 세대와는 다른 형식의 농민공이 등장한 배경에는 **문화 자본에 의한 계급 재생산**이라는 부르디외의 논의가 전도된 형식으로 드러나는 측면 존재

* 이동성의 관점

: 학계의 주류적 관점은 이들이 이전 세대와는 달리 돌아갈 곳이 없고, 오히려 일을 찾기 위해 비슷한 급 간의 도시들을 부유하는 특징 : 北漂

: 이들은 비록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정도가 높고, 직업에 대한 기대치 또한 높으며, 물질과 정신에 대한 향유의 욕구 또한 높지만,**

반면 노동에 대한 인내력에 있어서 전 세대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속성[三高一低]을 갖는 것으로 인식

16. 신형성진화 계획 가운데 '사람의 성진화, 즉 사람의 도시화' 전략

“베이징의 경우 거주증 신청자가 베이징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였을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향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취업해야 하는 상황일 것을 요구하고, 선전의 경우 거주증 신청 전의 거주기간을 12개월로 요구하고 사회보험료도 연속으로 12개월 또는 거주증 신청 전 2년 내에 누적하여 18개월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하이외의 경우 안정적인 취업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베이징시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누적포인트 후커우 등기관리제도**를 예시로 살펴보자면, 누적포인트 후커우 등기제도란 지표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정 퇴직연령 미만의 거주권자에 대해 베이징에서 연속 7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형사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총 9항 지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상응한 평점을 합산한 후 총 누적포인트가 공시점수에 부합되면 곧 해당 거주권자에게 베이징시 후커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그 중 총 9항 지표항목에는 적법하고 안정적인 취업지표, 적법하고 안정적인 주거지표, 교육배경지표, 거주구역지표, 창신·창업지표, 납세지표, 연령지표, 명예표창지표, 준법기록지표 등이 있다.”

“사람의 도시화” 에 대한 문제제기 : 법적 지위의 부여만이 모든 것이 아니다.

17. 결론

- ▶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2018년 12월에 발표한 『중국유동인구발전보고(中国流动人口发展报告)2018』에 따르면, 2015년부터 중국의 유동인구 규모가 이전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부터 완만한 하강 추세로 전환 추정
- ▶ 국가 통계국은 2015년 전국의 유동인구 총량이 2억 4700만 명인데, 이는 2014년에 비해 600만 명 감소
2016년의 유동인구 총량은 2015년에 비해 다시 171만 명 감소
- ▶ 이어서 2017년에도 다시 82만 명이 줄어 총 유동인구의 양은 2억 4400만 명으로 감소
중국 내에서 이동의 절대적 양이 줄어들기 시작 (“解读《中国流动人口发展报告2018》”, 2018)
- ▶ 이러한 이동의 추세 변화 속에서 신세대 유동인구는 이른바 “빠링호우(80后)”가 35.5%, “지우링호우(90后)”가 24.3%를 차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유동인구의 주요한 성원이 이제 새로운 청년층이 되었음
- ▶ 그리고 도시군 간의 유동인구의 발전 추세를 보면, 장기 거류 유동인구, 즉 상주인구로 변화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최근에는 각 성시와 군현 내 유동인구의 비중은 감소. 이는 기본적으로 농촌인구의 성진화가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상징.

17. 결론

- ▶ 이동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배제의 과정 : 문화자본의 유무 정도가 더욱 영향력을 갖게 됨
: 농민공의 이동을 통한 내·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다른 형식의 위계들이 형성 중
- ▶ 이동이 줄어들다는 것은 일면 이미 기회가 줄어드는 **정체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고,
만약 도시들의 대형화 과정 가운데에서 위계가 한 번 정립되면 그 질서가 깨지기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
- ▶ 왜냐하면 대도시화를 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본의 축적량일 것이고,
이러한 기준은 이전의 법적, 혹은 제도적 규제보다 더 공고하게 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의 하향천이를 유발 가능
- ▶ **신형성진화가 의미하는 것이 더 정교하고 세밀한 자본의 혹은 기존 등급 구조의 서열화를 공고화하는 경향으로 나갈 가능성**
: 이동은 이전 1세대 농민공들에게는 차별과 기회 양가적 의미를 지녔지만, 신세대농민공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비자발적 하향천이 혹은 비슷한 수준의 중소도시를 표류하는 궤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큼
- ▶ 현재는 도시들이 존립을 걸고 경쟁적으로 성장에 몰두하는 상황 속에서 도시의 발전 정도에 따라 계단식 위계가 존재하는데,
이 같은 자본화의 위계는 근본적으로 도농이원구조의 질서를 동형(同型)의 구조로 확장하는 결과 초래
- ▶ 이전의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제도적으로 공인되는 불평등 구조였다면, 이후 전개될 상황 속의 대도시와 농촌,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 성진 사이의 불평등 구조는 자본화된 주체들 내면에 각인되고 문화를 통해 중속시켜 더 이상 경계의 바깥을 상상할 수 없는 고착구조로 영구화할 가능성이 큼

17. 결론

- ▶ 본 연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혹은 사회적 차원의 배려를 제안하는 바인데, 우선 이들의 부유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타자화되면서 느끼는 이들의 패배감이나 상실감, 다시 말하면 정신적 상처들을 보듬으면서 도시 내의 귀속감을 만들어 자신의 자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상 감성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 ▶ 그리고 중국 정부의 『국가신형도시화계획[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람의 도시화[人的城镇化]” 개념이 단순히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의 보장과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만 파악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도시 기능의 재배치와 분산을 통해 도시 간 위계화를 지양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문화 자본 상의 차별 구조가 도시와 농촌의 구조처럼 지속적으로 반복, 재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감사합니다

한국유럽학회 공동학술대회 토론문

정승철(국립부경대)

*일정상 토론문은 짧게 제출하고 학술대회 당일날 더 철저히 토론 준비해 가겠습니다.

○ 김주희 (부경대) — AI의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정책

- AI 규제 모델이 국가마다 다르며 이는 국가들이 각자 다른 규제 논리, 인식, 정치경제적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함이라는 주장이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분석이라 여겨짐.
- 국가마다 규제원리, 우선가치, 거버넌스 구조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강조하는 측면이 다르기에 궁극적으로 국가마다 다른 AI 규제 모델이 나타나게 됨.
- 다만 첫번째 규제 원리인 "원칙"기반과 "규칙" 기반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설명 해주면 좋을거 같음. PPT 내용만으로는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거 같음.
- 그리고 PPT에서는 국가별로 다른 규제모델이 나타난다고 언급하셨는데 향후 논문 등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역사, 문화, 경로의존성, 사회적 합의, 기술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을거 같음.
- 미국과 EU, 그리고 유럽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AI를 규제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추후 과제로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 AI 강국들은 어떤 식으로 AI 규제에 대처하는가로 연구를 확장하면 좋을듯 함. 지표에 따라 다르지만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 AI 강국 순위에 나타나지는 않음. 물론 스위스, 핀란드도 AI 규제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각 AI 강국은 어떤 식으로 AI를 규제하는지가 향후 AI 경쟁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음. 미국의 경우 교수님 말씀대로 위험, 통제보다는 혁신, 경쟁력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실제로 AI 분야에서 세계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세계2위 기술력을 보유한 중국은 어떤 식으로 AI 규제에 대처하는지 궁금함. 개인적으로는 중국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AI 개발에 몰두하고 있지 않을까 싶음. 이처럼 세계 1, 2위가 기본권 보호, 위험, 규범 등 보다는 혁신, 경쟁력에 초점을 두고 기술력에서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을 앞서나갈 경우 과연 다른 국가들도 AI 경쟁에서 뒤쳐지는 와중에도 기본권 보호, 위험, 규범 등 가치를 중시하는 행보를 계속해서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들도 결국은 기술력 발전을 위해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방향성을 수정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함.

○ 오창룡 (부경대) — 불확실성의 시대 극단화된 정치와 사회분열

- 프랑스 정치의 양극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심.
- 프랑스 사례를 알아보는데서 더 나아가 프랑스 사례(정치 분열 및 양극화)가 유럽 다른 국가, 혹은 EU 전반에 시사하는 바,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언급해주시면 좋을듯 함. 한국 정치상황과 프랑스 간 공통점,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사회가 프랑스 사회의 양극화 혹은 분열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등을 언급해주시면 좋을 듯함.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김연준

○ 기후 위기 불확실성과 대안적 대응: 화폐제도의 재구축과 기반 시설의 공유지(빈재익)

■ 기후 위기와 AI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반 시설을 공유지로 관리하고 통화제도까지 재구성한다는 주장을 다룸

- 기반 시설의 확장이 핵심 개념인데 기존에는 도로나 전력망 같은 물리적 시설을 의미, 지금은 자연환경, 디지털 지식, 돌봄, AI 시스템까지 포함
- 이러한 자원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존재의 생존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
- 이 연구는 이러한 기반 시설을 시장에 맡기면 외부효과가 과소 공급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보고 공동체가 관리하는 공유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 오스트롬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 중심의 다중심적 거버넌스를 대안으로 제시
- 여기에도 한계는 있는데 공유지 관리는 공동체 신뢰와 명확한 경계가 필요한데 현대 사회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움
-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대안으로 생태 부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화금융 질서를 제안함
- 즉, 자연을 훼손한 만큼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금융과 화폐 시스템을 통해 생태 전환에 자금을 공급하자는 것임
- 본 연구는 공유지 기반 인프라와 새로운 통화제도를 결합해야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
-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제도적·정치적 현실성을 고려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공유지 인프라와 기반 새로운 통화금융 질서의 결합이 필요

- 공동체가 규칙을 만들고 감시와 제재를 수행하면 공유지는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음 → 공유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방식에 있음
- 시장과 공유지 효율적인 면에서 접근하면 외부효과가 큰 자원에서는 시장이 과소공급을 일으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예. AI 기술
-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신뢰형성은 공유지 모델이 항상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생태 부채 기반 통화제도는 UN 등 국제기구의 국제 협력과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여 단기에 실행되기는 쉽지 않음 → 기존 시장 중심 금융이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성을 줌

- 자본의 흐름 자체가 이윤을 중심으로 이동하므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 화폐와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생태 전환에 필요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
- 공유지 모델은 공동체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통화제도 개혁은 국제 정치 및 경제적 합의가 필요함
- 그리고 지역화폐, 에너지 공동체와 같은 공유지 실험과 국가 정책을 결합하는 혼합 모델 필요
- 기반 시설을 공유지로 전환하고 이를 서포트 할 새로운 통화 금융 질서가 요구됨

○ 부유하는 주체 “베이피아오”와 베이징 공간의 의미(이보고)

■ 중국 유동인구 감소와 위계 구조 변화에 관해 설명함

- 2015년 이후 중국 유동 인구 규모는 감소세로 전환하였음(2015년 2.47억 명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이동의 절대적 규모 자체가 축소되었는데 유동 인구 구성은 1980년대 출생 세대가 약 35.5%와 1990년대 출생 세대가 약 24.3% 중심의 청년층으로 재편됨
- 장기 거주(정착)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동 중심에서 정착 중심의 사회로 전환됨
- 농촌인구의 도시화 완성 단계에 진입
- 과거에는 기회, 차별의 양가적 구조에서 현재의 이동은 배제, 하향 이동 가능성이 증가함
- 교육, 능력 등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농민공 이동 과정에서 새로운 위계 구조가 형성됨
- 문제는 이동이 감소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였다는 점임
- 이동이 감소하였다는 점은 기회가 축소되었고 정체 사회 진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대도시 중심 자본 축적에서 도시 간 위계가 굳어짐
- 기존에는 호적과 같은 제도가 이동의 제한이었었던 반면 현재는 자본과 문화 자본이 더 강력한 장벽으로 작용함
- 신형 도시화에서 자본 중심 서열 구조를 더 정교하게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간 계단식 위계가 형성되고 도농 이원 구조는 자본 중심 위계 구조로 재생산됨
- 불평등 구조가 개인 내면에 내재화되어 탈출 불가능한 고착 구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유동 인구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도시 내 상실감, 소외감과 같은 타자화 경험에 대한 대응 필요하며 이는 감성적, 심리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도시 내 소속감 형성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사람의 도시화 개념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데 단순한 법적 위위 보장이나 복지 제공을 넘어야 함

- 핵심 대안으로는 도시 기능 재배치 및 분산, 대도시 집중 완화, 도시 간 위계 구조 완화이며 목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문화자본 격차 재생산 방지로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임

■ 변화의 한 측면을 의미 있게 드러내며 보다 다양한 원인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이동감소가 기회 감소라는 해석에는 과도한 일반화일 수가 있음 → 즉, 양적 이동 감소가 질적 기회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음
- 자본 축적만으로 위계 형성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위계 구조를 자본 요인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환원주의적인 접근일 수도 있음
- 문화자본에는 교육, 기술, 네트워크 등 다양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데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이 분석 도구로서 구체화하여야 함
- 위계가 한번 형성되면 깨지기 어렵다는 주장은 현실에서는 도시 간 경쟁, 정책 개입 등으로 변화가 가능함 → 도시 위계의 고착을 지나치게 결정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 감성적 배려, 소속감 형성 등은 중요하지만 구체적 정책 수단이 부족하여 도시 기능 분산도 현실적으로 기업, 자본 이동 없이는 어려움
- 중국의 특수성만 강조되고 자동화, 매개 노동 등 세계 경제 변화, 기술 변화 등의 영향은 부족함
- 정착이 증가하면서 생활 안정, 사회 통합, 지역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며 유동성 감소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패널 6

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커피문화의 역사적 순환: 프랑스에서 베트남을 거쳐 유럽으로>

정세원 (국립부경대학교)

BY [YOUR NAME]

발표개요

- 들어가며: 커피문화의 순환
- 프랑스 커피문화의 간략한 역사 (도입부터 베트남 식민지 플랜테이션까지)
- 베트남 커피문화의 프랑스의 영향력
- 베트남 커피시장의 성장과 유럽시장 진출
- 마치며: 커피문화순환의 함의 - 상생의 에너지

들어가며: 커피문화의 순환

- 프랑스의 커피문화는 17세기 초 베네치아 상인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지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1671)
- 베트남의 커피 재배는 프랑스 식민지 기간 동안 19세기 말(1857) 프랑스 선교사가 베트남에 처음 들여오게 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 베트남은 그 이후 브라질에 버금가는 커피재배 생산국이 되었다 2023년 기준 EU는 비 EU국가로 부터 커피 2.7백만 톤을 수입했고, 브라질 로부터 921,900톤 (34%), 베트남 으로부터 652,000톤(24%)를 수입했다.



프랑스 커피문화의 역사

- 프랑스의 커피문화는 17세기초 베네치아 상인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졌다.
- 당시 가톨릭 교회는 커피에 대해 강한 저항감을 표출했다.
 - 당시 커피는 “검고 그을음 같은 음료”로 “사탄의 발명품”으로 묘사되었음.
 -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8세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커피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그 전에 먼저 맛을 보게 해달라고 하였다. 시음 이후 그는 “이 악마의 음료는 너무 맛있어서 악마를 속여 세례를 줘야 할 정도다.”라고 선언했다.
- 클레멘트의 이 같은 반응 이후 유럽 전역에 커피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 커피하우스 설립: 베네치아 (1645), 영국 (1650), 프랑스 (1671)

프랑스 커피문화의 역사

- 커피는 1669년 프랑스 루이 14세 궁정 대사였던 술레이만 아가에 의해 파리에 처음 소개되었다.
 - 무함마드 4세의 명을 받아 커피자루를 가지고 온 아가는 커피에 정향, 카다멈 씨앗, 약간의 설탕을 넣어 마시면 마법의 음료가 된다고 묘사했다.
 - 그 당시 커피는 튀르키예식의 커피로 필요한 도구들도 같이 도입되었다. (도자기 그릇, 금, 은, 비단으로 수놓은 작은 무명천 조각들이 냅킨으로 사용되었음)
- 파리의 최초로 연 커피하우스는 파스칼이라고 부르던 아르메니아인이 1671년 파리 시내의 생제르망(St. Germain)에 연 가판대가 시초가 되었다.
 - 튀르키예 출신 소년들이 쟁반에 담긴 작은 컵으로 인파사이를 누비면서 커피를 판다.
 - 장터는 봄철 첫 두 달 동안 파리 성벽 안쪽, 라틴 지구 근처의 넓은 공터에 열렸다. 쌀쌀한 날씨에 파스칼의 갓 내린 커피의 향긋한 냄새가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시기 시작했다.
 - 시장의 방문객들은 작고 검은 컵 (petit noir)이라고 불리는 작고 따뜻한 커피를 찾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파리 커피하우스의 시작이 되었다.



<https://thegoodlifrance.com/the-history-of-coffee-in-france/>

프랑스 커피문화의 역사

- 커피는 도입 초창기에는 이러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미도 아울러 존재했다.
 - 쓴맛, 건강 위험성,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의 연관성 (외면 요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신을 거쳐 대중적인 음료로 탈바꿈 했고, '카페 (Café)라는 새로운 소비공간, 소비자 문화를 만들어 냈다. (Landweber 2015)
- 파리의 커피문화의 성공적인 정착의 이면에는 프랑스의 왕족 및 지도층의 적극적인 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 경내 온실에서 커피를 직접 재배했다. 그는 콩을 손으로 직접 따고, 볶고, 갈아 궁전을 찾는 손님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커피를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다.
 - 1714년 그는 네덜란드로부터 파리 왕립 식물원인 Jardin de Plantes 에 심을 커피나무 한 그루를 선물로 받았다.
 - 네덜란드가 자바섬에서 성공한 경험을 듣고, 그는 프랑스의 해외영토인 서인도 제도의 마르티니크에 커피를 재배하기로 하였고, 50년 기간동안 1,800만 그루의 커피나무가 재배되었다.



파리에 가장 오래된 커피 하우스 Le Procope (1686)



<https://thegoodlifrance.com/the-history-of-coffee-in-france/>

프랑스 커피문화의 확산

- 프랑스는 18세기 이후 해외영토와 식민지에 커피콩 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 마르티니크 (1720-23), 아이티의 생도맹그 (1734), 과달루프 (1730-1790), 레위니옹 섬 (1715), **베트남 (1857)**
- 이러한 선진국의 자본 + 현지의 값싼 노동력 결합하는 상업적 농업 방식인 플랜테이션의 일환으로 베트남에 커피콩이 소개되었다.
- 이후 베트남의 커피는 생산 유통이 대량화되며, EU시장으로 원료 공급자의 역할이 강화되었다(Eurostat 2024).

베트남 커피문화의 역사: 프랑스 커피문화의 영향력

- 1857년 프랑스의 신부였던 Alexandre Vallet가 아라비카 커피 품종을 가져와 재배 실험을 하면서 베트남에 처음 소개되었다.
- 1888년 프랑스는 베트남 북부에 커피농장을 설립해서 시작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대상지역 Hà Nam, Bac Tri)
- 커피 품종이 산악 기후가 더 유리한 중부 고원 지대로 옮겨진 후에 커피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An Nam 지역)
- 이후 수십 년 동안 고원지대에 커피 농장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1950년에는 베트남 최초의 상업용 커피 가공 공장이 건설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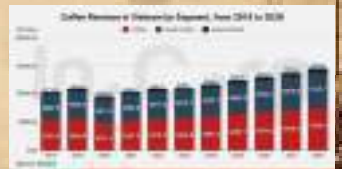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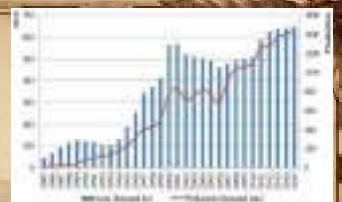
베트남 커피문화의 역사: 프랑스 커피문화의 영향력

- 베트남의 커피는 역사의 흐름을 견뎌내며 베트남 음식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 프랑스는 베트남에게 커피문화를 식민통치기간에 도입시켰다.
 - 아라비카 커피(1857) 품종 재배 시도 후 습한 기후에 약한 아라비카 대신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타가 재배에 적합하여 주력 품종이 됨.
 - 커피 플랜테이션을 통한 농장 확산 (중북부, 안남지방 중심)
- 프랑스는 초기 베트남 커피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 어휘: 프랑스어 *café, filtre* -> 베트남어 *cà phê, phin*
 - 문화: 프랑스의 우유를 넣은 커피 (*café au lait*)를 베트남에 도입하려다, 신선한 우유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당 연유를 사용하여 새로 탄생시킨 커피가 바로 베트남의 카페 스어 다 (*cà phê sữa đá*)이다. 그리고 연유 마저 부족해지자, 베트남인들이 달걀 노른자를 사용해 하노이의 상징인 카페 쥘(*cà phê trứng*)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적응은 프랑스와 베트남 문화의 섬세한 혼합을 아름답게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베트남 커피시장의 성장과 유럽시장 진출

-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프랑스 식민통치 시절에 커피의 재배와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간 지속한 베트남 전쟁과 통일 이후 연달한 경제개발 계획은 베트남 경제와 국민의 삶을 힘들게 했다.
- 전쟁 이후 도이머이 정책 도입 후, 베트남 커피 생산의 혁신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경제 개혁 정책은 토지 이용을 장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커피 생산을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이 시기에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은 급증하며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 수익구조는 원두(coffee), 가공원두(roast coffee), 인스턴트 커피(instant coffee)로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 커피시장의 성장과 유럽시장 진출

- 2023년 EU는 비EU국가로 부터 커피 270만톤(10.6억 유로)을 수입했고 브라질과 베트남이 양대 공급국이다.
- 같은 해, EU의 수입은 독일 911,300톤 (33%), 이탈리아 624,600톤 (23%), 벨기에 278,200톤 (10%), 스페인 249,500톤 (9%), 프랑스 184,000톤 (7%) 등에 집중되어 있다.
- EU는 2023년 로스팅/디카페인 등 가공커피를 기준으로 230만톤 이상 생산했으며, 이탈리아 556,500톤, 독일 507,700톤, 프랑스 139,300톤, 네덜란드 124,600톤으로 상위 생산국이다. (“수입 원두→EU 내 로스팅→역내 유통·수출” 순환의 산업적 기반)



베트남 커피시장의 성장과 유럽시장 진출

- 사례 1) 원두 (Green Coffee) 진출 = 베트남의 EU공급망 편입 (물량, 가치확대)
 - 유럽인이 마시는 커피 2잔 중 1잔은 '베트남 산'?
 - 1. 숫자로 보는 압도적 스케일: 2023년 한 해 동안 베트남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생원두는 무려 100만톤이 넘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 베트남 전체의 수출량 절반 이상(약 63만톤)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어, 유럽인이 베트남 커피를 가장 많이 사가는 고객임.
 - 2. 유럽의 커피 공장 : 독일과 이탈리아
 -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을 넘어 수입한 원두를 잘 로스팅 하여 전 세계로 다시 파는 거대한 커피 가공 허브의 역할을 함.
 - '로테르담 효과': 네덜란드나 벨기에가 커피를 많이 수입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형항구가 이 곳에 있어 그렇게 보이는 것임, 실제로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착시효과를 의미함.
 - 3. 베트남 커피가 잘 팔리는 비결: 가성비와 물량. 베트남 커피가 유럽시장을 꽉 잡고 있는 핵심 무기는 '착한 가격' 그리고 '안정적 공급'이다.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전 세계 어디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커피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유럽 바이어들을 사로잡는 비결임.
 - 4. 앞으로의 숙제: "기후, 환경 문제"
 - 잘 나가는 베트남 커피의 고민거리는 바로 환경문제 일것이다. 최근 EU가 환경 규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새로운 규칙: 숲을 파괴하며 만든 커피는 안된다. 라는 엄격한 실사 (브라질도 동일하게 적용 예정)
 - 우려되는 점: 규모가 큰 기업은 대응할 수 있지만,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한 베트남의 영세 농민이나,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이 복잡한 서류작업과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베트남 커피시장의 성장과 유럽시장 진출

- 사례 2) 인스턴트 커피의 신홍강자 (G7) 집에서 베트남 커피를?
 - 베트남은 유럽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서 영국에 이어 당당히 2위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함.
- 1. 팬데믹의 역설: 코로나19이후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베트남 산 가공커피 수요가 크게 늘었다.
- 2. 부가가치의 창출: 단순히 생원두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공 과정을 거친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베트남은 더 높은 이익을 얻고 있다. 확장가능성 시사
- 3. 새로운 과제: 알갱이 형태의 가공 커피 역시 유럽의 환경 규제를 피할 수 없다. 제조공정의 투명화가 필요해 진 상황이 됨. (지속가능성 규정 강화, 농업방식, 기록관리, 공급망 관리 등 전면 개편 필요, 산림벌채 규정 EUDR)



베트남 커피시장의 성장과 유럽시장 진출

- 사례3) 프랑스, 베트남 커피의 까다로운 관문
 - 예술과 미식의 나라 프랑스는 베트남 커피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핵심 길목.
 - 프랑스 내의 커피산업은 3,000개 이상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산업. (품질과 유통과정에 민감)
 - 환경 성적표: 프랑스 정부는 '산림훼손 위험 품목' 지정해 특별 관리 함.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생산이라는 타이틀이 필요. (규범 준수형 진입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

베트남 커피시장의 성장과 유럽시장 진출

- 사례4) 지리적 표시제 GI) 브랜딩 = 원료의 상품화 에서 원산지 스토리/권리로 이동
 -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베트남의 GI를 EU에서 인정, 보호하며, 예시로 Buôn Ma Thuột coffee가 공식 문서에 명기된다.
 - EVFTA 하에 EU는 베트남의 39개 GI를 보호하며 Buôn Ma Thuột coffee가 대표 GI로 언급된다.
 - GI 커피는 비교 대상 대비 2~3% 가격 프리미엄이 관측된다고 정리되어, 대량 원두와 다른 가치창출 (프리미엄)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 프리미엄 폭은 지역,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마치며: 커피문화순환의 함의 - 상생의 에너지

- 커피는 더 이상 유럽문화의 전유물이 아니라 글로벌시대의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 초반 베트남의 커피 재배와 문화정착은 프랑스의 영향이 컸다. (적절한 품종 선택, 연유커피, 노른자커피 등)
- 독립과 통일 이후 정부의 생산량 증대 정책과 1980년대 후반 개방경제 정책이 맞물려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으로 자리잡음.
- 베트남 커피는 원두, 가공원두, 인스턴트커피 까지 다양한 형태로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원자재 공급과 인스턴트커피 소개)
- 베트남 가공원두 (buon ma thout)나 인스턴트 커피(G7)는 베트남 커피의 유럽 문화로의 순환 확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에서 베트남 커피하우스를 살펴볼수 있고, 인기도가 높아지고 있어 문화의 순환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 (파리) Hanoi 1988 Ca Phe (35 Rue Galande)
 - (암스테르담) Niko Cà Phê
 - (영국) Hanoi 1991
- 결국 문화의 순환은 서로의 상생을 일으키는 좋은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질문 및 답변 (Q&A Session)]

런던 커피하우스에서 부산 커피도시로

: 사회적 교류와 다양성

김새미(한예종)

목차

1. 들어가기: 왜 지금, 다시 '커피하우스'인가?
2. 이론적 틀: 공론장과 사회적 교류
3. 17~18세기 런던 커피하우스
4. 현대 카페의 역설: 고립된 개인과 사회적 교류의 단절
5. 부산 커피도시의 가능성: 교류와 다양성의 도시적 재구성

커피(coffee)

'커피하우스' vs '카페'

문제제기



대치동 한티역 스타벅스 매장
출처 <https://blog.naver.com/beatingfruit/223069337140>

문제 제기



대치동 한티역 스타벅스 매장, 출처 <https://blog.naver.com/baengful/223068837140>



17세기 런던 커피하우스 내부를 보여주는 그림(1695, 작자미상)
출처: https://www.dmynews.com/NWSWeb/series/series.premium.pgasp?CNTN_CD=A0002988281

관심 주제

왜 지금, 다시 '커피하우스'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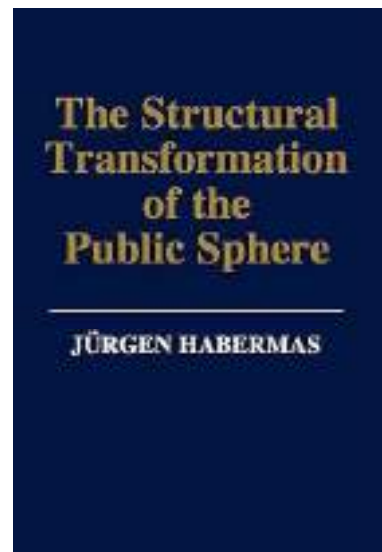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는 '매개체'이자 공간

- 커피를 매개로 한 만남과 관계 형성
- 커피로 야기된 정치·문화·사회적 변화 가능성

공론장 역할 의미



Jürgen Habermas



커피 공간이 시작된 영국

17~18C 영국, 런던

17-18C 영국의 변화

1. 변화의 태동

- 정치: 의회 중심 체제
- 경제: 상업-무역 확대
- 사회: 시민계층 성장
- 문화: 계몽주의, 과학 혁명

2. 새로운 사회적 교류의 발생

- 사회적 변화 경험
- 인권의식
- 새로운 문화와 사람,
세계에 대한 호기심



17-18C 런던 커피하우스

“What news have you?”

하버마스(Jurgen Habermas) 『공론장의 구조변동』

❖ “부르주아 공론장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를 설명하는 모델로 제시
영국 커피하우스 = 사적 개인들이 모이는 공적 토론 공간 = 공론장의 핵심 공간

조건

- 신문, 팜플렛
- 계층 간 토론
- 국가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인 독립성

기능

- 비판적 담론 형성
- 여론(public opinion) 생성
-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

하버마스(Jurgen Habermas) 『공론장의 구조변동』

❖ “부르주아 공론장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를 설명하는 모델로 제시
영국 커피하우스 = 사적 개인들이 모이는 공적 토론 공간 = 공론장의 핵심 공간

조건

- 신문, 팜플렛
- 계층 간 토론
- 국가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인 독립성

기능

- 비판적 담론 형성
- 여론(public opinion) 생성
-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

핵심 기능

- 사회적 교류의 조직화
- 다양한 지식, 문화 교차
- 새로운 사회 변화의 배양

현대 카페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독립된 개인들의 거대한 사회

- 개인화된 공간
- 상호작용 부재
- '나 홀로' 소비 공간



- 소비공간 → 관계 공간
- 고립 → 교류
- 이미지 → 경험

전환의 필요성

핵심 구조



- 다양성
- 사회적 교류 촉진
-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한 도시 자산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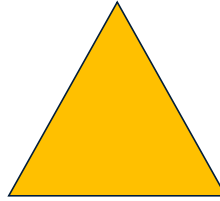
부산

정체성

- 항구도시, 이동과 혼종
- 관광과 생활 도시
- 청년, 창작, 로컬 공존

정체성

- 커피: 로컬 콘텐츠
- 공간: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낮은 진입 장벽



정체성

- 사회적 교류
- 다양성

부산

런던 커피하우스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부산의 맥락에 맞는 '기능적 번역' 필요

- 런던의 정보 교환/토론/네트워킹 → 작은 책모임, 독립출판, 지역 상인 협업, 청년 창작 발표 등 소규모 프로그램과 같은 느슨한 참여를 로컬(부산)과 연결
- 부산의 정체성: 이주와 이동의 역사를 가진 항구도시가 갖는 개방성
- 다양한 행위자(주민, 여행자, 창작자 등)이 섞이는 낮은 진입 장벽

결론

- 부산, 커피를 매개로 한 도시 공공성
- 단순히 커피 소비를 넘어선 디지털 시대의 고립된 개인들을 다시 느슨하게 연결하는 도시적 매개 공간
- 다양성을 사회적 교류로 전환하는 도시의 문화적 자산으로 확립



세션 6 | 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항해도시의 커피 공간

바르셀로나와 부산, 스페셜티 커피로 읽는 공론장과 정체성

2026. 3. 27.
고주현(연세대학교)

왜 항구도시와 카페인가?

- 항구는 물자·사람·문화가 교차하는 접촉지대
- 카페는 시민이 모여 말하고 연대하는 제3공간
- 스페셜티 커피는 글로벌 미학이자 로컬 정체성의 번역 장치
- 바르셀로나와 부산: 지중해·환동해 해양 관문 도시

유럽 커피하우스와 항구도시



17 Century Coffee House (Penny University)

1650s~

1페니 입장료, 신문·팜플렛 비치
정치·경제·문학 토론의 장

항구 연쇄

세비아·리스본·런던·암스테르담
해양무역 → 커피 → 커피하우스 → 공론장

근대의 토대

주식회사·보험·신문 등 근대 제도의
아이디어가 커피하우스에서 탄생

항구



해양무역



커피 플랜테이션



커피하우스



공론장

바르셀로나 항구와 현대 커피 무역

2026년 현재,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안트워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커피 수입 항구

- 스페인 전체 커피의 80%가 바르셀로나 항구 경유
- 연간 21만 톤의 생두(green coffee) 처리
- Barcelona International Terminal (BIT) 운영
- 항만-도시-카페 문화의 유기적 연결



Port of Barcelona Breaks Ground on €30 Million Flagship Coffee Terminal

바르셀로나: 지중해 관문 도시

- 17세기 이후 오토만 무역로를 통해 커피 유입
- 19세기: Las Ramblas 중심 카페 살롱 문화 확산
- 항구 창고·해양박물관·포트 레스토랑 밀집 지구
- 바르셀로네타: 노동자-어부-예술가 공존 공간

하버마스의 공론장 (Public Sphere)

"사적 개인들이 공중으로 모여 이성적·비판적 토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영역"

- 국가 권력과 시장경제 사이의 중간 영역
-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접근 보장
- 이성적 토론을 통한 합의 도출
- 17-18세기 부르주아 공론장의 탄생



테르톨리아(Tertulia) 문화

- 18세기 계몽기부터: 카페에서 지식인·예술가 정례 토론 모임
- 초콜릿→커피로 전환되며 대중화된 공론장 형성
- 문학·정치·예술·투우까지 논의 주제 확장
- 사적·준공적 공간에서 아이디어 순환과 사회 변동 촉발
- 스페인식 공론장

바르셀로나의 카페 공론장



라 람블라 (La Rambla) — 산책·카페·토론의 축



엘스 콰트레 가츠 (Els Quatre Gats) — 피카소와 모더니즘 예술가들의 공론장

항구-거리-카페 축

Port Vell → 라 람블라 → 엘스 콰트레 가츠
도시 공간이 공론장과 직결

테르톨리아 전통

카탈루냐 지식인·예술가의 정기 토론
예술·정치·도시를 아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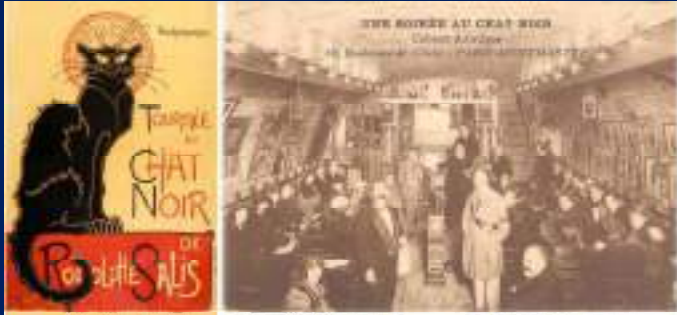
문화정책 연계

모더니즘 예술운동과 카탈루냐 정체성
창의도시형 공론장으로 제도화

엘스 콰트레 가츠 (Els Quatre Gats)

1897년 개관, 바르셀로나 모더니즘의 중심지

- 건축가 Josep Puig i Cadafalch의 네오고딕 건물
- 파리 Le Chat Noir 카바레에서 영감
- 파블로 피카소의 첫 개인전 개최 (1900년)
- 가우디 등 모더니스트 집결
- 음악 공연, 미술 전시, 문학 모임(tertulias) 개최



프랑코 독재와 저항의 카페

- 1939~1975: 언론 검열·정당 금지·카탈루냐어 탄압
- 고딕 쿼터·엘 본: 아나키스트·노동자 비밀 집회 장소
- 카페는 '침묵을 거부한' 대화와 연대 공간
- 민주화 이후 테르톨리아 부활, 공론장 전통 재점화

맛의 전환: 토레팩토(Torrefacto)에서 스페셜티로

- 토레팩토: 설탕 섞어 볶은 보존용 커피, 강하고 쓴맛
- 2010년대 중반~: Nomad Coffee, 제3의 물결 등장
- 싱글 오리진·필터·라이트 로스트로 '산미와 향' 재발견
- 바·카페→로스터리·큐핑 교육 공간으로 진화



노마드 = 항구도시 바르셀로나가 글로벌 스페셜티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관문 역할을 하는 브랜드

바르셀로나 스페셜티의 특성

- 지중해적 여유 + 디자인 감각 + 국제 인구 융합
- 사교 공간인 동시에 코워킹·창작 거점 역할
- 지속가능성·직접무역 강조, 윤리적 소비 전면화
- 포트·비치와 가까운 입지: 항구도시 정체성 시각화

부산: 한국의 해양 관문

-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한국 최초 국제항 개항
- 세계 7위 항만(2025, TEU 기준), 무역·물류 허브
- 자갈치시장·국제영화제·비치 문화: 해양 정체성
- 서울과 구별되는 '느림과 여유'의 항구도시 이미지

부산 모모스 커피 사례

- 2007년 창립, 온천장역 인근 본점, 정원·로스터리 공간
- 전주연 바리스타: 2019 세계바리스타챔피언십 우승
- 바리스타 아카데미·베이커리·전국 유통망 운영
- 한국 스페셜티 커피 산업의 골드 스탠다드로 평가



모모스와 부산 로컬 정체성

- 온천장: 관광 명소 아닌 주거·문화 복합 생활권
- 정원 카페: '느린 도시' 부산의 여유와 감성 상징
- 세계 챔피언 배출→국제 인지도와 로컬 자긍심 상승
- 커피 '맛' 이상의 교육·커뮤니티·스토리텔링 공간

두 항구도시 커피 문화 비교

바르셀로나

테르톨리아 전통 위 스페셜티 접합, 다국적 디자인 중심, 포트-비치 연계

부산

다방 문화 위 스페셜티 도약, 챔피언 기반 기술 정당성, 로컬 생활권 침투

항구도시 커피 문화 공통 키워드

- 개방성: 해양 무역로 통해 외래 문화·상품 조기 수용
- 제3공간: 시민 공론장, 저항 거점, 창조 커뮤니티 역할
- 글로컬 정체성: 글로벌 미학 + 로컬 스토리 혼종
- 느린 도시성: 대도시 속도와 구별되는 여유·친밀성

카페와 도시 정체성

- 커피 공간은 도시 브랜딩과 장소 감각의 물질적 매개
- 젠트리피케이션·창조계급 논의와도 연결 가능
- 항구의 '경계성'이 문화 실험과 혼종성 허용
- 로컬 커피 성공 = 도시 경쟁력·관광 자원 전환

스페셜티와 경험 관광

- 커피 투어리즘: 단순 소비 → 교육·커피·로스터리 체험
- 인스타그램·SNS 중심 시각 소비와 공간 미학
- 로컬 내러티브 중시: 챔피언 스토리, 테르톨리아 역사
- 지속가능 관광·윤리적 소비 트렌드와 맞물림

결론

바르셀로나와 부산의 스페셜티 커피는
항구도시의 개방성, 공론장 전통, 글로벌 정체성이
한 잔에 응축된 문화 텍스트

감사합니다

브라질은 어떻게 '커피'를 품었나

국가 브랜드의 탄생과
부산이 가야 할 길


2026 한국유업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자: 정호윤(국립부경대)



Table of Contents

브라질 커피의 역사부터
부산의 미래 전망까지,
커피로 읽는 국가 브랜드의 여정

- 01  커피 한 잔에 담긴 국가의 이야기
- 02  브라질 커피 신화의 시작 (1727~)
- 03  현대 브라질의 커피 브랜딩 전략
- 04  해외 도시 비교: 트리에스테 & 함부르크
- 05  부산이 가야 할 길

Introduction

커피 한 잔의 힘

매일 수십억 잔, 그 안에 국가의 운명이 있다

전 세계 일일 소비량

하루 20억 잔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한 국가의 경제적 토대이자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결정짓는 지표



경제적 가치

석유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세계적인 핵심 원자재



문화적 상징

도시의 라이프스타일과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문화



국가 브랜드

특정 지역을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강력한 자산

왜 브라질인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

단순 원자재 수출지에서

독보적 '국가 브랜드'로 진화

History of Success



브라질의 교훈 • 부산의 미래

왜 부산인가?

국내 생두 수입 95%

대한민국 커피의 고향에서

글로벌 '커피 도시'로 도약

BRAZIL COFFEE HISTORY

1727년, 전설의 시작

꽃다발 속에 숨겨진 씨앗 하나가 역사를 바꿨다

1



외교적 위장 임무

포르투갈 장교 팔레타 (Francisco de Melo Palheta), 영토 분쟁 해결을 명분으로 프랑스령 기아나에 파견 (비밀 임무: 커피 종자 확보)

2



위험한 로맨스

엄격한 종자 반출 금지령 속, 총독 부인의 마음을 얻어 작별 선물인 꽃다발 속에 커피 씨앗을 숨겨 밀수

3



제국의 탄생

브라질 파라(Pará)주에서 첫 재배에 성공하며,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

" 단순한 농업의 시작이 아닌, 국가 자부심의 씨앗이 되다 "

History of Brazilian Coffee

300년의 여정: 씨앗에서 세계 1위로



1727

커피 씨앗 도입
과라수 산맥에 교역
전쟁의 시작



1830s

제1차 커피 열
세계 생산량의
40% 점유 달성



1929

대공황 위기
커피 폭락으로
커피 소진의 위험



1999

Embrapa 고도화
국가의 중요 역할
생산성 혁신



1770

리우 확산
상업의 재부와
기술 대안



1880s

커피 플레이어
커피가 국가 발전을
동도하는 시대



1952

IBC 설립
커피 부문의
체계적 연구 시작



2020s

ESG+기술
스마트 커피
생산성 향상

"카페 콩 레이치(Café com Leite)"

커피와 우유가 대통령을 만든 시대 (1880~1930)



상파울루

커피 (Café)

경제력 기반 정치 세력



미나스제라이스

우유 (Leite)

인구 기반 정치 세력

대통령직
교차 획득



경제 의존도

70%

당시 브라질 전체 수출액 중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



도시화 가속

33배

상파울루 인구 폭발적 증가
(1850년 3만 → 1930년 100만)



인프라 혁명

철도망

커피 운송을 위해 내륙 깊숙이
광범위한 철도 시스템 구축



07

BRAZIL. THE COFFEE NATION

현대 브라질 커피 브랜딩 전략

PAST

저렴한 블렌딩용 원두

Commodity / Volume-Centric

PRESENT

"ESG + T" 전략

품질 · 지속가능성 · 기술혁신



지속가능성

재생 농업 도입 및
탄소 배출 저감 실천

Sustainability



품질 인증

BSCA 스페셜티 인증과
엄격한 품질 관리

Quality



기술 혁신

AI, 드론, 정밀 농업을
활용한 생산성 극대화

Technology



사회적 책임

공정 무역 확대 및
농가 공동체 지원

Social

08

커피 강국들은 어떤 '무기'로 브랜드를 만들었나?

BR

브라질

규모 + 기술 + ESG

- Embrapa 연구 시스템을 통한 과학적 생산 혁신
- GI(지리적 표시) 인증 확대로 지역 다양성 강조
- 지속가능성 기반의 The Coffee Nation 브랜딩

CO

콜롬비아

캐릭터 + 품질보증

- 1959년 탄생한 상징적 캐릭터 후안 발데스
- EU PGI(지리적 표시 보호) 최초 획득 국가
- 소규모 가족 농가 중심의 감성 스토리텔링

ET

에티오피아

헤리티지 + 지식재산권

- 커피의 기원지라는 독보적 헤리티지(Heritage)
- 스타벅스와 상표권 협상을 통한 가치 인정
- ECX(상품거래소) 인프라를 통한 투명성

☞ 브랜드는 단순한 '맛'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장치(기관·인증·스토리)로 완성

BUSAN CURRENT STATUS

부산, 대한민국 커피의 심장

The Coffee Gateway of Korea

95%

국내 생두 수입 비중
부산항 물량 기준 (입도액 1위)

17.6만 톤

연간 생두 수입량
2020년 기준, 국내 최대 규모

292만 명

외래 관광객 수
2019년 기준 (10년 내 최고치)



- 영도 (Yeongdo)**
연 조식소와 공구 창고를 제외한 대형 카페 및 로스터리 설치
- 전포 카페거리 (Jeonpo)**
공구 창고와 브랜드화 카페가 공존하는 '뉴타운' 문화의 중심지
- BEXCO (Centum City)**
World of Coffee 등 국제 행사와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



Pride of Busan

부산의 작은 창고에서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

2007

4평 창고의 시작

부산 온천장의 작은 테이크아웃 가게에서 시작한 '모모스커피', 스페셜티 커피의 꿈을 키우다

2019

세계 무대 제패

World Barista Championship(WBC)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부산 커피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

Now

커피업계의 애플

전 세계 커피인들이 성지순례를 오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여 도시의 문화적 자산이 됨



"인재(Software)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스템과 브랜드입니다."

Comparative Analysis

부산은 어디에 서 있나?

Italy Trieste	Germany Hamburg	Busan
<p>특성 강점</p> <p>로컬 브랜드(일리) 기반 전문 커피 교육 시스템</p>	<p>특성 강점</p> <p>스마트 물류 인프라와 역사적 창고 관광화</p>	<p>핵심 강점</p> <p>압도적 물동량(95%) + 세계 1위 인적 자원</p>
<p>특성 관핵</p> <p>과학(Science) + 예술(Art)</p>	<p>특성 관핵</p> <p>역사(History) + 효율(Efficiency)</p>	<p>핵심 전략</p> <p>물류(Logistics) + 문화(Culture)</p>
<p>시사점</p> <p>도시 고유의 자부심과 철학 확립</p>	<p>시사점</p> <p>산업 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전환</p>	<p>Future Task</p> <p>통합 브랜드 구축 및 글로벌 스토리텔링</p>



KEY INSIGHT

"물류의 힘에 문화적 서사(Narrative)를 입혀라"

부산이 가야 할 3가지 미래 전략

01



K-커피 인증 & 표준화

부산을 거쳐가는 생두에 독자적인 품질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신뢰도를 확보

"부산에서 볶은 원두 = 신선함의 보증"

02



지속가능한 공간 브랜딩

영도, 북항, 전포를 연결하는 커피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역사적 공간을 재해석

"해양 산업 유산과 커피 문화의 결합"

03



AI·DX 스마트 산업화

생두 보관부터 로스팅, 배송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

"커피 테크 스타트업 육성"

Step-by-Step Plan

3단계로 그리는 '글로벌 커피 허브 부산'

Step 01
단기 (1~2년)



브랜드 공식화 & 기반 조성

"부산 커피 관문도시" 브랜드 선포
로컬 카페·로스터리 공동 슬로건 개발
기존 국제행사와 도시 투어 프로그램 연동

Step 02
중기 (3~5년)



물류·품질 허브 구축

항만 기반 커피 물류·품질 관리 허브 구축
국제 커피기관(SCA 등)과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북항 재개발 지역 내 커피 문화 거점화

Step 03
장기 (5년~)



글로벌 플랫폼 완성

동북아 커피 트레이드·혁신 플랫폼 완성
아시아 최대 국제 커피 박람회 상시 유치
부산을 세계 커피인이 반드시 찾는 성지로 육성



부산시 커피산업 육성 프로젝트 투자 규모: 292억 원

Winning Strategy

성공의 핵심 공식

브라질에서 배우고, 부산에 적용할 승리의 방정식



Story

서사/스토리텔링

+



Institution

제도/인증

+



Logistics

물류/인프라

+



Marketing

홍보/마케팅

=



City Brand

도시 브랜드

Brazil



1727년 팔레타 장교의 커피 씨앗 밀수 전설

IBC(커피연구소) & Embrapa, BSCA 시스템

산투스항(Santos Port) 세계 최대 수출 거점

"The Coffee Nation" 국가 브랜딩 프로젝트

세계 1위 커피 생산국

Busan

KOREA

95% 생두 관문 세계 1위 바리스타 보유

K-커피 인증 체계 & 품질 표준화 도입

부산항 & 북항 스마트 물류/문화 허브

"Coffee Gateway" 글로벌 도시 마케팅

글로벌 커피 허브

18

CONCLUSION

커피를 품은 도시, 부산의 차례다

- ✓ 브라질은 씨앗 하나로 국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 ✓ 부산은 이미 95% 생두와 세계 1위 바리스타를 품고 있습니다
- ➔ 이제 필요한 것은 이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는 브랜드입니다

Coffee Gateway Busan

세계 커피가 만나는 도시

☞ 커피 향기가 부산항을 넘어 세계로 퍼져 나갈 날을 기대합니다 ☞

19

감사합니다

커피의 두 운명: 문화는 산업을 살리는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김계리

1

목차

문제제기

앙골라 커피 이야기

에티오피아 커피 이야기

부산에 주는 함의

2

문제제기: 커피 산업의 지속과 붕괴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 커피 산업은 기후, 고도, 토양, 품종, 생산기술과 농업 시스템 등의 생산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함
-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 산업의 지속과 붕괴를 설명할 수 있을까?

- 에티오피아(Ethiopia)

고도 1500-2200m의 고산지대

야생 아라비카 유전자 다양성 보유

➡ 자연환경과 커피 품질이 잘 조화된 대표적인 사례

- 케냐(Kenya)

고산 화산토 지역(Mount Kenya)

연구소 중심 품종 개량

➡ 자연환경과 농업기술이 잘 조화된 대표적인 사례



3

문제제기: 커피 산업의 지속과 붕괴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 그렇다면, 앙골라(Angola) 는?

- 앙골라 역시 한때 아프리카의 주요 커피 생산국 중 하나

고도 1000-1800m의 고산지대

열대 기후와 비옥한 토양

포르투갈 식민지 시기 대규모 커피 플랜테이션 형성

1970년대 앙골라는 세계 커피 생산량의 약 3~5%를 차지

➡ 자연환경과 생산 시스템이 잘 결합된 커피 생산 중심 국가

- 하지만 앙골라의 커피 산업은 현재 거의 잊혀짐, 왜?



4

앙골라 커피 이야기

- 앙골라 커피 산업의 흥망성쇠
- 1. 식민지 시기: 커피 산업의 급성장 (1950-1970s)
 - 이 시기 앙골라는 세계 주요 커피 생산지 중 하나로 성장
 - 특히, 북부 고원지대인 Uíge, Kwanza Norte, Malanje에서 주로 생산
 - 이 지역들은 고도 약 1,000-1,800m, 풍부한 강수량, 비옥한 토양 등 커피 재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추
 - 포르투갈 식민정부는 이 지역에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을 구축하였으며,
 - 특히 로부스타(Robusta) 커피 생산을 중심으로 산업이 빠르게 확대

5

앙골라 커피 이야기

- 2. 전성기: 세계 3-4위 커피 생산국(1970s)
 - 1970년대 초 앙골라 커피 산업은 최대 생산량을 기록
 - 1973년 생산량, 약 22만 톤, 세계 3~4위
 - 1970년대 앙골라는 연간 25만 톤의 커피를 생산함
 - 당시 앙골라는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와 함께 세계 커피 시장의 주요 공급지 중 하나
 - 커피는 석유를 발견하기 이전까지 앙골라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작물
- 3. 붕괴의 시작: 독립과 농장 시스템의 해체(1975).
 - 앙골라가 독립하면서 커피 산업의 기반이었던 식민 농장 시스템이 급격히 붕괴
 - 포르투갈 농장주와 기술 인력의 대거 이탈, 농장 관리 체계 붕괴, 생산 인프라 붕괴
 - 수십 년 동안 구축된 플랜테이션 경제구조가 사실상 해체됨

6

앙골라 커피 이야기

4. 내전: 산업의 붕괴(1975-2002)

- 독립 직후 시작된 앙골라 내전은 약 27년 동안 지속
- 내전 기간 동안, 농촌 지역에서 전투 발생, 농장 파괴, 인구(노동력) 이동, 농업 인프라 붕괴
- 특히 커피의 주요 생산지였던 Uíge 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음
- 커피 생산은 거의 중단 수준

5. 현재: 전성기의 극히 일부 생산

- 내전 종식 이후 앙골라 정부는 커피 산업 복구를 시도
- 2002년 원두 커피콩 생산량은 2019~2020년 34% 증가
- 현재 5~8천 톤 수준



7

에티오피아 커피 이야기

- 에티오피아 역시 커피 산업 위기를 겪음

1. 사회주의 혁명(1974)

- 1974년 하일레 셀라시에(Haile Selassie) 정권이 붕괴하면서 군사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
- 그 과정에서 농장 국유화, 커피 시장 구조 붕괴, 생산 및 유통 체계 혼란이 발생
- 커피 산업에도 심각한 위기를 겪음

2. 내전과 정치 불안

- 1970-1990년대 에티오피아는 내전, 정치불안, 경제위기를 지속적으로 경험
- 이로 인해 농업 생산 전반 감소, 농촌경제 약화가 나타났고
- 커피 산업 역시 또 한번 큰 타격

8

에티오피아 커피 이야기

3. 국제 커피 가격 붕괴(1989)

- 1989년 International Coffee Agreement (ICA) 체제가 붕괴하면서 세계 커피 가격이 급락
- 커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소규모 농가가 큰 타격
- 에티오피아 커피 농가 역시 심각한 위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커피 산업은 유지
소규모 농가, 가족 노동 중심으로 혼합 농업을 유지
커피는 수출 뿐만 아니라 농가의 생활과 사람들의 일상 문화의 일부
커피를 중심으로 문화적 서사가 만들어지고 국가 정체성과 브랜딩에 커피가 중요한 역할

- 그렇다면 그 차이는 왜?

9

에티오피아 커피 이야기

문화적 서사 1. 커피의 기원지

- 칼디(Kaldi)의 전설, 에티오피아는 커피가 처음 발견된 곳이라는 서사, 에티오피아 남서부 Kaffa 지역
- 국가 정체성, 문화적 자부심, 커피와 국가 브랜딩의 기초가 됨

문화적 서사 2. 일상적 소비

- 에티오피아는 생산국 중에서도 국내 소비가 매우 높은 나라
(생산된 커피의 약 40~50%가 국내에서 소비)
- 생산량의 상당 부분 국내 소비하는 커피를 일상적으로 소비



10

에티오피아 커피 이야기

문화적 서사 2. 커피 세레모니(coffee ceremony)

- 커피는 환대, 공동체, 일상 교류, 정보 교환, 갈등 조정 등과 연관
- 손님 방문, 가족이나 이웃 모임과 교류, 일상의 휴식에서
- 주로 여성이 진행
- 커피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의례적 실천
- 1. 생두 로스팅 2. 절구로 분쇄 3. 제베나로 추출 4. 세번 제공
Abol(아볼), 환대의 시작
Tona(토나), 사회적 교류
Baraka(바라카), 축복



11

부산에 주는 함의

- 에티오피아와 앙골라 커피 비교

요소	에티오피아	앙골라
생산 구조	소농 중심	플랜테이션
커피의 의미	생활과 문화	수출 작물
정치적 위기	존재	존재
결과	산업 유지	산업 붕괴

- 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가 문화와 공동체 속에 깊이 스며들었지만,
- 앙골라에서는 커피가 수출 작물로 존재
- 산업은 경제를 뒷받침 하지만, 산업을 뒷받침 하는 것은 문화이다.
- 사회적 의례, 일상, 공동체 등에 관한 문화적 서사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

12

감사합니다.

“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패널6) 토론문
김신규(한국외대)

이번 패널의 발표문은 공통적으로 커피를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공론장을 형성하는 매개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커피를 중심으로 한 인류학적 통찰과 경제적, 정책적 전략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인프라’로서의 커피하우스, 그리고 ‘도시 성장의 동력’으로서 커피가 지닌 공적, 경제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커피와 카페가 단순한 소비재이자 소비공간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개별 발표문이 아니라 패널 전체를 대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자 여러분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커피를 매개로 한 ‘공론장(Public Sphere)’의 현대적 재해석과 공간의 변화에 관한 측면입니다. “유럽 커피하우스와 항해도시에서”에서 고주현 선생님은 커피하우스를 평등한 소통 공간으로 제시했고, “런던 커피하우스에서 부산 커피 도시로”에서 김새미 선생님은 현대의 커피하우스를 ‘고립된 개인들의 거대한 사회’로 표현했습니다. 두 발표를 통해 커피와 카페가 지닌 역사, 문화, 정치적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커피와 카페가 사실 공론장이라기보다는 ‘보이지 경계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카공족’이나 ‘디지털 노마드’라는 표현도 있듯이, 소통의 장이 아니라 개인적 공간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화된 공간으로 변모한 카페가 다시 소통과 관계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시대와 장소에 따라 커피와 카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굳이 공론장과 같은 의미로의 복원은 다소 어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커피도시 부산’이라는 맥락에서는, 커피와 카페가 기존의 의미나 역할과는 다른 의미와 장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문화와 산업의 측면에서 커피와 부산의 매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부산이 ‘커피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문화적 서사가 커피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커피의 두 운명: 문화는 산업을 살리는가”에서 김계리 선생님은 앙골라와 에티오피아 사례를 통해 문화적 서사가 산업 붕괴를 완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커피문화의 역사적 순환”에서 정세원 선생님은 프랑스-베트남 관계가 지리적 표시제(GI)와 브랜딩으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부산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좋은 원두를 수입하고 우수한 장비로 가공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선도 사례를 넘어서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부산이 글로벌 커피 허브를 지향한다면, 기존 모델을 차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고유한 ‘서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커피=부산’이라는 이미지 혹은 그러

한 현실을 만들고 강화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서사와 내러티브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항구도시의 지리적 이점과 산업 집적화 전략입니다. “브라질은 어떻게 커피를 품었나”와 “커피는 어떻게 도시의 산업이 될까”에서 정호윤, 그리고 앞선 패널에서 김주희 선생님은 함부르크와 트리에스테 사례를 통해 부산의 항만 기반 물류 허브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들 사례가 단순한 물류 기능에 그치지 않고, 환경규제와 품질 관리, 교육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부산이 대규모 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로컬 카페 문화와 대규모 항만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적 자원과 서사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 무형의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국내외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 학, 관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단, 중,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패널의 발표문은 커피하우스가 지녀온 소통의 에너지를 어떻게 현대 도시의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이 정치·경제적 선택에 따라 커피에서 차(Tea) 문화로 전환했듯이(고주현), 오늘날 부산의 커피 선택 역시 도시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은 단순한 소비 도시를 넘어, 에티오피아처럼 강력한 정체성을 구축하고(김계리), 정교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며, 나아가 베트남과 유럽의 사례처럼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규범 준수와 품질 차별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정세원).

이번 패널의 발표문은 커피가 관계를 매개하고 공론장의 역할을 해왔듯이, 커피도시 부산이 사람과 이야기가 연결되는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문제의식과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커피-부산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한 논의가 오늘의 학술대회에 머무르지 않고 심층적인 연구로 이어지며, 나아가 정책적 기반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강연

김영재 부산연구원 원장: 글로벌 경제의 미래



